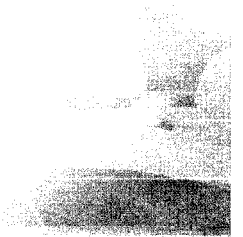
5·31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차 례

발 간 사 ····· 조준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6

기사심의를 마치면서 ····· 유효봉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 8

제1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일반 ····· 13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 15
제3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법규 개정 ····· 22

제2부 선거기사 심의의결 현황

제1장 심의내용 및 결정개관 ····· 27

제2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1. 경고문 게재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 29
   나.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 30
2. 경 고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 30
   나. 여론조사 관련 위반 ····· 32
   다. 칼럼게재 제한 위반 ····· 32
   라. 상업광고의 제한 ····· 33
3. 주 의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 34
   나.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 35
   다. 칼럼게재 제한 위반 ····· 35
4. 반론보도문 게재 ····· 36
5. 정정보도문 게재 ····· 36
6. 기 각 ····· 37

제3장 매체별 위반사례 분석 ····· 38

1. 중앙일간신문 ····· 39
2. 지역일간신문 ····· 40
3. 지역주간신문 ····· 41

제4장 심의대상기사의 위반유형별 분석

1. 공정성 및 형평성
가. 인물부각 ····· 42
나. 인터뷰 ····· 43
다. 판세분석 ····· 44
라. 제 목 ····· 45
마. 사 진 ····· 45
2. 여론조사 ····· 46
3. 칼럼게재 제한 ····· 47
4. 상업광고 제한 ····· 47

제3부 종합평가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의 평가 ····· 51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 59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1. 주 의 ····· 67
2. 경 고 ····· 102
3. 경고문 게재 ····· 177

제2장 시정요구 ····· 196
제3장 반론보도 ····· 258

제5부 선거기사심의 관련 법규 및 서식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 269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 273
• 선거기사심의기준 ····· 277
• 서 식 ····· 279

발 간 사

민선 4기째를 맞아 지난 5월 31일 치러진 5·31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참여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이정표로서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사의 흐름을 더듬어보는 시금석으로서의 의미도 막중하였습니다.

금번 선거에서는 과거에 비해 금전, 관권선거의 폐해가 크게 줄었고, 나아가 여러 유권자 단체와 후보자들이 메니페스토(menifesto) 선거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것은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강조했던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견에 대한 검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유권자의 건전한 의사결정은 이른바 '정당선거'라는 큰 물결에 휩쓸려 미처 제대로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근본적으로 그릇된 구태적 정치상황에 기인된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언론이 과연 제대로의 기능을 다 하였는가 하는 엄숙한 물음도 제기케 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있어서의 언론의 기능은 유권자들에게 제반 선거현황을 진실 그대로 전달하고, 나아가 보도의 공정성, 형평성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사결정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저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0년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필두로 하여, 2002년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 2004년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금번 5·3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루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해 그 공정성과 형평성 등 제반 법률위반사례를 심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5·31 선거기사에 대한 위원회의 자체심의결과 선거법 위반유형중 공정성 및 형평성을 어긴 경우가 58.5%로 나타났고, 이것은 일부 언론이 아직도 불공정, 편파적 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조 준 희

라는 구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첩경은 무엇보다도 불편부당한 선거보도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선거보도의 공정성, 진실성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5부로 이루어진 이 백서는 제1부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반 업무현황, 제2부에 5·31 전국동시지방선거기사 심의의결 현황, 제3부에 종합평가, 제4부에 심의의결 사례, 제5부에 선거기사심의 관련 법규 및 서식을 각각 실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립 후 네 번째로 발간되는 이 백서가 향후 선거보도에 있어서 보다 유용한 참고자료가 됨은 물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7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조 준 희**

선거기사심의를 마치면서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민의를 확인하는 대표적 수단임에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선거를 통한 민의는 정당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민의의 중요성 때문에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고, 유권자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민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51.6%로 유권자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물론 선거前 월드컵 분위기 상승과 같은 주변 환경으로 인한 정치 무관심이 최저투표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나온 결과라서 다소 다행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유권자 전체의 민의를 대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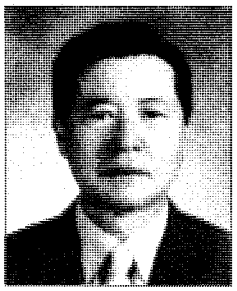
민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면서 방향키와 같다 할 것이기에 그 산출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산출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면 민의로서 가치가 없다 할 것이고, 민주적 민의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

선거를 통한 민의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서 나와야 합니다. 올바른 유권자의 판단은 언론보도를 통한 후보자의 정견, 정당의 정강·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비교·분석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이번 선거보도에서 정국·감성보도를 지양하고 정책보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메니페스토 캠페인을 부각시키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선거 때마다 문제시되었던 유력 정당과 유력 후보 위주의 압축보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유력 정당소속, 여론조사지지율, 유권자의 관심도 등에 따른 일정 정도의 상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은 용인될 수도 있겠지만 선거초반부터 특정 구도로 몰고 가는 여론몰이식 보도는 결국 유권자의 식견있는 판단을 이끌지 못할 것이고, 정확한 민의산출도 어렵게 만들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보도양태라 할 것입니다.

선거보도는 후보자에게는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적으로는 민의를 창출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척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유 효 봉

것입니다.

우리 언론은 선거 때마다 공정보도 준칙을 내세우지만 그러한 보도준칙이 지면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마식, 중계식 보도양태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정책공약 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보도가 재미있고 흥미로울수록 선거기사로서의 순기능적 역할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기계적 균등과 기술적 형평을 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도의 질적 균형을 맞추라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후보와 정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것이 좋은 내용이든 좋지 못한 내용이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지면이 허용되는 한 유권자들에게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특정 후보·정당을 의도적,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기사가 지면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심의기조를 바탕으로 특정 후보 또는 정당에 지극히 편향된 기사에 대해 공정성위반으로 보고 제재조치를 하였으며, 여론조사결과 보도요건 준수 및 공표제한, 칼럼 또는 상업광고 게재제한 등을 지키지 못한 보도에 대해 각각의 법규 위반을 적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이 언론의 선거보도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선거보도문화에 기여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6년 7월

선거기사심의위원장 **유 효 봉**

제1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일반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제3장 선거기사심의기준 관련 법규 개정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일반

1. 설치근거 및 기간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일 2006년 5월 31일) 기사심의위원회는 2006년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0일동안 운영됐다.

2. 구 성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한국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각 1명의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그 결과 한국언론학회는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교수, 대한변호사협회는 하창우 변호사, 한국신문협회는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이경일 겸임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이명순 공동대표, 열린우리당은 박구진 변호사, 한나라당은 숭실대 법학과 강경근 교수 등을 각각 추천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각 추천된 사람에 대해 당적 보유 여부 및 기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들 6인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유효봉 위원, 노향기 위원, 안병준 위원 등 모두 9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6년 1월 31일 제1차 회의 겸 발족식을 개최하여 호선에 의해 유효봉 위원을 심의위원장으로, 이명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3. 기 능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일조한다. 또한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반론보도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방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역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운영방침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하기 시작한 '경고문 게재결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개정(2004. 10. 26.)을 통해 심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결정 유형으로 명문화됐다.

한편,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여론조사결과 보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선거기사심의기준 관련 조항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거판세를 분석하는 보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해당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심의했다.

결정유형별로 심의위원회 운영방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문 게재결정'은 선거법상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죄 광고는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1991년)에 따라, 그 행사를 자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둘째,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은 해당 선거기사가 명백한 오류로 밝혀져 정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참고하여 명백한 오류로 판명된 기사내용에 한해 정정보도 게재결정을 내리는 등 해당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셋째, '경고문 게재결정'은 실효성이 낮은 '사과문 게재'와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을 대체하여 2004년 총선 기사심의위원회에서 새로 도입하여 2004년 10월 26일 규칙이 개정되면서 명문화된 결정유형이다. 이는 주의나 경고 등의 비공개결정으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체심의에 의한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동일한 유형의 위반을 반복하거나 특정 후보를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현저하여 불공정성이 특히 심한 경우 등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넷째, '반론보도문 게재결정'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정정보도문 게재결정'과 달리 신청인에 대한 반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취할 수 있는 결정유형이다. 따라서 여타 심의·의결절차보다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정당(중앙당)과 언론사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만 심의위원회로의 회부가 가능한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제도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사의 사실관계가 어긋나지는 않았으나 신청인에 대한 반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 등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사건 심의에서도 해당 결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섯째, 자체심의안건에 적용하는 결정유형으로는 '경고', '주의'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칼럼을 게재한 경우, 후보자의 저술광고를 게재한 경우 또는 선거일전 6일부터 여론조사결과공표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주의' 결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보도요건을 미비한 채 결과를 공표하였거나 특정 후보를 부각보도한 경우 등에 의결하였다. 또한 2004년 10월 26일 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권고' 결정은 '경고' 및 '주의'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의결된 예는 없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든 후보자들을 동등하게 다루지 않고 소수의 유력 후보자만을 다룰 경우 보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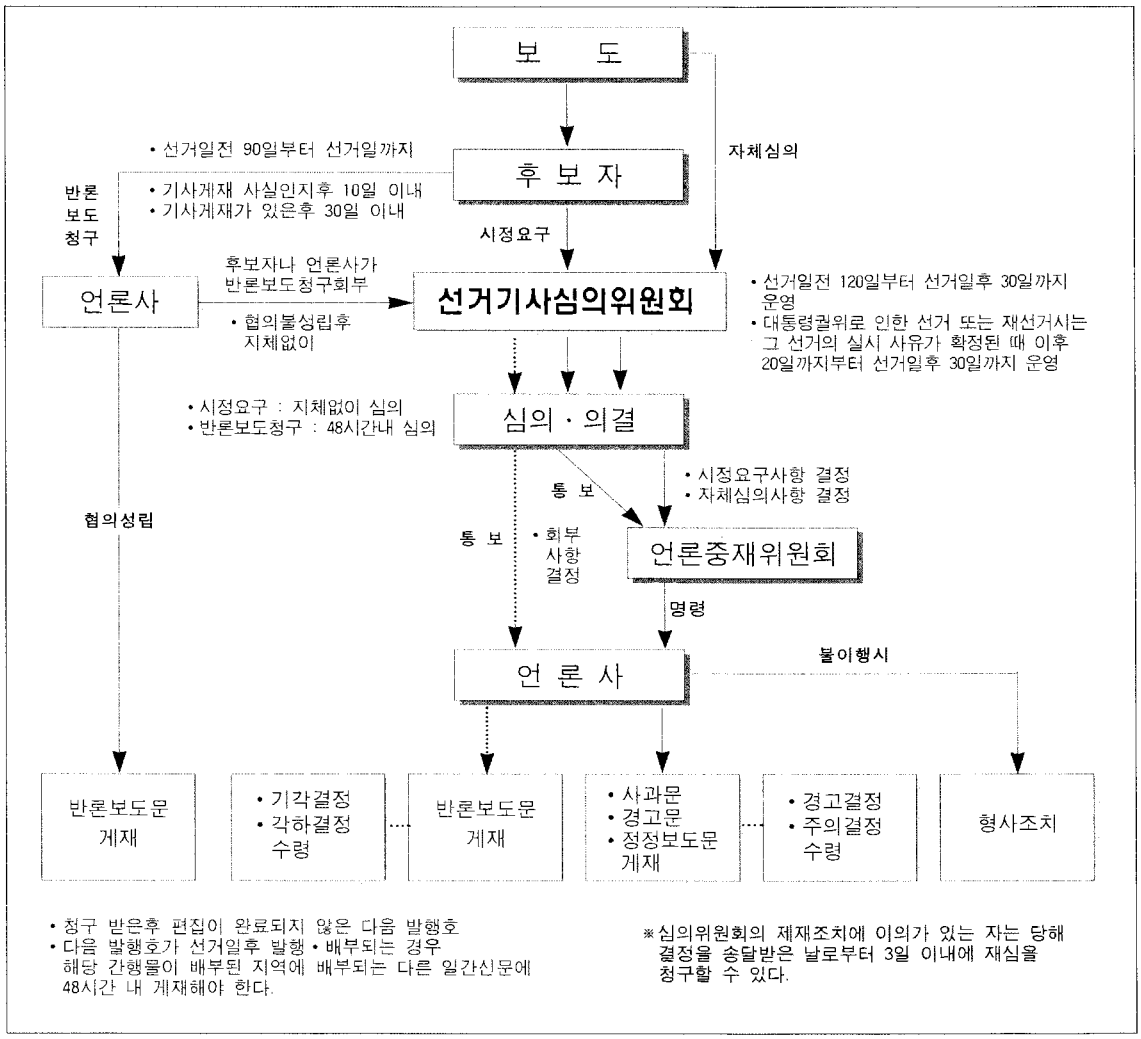
점에 따라 달리 접근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선거 초반부터 소수의 특정 후보자들에 대해 '양강 구도' 또는 '양자 대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판세를 단정지을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부각 보도로 판단하기로 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소수의 특정 후보자들에 대해 유권자의 표심이 집중되어 있음이 공지의 사실로 인정된 상황에서는 뉴스 가치 및 유권자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각도에서 판단하기로 정했다.

2. 심의 · 의결 절차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회부 등에 대해 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 · 의결을 진행했다. 〈표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절차

〈표 1〉



가. 자체심의

심의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불공정보도의 경우 위반 수위에 따라 사과문·정정보도문·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의결한다.

자체심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 전문 모니터요원 및 실무팀이 일간신문, 주간신문 및 주간지, 월간지 등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도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안건에 대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제재수위를 달리하여 결정사항을 의결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해당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시정요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의결한다. 시정요구 역시 자체심의와 같은 절차에 의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및 언론사는 1회에 한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당(중앙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그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단, 기사게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게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반론보도문에 대해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측 모두 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해당 언론사)에게 통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 및 언론사는 1회에 한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처벌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따르지 않은 언론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처해진다.

3. 기사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불공정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입각하

여, 2006년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0일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에 따라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자체심의 53건을 의결하였고, 시정요구 25건과 반론보도청구회부 2건 등 총 80건을 처리하였다. 자체심의의 구체적 결정유형으로는 경고문 게재 6건, 경고 30건, 주의 17건 등이고, 시정요구의 경우 정정보도 게재결정 1건, 반론보도 게재결정 1건, 경고와 주의가 각 2건, 기각 4건, 취하 15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경우 인용과 기각 결정 각 1건씩이었다.

가. 자체심의

심의위원회는 자체 구독한 각종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하여 경고문 게재 6건, 경고 30건, 주의 17건 등을 결정하였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1건(58.5%)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와 '외부기고 제한 위반'이 각 10건(18.9%)이었으며,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과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각 1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지역일간지가 33건(62.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역주간신문 12건(22.6%), 중앙일간지 7건(13.2%), 월간지 1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타 매체에 비해 지역일간지의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나. 시정요구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25건의 시정요구가 접수되어 '정정보도 게재결정'과 '반론보도 게재결정' 각 1건, '경고'와 '주의' 각 2건, '기각' 4건, '취하' 15건 등으로 처리되었다. 이 가운데 취하된 15건은 시정요구 접수 이후 시정요구인에 대한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 등이 게재되었거나, 시정요구인이 해당 절차 이외의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의 이유로 취하가 이루어졌다. 매체별 현황으로는 지역일간지와 지역주간신문이 각 10건(40%)이었고, 중앙일간지에 대한 시정요구는 5건(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반론보도청구회부

반론보도청구회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처음 설치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기사심의위원회 운영 당시 1건이 회부된 이후,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등 세 차례에 걸쳐 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한 건도 회부되지 않았다. 이번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에는 2건의 반론보도청구가 회부되어 각각 인용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처럼 반론보도청구회부 제도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언론사를 필수적으로 경유하여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함께, 후보자들이 해명의 강도가 낮은 반론보도보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정정하기 위해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등의 게재를 청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자체심의 대상매체

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에서 발행되는 7900여종의 정기간행물 가운데, 구독이 가능하고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할 개연성이 높은 중앙일간지 26종, 지역일간지 69종, 시사주간지 및 주간신문 286종, 월간지 7종, 뉴스통신 2종 등 총 390개 매체를 심의대상으로 삼았다. 〈표 2·3·4〉[1)]

심의대상 매체별 현황으로는 일간지 95종, 시사주간지 및 종합주간신문 21종, 월간지 7종, 지역주간신문 265종, 뉴스통신 2종 등이다.

이를 발행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15종(일간지 26종, 시사주간지 8종, 종합주간신문 13종, 지역주간신문 59종, 시사월간지 7종, 뉴스통신 2종), 부산 4종(일간지 2종, 지역주간신문 2종), 대구 7종(일간지 4종, 지역주간신문 3종), 인천 6종(일간지 3종, 지역주간신문 3종), 광주 12종(일간지 11종, 지역주간신문 1종), 대전 5종(일간지 5종), 울산 5종(일간지 3종, 지역주간신문 2종), 경기 50종(일간지 16종, 지역주간신문 34종), 강원 12종(일간지 2종, 지역주간신문 10종), 충북 21건(일간지 5종, 지역주간신문 16건), 충남 20종(지역주간신문 20종), 전북 22종(일간지 6종, 지역주간신문 16종), 전남 38종(일간지 1종, 지역주간신문 37종), 경북 29종(일간지 3종, 지역주간신문 26종), 경남 37종(일간지 4종, 지역주간신문 33종), 제주 7종(일간지 4종, 지역주간신문 3종) 등이다.

자체심의 대상 매체 현황

■ 일간지 95종 (중앙일간지 26종, 지역일간지 69종) 〈표 2〉

발 행 지	매 체 명
서 울(26)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시민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헤럴드경제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칸, 스포츠한국, 일간스포츠 더데일리포커스, 데일리줌, 메트로, 에이엠세븐
부 산 (2)	국제신문, 부산일보
대 구 (4)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인 천 (3)	경도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광 주(11)	광남일보, 광주매일, 광주일보, 남도일보, 대한일보, 무등일보 서남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일보

1) 그동안 舊「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공직선거법」으로 법명 변경)」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매체는 舊「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한다)」상의 '정기간행물'로 규정되어 있었고, 정간법상 '정기간행물'은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로 정의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3년 5월 29일「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하 '뉴스통신법'이라 한다)」의 제정과 함께 뉴스통신이 정간법상의 정기간행물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 바, 그 과정에서「공직선거법」이 뉴스통신에 대한 심의기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뉴스통신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조문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뉴스통신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비록 뉴스통신이 외형적으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이탈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뉴스통신법을 제정하면서「공직선거법」을 정비하지 않아 야기된 문제 즉, 입법상의 과오로 발생한 문제라는 점, 뉴스통신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면 공정한 선거보도 및 심의에 관한 후보자 및 유권자의 신뢰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뉴스통신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언론사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법문대로 해석할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 그 어느 기관에서도 뉴스통신을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등을 고려하여 뉴스통신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일단 뉴스통신을 자체심의 대상으로는 포함시켰으나 적극적으로 심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동안 뉴스통신에 대한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나 반론보도청구회부도 없었다.

발 행 지	매 체 명
대 전 (5)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남일보, 중앙매일, 충청투데이
울 산 (3)	경상일보, 광역일보, 울산매일
경 기(16)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내외일보, 서울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아시아일보, 우리일보 중부일보, 전국매일, 투데이뉴스, 현대일보
강 원 (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충 북 (5)	동양일보, 새충청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한빛일보
전 북 (6)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 남 (1)	전광일보
경 북 (3)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 남 (4)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제 주 (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타임스, 한라일보

■ 주간지 및 월간지 28종 (시사주간지 8종, 종합주간신문 13종, 월간지 7종)

〈표 3〉

구 분	매 체 명
시사주간지 (8)	뉴스메이커, 시사저널,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한겨레21 매경ECONOMY, ECONOMIC REVIEW
종합주간신문 (13)	대한저널, 미래한국, 민주신문, 시민운동연합신문, 시민의신문 시사뉴스, 시사포커스, 오마이뉴스,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현대
시사월간지(7)	말,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한국논단, 여성동아, 여성중앙

■ 지역주간신문 265종 (서울 59종, 지역 206종)

〈표 4〉

	매 체 명
서 울(59)	강남내일신문,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신문,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신문 구로타임즈, 금천뉴스, 금천신문, 노원신문, 뉴스 in 강서양천,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자치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성동신문, 성북신문, 양천신문, 영등포신문, 용산신문 21은평News, 종로신문, 종로저널, 주간 강남신문, 주간 강동신문 주간 노원우리신문, 주간 동북신문, 주간 동작신문, 주간 마포신문 주간 서대문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은평신문, 주간 중랑신문 지역내일신문 23개(강북, 강남서초, 거제통영, 광주, 구미, 대구, 대전 마산창원, 부천, 부평계양, 분당성남, 수원, 안산, 안양, 양천, 용인, 울산 원주, 익산, 일산, 진주사천, 천안, 해운대)

	매 체 명
부 산 (2)	부산여성신문, 영도신문
대 구 (3)	대구달성신문, 대구푸른신문, 팔공신문
인 천 (3)	경인열린신문, 남동신문, 연수저널
광 주 (1)	시민의소리
울 산 (2)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경 기(34)	고양신문, 고양파주자치신문, 과천시대신문, 군포신문, 김포뉴스, 김포신문 동부교차로저널, 미래신문, 반월신문, 부천신문, 부천포커스, 세종신문 수원신문, 시흥자치신문, 시흥 참언론 21, 안산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양광역신문, 안양시민신문, 양주신문, 양평백운신문, 양평신문, 여주신문 연천저널, 용인시민신문, 용인신문, 이천설봉신문, 이천신문, 자치안성 파주저널, 평택시민신문, 포천신문, 한아름뉴스, 화성오산신문
강 원(10)	강릉신문, 강원리뷰, 강원신문, 삼척동해신문, 설악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태백신문, 한중신문, 홍천신문
충 북(16)	괴산증평신문, 목요신문, 보은미래신문, 삼군신문, 영동신문, 옥천신문 음성뉴스, 음성신문, 제천신문, 주간 예성신문, 진천군민신문, 진천시사신문 진천신문, 충북뉴스, 충주신문, 충청리뷰
충 남(20)	공주신문, 금산신문, 금산저널, 뉴스서천, 뉴스청양, 당진시대, 만빛신문 무한정보신문, 백제신문, 보령신문, 보령시민신문, 서천신문, 연기신문 예산신문, 온양신문, 우리고장당진뉴스, 충남시사신문, 천안신문, 청양신문 홍성신문
전 북(16)	고창신문, 고창코리아, 군산미래신문(舊 군산타임즈), 김제시민의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완주신문 익산신문, 임실신문, 전북일요시사, 정부고신문, 정읍신문, 진안신문
전 남(37)	격주간 담양신문, 격주간 만연신문, 고흥타임즈, 곡성신문,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남도 문화저널, 담양주간신문,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새여수신문 순천시민의신문, 여수로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암신문, 예향진도신문 완도타임스, 장성군민신문, 장성닷컴신문, 전남타임스, 정남진 장흥신문 주간 강진신문, 주간 고흥신문, 주간 나주신문, 주간 순천신문, 주간 영광신문 주간 완도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함평신문, 주간 해남신문, 주간 해진신문 주간 화순신문, 진도신문, 진도타임스, 청해진신문, 항도신문
경 북(26)	경북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고향신문, 군위신문, 김천신문, 삼백신문, 상주시민신문, 상주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안동신문, 영남신문, 영덕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영천시민신문, 예천신문, 울진신문, 울진21, 의성신문, 청도신문, 칠곡신문
경 남(33)	거제중앙신문, 거제신문, 거제통영고성타임즈, 거창신문, 경남여성신문 경남우리신문, 경서신문, 고성신문, 김해신문, 뉴스함양, 남해신문, 미리벌신문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사천신문, 새거제,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신문, 주간아림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신문, 진주신문, 진해신문 창녕신문, 통영신문, 하동신문, 함안군민신문, 함안아라신문, 합천신문 황강신문, Weekly경남
제 주(3)	뉴시스제주, 서귀포남제주신문, 제주여성신문

■ 뉴스통신 2종 (뉴시스, 연합뉴스)

제3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법규 개정

1. 공직선거법

가. 경과사항

舊「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개정·공포되면서 「공직선거법」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이 축소되었다.

나. 개정내용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축소하였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 - -. ②~④ (생략)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 - -. ②~④ (현행과 같음)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가. 경과사항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경고문 게재결정'을 2004년 10월 26일 규칙 개정을 통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결정유형으로 명시하였다.

나. 개정내용

자체심의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과문 게재결정'과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을 대체할만한 수단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기사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마련한 '경고문 게재결정'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결정유형임을 명시하였다.

개 정 전	개 정 후
제12조(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12조(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같음)

3. 선거기사심의기준

가. 경과사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2006년 1월 31일자로 선거기사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입법 취지를 살려 해당 조항을 6월 26일자로 재개정하였다. 또한 게재가 제한되는 기고문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게재가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나. 개정내용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축소됨에 따라 1월 31일자로 선거기사심의기준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6월 26일자로 재개정하여 공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여론조사 유형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게재를 제한하는 후보자에 의한 기고문의 범위를 '칼럼이나 저술'로 확대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홍보목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기고문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게재를 허용하기로 개정하였다.

1 차 개 정 (06. 1. 31.)	2 차 개 정 (06. 6. 26.)
제8조 (여론조사 보도) ①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 - -. ③~⑤ (생 략)	**제8조 (여론조사 보도)** ① - - -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11조 (외부기고) ① (생 략) ②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외부기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부 선거기사 심의의결 현황

제1장 심의내용 및 결정개관

제2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1. 경고문 게재
2. 경 고
3. 주 의
4. 반론보도문 게재
5. 정정보도문 게재
6. 기 각

제2장 매체별 위반사례 분석
1. 중앙일간신문
2. 지역일간신문
3. 지역주간신문

제3장 심의대상기사의 위반 유형별 분석
1. 공정성 및 형평성
2. 여론조사
3. 칼럼게재 제한
4. 상업광고 제한

제1장 심의내용 및 결정개관

제4회 5·31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은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심의, 그리고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선거기사 심의의 핵심사항인 자체심의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앞서 심의실무팀에서 대상매체(중앙일간신문 26종, 지역일간신문 69종, 시사주간신문 21종, 지역주간신문 265종, 월간지 7종, 뉴스통신 2종 등 390종)의 선거관련 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공직선거법과 위원회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낸 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특정후보 및 특정정당을 과다하게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크게 위반한 기사에 대해서는 경고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도성과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거나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가 잦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특정후보 및 특정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작성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기사크기가 비교적 작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주의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선거 실시 120일 전인 2006년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두 18차례 회의를 개최한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한 안건 53건 중 6건(11.3%)에 대해 경고문 게재를, 30건(56.6%)에 대해서는 경고, 그리고 17건(32.1%)에 대해서는 주의결정을 내렸다.

경고문 게재나 경고, 주의결정을 받은 53건의 기사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 31건(58.5%)
②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 10건(18.9%)
③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위반 : 1건(1.9%)
④상업광고 제한 위반 : 1건(1.9%)
⑤칼럼 등 게재 제한 위반 : 10건(18.9%)

위반건수를 매체별로 분류해보면, 중앙일간신문의 경우 5개 매체에서 적발된 위반사례는 총 7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3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22개 매체에서 적발된 위반사례는 총 33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1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7건, 칼럼 등 게재 제한 위반이 5건이었다.

지역주간신문의 경우 11개 매체에서 적발된 위반사례는 총 12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1건, 칼럼 등 게재 제한 위반이 5건인 것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이밖에 월간지 한 곳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을 1건 위배했다. 〈표 1〉

자체심의와는 별도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 등 피해당사자가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문 게재 등 시정심의를 요구한 시정요구심의는 모두 25건, 그리고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를 청구한 사례는 2건이었는데, 시정요구 심의의 경우 중앙일간지가 5건, 지역일간지 10건, 지역주간신문 10건이며, 반론보도청구회부건 심의는 지역주간신문 1건과 월간지 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회부 접수 시 안건심의에 앞서 시정요구인(청구인)과 피시정요구인(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은 후 안건을 심의,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거치는데 총 25건의 시정요구 신청을 심의한

결과 정정보도문 게재 1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 1건, 기각 4건의 결정을 내렸으며, 15건은 정정·반론보도문이 게재되거나 언론사의 사과 등으로 심의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됐다. 〈표 2〉

총 2건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의 경우 인용(반론보도문 게재) 1건의 결정이 있었으며, 1건은 기각결정됐다.

이번 지방선거 기사심의에 있어 자체심의 지적건수는 53건으로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의 자체심의 지적건수 46건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며, 2004년의 제17대 총선 때의 69건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이번 선거의 기사심의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시정요구심의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및 2004년 제17대 총선 때보다 월등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2년 지방선거의 경우 시정요구심의는 모두 10건이었고, 제17대 총선 때는 9건이었다.

자체심의 의결현황

〈표 1〉

구분 (간별 /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상업광고 제한	칼럼게재 제한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신문	중앙	7	3	3	1				4	3	
	지역	33	21	7			5	3	18	12	
지역주간신문		12	6			1	5	3	7	2	
월간지		1	1						1		
총계		53 100%	31 58.5%	10 18.9%	1 1.9%	1 1.9%	10 18.9%	6 11.3%	30 56.6%	17 32.1%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표 2〉

구분 (간별 /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정정보도 등	사과문 게재	주의·경고·권고 등	기타 (공정보도 등)	정정보도 게재결정	반론보도 게재결정	경고	주의	기각	취하
일간신문	중앙	5	3			2				1	1	3
	지역	10	8	1		1	1	1			1	7
지역주간신문		10	6		1	3			2	1	2	5
총계		25 100%	17 68.0%	1 4.0%	1 4.0%	6 24.0%	1 4.0%	1 4.0%	2 8.0%	2 8.0%	4 16.0%	15 60.0%

제2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1. 경고문 게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의도성과 함께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거나 동일 유형의 위반 사례가 잦은 언론사에 대해 '경고문'을 게재토록 했다.

경고문 게재결정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적용된 결정사항이다. 그 이전까지 자체심의에 대한 결정 유형으로는 선거법상 사과문, 정정보도문만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과문은 지난 199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고, 정정보도문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던 터라,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기사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주의 및 경고결정만 내려 왔었다. 그러나 주의 및 경고결정은 그 자체로 끝날 뿐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언론사가 이를 스스로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한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지적에 따라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번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총 6건의 경고문 게재결정이 내려졌는데, 매체별로 보면 지역일간신문 2개사에 3건, 지역주간신문 3개사에 각 1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5건, 여론조사 관련 위반이 1건이었다. 이들 가운데 아시아일보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로 2회의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3〉

〈표 3〉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3	아시아일보	2006. 2. 14.	2면	"성남 문화예술 최고 20년 앞당겼다"
2006자심9	종로저널	2006. 2. 13.	1면 5면 〃 〃	남상해회장 출판기념회 대성황 '神이 내리신 사람' "종로의 정신적 보배요 등불" "나는 오늘도 희망의 자장면을 만든다"
2006자심20	만연신문	2006. 2. 14. 2006. 3. 8.	2면 1면 5면	"할머니의 폭설상처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전형준 화·발·연회장 자서전 'CEO전형준의 도전과 희망' 출판 기념회 성황 전형준 화.발.연회장, 조선대학교 객원연구원 위촉
2006자심38	시민일보	2006. 3. 29.	1면 3면	"차기 서울시장은 맹형규" 51.6% "민생안정에 모든 것 걸어라"
2006자심50	양천신문	2006. 5. 8.	1면 2면	추재엽 현 구청장 재신임 출마 선언 추재엽구청장 5.31지방선거 무소속 출마선언 全文

나.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표 4〉

〈표 4〉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6	아시아일보	2006. 2. 3.	2면	100만 성남시민 위한 일꾼은 누구?

2. 경 고

이번 5·31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총 53건의 기사 가운데 56.6%인 30건에 대해 경고결정을 내렸다. 여타 결정보다 월등히 많은 건수이다. 이러한 건수는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경고결정이 12건(26.1%)에 불과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매체별 제재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일간신문과 지역주간신문이 각각 18건, 7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앙일간신문이 4건, 월간지 1건이었다.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내려진 경고결정 2건도 모두 지역주간신문이었다.

이처럼 중앙일간신문에 비해 지역지에 대한 경고결정이 높았던 것은 지역정서에 좌우된 이번 지방선거의 양상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지역신문들은 해당지역을 바탕으로 지역정서에 부합하는 후보나 정당을 편파적으로 부각시켜 불공정하게 보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자체심의에서 가장 많이 경고를 받은 신문은 서울지역 지역일간지인 시민일보로 경고결정 3건과 경고보다 높은 수준인 경고문 게재결정 1건을 받았다.

자체심의를 통해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를 유형별로 보면 ①'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9건(63.3%)으로 가장 많고 ②'칼럼게재 제한 위반' 7건(23.3%) ③'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2건(6.7%), 그리고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위반'과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각각 1건씩이었다.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의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후보예정자를 여러 면에 걸쳐 집중 소개하면서 홍보성이 농후하게 부각하는 경우
2) 선거기간 초반부터 특정 후보예정자를 중심으로 한 양자대결구도로 보도해 타 후보들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3) 선거판세와 관련한 여론조사내용을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예정자를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하는 경우
4)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하면서 편파적으로 부각하는 경우
5) 현직 의회의장 및 기초단체장으로 있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를 통해 활동상 황과 향후 계획 등을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는 경우
6) 특정 후보의 사진만을 편파적으로 게재해 타 후보들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7)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전략을 소개하면서 선거홍보물의 컨셉 등을 홍보물의 사 진과 함께 부각 보도해 타 후보들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8) 특정 후보의 선거활동 동향을 사진과 함께 편파적으로 보도하면서 주요 공약사항 등을 부각시켜 보도하는 경우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 '공정성' 및 제2조 '형평성'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였다. 〈표 5〉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5〉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1	시 민 일 보	2006. 2. 2. 2006. 2. 3. 2006. 2. 9.	3면 3면 4면	"강금실 전 장관과 맞붙고 싶다" 맹형규-강금실 '맞짱' 양상 "강금실 與 입당땐 지지도 추락할 것"
2006자심2	데 일 리 줌	2006. 2. 13.	28면	글로벌감각 탁월한 '여의도 젠틀맨'
2006자심10	전 주 매 일	2006. 2. 15.	1면 2면 〃 3면	김완주시장, 도지사 출마 선언 김시장, 전북농협 개혁안 제시 '전북도백' 건곤일척 승부 '불꽃점화' 김완주시장 고른 지지속 1위 달려
2006자심11	데 일 리 줌	2006. 2. 22.	9면	"청와대 용산이전, 민족 자존심 찾는일"
2006자심12	현 대 일 보	2006. 2. 22.	2면	"지방화시대 걸맞는 의정활동 노력하겠다"
2006자심13	전 민 일 보	2006. 2. 23.	6면	"기업 적극 유치 경제활성화 주력"
2006자심16	대 구 신 문	2006. 2. 24. ~28.	각 5면	선택 5·31 지방선거 D-96~92
2006자심18	전 국 매 일	2006. 2. 28.	1면 16면	국제도시 도약 초석 마련, 교육·문화예술 키울 터 짜임새 있고 표정이 있는 야무진 도시
2006자심32	경 동 신 문	2006. 3. 16.	8면	京東인터뷰 - 광진구의회 추윤구의원 (중곡 4동)
2006자심41	월 간 중 앙	2006년 3월호	246~ 251면	하림각 회장 남상해 질긴 꿈으로 세상을 보듬은 남자
2006자심44	매 일 경 제	2006. 4. 8.	A21면	나는 더 큰 꿈을 따라 걸어 왔네
2006자심45	투데이뉴스	2006. 4. 12.	6면	"지역 발전 녹색도시 건설 앞장"
2006자심48	남 도 일 보	2006. 4. 21. 2006. 4. 26. 2006. 4. 27.	3면 1면 3면 〃 1면	민주당 텃밭 '제2의 DJ'로 위기의 민주당 구할 '구원투수' 나선다 "중앙당이 경쟁력 깎아내려" "우리 호남인들 똘똘 뭉쳐야" 박광태·박준영 '공동번영 상생협력' 선언문 발표
2006자심49	항 도 신 문	2006. 4. 12. 2006. 4. 28. 2006. 5. 5.	5면 5면 1면	'소리없이 강한' 정시장 민생 챙기기 동북아시대 "목포발전 큰 그림 그리겠다" 정종득시장, 지방선거 출마 공식선언
2006자심51	서 울 일 보	2006. 5. 16.	20면	점검/한나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 박주원
2006자심52	경 인 매 일	2006. 5. 17.	3면	도민소득 3만불 '경제 도지사' 약속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53	울 산 매 일	2006. 5. 20.	3면	지방선거 현장 - 표심잡는 후보들
2006자심54	광 역 일 보	2006. 5. 20.	16면	빗속 민심잡기 발품
2006자심55	경기도민일보	2006. 4. 26. 2006. 5. 16. 2006. 5. 24.	각3면	"경기도의 에펠탑 구상중" 화성 병점高서 '애국심' 강조 김문수, 양평시장 유세

나. 여론조사 관련 위반

여론조사 관련 위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여론조사 보도'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 보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보도금지 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 보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이번 심의를 통해 지적된 여론조사 관련 기사는 모두 11건으로,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10건,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위반'이 1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는 3건으로,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2건,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위반이 1건이었다. 나머지 여론조사 관련 위반기사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결정이 7건, 경고문 게재결정이 1건이었다. 〈표 6, 7〉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표 6〉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26	수도권일보	2006. 3. 20.	3면	김문수의원 지지 '45.5%'
2006자심34	아시아일보	2006. 3. 27.	2면	"경선 패배해도 선대위원장 맡겠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표 7〉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56	중 앙 일 보	2006. 5. 30.	6면	서울 · 부산 · 충남 · 광주 유권자 3차 패널조사 - 충남 '박 대표 테러'에 가장 영향 받아

다. 칼럼게재 제한 위반

칼럼게재 제한 위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의 제2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 '외부기고' 규정을 근거로 심의하였다. 이 부분의 위반은 지난 17대 총선이래 대부분 경고결정을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예정자나 후보자의 칼럼은 주관적 판단이 주류인 칼럼의 특성상 선거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거기간 중 후보나 후보예정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하여 적발된 기사가 9건, 그리고 특정 후보예정자를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외부기고문 게재로 적발된 기사가 1건 있어, 총 10건의 기사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를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는 7건이었고 나머지 3건은 주의결정을 받았다. 〈표 8〉

칼럼게재 제한 위반

〈표 8〉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15	거 창 신 문	2006. 2. 20.	9면	지사님 힘내세요!
2006자심28	전 북 일 보	2006. 3. 2.	18면	'재의 나라'에서 개혁의 불씨 지피다
2006자심29	종 로 신 문	2006. 3. 10.	7면	아쉬운 道德政治의 구현
2006자심30	부천자치신문	2006. 3. 11.	10면	실효성 없는 조세개혁
2006자심31	시 민 일 보	2006. 3. 17. 2006. 3. 21.	각 5면	요덕, 충격과 감동의 휴먼 드라마 안전 서울 5대 프로젝트
2006자심36	시 민 일 보	2006. 3. 27.	5면	천막정신이 한나라당의 살길이다 낙후지역 개발에 대해
2006자심43	종 로 신 문	2006. 3. 22. 2006. 3. 29.	7면 6면 7면	5·31지방선거, 종로 체통살려야 서울 돔구장 유소년 전용 야구장 건설하자 지역갈등 해소가 국가발전의 첩경

라. 상업광고의 제한

상업광고의 제한 위반결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 '상업광고의 제한' 부분을 근거로 심의하였다. 이 조항들은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는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규정을 잘 지켰으나, 한 지역주간신문만이 이를 위반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표 9〉

상업광고의 제한 위반

〈표 9〉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37	새여수신문	2006. 3. 13.	1면	박주선과 호남 - 시련에서 영광으로

자체심의 외에 시정요구심의에서도 2건의 경고결정이 나왔다. 지역주간신문인 금천뉴스는 금천구청장선거와 관련해 현 구청장인 특정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하면서 그의 구정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구정 계획 등을 2주 연속 2개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이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정요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고결정을 내렸다.

또 역시 지역주간신문인 보성다향신문에 대해서도 전남 보성군의회 후보예정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소개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 경고결정을 내렸다.

3. 주 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53건의 기사 가운데 17건(32.1%)에 대해 주의결정을 내렸다. 주의결정은 경고결정 30건(56.6%)보다 적은 수치로, 이는 경고보다 주의결정이 많았던(73.9%)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와 대조적이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3건, 지역일간신문이 12건, 그리고 지역주간신문이 2건이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17건의 기사를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각각 7건, 그리고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3건이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기사의 유형별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7건 모두 지역일간지 및 지역주간신문이었다. 이들 지역지는 특정 후보예정자 및 후보를 부각시키는 기사들로 인해 주의결정을 받았는데, 내용들은 대부분 후보등록이나 출마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공직퇴임 등의 시기에 맞춰 후보예정자를 홍보성이 농후하게 부각시키는 기사들이었다. 전북일보의 경우 기초단체장으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특정정당 특정 예비후보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하면서 그의 재임 중 치적과 출마의지 등을 소개해 두 차례 모두 주의결정을 받았다. 〈표 10〉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10〉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17	경 상 일 보	2006. 2. 28.	6면	"학수고대하던 학위받자 울컥"
2006자심23	중 도 일 보	2006. 3. 4.	3면	박성효부시장 한나라 후보 등록
		2006. 3. 7.	2면	박성효 대전 정무부시장 퇴임
			3면	"경쟁력 있다" - "검증 안돼" 상반
		2006. 3. 7.	〃	"50년 인생에 홀로서기 나서"
			〃	악연인가 운명인가
2006자심24	전 북 일 보	2006. 3. 9.	5면	"8년동안 전주와 후회없는 사랑 나눴죠"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25	중 도 일 보	2006. 3. 14.	1면	심대평 지사직 11년 마감
			3면	정치인 심대평 "地選 필승"
			〃	공직생활 40년 … 도지사만 4차례
			〃	중심당 전념위해 사퇴결심.
				'도청' 마무리 못해 아쉬워
			4면	행정도시 건설 확정 '성장' 이끌어
			〃	심지사 사퇴 '나를 따르라'
2006자심33	부 안 저 널	2006. 3. 15.	3면	전국 최고의 자치제로 급부상하는 부안!
2006자심39	전 북 일 보	2006. 3. 30.	5면	"산골오지에 월드시티 희망 심고 떠나 뿌듯"
2006자심40	전북연합신문	2006. 3. 31.	4면	모두가 잘사는 새 임실 만들기 '총력'

나.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모두 7건이 주의결정을 받았는데, 중앙일간신문이 3건, 지역일간신문이 4건이었다. 이들 기사는 여론조사보도요건 중 다른 요건은 대부분 충족했으나 표본오차율을 적시하지 않아 주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역일간신문들 가운데는 '2파전 압축'이나 '김ㅇㅇ 1위' 식의, 불공정한 제목을 단 여론조사관련 보도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들도 있었다. 〈표 11〉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표 11〉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4	한 국 일 보	2006. 1. 31.	3면	강금실 신드롬 실체는?
2006자심5	중 부 일 보	2006. 2. 1.	3면	'김문수-정종흔' 후보 지지
2006자심7	내 일 신 문	2006. 2. 8.	2면	광주 · 전남은 민주당, 전북은 우리당
2006자심8	내 일 신 문	2006. 2. 13.	2면	한나라 예비대의원 마음은 맹형규
2006자심14	아시아일보	2006. 2. 15.	2면	강운태 · 박광태 후보 2파전 예상
2006자심21	광 역 일 보	2006. 3. 1.	2면	UBC 5 · 31 기초단체장 선호도 조사
2006자심27	아시아일보	2006. 3. 20.	1면	경기지사 가상대결, 김문수 1위

다. 칼럼게재 제한 위반

지역일간신문에서 2건, 지역주간신문에서 1건이 칼럼게재제한 위반으로 주의결정을 받았다. 기사들은 모두 특정

후보예정자의 기명칼럼이었다. 이들 칼럼은 선거와 무관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결정을 받았다.〈표 12〉

칼럼게재 제한 위반

〈표 12〉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6자심22	경 기 신 문	2006. 3. 7.	15면	성추행과 골프
2006자심35	전 남 매 일	2006. 3. 22.	15면	'지방재정평가' 조정 필요
2006자심46	순천시민의신문	2006. 4. 12.	6면	순천의 경쟁력을 생각한다

이밖에 시정요구신청에 대한 심의에서도 2건의 주의결정이 내려졌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조선일보가 경기도 고양시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특정 2개 정당 후보예정자만 부각보도하고 나머지 후보예정자들은 단순 소개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결정을 내렸다. 또 지역주간신문인 김천신문에 대해서도 김천시의원 선거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만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 주의결정을 내렸다.

4. 반론보도문 게재

반론보도 게재결정은 시정요구심의와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에서 각각 1건씩 이루어졌다.

시정요구심의의 경우, 인천일보가 2월 17일자에서 이원복 인천시장 후보예정자의 선거출마와 관련, "이원복 위원장의 시장출마선언이 불공정경선 및 후보 줄세우기 논란에 싸여 있으며, 이원복 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타 후보들이 불공정경선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이원복 후보예정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시정요구 신청을 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게재는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자의 주관적 추측에 의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론보도 게재결정을 내렸다.

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경우, 장성군민신문이 4월 25일자에서 고일갑 장성군수 예비후보자가 "거액의 축산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축산물 가공공장을 준공하였으나 가동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국가정책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전남도당은 고 후보에 대한 공천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장성군수 예비후보자는 해당기사가 언론사의 일방적 주장만 싣고 있다며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하였다.

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분을 받아들여 "연이은 구제역파동으로 가공육 판로가 막혀 공장가동이 불가능했으며, 특히 2004년도 구제역청정지역은 제주도뿐으로 여타 지역에서는 육가공을 수출할 수가 없었고, 전남도당은 이와 무관하게 고씨를 장성군수 후보공천자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토록 결정하였다.

5. 정정보도문 게재

시민일보는 4월 18일자에서 "서울 광진구는 권혁모 부구청장이, 강서구는 김도현 당원협의회의장이 각각 후보로

결정될 전망이다"라고 보도한 데 대해 피해자 측에서는 이 보도가 잘못된 것이며 특정후보를 부각하기 위해 보도한 것이라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사과문게재를 요청하는 시정요구를 신청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시민일보의 보도가 오보였다고 판단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결정하였다.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결정한 것은 사죄광고 게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1년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6. 기 각

25건의 시정요구심의 중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4건이었다.

경향신문이 5월 3일자 6면에 『'선택 5·31' 지방선거 열전지대 - 대구』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 후보의 사진과 관련기사를 부각시켜 보도함으로써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민주당후보와 여타 후보들이 선거활동에 심대한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며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예정자가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 강원도민일보는 4월 26일자 5면에 『심 전시장 출마땐 표심 분산. 우세 김 지사 영향 받을 수도』 제하의 기사 및 '거꾸로 보기' 코너의 기사에서 "유 전의원은 도내 당 조직이 사실상 없다시피 해 인지도와 지지도에서 타 후보들과 열세…"로 보도한 데 대해 유승규 국민중심당 강원도지사 후보예정자가 시정을 요구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언론사가 특정선거의 후보예정자 모두를 다루는 판세분석보도 및 소개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 지지도 순위, 유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차별하여 보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정 후보예정자가 여타 후보예정자에 비해 다소 부각 보도된 경우라도 유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은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하에 각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또한 지역주간신문인 영광21이 5월 18일자에 전남 영광 군수후보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강종만 영광군수 후보자가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표본에서 배제되어 여론을 호도한 불공정한 보도행위를 했다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영광21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여론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연령별 분류에서 50대 이상 490명이 기사에서 표기된 50대 490명과 일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사가 '50대 이상'을 '50대'로 단순 오기한 것으로 판단, 특정 연령대를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하였다.

후보 예정자인 경기도 부천시장이 신청한 주간 부천자치신문의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도 기각되었다. 부천시장은 부천자치신문 4월 1일자와 8일자에 '부천시화장터건립반대투쟁위원회'의 명의로 실린 '부천시장이 부천시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제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는 요지의 각 의견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선거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사의 범위에는 일반 기사와 함께 광고도 포함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장기간 부천시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로 분쟁이 계속되어 온 점과 광고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인 2005년 6월 4일부터 계속 게재되어 온 점, 그리고 광고문안에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화장장 건립반대'에 초점을 맞춘 의견광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불공정 선거기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제3장 매체별 위반사례 분석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의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총 390종으로, 중앙일간신문 26종, 지역일간신문 69종, 시사주간지 8종, 종합주간지 13종, 지역주간신문 265종, 월간지 7종, 뉴스통신 2종이었다.

이 중 중앙일간신문 5종, 지역일간신문 22종, 지역주간신문 11종, 월간지 1종 등 모두 39종이 이번 선거기사심의기간 중 최소 1건 이상 법규와 규정을 위반해 주의·경고·경고문게재 등의 결정을 받았다. 심의대상 매체 대비 위반비율은 10.1%로,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의 9.2%, 2004년 제17대 총선 때의 8.9%보다 높았다.

중앙일간신문은 심의대상 26개 매체 중 5개 매체에서 7건이 지적되어 주의 3건, 경고 4건의 결정을 받은바, 매체대비 위반비율은 19.3%였다.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3건, 그리고 '여론조사결과보도 금지 위반'이 1건이었다.

지역일간신문은 심의대상 69개 매체 중 22개 매체에서 33건이 지적되어 경고문게재 3건, 경고 18건, 주의 12건의 결정을 받았으며, 매체대비 위반비율은 31.9%였다. 위반유형과 관련해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7건, 그리고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5건이었다.

지역주간신문은 265개 매체 중 11개 매체에서 12건이 지적되어 경고문게재 3건, 경고 7건, 주의 2건의 결정을 받았다. 매체대비 위반비율은 4.2%였다.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5건,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1건이었다.

그리고 월간지 7개 매체 중 1개 매체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1건이 지적(14.3%)되어 경고결정을 받았다.

전 매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신문은 지역일간지인 아시아일보로 모두 5건을 지적받았다. 〈표 13〉

매체별 위반 현황

〈표 13〉

구분 / 간별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상업광고 제한	칼럼게재 제한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중앙일간지	내일신문	2		2						2
	데일리줌	2	2						2	
	매일경제	1	1						1	
	중앙일보	1			1				1	
	한국일보	1		1						1
	소 계	7	3	3	1				4	3
지역일간신문	경기도민일보	1	1						1	
	경기신문	1				1				1
	경상일보	1	1							1
	경인매일	1	1						1	
	광역일보	2	1	1					1	1
	남도일보	1	1						1	
	대구신문	1	1						1	
	서울일보	1	1						1	
	수도권일보	1		1					1	

구분 / 간별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상업광고 제한	칼럼게재 제한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지역일간신문	시민일보	4	2				2	1	3	
	아시아일보	5	1	4				2	1	2
	울산매일	1	1						1	
	전국매일	1	1						1	
	전남매일	1					1			1
	전민일보	1	1						1	
	전북연합신문	1	1							1
	전북일보	3	2				1		1	2
	전주매일	1	1						1	
	중도일보	2	2							2
	중부일보	1		1						1
	투데이뉴스	1	1						1	
	현대일보	1	1						1	
	소계	33	21	7			5	3	18	12
지역주간신문	거창신문	1					1		1	
	경동신문	1	1						1	
	만연신문	1	1					1		
	부안저널	1	1							1
	부천자치신문	1					1		1	
	새여수신문	1							1	
	순천시민의신문	1				1	1			1
	양천신문	1	1					1		
	종로신문	2					2		2	
	종로저널	1	1					1		
	항도신문	1	1						1	
	소계	12	6			1	5	3	7	2
월간지	월간중앙	1	1						1	
	소계	1	1						1	
총계		53 100%	31 58.5%	10 18.9%	1 1.9%	1 1.9%	10 18.9%	6 11.3%	30 56.6%	17 32.1%

1. 중앙일간신문

중앙일간신문은 종합일간지 3개와 경제지 1개, 무료일간지 1개 등 5개 매체가 여론조사 관련 보도로 4건(57.1%)을, 공정성 및 형평성 관련 보도로 3건(42.9%)을 위반해 경고 및 주의결정을 받았다.

두 번 이상 위반한 매체는 내일신문과 무료일간지인 데일리줌으로, 내일신문은 광주·전남과 전북지역의 선거구도와 관세 및 한나라당 내 서울시장 후보예정자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표본오차율을 미기재하는 등 여론조사보도요건 조항을 두 번이나 위반해 각각 주의결정을 받았다.

데일리줌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기사를 통해 학·경력 및 출마의 변, 공약사항 등을 사진과 함께 홍보성이 농후하게 부각하여 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해 두 번 모두 경고결정을 받았다.

중앙일보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5월 30일자에 보도,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상의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부분을 위반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역시 여론조사 관련 보도로 주의결정을 받은 한국일보는 1월 31일자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열린우리당 강금실 예비후보자의 우세 현상을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도하면서 보도준수사항인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아 여론조사보도요건 관련 조항을 위반하였다.

2. 지역일간신문

지역일간신문 위반사례는 69개 대상매체 중 31.9%인 22개 매체에서 모두 33건을 위반했는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1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7건(21.2%), '칼럼게재 제한 위반' 5건(15.2%)의 순이었다.

이 같은 위반매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경고문게재 3건(9.1%), 경고 18건(54.5%), 주의 12건(36.4%)이었다.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신문은 아시아일보로, 여론조사보도요건 위반 4건 및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건이었다. 아시아일보는 이 같은 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결정인 경고문게재 2번과 경고 1번, 주의 2번을 받았다. 아시아일보는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예정자가 성남시 문화예술을 10~20년간 앞당겨 고급문화예술을 접하게 만들었다는 등 그의 치적을 사실과 의견의 구분 없이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한 것 등에 대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또한 이 신문은 역시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 각 정당별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표본오차율을 미기재하는 등 보도요건을 미충족한 것 외에 객관성이 결여된 표본과 비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한 결과를 보도한 것 등에 대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두 번째로 지적을 많이 받은 신문은 시민일보로, 모두 4건 중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각각 2건으로 경고문 게재결정 1건과 경고결정 3건이 내려졌다.

지역신문의 전반적인 위반유형은 대부분 특정후보를 박스기사나 인터뷰기사, 그리고 보도요건이 미비된 여론조사 기사를 통해 선거에 유리하게 부각시킨 것들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를 폄하하거나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보도는 드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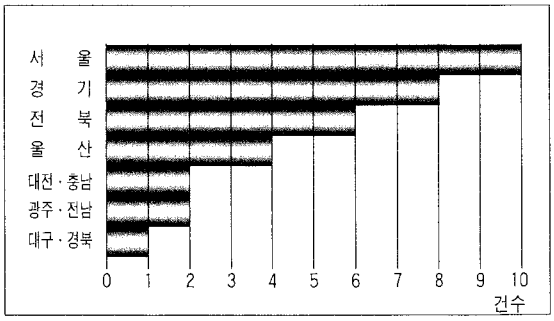
지역일간신문들의 지역별 위반건수를 보면 서울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지역이 8건, 전북지역 6건, 울산지역이 4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지역이 각각 2건, 대구·경북지역이 1건이었다. 인천, 강원 및 경남, 충북, 제주지역은 한 건도 없었다. 참고로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시 대구·경북지역의 신문들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지역은 1건이었다. 〈도표 1〉

지역일간신문의 위반내용 중 특이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북일보는 전주시장 선거와 관련, 특정정당의 현직

발행지역별 위반 현황

〈도표 1〉



시장이 재출마를 선언한 것을 동일자 신문 1면과 2면, 3면에 공약사항 등과 함께 대대적으로 부각 보도하는 한편, 지역의 선거판세를 보도함에 있어 그 후보예정자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해 분석·보도하면서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현저하게 갖추지 않아 경고결정을 받았다.

시민일보는 서울시장 선거 후보예정자인 특정정당 의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기명칼럼을 연속적으로 전재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남도일보는 전남도지사 및 광주시장 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와 함께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사진들과 함께 수일에 걸쳐 집중 보도해 역시 경고결정을 받았다.

울산매일은 후보자들의 선거활동 동향을 다루면서 전체 후보자들 중 특정정당 소속 후보자들 위주로 선별하여 그들의 거리유세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황 등을 현장 사진과 함께 편향적으로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중도일보는 특정정당의 공동대표가 선거지원을 위해 광역단체장을 사퇴한 것과 관련, 1면을 비롯해 3개면에 걸쳐 6개의 스트레이트 및 박스기사로 부각 보도해 주의결정을 받았다.

3. 지역주간신문

지역주간신문은 대상매체 265개 중 4.2%인 11개 매체에서 모두 12건이 지적되었는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50.0%),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5건(41.7%), 그리고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1건(8.3%)이었다. 이들 위반사례들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경고문게재 3건(25.0%), 경고 7건(58.3%), 주의 2건(16.7%)의 결정을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 4개 매체에서 5건이 지적되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남지역 4건, 경기, 전북, 경남지역이 각각 1건이었다.

위반 건수들은 유형상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그의 경력·인생관 등을 다룬 특집기사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종로저널의 경우 1면에 해당지역의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크게 다루는 한편으로 5면에 2개의 특집기사를 통해 이 후보예정자를 크게 부각시켜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만연신문은 전남 화순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각종 동향을 2회에 걸쳐 3개면에 우호적으로 집중 보도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양천신문은 양천구청장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선언과 관련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1면에 보도하는 한편, 2면에 비상식적으로 이 후보예정자의 출마선언全文을 게재해 역시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함께 칼럼게재 제한을 위반한 사례도 많았다. 종로신문의 경우 특정정당 후보예정자의 기명칼럼을 연속적으로 게재해 두 차례 경고결정을 받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특정 후보예정자의 기명칼럼은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거창신문은 현 광역단체장으로 선거에 재출마하는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지극히 우호적인 내용의 외부기고문을 게재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밖에 새여수신문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로 된 저술의 광고를 광고금지 기간(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게재함으로써 경고결정을 받았다.

제4장 심의대상기사의 위반유형별 분석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선거기사와 관련, 자체심의를 통해 제재결정을 내린 대상 기사는 의도적으로 특정후보를 부각시킨, 판세분석과 인터뷰를 포함한 기사내용, 그리고 제목과 사진 등이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보도요건을 미비한 채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한 것 등의 여론조사 관련 기사와 선거일전 90일부터 게재가 금지되는 후보자의 칼럼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위반기사들 가운데 의도성이 높고 정도가 심한 것은 경고문게재를 결정했으며, 이어 경고와 주의 순으로 결정을 내렸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한 기사의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총 위반건수 53건 가운데 특정후보 인물부각 등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기사내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론조사 관련이 11건, 칼럼게재가 10건, 그리고 상업광고게재가 1건이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기사내용을 보도유형별로 다시 세분하면 인물부각이 15건, 인터뷰가 7건, 판세분석이 4건, 사진이 3건, 제목이 2건이었다. 〈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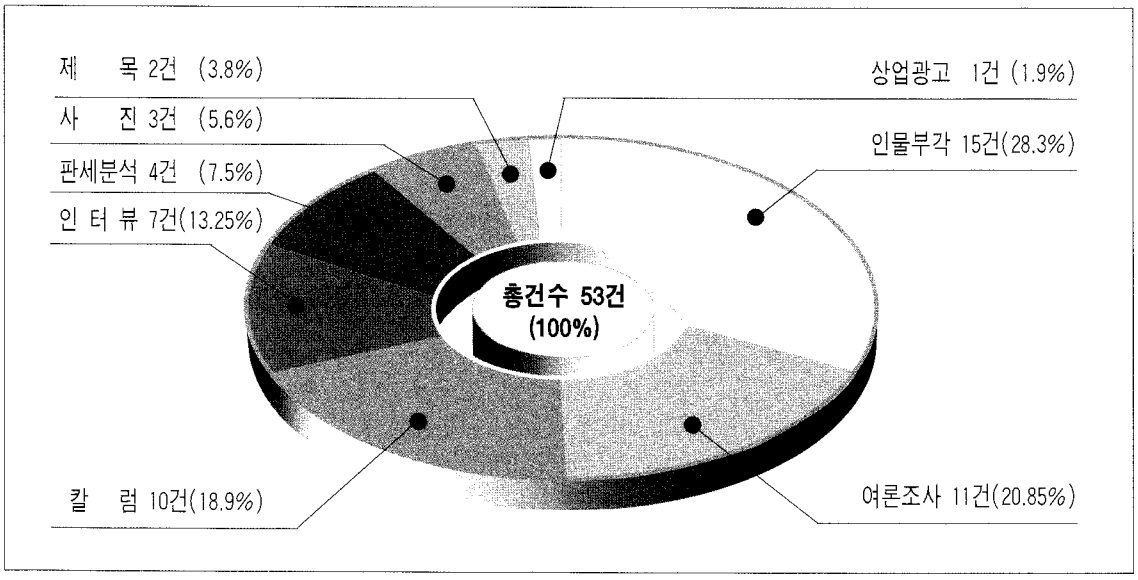
1. 공정성 및 형평성

가. 인물 부각

선거기사심의에서 가장 많은 제재결정을 받은 기사는 인물평을 중심으로 한 후보예정자 내지 후보자에 관한 것들이다. 이들 기사는 대부분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대상자들을 부각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정도가 심한 언론사

위반유형별 분포도

〈도표 2〉



의 경우 특정인물에 대해 같은 날짜 2~3개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하거나 며칠 연속으로 집중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중앙일간신문보다 지역일간신문이나 지역주간신문들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특정 인물을 부각시킨 기사가 많았다. 중앙일간신문 가운데서는 매일경제가 유일하게 인물부각 기사로 경고결정을 받았다. 월간지인 월간중앙도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킨 기사로 경고결정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매일경제는 4월 8일자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예정자의 저술 발간과 관련한 소개기사를 보도했다.

광주에서 발행되는 지역일간신문인 남도일보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예정자인 박광태 현 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예정자인 박준영 현 지사를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선거 전략과 주요 공약사항 및 정치적 의지 등을 4월 21일, 4월 26일, 그리고 4월 27일자에 사진과 함께 집중적으로 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경고결정을 받았다.

서울지역 지역일간신문인 아시아일보는 2월 14일자 2면에 『"성남 문화예술 최고 20년 앞당겼다"』 제하로, 경기도 성남시장선거의 한나라당 후보예정자들 가운데 현 시장인 특정 후보예정자의 재임 중 치적을 사실과 의견의 구분 없이 부각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폄하 보도했다. 또 정당한 근거 없이 당내 경선 결과에 대해 예측보도하기도 해 비교적 무거운 제재인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발간되는 지역주간신문인 종로저널은 2월 13일자에서 후보예정자인 남상해 하림각 대표의 책 출간과 관련한 출판기념회 소식을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5면에 3개의 박스기사를 통해 출판기념회 이모저모와 축사내용, 약·경력, 그리고 살아온 내용을 토대로 한 연재물을 게재해 역시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경상일보는 2월 28일자 6면에 『"학수고대하던 학위받자 울컥"』 제하로, 울산시장에 재출마하는 한나라당 박맹우 울산시장의 행정학박사학위 취득소식을 전하면서 학위취득의 동기와 취득과정에서의 고충 및 논문의 주요내용 등을 부각하는 기사를 인물사진과 함께 게재해 주의결정을 받았다.

서울지역 주간신문인 양천신문은 5월 8일자에서 현 구청장으로 구청장선거에 재출마하는 추재엽 후보예정자의 출마선언 소식을 1면에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함과 아울러 2면에는 이례적으로 이 후보예정자의 무소속 출마의지를 밝히는 선언문 전문을 게재,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히 위반하여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경기도민일보는 경기도지사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 동향과 활동상황, 주요 공약사항 등을 4월 26일, 5월 16일, 5월 24일 사흘에 걸쳐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월간중앙은 3월호에서 『하림각 회장 남상해, 질긴 꿈으로 세상을 보듬은 남자』 제하로, 종로구청장 선거 후보예정자인 남상해씨를 다룬 인터뷰형식의 특집기사를 5페이지에 걸쳐 게재하면서 그의 유년시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경험담과 향후 계획 등을 홍보성이 농후하게 집중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나. 인터뷰

정당공천을 전후해 많은 매체들이 후보나 후보예정자의 정책이나 공약, 정치적 의지, 비전 등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릴레이나 시리즈 형식을 취하는 기사들도 있었으나, 의도적인 차원에서 특정인물부각을 위해 게재한 단발성의 인터뷰기사들이 대부분 제재결정을 받았다. 모두 7건 가운데 중앙일간지로는 무료일간지인 데일리줌이 2건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지역일간지들이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데일리줌은 2월 13일자 28면에서 『글로벌감각 탁월한 '여의도 젠틀맨'』 제하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예정자인 박 진 의원을 인터뷰한 기사를 두 컷의 사진과 함께 게재하면서 그의 학·경력과 출마의 변 등을 부각시켜 소개했다. 해당 신문은 박 후보예정자가 영국의 블레어 총리, 클린턴 전 美 대통령과 옥스포드대학 동창이라는 점, 외무고시 차연소 합격경력, 서울시장 후보예정자로서의 장점 등 지나치게 우호적인 내용들을 소개한 것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고결정을 받았다.

전북 전주에서 발행되는 전민일보는 2월 23일자에서 전북 익산시장 후보예정자인 채규정 현 익산시장을 인터뷰한 기사를 6면에 게재, 재임 중 시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및 진행상황과 각종 사업들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시정계획, 출마의 변 등을 집중 소개했다. 이 기사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할 수 없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6조의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도내용이 후보예정자에게 지극히 우호적인 것이고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경고결정을 받았다.

전북일보는 3월 9일자와 3월 30일자 등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전북도지사 선거를 위해 전주시장을 사퇴하는 김완주 시장과, 역시 전북도지사 선거를 위해 무주군수직을 사퇴하는 김세웅 군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 및 군수 재임시 역점사업과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과 출마의 변 등을 대형 인물사진과 함께 홍보성이 농후하게 보도해 각각 주의결정을 받았다.

전남 목포에서 발행되는 항도신문은 4월 28일자에서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예정자인 정종득 현 시장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와이드인터뷰 형식으로 5면에 대대적으로 소개, 시정 추진현황과 주요 공약사항, 그리고 선거전략 등을 부각시켜 보도함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판단 아래 경고결정을 받았다.

다. 판세분석

선거관련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과 지지율 등을 분석하는 판세분석은 다른 유형의 기사들보다 그 중요성에서 비중이 높다.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판세분석기사가 유동층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선택할 후보를 미처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대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찍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 당사자들은 신문 등에서 보도하는 판세분석의 추이에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를테면 의도가 개입된 판세분석 기사를 부추기는 노력들을 한다.

언론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정당 자체분석, 정밀취재 등에 근거한 판세분석 보도를 해야 한다. 판세분석의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할 때 보도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

우리 언론사들의 판세분석 보도행태는 대개 경마식 보도로 나타난다. 후보들 간의 우열, 즉 누가 얼마나 앞서고 누가 얼마나 처졌느냐 하는 식이 대부분으로, 2파전이니 양강구도니 하는 두 후보위주로 보도하거나, 특정후보 독주니 하며 한 후보를 부각시키는 보도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또 후보들간 '우세·열세' 외에 '경합·혼전·접전', 나아가 '박빙의 승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흥미위주의 보도도 곧잘 등장한다. 유동층 유권자들은 이런 보도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럴 경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제재결정을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한 판세분석 기사가 많았다. 여론조사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위반유형상 여론조사관련 위반과 겹치는 사례들도 두어 건 있었다. 이들 가운데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해 제재결정을 받은 기사들은 모두 4건으로, 중앙일간지 한 곳과 지역일간지 세 곳에서 경고 2건, 주의 2건의 결정을 받았다.

판세분석 기사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내일신문은 2월 8일자 『광주·전남은 민주당, 전북은 우리당』 제하의 기사에서 지역정서 분석 및 각종 여론조사 결과 광주, 전남에서는 민주당, 전북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높아 당내 경선결과가 본선결과로 이어지리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판세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이 판세분석 기사는 불투명한 지역정서와 출처가 모호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인위적으로 선거 구도를 특정정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주의결정을 받았다.

아시아일보는 2월 15일자 『강운태·박광태 후보 2파전 예상』 제하의 기사에서 광주시장선거와 관련, 후보예정자별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민주당의 강운태, 박광태 두 후보예정자의 우위가 뚜렷하다면서 같은 당 두 후보예정자간 양강구도의 선거판세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아 주의결정을 받았다.

전주매일은 열린우리당 김완주 전주시장의 전북도지사 출마선언과 관련한 기사를 1, 2, 3면에 각 게재하면서 『김완주 시장 고른 지지 속 1위 달려』 제하로 김시장의 독주 및 당선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판세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와 같은 판세분석의 근거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내용을 인용했는데, 공표준수사항인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인용,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여론조사 관련사항 위반으로 경고결정을 받았다.

라. 제 목

기사문에서 제목은 기사내용을 압축한 것이다. 기사내용을 다 보지 않더라도 대충 기사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제목이다. 이러한 특성상 때로는 기사 내용보다 과장 내지는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기사에서의 제목은 민감한 것일 수밖에 없고 파급효과 또한 엄청나다. 정당이나 후보, 후보예정자들은 제목 한 줄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사례가 많고 편파시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기사 자체심의에서 제목이 공정성에 위반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사례는 2건이다.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의 7건, 2004년 제17대 총선 때의 5건에 비해 줄었다.

두 건 모두 서울지역 지역일간신문인 시민일보에서 나왔다. 두 건 모두 특정인물을 부각시키는 것들로, 2월 3일자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한나라당 맹형규 후보예정자가 부상하면서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예정자의 유일한 상대가 될 것이란 내용의 기사를 『맹형규-강금실 '맞짱' 양상』 이란 제목으로 3면에 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또 3월 29일자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와 관련해 한나라당 서울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나라당 후보예정자들간의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역시 맹형규 후보예정자를 부각시켰다. 여론조사결과 맹 후보예정자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요지의 기사를 『"차기서울시장은 맹형규" - 51.6%』 라는 제목으로 1면에 보도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고 특정 후보예정자를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여론조사보도관련 위반으로 무거운 조치인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마. 사 진

선거관련기사에서 사진의 불공정사례는 한 지면의 기사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쓴다든가, 한 기사 속에서 특정 후

보예정자들의 사진만 편향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뷰 시리즈기사에서 특정인물 사진을 지나치게 크게 또는 작게 게재하는 것 등이다.

이번 선거기사 자체심의에서 사진보도가 불공정 사례로 지적된 것은 3건이었고 모두 경고결정을 받았다.

사진으로 특정정당과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킨 사례로 지적된 신문은 대구신문이었다. 대구신문은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면에 박스기사로 5·31지방선거와 관련한 고정시리즈를 연재하면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예정자들의 활동 동향만을 담은 사진을 4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 여타 정당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경고결정을 받았다.

울산매일도 5월 20일자 3면에 울산 및 울주군지역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운동 활동상황을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활동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위주로 편집,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정당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역시 경고결정을 받았다.

한 지면에 특정후보의 사진을 여러 컷 게재해 불공정한 사례로 조치를 받은 신문은 서울지역 지역일간신문인 서울일보였다.

서울일보는 5월 16일자 20면에 안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박주원 후보의 약력과 출마의 변, 주요 공약사항 등을 소개하면서 무려 5컷의 박 후보 사진을 게재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2. 여론조사

선거기사의 여론조사관련 위반사례는 모두 11건으로,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대부분인 10건, 그리고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위반'이 1건이었다. 이 중 강도가 높은 결정인 경고문게재가 2건, 경고가 4건, 주의가 5건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보도 금지기간이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이전 선거법규정(선거기간)보다 줄어들어 공표 가능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판세분석을 위한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선거 막판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표본오차율 등을 적시하지 않아 보도요건 미비로 지적된 위반 건수도 많았다.

여론조사결과 보도는 정보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선거기사의 여론조사보도는 반드시 공표 준수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표본오차율을 밝히는 것은 필수적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보도 시 함께 적시해야 할 요건으로 표본오차율을 포함,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정해 심의했다.

여론조사관련 위반사례 중 중앙일간지는 모두 4건으로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서 각각 1건, 그리고 내일신문에서 2건이었다.

한국일보는 1월 31일자 『강금실 신드롬 실체는?』 제하의 판세분석 기사에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예정자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우세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내용을 분석,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아 주의결정을 받았다.

중앙일보는 선거 하루 전인 5월 30일 서울·부산·충남·광주 등 4개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조사를 보도한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규를 어겨 경고결정을 받았다.

내일신문은 2월 8일과 2월 13일자에서 각각 광주·전남·전북지역의 선거판세 및 서울시장선거의 한나라당 예비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인용과 보도요건 미

비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주의결정을 받았다.

지역일간신문인 아시아일보는 2월 3일자 2면 『100만 성남시민을 위한 일꾼은 누구?』 제하의 기사에서 성남시장선거와 관련, 정당 및 각 정당별 예비후보자 지지도에 대해 실시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이대엽 현 시장의 지지도가 가장 높다는 내용과 함께 성남시장 선거판세를 분석·보도하여 비교적 무거운 제재인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이 신문은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보도요건 중 매우 중요한 사항을 보도하지 않았다.

서울지역 지역일간신문인 시민일보는 3월 29일자 『"차기 서울시장은 맹형규" 51.6%』 제하의 1면 머리기사에서 한나라당 서울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나라당 후보예정자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맹형규 전 의원이 51.6%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으나, 표본오차율 등 보도요건을 미비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맹 후보예정자를 홍보성이 농후하게 부각함으로써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3. 칼럼게재 제한

칼럼게재 제한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적용된 선거기사관련 위반사항으로, 이번 선거기사 자체심의에서는 모두 10건이 지적되었다. 위반사례는 지역일간신문이 5건, 지역주간신문이 5건이었으며, 중앙일간신문은 한 건도 없었다.

이 같은 위반에 대해 경고결정이 7건, 주의결정이 3건 내려졌다.

두 차례 경고결정을 받은 신문은 지역일간신문인 시민일보와 지역주간신문인 종로신문으로, 시민일보는 3월 17일자와 3월 21일자에 서울시장 후보예정자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기명칼럼을 게재하여, 그리고 3월 27일자에 같은 서울시장 후보예정자인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기명칼럼을 게재하여 각 1회 경고결정을 받았다.

또 종로신문은 3월 10일자와 3월 22일자, 그리고 3월 29일자에 한나라당 종로구청장 후보예정자인 남상해 하림각 대표의 기명칼럼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예정자인 박진 의원의 기명칼럼을 게재해 각각 경고결정을 받았다.

거창신문은 2월 20일자 9면에 경남도지사 후보예정자인 한나라당 김태호 현 지사에게 지극히 우호적인 『지사님 힘내세요!』 제하의 외부기고문을 게재,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밖에 전북일보는 열린우리당 전북도지사 후보예정자인 김완주 현 전주시장의 기명칼럼을 3월 2일자 18면에 게재해 역시 경고결정을 받았다.

4. 상업광고 제한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상업광고는 새여수신문 1건이었으며, 이에 대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지난 제17대 총선 때는 상업광고제한을 위반한 기사는 모두 3건이었다.

순천시민의신문은 서울시장 선거 후보예정자인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 명의의 저술인 『박주선과 호남 - 시련에서 영광으로』에 대한 상업광고를 광고금지기간인 3월 13일 1면에 게재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제3부 종합평가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의 평가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의 평가

1. 미디어와 선거

장 호 순
선거기사심의위원

□ 경희대학교 영문과 졸업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언론학 박사
□ 바른지역언론연대 자문위원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16명, 구시군 단체장 230명, 시도의원 738명, 구시군의원 2888명 등 총 3872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대규모 선거였다. 최종 투표율은 51.2%로 사상 최저치를 보였던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48.9%보다 2.3%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 16대 대선의 70.8%나 2004년 총선의 69.6%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지방선거는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 등 고질적 선거비리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5·31 지방선거를 이틀 남겨둔 29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 적발·조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54%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50배 과태료와 최고 5억원의 포상금지급제도로 인하여 선거법 위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부터 새로운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서, 선거운동 방법이 혁신적으로 달라졌다. 금품수수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선거운동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각종 집회나 후보자의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고, 대신 신문이나 방송 등을 이용한 미디어 선거가 깨끗한 선거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덕분에 선거 부조리와 더불어 선거비용도 크게 줄어들었다.

미디어는 유권자와 후보자에게 모두 효율적인 선거수단이다. 투표권 행사에 앞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유권자로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언론매체이다. 후보자나 후보자의 운동원으로부터 얻는 정보는 부정확하고 편향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후보자 입장에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보다는 언론매체를 통해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자신의 능력과 정책을 알릴 수 있으므로 미디어 선거를 선호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미디어 선거가 정착되려면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언론의 선거보도가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후보자를 위한 선거보도가 아니라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선거보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할 때 진가를 나타낸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를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퇴출시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청렴하고 유능한 정치인들을 선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

치개혁이 시작되고 민주사회로 한 발짝 더 전진하게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공정하고 유용한 선거보도이다. 유권자들이 언론을 통해 후보자 개인 신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아울러 그가 속한 정당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 숙지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후보자 자신들의 선거유인물이나 선거유세만으로는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감추고 유리한 것만을 선전하면서 상대 정치인들의 약점만을 들추어내게 마련이다. 특히 선거 때일수록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유포시켜 유권자를 현혹하게 마련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는 때가 바로 선거철이다.

미디어는 민주주의 정치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며 불완전한 정치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미디어는 유권자에게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인에게는 여론의 향방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권과 지도층에 제한되어 있던 정치를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설득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닌, 행위의 주체로 승격된다.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도 언론의 정치적 기능을 보호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축으로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민주사회의 혈관으로서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언론의 정치적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후반이후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선거정치가 본격화되었고,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증대되었다. 신문과 방송은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 언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나 압력은 줄어든 대신,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 특히 선거철의 영향력은 매우 증대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가 선거민주주의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일부 신문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왜곡편파보도를 자행하고 지역감정을 선동하는가 하면, 정치 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혐오감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투표율 하락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았다. 해가 갈수록 언론의 선거보도가 예전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완전한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언론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결국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구성하여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와 처벌을 가능토록 했다. 공직선거법은 언론이 후보자의 정견이나 선거운동에 대해 보도하거나 후보자 토론회 등을 방송할 경우 공정하게 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감시하고 시정하기 위해 선거보도에 대한 사후심의절차를 도입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사들은 선심위 조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했었다. 한국신문협회는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 언론사가 반론 및 사과문을 게재토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이의 제기의 기회조차 봉쇄한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각 신문사들도 사설을 통해 선거기사 심의제도가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 언론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한 법적·제도적 규제 장치가 있다. 선거보도의 경우도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수 있고, 민·형사상의 소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 언론보도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권이 공정성을 핑계로 언론에 대한 공격적 메커니즘을 법의 형식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
> (세계일보, 1999년 12월 16일자)

> 우리는 불공정 보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신문을 규제하려는 이런 발상에 동의할 수 없으며,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불공정을 판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언론계·학계·변호사회·시민단체와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선거기사심의위가 그것을 판정한다고

하나, 사법부 아닌 민간단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겨레, 1999년 12월 16일자)

설령 법개정 취지가 사이비 언론의 횡포를 막고 언론피해 구제절차를 단축하는 데 있다고 해도, 이 조항은 비판을 수용하기 싫어하는 측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언론 전체의 논조나 비판기능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독소조항'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철폐를 주장한다.

(조선일보, 2000년 3월 1일자)

2. 선거기사 심의제도

1) 법적 근거

언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제도는 제도화되었고, 이미 수차례 운영되어 왔다. 선심위 제도는 선거보도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사법적 절차 대신 언론중재제도를 원용한 신속·간이한 절차이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모두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간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해서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기사게재 30일 이내에 당해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분쟁당사자들은 지체없이 해당 청구건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때 선심위는 48시간 내에 반론보도문 게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언론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선거보도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공익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천명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여론조사보도의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에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 게재가 금지되고, 선거일전 90일부터는 후보자의 저술 등에 관한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00년 제16대 총선, 2002년 제16대 대선,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각각 새로이 선심위가 구성되어 심의활동을 벌였다. 이는 선심위가 상설기구가 아니라 각 선거 때마다 새로이 설치되어야 하는 한시적 기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심위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를 맡고,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각각 심의를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르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후 30일까지 방송위원회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조의5에는 선관위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방식은 큰 차이가 없어 정당 및 관련학계와,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로 각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위원수와 추천단체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3년 임기의 상설기구라는 점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다르다.

2006년 지방선거관련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통계를 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53건의 자체심의, 25건의 시정요구심의, 2건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등 총 80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경우, 6월말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지상파 방송사의 선거방송 제재 건수는 모두 43건이며, 이 중 KBS

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MBC와 SBS가 각각 10건과 5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06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고문게재' 1건, '경고' 20건, '주의' 21건, '공정보도협조요청' 9건, '기각' 3건 등 총 54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2) 선거기사 심의절차 및 결과

선심위의 심의는 심의위원회 내에 설치된 실무팀이 조사하여 찾아낸 심의기준 위반사례를 심의하는 자체심의와, 후보자들이 선심위에 요청한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심의로 구성된다. 불공정 보도로 판단될 경우, 사과문·정정보도문·경고문 게재나 경고·주의 또는 권고 결정을 내린다. 후보자는 시정요구 외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선심위는 법에 따라 선출된 9명의 심의위원과 심의위원의 심의 업무를 보조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심의실무팀으로 구성했다. 자체심의를 통해 문제가 되는 선거기사의 선정은 사무처 내 전문위원 2인과 전문심의원 4인, 그리고 각 지역사무소장이 맡아 선심위에 상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총 심의대상 매체는 26개의 중앙일간지, 69개의 지방일간지, 265개의 지역주간지, 21개의 시사주간지, 7개의 월간지, 2개의 뉴스통신 등 총 390개였다.

선심위의 결정은 대부분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했다. 제재여부에 대해 위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해 표결에 부친 안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심의위원회의 제재 결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 정정보도문 게재 : 선거기사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왜곡 보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 경 고 문 게 재 :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거나 동일유형의 위 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 경고, 주의, 권고 : 불공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 반론보도 청구 인용 : 반론보도 청구내용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기 각 : 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 각 하 : 청구기간을 도과하는 등 형식과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

2006년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심위는 53건의 자체심의, 25건의 시정요구심의, 2건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등 총 80건을 처리했다. 이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기사심의위의 78건,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시의 56건에 비해 약간 늘어난 숫자이다.

비록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올해의 심의건수는 40%정도 늘어났지만, 전체 후보자의 숫자와 그에 대한 언론보도의 양에 비해서 불공정보도로 심의된 안건은 비교적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년 전 10건에 불과했던 후보자들의 시정요구심의가 올해에는 25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선심위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후보자들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정요구 25건 중 15건이 취하되었는데, 대부분 심의 전에 정정 내지 반론보도가 이루어졌거나 언론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취하한 것이었다.

선심위의 결정은 4년 전에 비해 더 엄격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는 46건의 자체심의 중 경고가 26.1%(12건), 주의가 73.9%(34건)를 차지했으나 올해 선심위의 결정은 경고 이상의 제재가 크게 늘어났다. 경고문 게재가 11.3%(6건)였고, 경고가 56.6%(30건), 주의가 32.1%(17건)였다. 시정요구심의의 결과는 2002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선심위의 심의안건을 매체별로 구분하면 총 80건 중, 중앙일간지가 12건, 지역일간지가 43건, 지역주간지가 23건, 월간지가 2건이었다. 중앙일간지는 4년 전에 비해 2건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지역일간지는 12건, 지역주간지는 11건씩 비교적 크게 늘어났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지가 10개, 지역일간지가 31건, 지역주간지가 12건, 시사주간지 1건, 월간지 2건이었다.

위반유형을 보면, 자체심의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여론조사보도요건 위반,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위반,

상업광고제한 위반, 외부기고 금지 위반 등으로 나타났는데,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비율이 약간 줄어든 대신, 외부기고 금지 위반이 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시정요구심의의 경우, 정정보도 요구가 40%에서 68%로 크게 늘어났다.

3. 선거기사심의제도의 개선방향

1) 선심위 운영상의 문제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기사 심의제도가 원래의 법제정 취지에 보다 긴밀히 부합하려면,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3개 선거기사 심의기구의 통합 : 현재 신문, 방송, 인터넷 등으로 분화된 선거보도관련 심의기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일한 목적의 심의기구이고, 대동소이한 심의규정을 적용하면서 매체 유형에 따라 별도 기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일후 30일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인 반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3년 임기의 상설기구인 점만이 다를 뿐이다.

둘째, 현재와 같은 심의기구의 분산은 후보자, 정당 등 신청인들에게 피해구제를 얻기 위해 세 기구를 일일이 찾아 상이한 절차를 따르게 함으로써 혼란과 번잡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동일한 분쟁 내용에 대한 법리적용의 일관성이 필요함에도 각 기관별 심의 결과가 서로 다를 개연성이 있다. 현재 심의안건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3개의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비용상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셋째, 정간법을 신문법으로 개정하면서 뉴스통신에 대한 피해구제 관할 기관이 모호해졌다. 이를 선심위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이 선거보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당에서도 할 수 있도록 넓혀야 한다.

다섯째, 후보자나 정당이 반론보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사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거두기 힘들다. 언론사와의 사전협의를 임의절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정당 중 중앙당에만 허용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정당의 지역사무소에서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선심위는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으므로 사과문 게재명령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2) 심의 기준의 문제

현행 선심위의 핵심적 심의기준은 공정성(제1조), 형평성(제2조), 객관성(제3조), 공익성(제4조), 정치적 중립성(제5조)이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언론의 편파, 불공정 보도에 시달려온 국민들은 선거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언론의 공정성 여부에 큰 우려를 보여왔다. 비록 그 빈도는 크게 줄었지만 언론들은 여전히 -대신 더 교묘한 방법으로-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인 보도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지면이나 화면을 조작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시절 선거보도에 비해 언론보도의 편파성은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후보자간, 정당간 할애되는 선거관련 지면이나 방송 시간을 양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보도의 양적 균형은 형평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객관성이나 공정성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중립성이나 형평성을 공정성으로 혼동하고 있다. 법원의 중립적인 결정이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보도가 곧 공정한 보도라는 등식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입장을 양적으로 균등히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결코 공정보도의 임무 완수가 될 수는 없다.

'공정성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양적으로 후보자들에게 균등하게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중립적이기는 하지만 공정한 것은 아니

다. 그들의 자질이나 능력에 걸맞은 평가를 할 때 공정한 언론보도가 되는 것이다.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이나 그들이 내놓은 정책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이 결코 언론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후보에게 더 많은 지면을, 혹은 더 적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후보는 10가지의 자세한 공약을 제시하고, 반대후보는 5가지의 공약만을 제시했다면, 10개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두 후보에게 무조건 동일한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열심히 준비한 후보에게는 불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06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기준은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였다. 앞으로 선심위는 현재의 공정성 기준을 양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독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후보자의 옥석을 가리는 제대로 된 언론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언론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선거보도가 양적 형평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정책에 있어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불법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치밀한 보도도 찾아보기 힘들다. 특정후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할 경우, 편파보도라는 비난과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정성 심의기준을 형평성과 구분하여, 형평성이나 중립성을 위반한 선거보도라 하더라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1)]

4. 지방자치와 지역언론

올해 선심위의 심의안건을 언론사별로 보면, 중앙일간지는 12건인 반면, 지역일간지는 43건, 지역주간지는 23건으로 지역신문사들의 불공정보도 사례가 많았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도 중앙지는 10건에 불과한 반면, 지방일간지는 31건, 지역주간지는 12건으로 역시 지역신문사들의 선거보도가 많은 제재를 받았다. 지역신문사들이 중앙일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수적으로 지역신문사들이 중앙일간지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2006년의 경우, 심의대상 매체가 중앙일간지는 26개인 반면, 지역일간지는 69개, 지역주간지는 265개에 달했다.

선거보도에 있어 지역신문의 편파보도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지역신문들이 독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 지방선거에서는 미디어선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출할 후보의 자질이나 그 후보의 정책보다는 정당인지도나 연고 위주로 투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결과 선거를 불과 10일 앞두고도 아직 선택할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5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후보자를 잘 몰라서"가 4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가 19.1%, "후보자의 홍보물·연설회 등을 보고 결정하기 위해서"가 17%, "선거운동을 지켜보고 결정하기 위해서"가 10.3%로 나타났다.

---

1) 선심위는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기간 동안 '합리적 차별 허용'을 심의 잣대로 새롭게 정립하기도 했다. 선심위는 선거관세 분석보도 및 후보자 소개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 지지도 순위, 유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차별하여 보도할 수 있다고 보고 특정 후보가 여타 후보에 비해 다소 부각 보도된 경우라도 유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은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시도가 공정한 선거보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게 틀림없지만, 그같은 잣대만으로는 매우 복잡·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선거기사에 대해 그 공정성을 심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언론체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낮고, 자연히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과 같이 중앙 중심적 언론체제로는 지방자치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

자치란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지방자치는 자치의 권리를 지역적인 단위로 행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권력의 남용과 독재정치의 출현을 방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수개인의 권력독점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의 권력집중화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그러한 중앙권력의 지역분산이라는 기본조건은 충족되지 않았고, 결국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나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달성되지 못했다. 지역사회의 민주화나 지역사회의 성장 그리고 지역격차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물론 지난 15년간의 지방자치가 실패한 것만은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의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고, 민선단체장의 임기보장으로 지역행정의 책임의식과 봉사의식이 강화되었다. 특히 지방행정의 주민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행정이 상명하달식의 권위주의적 행정에서 주민의 자율성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바뀌었고, 과거의 통제관리식 행정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행정으로 바뀌었다. 또한 각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사회가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제도적인 미비점도 있지만, 지방자치 성공의 절대요소인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지 못해 지역사회내의 정보교환, 비판감시, 여론수렴 등 민주적 의사소통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론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없듯이 지역언론 없는 지방자치란 있을 수 없다.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정부를 감시·비판하는 수단이 없다면 지방자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는 사실상 지역언론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되었고 이는 4번째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한 올해에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15년이 지난 현재도 지역언론, 특히 지역신문의 실정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구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관공서 주변에만 수천 부 정도 배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기득권자와 관공서의 대변지로 전락했고,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하는, 즉 지역의 후보자와 지역의 유권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유권자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한 후보만을 선택하는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각기 다른 후보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도 중앙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앙언론이 수만 명에 달하는 후보자들을 일일이 다 소개해 줄 수는 없다. 전국적 언론이 각 지역마다 상이한 선거의제나 후보자의 신상에 대해 소상하게 보도할 지면이나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선거에도 중앙언론은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보다는 각 정당 대표의 선거유세에 집중했고, 독자와 시청자들은 정작 자신들이 뽑아야 할 후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언론으로부터 얻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소위 "묻지마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지방자치 선거이지만, 중앙당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미디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지방선거는 중앙권력의 지역 쟁탈전으로 변질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착보수주의를 기득권으로서 정착시켰다. 지역언론

의 부실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능력 검증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신지역, 가문, 출신학교 등 연고가 튼튼한 사람이나 선거자금이 많은 지역유지들이 지역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지자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부분의 지역토호 세력들은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지역언론 부재로 인한 감시 소홀의 틈을 이용, 겉으로는 행정 감시나 주민권익보호를 앞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기득권 세력과의 야합과 타협을 통해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집단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그 결과 지역분권은커녕 지방정부의 부패, 지역의 비효율성만 높아져 오히려 지방과 중앙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맺음말

현대 시민사회에서는 정치과정의 대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권자들이 정치현안을 직접 분석하거나 정치인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유권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언론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을 거친 정치뉴스나 논평이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권자들은 뉴스보도, TV 토론, 여론조사, 사설-칼럼 등을 통해 정치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정치적 현안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판단을 한다. 즉 현대민주주의 정치는 대부분 언론을 매개로 혹은 언론을 의식해서 이루어진다. 언론은 정치의 필수요소인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면서도 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는 주된 이유도 언론의 정치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정치권력의 압력이나 보복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보도가 전제되어야 시민들이 정부를 선택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라는 특권을 누리는 언론에게는 유권자의 뜻을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고 정치인들의 활동상을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고 적절하게 보도할 때 민주주의가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할 때 진가를 나타낸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를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퇴출시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청렴하고 유능한 정치인들을 선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사회로 한 발짝 더 전진하게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공정하고 유용한 선거보도이다. 유권자들은 언론을 통해 후보자 개인 신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아울러 그가 속한 정당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 숙지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후보자 자신들의 선거유인물이나 선거유세만으로는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감추고 유리한 것만을 선전하면서 상대 정치인들의 약점만을 들추어내게 마련이다. 특히 선거 때일수록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유포시켜 유권자를 현혹하게 마련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가 바로 선거철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보도는 언론의 존재이유나 다름없는 것이다. 언론이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보도를 할 때, 유권자들은 현명한 공중(informed public)이 되고 민주주의의 완성도는 높아진다. 지방자치제도에 걸맞은 언론체제가 구축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적절하게 균형잡힌 선거보도 문화가 정착되어 선거보도심의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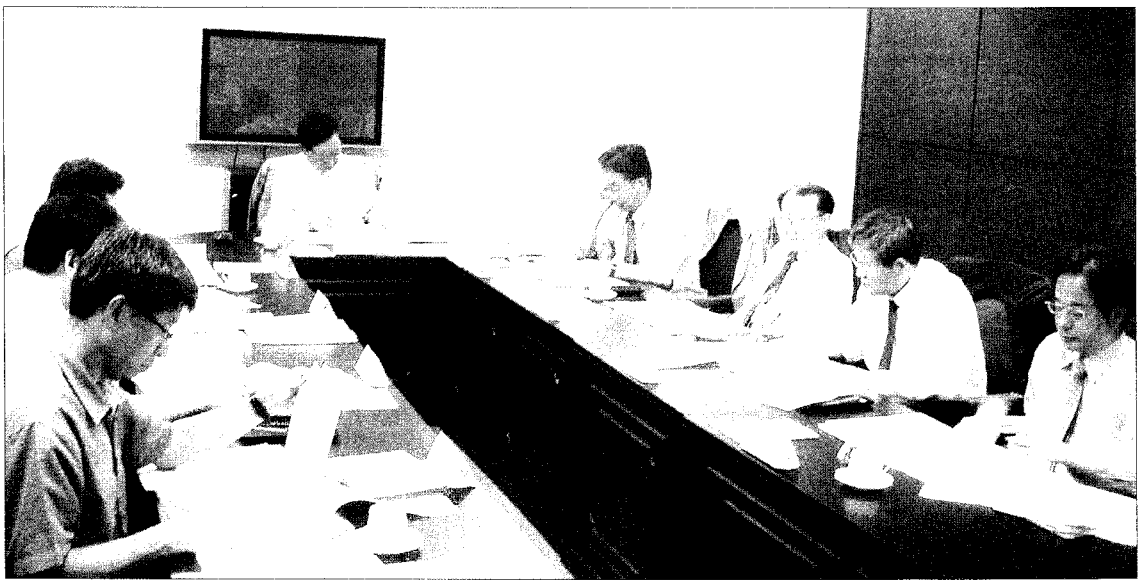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평가

일 시 : 2006년 6월 26일 오후 4시
장 소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실

참 석 자 명 단

- 유 효 봉 (庾孝鳳, 심의위원장, 사회)
- 이 명 순 (李明純, 부위원장)
- 이 경 일 (李耕一,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 노 향 기 (盧香基, 前 월간 말 발행인)
- 안 병 준 (安秉峻, 前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박 구 진 (朴九鎭, 변호사)
- 하 창 우 (河昌佑,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강 경 근 (姜京根, 숭실대 법학과 교수)
- 장 호 순 (張浩淳,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좌담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로 150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좌담회를 열어, 이번 선거보도의 실태 및 심의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후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 편집자

위원장 : 오늘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자체심의 53건, 시정요구 25건, 반론보도청구회부 2건 등 총 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사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 46건, 시정요구 10건 등 총 56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같은 심의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관련하여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보도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근 위원 :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개정되어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까지 각 지역구별 후보자들간의 경쟁이 아닌 정당간의 대결구도로 인식되어 지역현안에 대한 보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지역일꾼을 뽑는다는 취지가 퇴색된 경향이 컸습니다. 이처럼 언론사가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는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만한 이슈를 제시하는 것에도 실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향기 위원 : 이번 선거보도에서는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보도는 미미한 반면에, 광역단체장과 정당대표 등에 관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는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 보니 유권자들로서는 선거공보물에만 의존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당간 대결구도에 따른 보도에서 탈피하여 지역 쟁점에 대해 초점을 맞춰 이를 이슈화한다면 각 후보자 및 공약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유권자의 투표행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후보자별로 비중을 달리하여 보도하거나,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유력 후보자만을 선정하여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뉴스가치 및 유권자의 관심도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한 보도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마련하는 등, 공정보도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립한 것도 이번 심의위원회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 효 봉** 심의위원장*

이명순 부위원장 :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유급제가 도입되어 예년에 비해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보도 역시 과열양상을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실제 이뤄진 보도수위로 미루어볼 때 당초 예상보다 언론사들이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선거기사의 공정보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평가에도 반영되어 발전기금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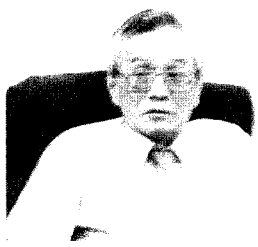
당초 예상보다 언론사들이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거기사의 공정보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명 순 부위원장

장호순 위원 :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시민단체와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미미했던 반면, 오히려 신문, 방송 및 기존 언론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매니페스토 캠페인 등 선거와 관련한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낮아, 결국 언론보도를 통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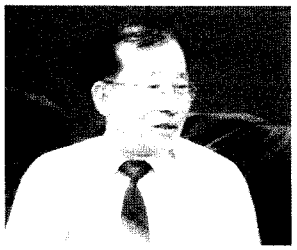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선거보도의 실태를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의 뉴스가치와 언론사 입장에서의 뉴스가치가 상반된 양태를 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광역단체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조명한 반면, 유권자들은 해당 지역의 행정전반을 이끌어갈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보 욕구가 더욱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유권자들로서는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고, 지역의 담론을 생산해야 하는 지역언론까지도 중앙 언론에 의존하여 보도하다보니, 내 지역의 일꾼을 직접 뽑는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디어 제공자와 수용자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자치제가 원만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언론과 지역 단위 언론간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일 위원 : 일반적으로 중앙 언론사들은 공정보도 등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많아 여타 지역의 군소 언론사들에 비해 공정한 선거보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기사심의위원회 활동 당시 자체심의를 통해 중앙일간지가 6건 제재받은 것에 비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7건이 제재받아 중앙 언론사에 의한 선거기사의 공정성 유지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앙 언론사들이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지역 언론에 비해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중앙 언론이 오히려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보도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할



중앙 언론사들이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지역 언론에 비해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중앙 언론이 오히려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보도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 일 위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조치에 대해 재심청구가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의위원회 결정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 향 기 *위원*

것입니다.

한편 지역 신문들의 경우 예년의 선거보도에 비해 공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영향도 크지만, 매니페스토를 실천하려는 언론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강화된 선거법으로 인해 혼탁 선거가 방지되어 선거보도문화에까지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 전체적으로 중앙 언론사보다 지역 언론사의 위반 건수가 많은 것은 지역 언론사 중 상당수가 재정적으로 취약하여 해당 지역단체장 및 지역유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사의 존립을 위해 지역단체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기초의원에 대한 보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 지역 언론사들의 공정보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언(政言)유착 관행이 근본적으로 타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성과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향기 위원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조치에 대해 재심청구가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의위원회 결정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구진 위원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한 건수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보여 선거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의위원회 발족 시기에 맞춰 심의대상 매체들에게 '선거기사심의편람'을 발송하여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회의가 끝날 때마다 각 언론사들에게 의결사항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창우 위원 : 이번 심의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여타 심의기구에서도 유사 사건에 대한 우리 심의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판단근거로 삼기도 하고,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공정성이 의심되는 기사에 대한 판단을 의뢰해오기도 하는 등 우리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상 또한 한층 높아진 것으로 자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1997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하여 언론에서 지역구별 후보자들을 다룰 때 국민적 관심도와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인지 여부 등에 따라 후보자별로 비중을 달리하여 보도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차별로 규정하여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유력 후보자만을

제재조치를 받은 언론사들을 보면 대부분 지역의 군소 매체들로서, 중앙일간지나 지역 유력 일간지의 위반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규모가 작은 언론사일수록 선거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병 준 *위원*

선정하여 이력이나 공약사항 등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뉴스가치 및 유권자의 관심도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한 보도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방침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추상적인 기준으로써만 판단해오던 후보자별 공정보도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립한 것도 이번 심의위원회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더욱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심의대상 매체들에게 '선거기사심의편람'을 발송하고, 의결사항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 구 진 위원

노향기 위원 : 자체심의를 통해 불공정한 선거기사 53건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취한 결정으로는 '경고문 게재' 6건, '경고' 30건, '주의' 17건 등으로 '경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 결정은 해당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불공정성에 대해 자각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의 실효성이 낮아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결정유형으로 '경고문 게재결정'이 있으나, 법상 보장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결정권한인 '사과문 게재'보다 낮은 수위의 결정유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적용이 어려운 '사과문'에 버금가는 제재수단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병준 위원 : 제재조치를 받은 언론사들을 보면 대부분 지역의 군소 매체들로서, 중앙일간지나 지역 유력 일간지의 위반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규모가 작은 언론사일수록 선거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이들 군소 언론사들에게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경근 위원 : 중앙일간지의 경우 외양상으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지보다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비치지만, 관련 조항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방식으로 불공정한 보도를 일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련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도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융통성있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기간행물,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를 일원화하여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유권자 및 후보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현 체제로서는 심의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하 창 우 위원

이경일 위원 :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특정 정당 대표가 유세 중 피습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현안에 대한 보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지역일꾼을 뽑는다는 취지가 퇴색된 경향이 컸습니다. 이처럼 언론사가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는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만한 이슈를 제시하는 것에도 실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 경 근 위원

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는 물론, 사설과 논평 등을 통해 노골적인 논조로써 여론을 이끌어가려는 언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적용할 만한 잣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과정에서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기고 형식의 칼럼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행태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호순 위원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통해 의결한 건수 53건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이 3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은 위반 여부가 명확한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나 '외부기고 조항 위반' 등과 달리 판단기준이 애매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후보자들에게 노출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치우치는 등 양적인 형평성 위주로 판단해왔습니다만, 향후에는 양적인 형평성 못지않게 내용적인 측면의 질적인 형평성 또한 주요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창우 위원 : 현재 정기간행물,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를 일원화하여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유권자 및 후보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150일동안 한시적으로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현 체제로서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재·보궐선거 관련 기사심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선거별 심의위원회가 설치될 때마다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함에 따라 심의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위원장 : 심의기구의 분산으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한 제재조치가 매체별로 상이하게 내려진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지위 또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각 심의기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도 크게 흔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의기구의 통합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번까지 통산 5회에 걸쳐 운영되어 관련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해가며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상의 미비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공정한 선거보도문화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후보자들에게 노출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치우치는 등 양적인 형평성 위주로 판단해왔습니다만, 향후에는 양적인 형평성 못지않게 내용적인 측면의 질적인 형평성 또한 주요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장 호 순 위원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1. 주 의
2. 경 고
3. 경고문 게재

제2장 시정요구

제3장 반론보도

제1장 자체심의

1. 주 의

안건번호 : 2006자심4

언 론 사 : (주)한국일보사
서울시 중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이 종 승

주 문 : (주)한국일보사가 발행한 한국일보 2006년 1월 31일자 3면 『강금실 신드롬 실체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한국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지지도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중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우세 현상을 분석·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케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차기 서울시장 지지도' 한나라4명 합한 것보다 높아

강금실 신드롬 실체는?

非정치인·개혁적 이미지 '신선'
여성·신비주의적 스타일도 한몫
본선서 위력 발휘할지는 미지수

■ 16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지지도 조사

〈보도내용〉

'차기 서울시장 지지도' 한나라4명 합한 것보다 높아

강금실 신드롬 실체는?

'강금실 서울시장' 신드롬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강 전 법무장관이 차기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오래전이지만, 최근 조사에선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단계로 치닫고 있다.

SBS가 TNS와 공동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지지도 조사를 실시, 28일 보도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에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강 장관은 35.6%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한나라당 후보로 거론되는 맹형규(11.1%) 홍준표(10.9%) 박진(2.5%) 의원과 권문용(3.5%) 강남구청장 등 4명의 지지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SBS조사에선 서울의 정당지지도가 우리당 23.9%, 한나라당 42.6%로 한나라당이 20% 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척박한 여건에서도 강 전 장관의 인기가 한나라당 주자들을 압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꼽히는 요인이 강 전 장관은 비(非)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TNS 이상일 부장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큰 와중에 정치권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강 장관이 신선해 보이는 것"이라며 "지난해 고건 전 총리의 지지도가 치솟았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당 정장선 의원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도 역설적으로 인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非 정치인 · 개혁적 이미지 '신선'
여성 · 신비주의적 스타일도 한몫
본선서 위력 발휘할지는 미지수

여기에 개인 이미지가 한 몫을 한다는 지적이다. 미디어리서치 김지연 이사는 "장관 재임시 보여줬던 개혁적 이미지, 자기 할 말은 똑 부러지게 하는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등이 긍정적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업무성과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지만, 상당수 국민의 뇌리에는 신선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이라는 점과 신비주의적인 스타일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장관이 걸친 보라색 숄'은 당시로서는 파격이었다. 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으로서 캐리어우먼이 풍기는 일종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게 주효한 것 같다"고 평했다.

하지만 요즘의 인기가 본선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키 어렵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귀영 연구실장은 "강 장관의 지지 층은 20~30대가 주축인데 이들의 투표율이 낮다는 게 약점"이라며 "정당지지도가 주요 변수가 되는 지방선거에서 개인인기가 계속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의 인기가 구체적 실적 보다는 이미지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막상 정치 검증대에 올라섰을 때는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5

언 론 사 :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대표이사 임 재 율

주 문 : (주)중부일보가 발행한 중부일보 2006년 2월 1일자 3면 『'김문수-정종흔' 후보 지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중부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 및 시흥시장)와 관련, 시흥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조사의뢰자,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케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시흥시민들 '차기 경기지사-시흥시장' 선호도

'김문수-정종흔' 후보 지지

김 37.90%, 정 41.80%로 1위

경기 시흥시민들은 차기 경기지사 후보로 한나라당 김문수(부천 소사) 의원, 시장 후보로 같은당 정종흔 현 시장을 가장 높게 지지하거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여론조사기관인 정치발전연구원 부설 KPDI가 지난 24,25일 양일간 시흥시민 1천409명을 대상으로 CTS를 이용한 자동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도지사후보 지지도에서 37.90%, 정 현 시장은 시장후보 인지도에서 41.80%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도지사 후보 지지도의 경우 김 의원에 이어 전재희(광명을) 의원이 18.74%, 김영선(고양 일산을) 최고위원은 17.67%, 이규택(이천·여주) 최고위원은 10.08%로 나타나 1강·3중 양상을 보였다. 차기 시장후보는 인지도에서 김왕규 시의원이 36.20%, 홍기표 NGO환경운동본부 시흥지회장이 34.92%를 나타내 1위인 정 현 시장을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민들 '차기 경기지사-시흥시장' 선호도

'김문수-정종흔' 후보 지지

김37.90%, 정41.80%로 1위

경기 시흥시민들은 차기 경기지사 후보로 한나라당 김문수(부천 소사) 의원, 시장 후보로 같은당 정종흔 현 시장을 가장 높게 지지하거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후보 지지도의 경우 김 의원에 이어 전재희(광명을) 의원이 18.74%, 김영선(고양 일산을) 최고위원은 17.67%, 이규택(이천·여주) 최고위원은 10.08%로 나타나 1강·3중 양상을 보였다. 차기 시장후보는 인지도에서 김왕규 시의원이 36.20%, 홍기표 NGO환경운동본부 시흥지회장이 34.92%를 나타내 1위인 정 현 시장을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후보 단순지지도를 보면 김 시의원이 26.19%로, 25.62%를 차지한 정 현 시장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 대조를 보였다.

홍 지회장은 15.54%를 나타냈으며, 32.65%는 아직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시장후보 단순지지도를 보면 김 시의원이 26.19%로, 25.62%를 차지한 정 현 시장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 대조를 보였다.

홍 지회장은 15.54%를 나타냈으며, 32.65%는 아직 '없다'고 응답했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7

언 론 사 : (주)내일신문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55번지
대표이사 장 명 국

주 문 : (주)내일신문이 발행한 내일신문 2006년 2월 8일자 2면 『광주·전남은 민주당, 전북은 우리당』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내일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선거 판세에 대해 분석 보도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케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광주 · 전남은 민주당, 전북은 우리당

고건 신당 출현 여부, 호남지역 지방선거 뒤흔들 새 변수로 부각

5 · 31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은 광주 · 전남에서는 민주당 강세가, 전북에서는 열린우리당 우세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서는 경쟁이 본선 못지 않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광주시장을 두고 박광태 시장과 강운태 전의원이, 전남지사를 놓고 박준영 지사와 박주선 전의원간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당에서는 전북지사를 둘러싸고 강현욱 지사와, 김완주 전주시장, 유성엽 정읍시장간 3파전 양상으로 당내 경선 구도가 짜여졌다.

고 건 전 총리를 매개로 한 지방선거 이전 '신당 창당' 움직임은 호남지역 지방선거 판도를 바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상태다.

♦강운태 무소속 출마할까? = 광주 · 전남은 민주당 경선 결과가 곧 본선 결과로 이어지리란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고 건 전총리를 중심으로 한 신당 추진 움직임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지역 정가에서는 고 건 신당이 지방선거 이전에 가시화되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할 것 같은 민주당 예비 후보' '우리당 출마 예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탈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광주 · 전남지역의 우리당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거의 대부분 탈당, 고 건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광주시장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로 박광태 시장과 강운태 전장관 가운데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당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 경선 결과가 곧 본선 승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광태 시장의 독주체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강운태 전 의원이 당헌당규상 운영위원장 사퇴 규정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강 전 의원이 움직이려면 3~4월경에는 고 건 신당이 떠야 한다는 전제가 실현돼야 하기 때문이다. 강 전 의원은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낮은 정당 지지율과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등에 출마할 예비 후보들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출마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 장관은 고사한 상태다. 김재균 우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전략공천은 없다'며 당내 경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정현 수석부대변인이 출마를 준비중이고, 민노당에서는 오병윤 시당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 전남지사, 박준영, 박주선간 치열한 양박 대결 = 전남지사 역시 민주당 경선 결과가 곧 본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준영 지사에 박주선 전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경선 방식'으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최인기 전남도당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방식'을 없애고, '당원과 도민 참여경선 방식'을 도입, 전남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체육관 경선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현역 지사인 박준영 지사에게는 여론조사 방식이 포함된 경선방식이 유리한 반면, 여론조사를 없애면 박주선 전의원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두 번째 변수는 당내 경선이 전남 동부권(보성) 출신의 박주선 전의원과 서남권 출신(영암)의 박준영 지사간 '동서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다. 경선이 동서 대결 양상으로 치러지면 박 전의원이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남 동부권이 전남 서남권에 비해 인구가 2배 정도 많기 때문이다. 박주선 전의원도 이런 여건을 감안, 선거 사무실을 순천에 두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낮은 정당 지지율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출마가 유력시됐던 주승용 의원도 출마를 포기한 상태다. 한나라당에서는 박재순 전남도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영입, 출마시킬 예정이다.

♦ 전북, 강현욱 현 지사 거취 최대변수 = 열린우리당의 우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사 선거의 관전포인트는 강현욱 지사의 거취와 고 건 전 총리의

본격적인 정치활동 개시 시점으로 모아진다. 김완주 전 주시장과 함께 열린우리당 공천 경쟁을 양강 구도로 이끌어 온 강 지사가 방향을 전환할 경우 열린우리당 공천경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지역정가에서는 열린우리당 공천경쟁을 벌이는 강현욱 지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당 공천과 관계없이 직접 본선에 뛰어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별 고른 지지를 바탕으로 현역의 힘을 앞세우면 본선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도 나온다.

또 2월10일로 예정된 '2002년 민주당 도지사후보 경선 비리' 재판결과도 강 지사의 본선직행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강 지사측 핵심운동원으로 활동한 'o'씨가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이어서 2심에서도 '비리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강 지사의 거취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열린우리당 공천경쟁에 전격적으로 합류한 유성엽 정읍시장은 "강 지사가 열린우리당 공천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강 지사의 빈자리를 염두에 두고 출마를 결정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 하나 중요변수는 고 건 전 총리가 지방선거 전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다. 고 건-강현욱, 혹은 고 건-민주당 짝짓기가 현실화 될 경우 열린우리당이 압도하고 있는 현상황이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문용주 전 전북도교육감을 영입해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은 염경석

마라 가보는 5.31지방선거 광주 · 전남 · 전북

광주 · 전남은 민주당, 전북은 우리당

고건 신당 출현 여부, 호남지역 지방선거 뒤흔들 새 변수로 부각

도당위원장이 나선다. 민주당은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과 이무영 전 경찰청장, 장성원 전 의원 등이 후보 물망에 올라 있는 가운데 '대어급' 인물인 진념 전 경제부총리 영입설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세웅 무주군수도 민주당 공천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이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8

언 론 사 : (주)내일신문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55번지
대표이사 장 명 국

주 문 : (주)내일신문이 발행한 내일신문 2006년 2월 13일자 2면 『한나라 예비대의원 마음은 맹형규』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내일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예비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공표준수

사항인 조사의뢰자,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케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한나라 예비대의원 마음은 맹형규

디오피니언 여론조사 … 맹형규 42.2%, 홍준표 23.1%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 대의원들은 맹형규 예비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디오피니언이 지난 7일 서울지역 예비대의원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나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감 선호도' 전화조사에서 맹형규 후보가 42.2%의 지지를 얻었다. 홍준표 의원은 23.1%로 2위를 차지했으며, 박 진 의원 9.7%, 박계동 의원 3.6%, 권문용 강남구청장 3.0%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5%였다.

맹 후보의 의원직 사퇴의 영향력에 대해선 74.6%(매우 도움이 될 것 27.6%+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47.0%)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1.0%(별로 도움 안됨 17.7%+전혀 도움안됨3.3%)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주)디오피니언 관계자는 "맹형규 예비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한 것이 예비대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보다 한나라당 대의원들이 맹 후보의 의원직 사퇴를 높이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이 여론조사는 차기 예비대의원은 1350명(서울시당위원장 선출당시 대의원, 각 지역 운영위원, 사이버·차세대·홍보·중앙위·여성·청년위원회 지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중 813명이 참여했다.

한나라 예비대의원 마음은 맹형규

디오피니언 여론조사 … 맹형규 42.2%, 홍준표 23.1%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 대의원들은 맹형규 예비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디오피니언이 지난 7일 서울지역 예비대의원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나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감 선호도' 전화조사에서 맹형규 후보가 42.2%의 지지를 얻었다. 홍준표 의원은 23.1%로 2위를 차지했으며, 박 진 의원 9.7%, 박계동 의원 3.6%, 권문용 강남구청장 3.0%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5%였다.

맹 후보의 의원직 사퇴의 영향력에 대해선 74.6%(매우 도움이 될 것 27.6%+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47.0%)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1.0%(별로 도움 안 됨 17.7%+전혀 도움 안 됨 3.3%)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주)디오피니언 관계자는 "맹형규 예비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한 것이 예비대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보다 한나라당 대의원들이 맹 후보의 의원직 사퇴를 높이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이 여론조사는 차기 예비대의원은 1350명(서울시당위원장 선출당시 대의원, 각 지역 운영위원, 사이버·차세대·홍보·중앙위·여성·청년위원회 지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중 813명이 참여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안 건 번 호 : 2006자심14

언 론 사 : 아세아일보(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7
대표이사 권 기 호

주 문 : 아세아일보(주)가 발행한 아시아일보 2006년 2월 15일자 2면 『강운태·박광태 후보 2파전 예상』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아시아일보가 광주시장 선거 판세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등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

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5·31지방선거-광주

강운태·박광태 후보 2파전 예상

광주시장 후보간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의 강운태, 박광태 후보가 모두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당지지도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후보자간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우위가 뚜렷했다.

강운태 전 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나섰을 경우 열린우리당 정동채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우위를 보였다. 강운태 32.2%, 정동채 28.9%를 기록했으며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와 한나라당 이정현 후보가 각각 9.9%, 5.5% 지지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운태 후보가 동구(50.8%)와 남구(47.3%)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으며 정동채 후보는 광산구(36.1%)와 북구(32.0%), 서구(29.7%)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당 박광태 후보와 열린우리당 김재균 후보,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 한나라당 이정현 후보 사이의 가상대결에서는 박광태 후보가 30.2%로 김재균 후보(28.6%)를 허용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95%p)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5·31지방선거-광주

강운태·박광태 후보 2파전 예상

광주시장 후보간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의 강운태, 박광태 후보가 모두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당지지도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후보자간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우위가 뚜렷했다.

강운태 전 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나섰을 경우 열린우리당 정동채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우위를 보였다. 강운태 32.2%, 정동채 28.9%를 기록했으며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와 한나라당 이정현 후보가 각각 9.9%, 5.5% 지지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운태 후보가 동구(50.8%)와 남구(47.3%)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으며 정동채 후보는 광산구(36.1%)와 북구(32.0%), 서구(29.7%)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당 박광태 후보와 열린우리당 김재균 후보,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 한나라당 이정현 후보 사이의 가상대결에서는 박광태 후보가 30.2%로 김재균 후보(28.6%)를 허용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95%p)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17

언 론 사 : (주)경상일보
울산시 남구 무거동 299-10
대표이사 신 원 호

주 문 : (주)경상일보가 발행한 경상일보 2006년 2월 28일자 6면 『학수고대하던 학위 받자 울컥』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경상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현 지역자치단체장인 특정 후보예정자의 박사학위 취득 소식을 전하면서 학위 취득까지의 경위 및 그의 행정 철학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박맹우 울산시장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학수고대하던 학위 받자 울컥"

"박사학위를 받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학위를 받던 날 평소와는 달리 집사람까지 대동했습니다. 그만큼 학수고대하던 학위였기 때문이죠"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체까지 행정실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도통한 박맹우 울산시장(55)이 지난 25일 동의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꽉 짜여진 스케줄에 매여 사는 박 시장이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또 다시 행정학 공부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증은 그의 명료한 설명에 금방 풀린다.

"행정고시를 통해 현장에 뛰어들면서 대학시절 행정학 전공을 하던 때와는 달리 좀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행정에 대한 학문적 갈증, 다시 말해 현장 행정에 환류될 수 있는 이론에 대한 갈증이 커졌지요"

그러나 박 시장은 지난 2003년 박사과정을 신청하고 난 뒤에도 고민도 많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다.

"민선 광역시장의 일은 생각했던것 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빠듯한 일정 속에서 시간 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공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행정학과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일과시간이 끝나고 저녁 외부일정이 마무리된 밤 10시 이후에 영어공부를 했다. 또 불가피한 술자리를 서둘러 끝내고 수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강의실에서 술냄새를 풍기기도 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이 교수님들에게 가장 '골치아픈 제자'였으리라고 박 시장은 스스로 고백했다.

"지금도 교수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으로서 해야할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또 논문을 준비하면서부터는 거의 밤잠을 설쳤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박 시장의 논문제목은 '지방정부 조직진단의 모형 정립과 적용'. 박 시장은 이 논문에서 조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사고와 근무분위기 등을 조직진단 기준에 새롭게 도입해 주목을 끌었다. 조직구조와 기능이 아무리 잘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행태를 등한시하고는 올바른 진단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 연구의 모델을 울산광역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도사리고 있었다.

"논문의 테마가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돼 있어 직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조직축소를 우려한 직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논문을 발표하던 날에는 수십명의 대학원생들과 장시간 질의·응답·토론시간을 가졌는데, 토론의 주제가 다양하고 깊어 다시한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함께 공부한 대학원생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않고 있다는 박 시장은 앞으로도 행정공부는 계속 할 것이며, 훗날 은퇴하고 난 뒤에는 실물과 이론을 종합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강단에서 후배들에게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맹우 울산시장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학수고대하던 학위 받자 울컥"

현장행정 보완할 학문적 갈증으로 시작한 공부

울산시 모델로 '지방정부 조직진단 모형 정립'

빠듯한 시간으로 밤잠까지 설치며 논문 준비

안 건 번 호 : 2006자심21

언 론 사 : (주)광역일보
울산시 남구 신정1동 1285-1 태형빌딩 4층
대표이사 조 희 태

주 문 : (주)광역일보가 발행한 광역일보 2006년 3월 1일자 2면 『UBC 5·31 기초단체장 선호도 조사』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광역일보가 울산방송이 실시한 울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판세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조사기관·단체,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ubc 5·31 기초단체장 선호도 조사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의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구 에서는 조용수 현 구청장이, 남구에선 김헌득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울주군은 엄창섭 현 군수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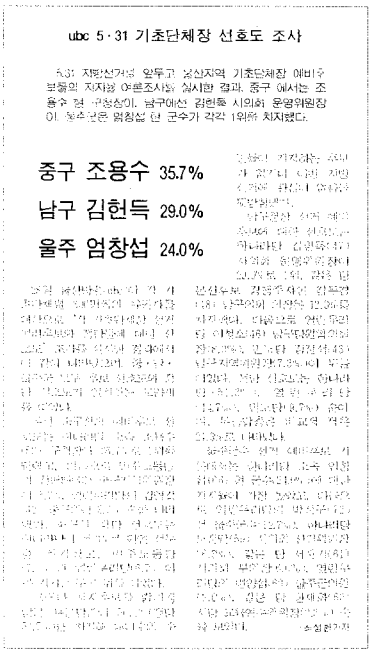
중구 조용수 35.7%
남구 김헌득 29.0%
울주 엄창섭 24.0%

28일 울산방송(ubc)이 각 기초단체별 300명씩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각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와 정당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이 같이 나타났으며, 중·남·울주군 모두 후보 선호도와 정당 선호도가 일치하는 모양새를 띠었다.

우선 중구청장 예비후보 선호도는 한나라당 소속 조용수(53) 구청장이 35.7%로 1위를 달렸고, 다음으로 민주노동당의 천병태(43) 중구지역위원장이 5.7%, 열린우리당의 김영길(43) 중구의원 3.7% 순을 나타냈다. 중구의 정당 선호도는 한나라당이 35.3%로 단연 선두를 차지했고, 민주노동당(7.3%)과 열린우리당(6.7%)이 큰 격차를 두고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지지후보를 밝히지 않은 무응답층이 50.0%(정당 50.7%)를 차지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음을 뒷받침했다.

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한나라당 김헌득(47)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9.0%로 1위, 같은 당 본선후보 경쟁주자인 김두겸(48) 남구의회 의장은 12.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열린우리당 이철호(46) 남구당원협의회장(8.0%), 민노당 김진석(43) 남구지역위원장(7.3%)이 뒤를 이었다. 정당 선호도는 한나라당(51.3%), 열린우리당(14.7%), 민노당(9.7%)


ubc 5·31 기초단체장 선호도 조사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의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구 에서는 조용수 현 구청장이, 남구에선 김헌득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울주군은 엄창섭 현 군수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중구 조용수 35.7%
남구 김헌득 29.0%
울주 엄창섭 24.0%

순이며, 무응답층은 비교적 적은 24.3%로 나타났다.

울주군수 선거 예비후보 가운데서는 한나라당 소속 엄창섭(66) 현 군수(24.0%)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열린우리당의 박진구(72) 전 울주군수(12.7%), 한나라당 노진달(59) 시의회 산건위원장(6.3%), 같은 당 서진기(61) 시의회 부의장(6.0%), 열린우리당의 변양섭(60) 울주군의원(2.0%), 같은 당 한재화(60) 시당 교육연수위원장(0.3%) 순을 보였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22

언 론 사 : (주)경기신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대표이사 정 충 남

주 문 : (주)경기신문사가 발행한 경기신문 2006년 3월 7일자 15면 『성추행과 골프』 제하의 칼럼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경기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의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성추행과 골프

신 종 철 경기도의원, 열린우리당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주제로 한마디 해보고자 한다.

야당의 중진의원이 술좌석에서 모신문 여기자의 가슴을 거칠게 껴안은 성추행으로 당직에서 물러나고 탈당(실제로는 거의 출당이다)한데 이어 이제는 의원직 사퇴의 절벽에 몰려버렸다.

국무총리가 3.1절에, 그것도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등과 골프를 즐겼다가 총리직 사퇴위기에 몰려 있다.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결정을 하신다니 과연 대통령과 가장 코드가 맞는다는 이총리를 읍참마속(泣斬馬謖)할지도 궁금하다.

이 두 사건은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건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변명과 변호는 가관이다.

먼저 '여기자 성추행'과 관련한 황당한 이야기들.

첫 번째, 당사자는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했다."고 변명하였다. 과연 음식점 주인은 성추행해도 된다는 말인가? 전국의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미쳐 버릴 지경이라고 한다.

두 번째, 한나라당 정의화의원은 "술이 약한 분이 60이 넘긴 나이에 과음을 해서 급성알코올 중독 증세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고 유추된다"고 하였다. 또 하나, 열린우리당 한광원의원은 최의원의 행동을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 누구나 그 향기에 취하고 싶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만져 보고 싶은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세상의 섭리다."라고 주장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사실 술자리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성에 대한 남성의 호기심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추행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어떤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 것일까?

'3.1절 골프'와 관련한 황당한 이야기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회의에서 "등산은 괜찮고 골프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하였다. 아니 평상시에 골프치던 등산가던 누가 문제를 삼겠는가? 철도파업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이에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총리의 자세를 지적한 것인데.

여당 정동영 대표는 '공직자의 자숙과 기강확립'을 강력히 제기하였고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총리의 처신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잇달았다. 하지만 여당의원들 속에서도 "총리는 골프가 낙인 사람"이라던가 "골프광"이라는 등의 정말 문제의 핵심과 관련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한다.

공인으로, 공복으로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찌 평범한 사람과 같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옛 성현들은 '오이밭 밑에서는 짚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마라'는 교훈을 주셨다.

통문

성추행과 골프

신종철

경기도의원, 열린 우리당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주제로 한마디 해보고자 한다.

여당의 중진의원이 술좌석에서 모신 분 여기자의 가슴을 거칠게 껴안은 성추행으로 당직에서 물러나고 탈당(실제로는 거의 돌당이다) 한데 이어 이제는 의원직 사퇴의 철벽에 몰려버렸다.

국무총리가 3.1절에, 그것도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과 골프를 즐겼다가 총리직 사퇴위기에 몰려 있다.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결정을 하신다니 과연 대통령과 가장 코드가 맞는다는 이총리를 읍참마속(泣斬馬謖) 할지도 궁금하다.

이 두 사건은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건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변명과 변호는 가관이다.

먼저 '여기자 성추행'과 관련한 황당한 이야기들.

첫 번째, 당사자는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했다."고 변명하였다. 과연 음식점 주인은 성추행해도 된다는 말인가? 전국의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에 마쳐 버릴 지경이라고 한다.

두 번째, 한나라당 정의화의원은 "술이 약한 분이 60이 넘긴 나이에 과음을 해서 급성알코올 중독 증세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고 유추된다"고 하였다. 또 하나, 열린우리당 한광원의원은 최의원의 행동을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 누구나 그 향기에 취하고 싶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만져 보고 싶은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세상의 섭리다."라고 주장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사실 술자리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성에 대한 남성의 호기심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추행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어떤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 것일까?

'3.1절 골프'와 관련한 황당한 이야기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회의에서 "등산은 괜찮고 골프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하였다. 아니 평상시에 골프치던 등산가던 누가 문제를 삼겠는가? 철도파업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이에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총리의 자세를 지적한 것인데.

여당 정동영 대표는 '공직자의 자숙과 기강확립'을 강력히 제기하였고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총리의 처신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잇달았다. 하지만 여당의원들 속에서도 "총리는 골프가 낙인 사람"이라던가 "골프광"이라는 등이 정말 문제의 핵심과 관련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한다.

공인으로, 공복으로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찌 평범한 사람과 같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옛 성현들은 '오이밭 밑에서는 짚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마라'는 교훈을 주셨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23

언 론 사 : (주)중도매일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7-11
대표이사 김 원 식

주 문 : (주)중도매일이 발행한 중도일보 2006년 3월 4일자 3면 『박성효부시장 한나라 후보등록』, 동년 3월 7일자 『박성효 대전 정무부시장 퇴임』(2면) 『"경쟁력 있다"-"검증 안돼"상반』(3면) 『50년 인생에 홀로서기 나서』(3면) 『악연인가 운명인가』(3면) 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중도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전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공천 신청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공천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공직 사퇴 관련 인터뷰기사를 게재하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를 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박성효부시장 한나라 후보등록

대전시장 예비후보…
공천땐 '現시장vs부시장' 대결 전망

송천영 전(前)의원도 등록… 이달 중순께 추가신청

박성효 대전시정무부시장(51)이 3일 한나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5·31지방선거 예비후보 공천신청 마감일인 이날 박부시장은 서울 중앙당에 대리인을 통해 시장후보로 등록했으며, 전날 송천영 전 국회의원도 이날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부시장의 대전시장 후보 등록이 한나라당 대전시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무시장의 후보등록 후 공천을 받을 경우 한 솥밥을 먹던 염홍철 현 대전시장과의 '시장 VS 부시장' 간 대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부시장 시장 출마위해 사퇴하나 = 5·31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 대전시당의 문을 두드려 온 박부시장의 시장후보등록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뜻밖의 행보라는 반응이다.

박부시장은 지난해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강창희 시당위원장의 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해, 박부시장의 시장 출마 기대가 사그라드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로인해 최근에는 한나라당 동구청장 내지는 유성구청장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던 박부시장이 급(級)을 높여 시장후보에 등록, 향후 추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오후 늦게 강창희 시당위원장을 만나 시장후보 등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박부시장은 "모든 것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시장이 시장후보에 등록함에 따라 조만간 박 부시장의 사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사퇴 시기는 외유중인 염홍철 대전시장이 귀국하는 내주 초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 대전시장 후보는 = 5·31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마감일인 3일 박 부시장과 송천영 전국회의원 2명이 등록했지만 이달 중순 추가로 공천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당장에 후보군은 가시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당은 그동안 영입에 공들여 온 정종환 철도시설공단이사장의 등록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박 부시장과 송 전국회의원, 정 이사장 등 3파전마저 예상되고 있다.

박 부시장과 송 전의원의 후보등록에 대해 강창희 시당위원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나 시장후보에 등록하는 건 당연하다. 공천신청에 하자가 없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 대전시장 후보 출마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정종환 철도시설공단이사장에 대해 "(출마를 부인한 이후) 정 이사장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지 못해 의중이 무엇인지 아직 알수가 없다"며 "본인의 의사를 직접 듣고 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효부시장 한나라 후보등록

대전시장 예비후보… 공천땐 '現 시장vs 부시장' 대결 전망

송천영 前의원도 등록… 이달 중순께 추가신청

박성효 대전시정무부시장(51)이 3일 한나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5·31지방선거 예비후보 공천신청 마감일인 이날 박부시장은 서울 중앙당에 대리인을 통해 시장후보로 등록했으며, 전날 송천영 전 국회의원도 이날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부시장의 대전시장 후보 등록이 한나라당 대전시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무시장의 후보등록 후 공천을 받을 경우 한 솥밥을 먹던 염홍철 현 대전시장과의 '시장 VS 부시장' 간 대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부시장 시장 출마위해 사퇴하나 = 5·31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 대전시당의 문을 두드려 온 박부시장의 시장후보등록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뜻밖의 행보라는 반응이다.

박부시장은 지난해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강창희 시당위원장의 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해, 박부시장의 시장 출마 기대가 사그라드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로인해 최근에는 한나라당 동구청장 내지는 유성구청장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던 박부시장이 급(級)을 높여 시장후보에 등록, 향후 추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오후 늦게 강창희 시당위원장을 만나 시장후보 등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박부시장은 "모든 것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시장이 시장후보에 등록함에 따라 조만간 박 부시장의 사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사퇴 시기는 외유중인 염홍철 대전시장이 귀국하는 내주 초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 대전시장 후보는 = 5·31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마감일인 3일 박 부시장과 송천영 전국회의원 2명이 등록했지만 이달 중순 추가로 공천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당장에 후보군은 가시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당은 그동안 영입에 공들여 온 정종환 철도시설공단이사장의 등록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박 부시장과 송 전국회의원, 정 이사장 등 3파전마저 예상되고 있다.

박 부시장과 송 전의원의 후보등록에 대해 강창희 시당위원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나 시장후보에 등록하는 건 당연하다. 공천신청에 하자가 없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 대전시장 후보 출마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정종환 철도시설공단이사장에 대해 "(출마를 부인한 이후) 정 이사장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지 못해 의중이 무엇인지 아직 알수가 없다"며 "본인의 의사를 직접 듣고 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은병 기자

(2006년 3월 4일자 3면)

❀ ❀ ❀

박성효 대전 정무부시장 퇴임

"열린우리당에 실망 한나라 입당" 밝혀

박성효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6일 "열린우리당에 실망해 한나라당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실망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이 때문에 한나라당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부패한 지방권력의 척결론'과 관련 "지방에서 근무해 온 나로선 동의할 수 없다"며 "중앙이나 정치권의 부패가 지방정부의 부패보다 적다는 것은 중앙 우위적 사고"라고 꼬집었다.

박 부시장은 이어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수권할 수 있는 정당이 한나라당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내 개인적인 성향도 한나라당과 맞는다"고 당의 선택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박성효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퇴임식을 갖고 2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박성효 대전 정무부시장 퇴임

"열린우리당에 실망 한나라 입당" 밝혀

박성효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6일 "열린우리당에 실망해 한나라당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실망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이 때문에 한나라당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그는 최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부패한 지방권력의 척결론'과 관련 "지방에서 근무해 온 나로선 동의할 수 없다"며 "중앙이나 정치권의 부패가 지방정부의 부패보다 적다는 것은 중앙 우위적 사고"라고 꼬집었다.

박 부시장은 이어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수권할 수 있는 정당이 한나라당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내 개인적인 성향도 한나라당과 맞는다"고 당의 선택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박성효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퇴임식을 갖고 2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백운석 기자 bws@

(2006년 3월 7일자 2면)

"경쟁력 있다"-"검증안돼" 상반

박성효 前부시장 25년 공직생활 마감… 정치행보 본격화

"시장후보 될까" 정가 관심

지난 3일 한나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공천을 신청한 박성효 전 부시장이 6일 사퇴와 함께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다.

박 전부시장의 한나라당 대전시장후보 공천신청은 뜻밖의 행보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박부시장이 대전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각종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박 전부시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항상 지역정가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선거철마다 타의에 의해 이름이 거론됐지만 줄곧 출마를 고사해왔던 박 전부시장이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장후보에 도전하고 나선 셈이다. 박 전부시장의 공천여부는 지금으로선 반반(半半)이라는 평가다.

▲박 전 부시장 한나라당 공식후보 될까? = 박 전부시장의 대전시장 후보 공천신청은 '절묘한 타이밍에 던진 박 전 부시장의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시당은 수차례 대전시장 후보 영입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대전시당이 더 이상 내세울 카드가 없을 경우 '선출직에는 다시 나서지 않겠다'는 강창희 시당위원장이 출마할 수 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에

"경쟁력 있다"-"검증안돼" 상반

박성효 前 부시장 25년 공직생활 마감… 정치행보 본격화

"시장후보 될까" 정가 관심

지난 3일 한나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공천을 신청한 박성효 전 부시장이 6일 사퇴와 함께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다.

박 전부시장의 한나라당 대전시장후보 공천신청은 뜻밖의 행보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박부시장이 대전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각종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박 전부시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항상 지역정가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선거철마다 타의에 의해 이름이 거론됐지만 줄곧 출마를 고사해왔던 박 전부시장이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장후보에 도전하고 나선 셈이다. 박 전부시장의 공천여부는 지금으로선 반반(半半)이라는 평가다.

▲박 전 부시장 한나라당 공식후보 될까? = 박 전부시장의 대전시장 후보 공천신청은 '절묘한 타이밍에 던진 박 전 부시장의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시당은 수차례 대전시장 후보 영입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대전시당이 더 이상 내세울 카드가 없을 경우 '선출직에는 다시 나서지 않겠다'는 강창희 시당위원장이 출마할 수 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에

꽃다발 건네는 염시장 지난 3일 한나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성효 정무부시장(왼쪽)이 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염홍철 시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하지만 박 전부시장이 대전시장 후보에 등록함에 따라 박 전부시장이 대전시장 후보 '변수'가 아니라 '정수'로 자리 잡았다. 이로인해 강창희 위원장이 고감동해온 '대전후보시장 영입대상'을 다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부담을 함께 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부시장의 대전시장 공식후보 여부는 '정치적 컨셉트 설정' 방향에 따라 최우선 전망이다.

동력있는 행정가 컨셉트가 아닌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한나라당의 대권가도의 바탕목이라는 정치적 컨셉트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행정가 박성효는 이미 검증 받았지만 정치인 박성효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해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박 전 부시장이 우리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 가느냐에 따라 그의 공천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경쟁력은 있다' = 박 전 부시장의 대전시장 후보도에 대해 당내 외에서는 참신성을 경비했으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고시에 합격, 지난 25년간 공직생활 대부분을 대전시에서 근무한 박 전부시장은 기획관리실장 4년 반을 재임했다. 또 경제국장에 재직하면서 대덕밸리의 환규기를 이끌었다는 점은 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당내외에서는 "박 전부시장의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실력과 능력은 누구보다 우위에 섰다는 평가를 받기에 마땅하다"며 박 전 부시장이 대전시장후보로서 '인물론'에서는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회의적 시각도 = "박 전부시장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력만 가지고 선거에서 승리 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대전충남시도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대권의 분수령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대권가도에서 총정 표심을 얻지 못해 2년이나 고배를 마셨던 한나라당 으로선 또다시 실패를 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결과에서 '박 전부시장 카드가 최선의 카드인가'라는 점에선 아직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박 전부시장에게 구청장 출마를 제의해왔다는 분석이다. 또 열린우리당 후보로 염홍철대전시장이 나설 경우 '시장 VS부시장'이라는 대결 구도 역시 한나라당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권은남 기자

/편집=원영미 기자 ymwon@

(2006년 3월 7일자 2면)

봉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 전부시장이 대전시장 후보에 등록함에 따라 박 전부시장이 대전시장 후보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자리 잡았다. 이로인해 강창희 위원장이 고갈상태인 '대전후보시장 영입대상'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부시장의 대전시장 공식후보 여부는 '정치적 컨셉트 설정' 방향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능력있는 행정가 컨셉트가 아닌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한나라당의 대권가도의 버팀목이라는 정치적 컨셉트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행정가 박성효는 이미 검증 받았지만 정치인 박성효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해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박 전 부시장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 가느냐에 따라 그의 공천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경쟁력은 있다'=박 전 부시장의 대전시장 후보론에 대해 당내 외에서는 참신성을 겸비했으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고시에 합격, 지난 25년간 공직생활 대부분을 대전시에서 근부한 박 전부시장은 기획관리실장 4년 반을 재임했다. 또 경제국장에 재직하면서 대덕밸리의 황금기를 이끌었다는 점은 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당내외에서는 "박 전부시장의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실력과 능력은 누구보다 우위에 섰다는 평가를 받기에 마땅하다"며 박 전 부시장이 대전시장후보로서 '인물론'에서는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회의적 시각도 = "박 전부시장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력만 가지고 선거에서 승리 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대전충남시도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대권의 분수령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대권가도에서 충청 표심을 얻지 못해 2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한나라당으로선 또다시 실패를 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길목에서 '박 전부시장 카드가 최선의 카드인가'라는 점에선 아직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박 전 부시장에게 구청장 출마를 제의해왔다는 분석이다. 또 열린우리당 후보로 염홍철 대전시장이 나설 경우 '시장 VS 부시장'이라는 대결구도 역시 한나라당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 ❀ ❀

"50년 인생에 홀로서기 나서"

열린우리당에 개인적 실망 커… 중산층 몰락 책임론 지적

朴 부시장 일문일답

박성효 대전정무부시장은 6일 한나라당 대전시장 후보로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 25년간 몸담았던 공직 생활을 접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25년간 공직생활 마감하면서 정치에 입문하는 소감과 정무부시장직이 시장의 측근인데 시장과 당이 다른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데 대한 비난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시청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다. 시장 또한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치다. 따라서 시장과 부시장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맡겨진 역할에 따른 파트너 관계다. 인간적인 면에서 같은 길을 가야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5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홀로서기에 나선 것이다. 푸근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왜 한나라당을 택했는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해 개인적인 실망이 크다. 개혁적으로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혼란스럽다고 느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중산층이 붕괴됐다는 여론에 대해 집권당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와 함께 최근 정동영 당의장이 "부패한 지방권력을 타파하겠다"고 했는데 지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는 매우 서운하다. 중앙정부의 부패가 과연 지방정부보다 적은가. 또 다음에 집권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한나라당이라 생각했으며 개인 성향도 한나라당에 맞다.

-한나라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당원서를 제출했으며 객관적인 과정을 거쳤다. 협의나 사전교감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만일 염시장과 박부시장이 대전시장을 두고 대결을 벌이게 될 경우 전략은.

▲대결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선 긍정적인 자세로 정책에 대한 차별화 등으로 선거에 임할 생각이다. 불가피하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책과 추진 과정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R&D특구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있어 행정권역에 따르기 보다는 경제권역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다음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집권당이 바뀐다고 국책 사업이 바뀐다면 그에 따른 국민불안과 신뢰 상실, 그동안 추진돼왔던 사업 성과 등은 어떻게 되나. 그럴리도 없고 절대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염홍철 대전시장의 지난 4년 임기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은.

▲지역민들이 중앙 콤플렉스로 인해 지역에서 큰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지역 인재를 키워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끌고 나가야 한다.

"50년 인생에 홀로서기 나서"

열린우리당에 개인적 실망 커… 중산층 몰락 책임론 지적

朴 부시장 일문일답

박성효 대전정부부시장은 6일 한나라당 대전시장 후보로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 25년간 몸담았던 공직 생활을 접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25년간 공직생활 마감하면서 검찰에 입문하는 소감과 정무부시장직이 시장의 하근인데 시장과 당이 다른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데 대한 비난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시정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다. 시장 또한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치다. 따라서 시장과 부시장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파격적 역할에 따른 파트너 관계다. 인간적인 면에서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5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홀로서기에 나선 것이다. 부끄럽고 합리적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왜 한나라당을 택했는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해 개인적인 실망이 크다. 개혁적으로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가 훈련스럽다고 느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중산층이 몰락했다는 여론에 대해 집권당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와 함께 최근 정동영 당의장이 "부패한 지방권력을 타파하겠다"고 했는데 지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는 매우 서운하다. 중앙정부의 부패가 과연 지방정부보다 적은가. 또 나름에 집권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한나라당이라 생각했으며 개인 성향도 한나라당에 맞다.

-한나라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당원서를 제출했으며 객관적인 과정을 거쳤다. 협의나 사전교감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만일 염시장과 박부시장이 대전시장을 두고 대결을 벌이게 될 경우 전략은.

▲대결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선 긍정적인 자세로 정책에 대한 차별화 등으로 선거에 임할 생각이다. 불가피하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책과 추진 과정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R&D특구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있어 행정권역에 따르기 보다는 경제권역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다음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집권당이 바뀐다고 국책 사업이 바뀐다면 그에 따른 국민불안과 신뢰 상실, 그동안 추진돼왔던 사업 성과 등은 어떻게 되나. 그럴리도 없고 절대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염홍철 대전시장의 지난 4년 임기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은.

▲지역민들이 중앙 콤플렉스로 인해 지역에서 큰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지역 인재를 키워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끌고 나가야 한다.

/신석우 기자

(2006년 3월 7일자 3면)

❁ ❁ ❁

악연인가 운명인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넌 廉·朴

'악연인가, 운명인가'. 대전시정을 함께 이끌었던 염홍철 대전시장과 박성효 정무부시장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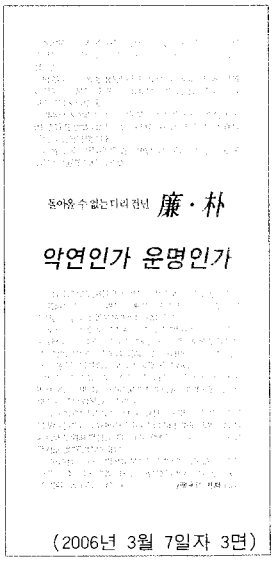
박 부시장이 정치입문을 위해 지난 3일 한나라당 중앙당에 대전시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고 6일 2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했다.

염홍철 시장과 박성효 정무부시장은 공직에서 관선(93·94년)과 민선(2002년 7월~2006년 3월 6일)때 각각 한차례씩 두번의 인연을 맺었다.

대전시 공직자들은 둘 간의 만남을 일부는 '악연'으로, 또 일부는 '운명'으로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6일 열린 박성효 정무부시장의 퇴임식장에서 염홍철 시장은 격려사 후 뼈(?) 있는 멘트를 건넸고, 박 부시장은 퇴임사에 앞서 "귀담아 듣겠다"고 답했다.

염 시장은 퇴임사 후 특유의 조크로 "박 부시장이 나를 두번 난처하게 했다"고 말한 뒤 "지난 94년 민선시장 부임시 박 부시장이 '시장이 속옷을 입지 않고 다니면 어떡하



(2006년 3월 7일자 3면)

냐'면서 러닝 셔츠를 입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고 했다.

염 시장은 "오늘 박 부시장이 또 다시 나를 난처하게 한다"면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그러나 좋은 추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정을 추슬렀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인 것이 두가지 있다"고 말 한 후 미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의 말을 빌려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 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상에 나온 박성효 부시장은 "내가 다소 불편한 심정을 만든 것 같다. 말씀 내용을 귀담아 들어서 좋은 인연 쌓기를 기원드린다"고 답했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24

언 론 사 : (주)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 훈

주 문 : (주)전북일보사가 발행한 전북일보 2006년 3월 9일자 5면 『8년 동안 전주와 후회 없는 사랑 나눴죠』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전북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를 인터뷰하면서 시장으로서 재임기간 중의 역점 사업과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설명과 출마변 등을 두 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8년동안 전주와 후회없는 사랑 나눴죠"

■ 김 완 주 전주시장 인터뷰

"지난 8년동안 전주와 후회없는 사랑을 했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이 8년 동안의 시장직을 마무리하고 10일 퇴임한다. 한번 더 시장직을 연임할 수도 있지만 더 큰 모험을 선택한 것. '전주를 바꾸겠다'며 취임한 이후 전주발전을 진두지휘한 그가 이제는 전북도를 '확'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 시장은 재임기간 중 전주천 되살리기와 전주경전철,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첨단산업단지, 35사단이전, 4대 문화축제, 영상산업, 서부 신시가지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한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체력으로 전주바꾸기에 나섰지만 그만큼 내·외부 반발도 적지 않았다.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도 많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불만도 높았다. 하지만 김 시장이 8년 동안 전주시의 체질을 개선했다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어 보인다. 김 시장으로부터 지난 8년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전주시장직을 그만두는 심정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퇴임식을 보면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심정이 그렇습니다. 퇴임식에서 할 말을 정리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올라 글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했던 일 하

나하나, 만났던 사람들 한명 한명을 떠올리다 보면 웃음도 나오고, 슬펐던 기억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시민들, 특히 전주시 공무원들이 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전주와 8년간의 후회없는 사랑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평가받고 싶습니까.

△지난 2일 마지막 청원조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역대 시장 중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시장이라고. 일을 하다 보면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욕은 당연히 먹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좋은 소리도 듣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김완주가 일은 잘했어' 라는 평가를 받으면 더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무엇인가요.

△가난을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이 어쩌면 자금의 나를 있게 한 원동력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가난 극복은 나에게 있어 오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장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달동네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달동네만은 없애자, 그리고 나중에라도 잘 사는 전주를 위해 토대를 닦아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는데도 끈질기게 첨단산업을 붙잡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만은 놓지 않겠다는 것이 내 신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공부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전국 최초 학교지원조례, 저소득층 자녀의 외국어학원 무료수강, 방과 후 아이들 학습을 위한 꿈나무교실, 매년 시 예산의 3%를 무조건 영어 학교나 대학지원 같은 교육 부문 지원 등은 이런 신념에서 추진된 것들입니다. 1000만원을 지원, 해외연수를 보내 주는 글로벌인재양성 프로젝트는 교육과 관련한 내 신념의 결정판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지요.

"8년동안 전주와 후회없는 사랑 나눴죠"

대담 : 권순덕 사회부장

가난극복 가장 역점추진
교육발전 신념 변함없어

퇴임식후 예비후보 등록
김완주식 비전마련 온힘

△동계올림픽입니다. 얼마 전 토리노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볼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저 멋진 경기를 전라북도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합의서가 있는데도 왜 전북이 동계올림픽 후보지가 안 됐는지 지금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전북의 미래를 위한 큰 계기가 없어졌다는 것에 아쉬움만 남습니다.

-처음 전주시장이 됐을 때 했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지난 1998년 7월 1일 취임식에서 전주시장으로서 세가지 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과 환경·교통·여가 등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 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약속했습니다. 전주천을 살리고,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고, 경전철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시민들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심정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청와대나 중앙 부처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전북은 변화와 정보에 늦다'는 것입니다. 중앙부처가 이미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전북은 버스 떠난 뒤 손흔드는 격이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대덕에 17조원의 투자 발표를 했을 때 과기처에 가서 '전북에도 좀 투자해 달라'고 건의했더니 전북에서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혁신시대입니다. 혁신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어 전북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급선무입니다. 정부가 밥 떠먹여 주기만을 바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타당성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를 만들고 정부에 내놓으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얼마 전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사퇴 후 일정은 어떻습니까.

△퇴임식을 갖고 나면 곧바로 지방선거 예비자후보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도민들을 만나 전북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생각입니다.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동참을 선언했듯이 김완주만의 전북비전을 마련하는 일에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전북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시민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죠.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고 칭찬도 들기도 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분들 모두가 손색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다 이룬 전주의 꿈을 훌륭히 이뤄내리라 믿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전주시민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25

언 론 사 : (주)중도매일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7-11
대표이사 김 원 식

주 문 : (주)중도매일이 발행한 중도일보 2006년 3월 14일자 『심대평 지사직 11년 마감』(1면), 『정치인 심대평 "지선 필승"』(3면), 『공직생활 40년…도지사만 4차례』(3면), 『중심당 전념위해 사퇴결심. '도청' 마무리 못해 아쉬워』(3면), 『행정도시 건설 확정 '성장' 이끌어』(4면), 『심지사 사퇴 '나를 따르라'』(4면) 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중도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특정 정당의 공동대표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선언에 관해 보도하면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퇴임변과 인터뷰기사를 게재하고 재임기간 중의 성과 및 과제를 분석하는 등 3개 면에 걸쳐 2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집중 보도한 것은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정당과 무소속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심대평 지사직 11년 마감

24일 공식 퇴임… "충청發 선거혁명 이루겠다"

국민중심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심대평 충남지사가 오는 24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선다.

심 지사는 13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의 더 큰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며 "오는 24일 오후 2시 퇴임식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도민에게 떠남과 동시에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중심당 대표로서 새로운 도전의 인사를 올린다"며 "5·31 지방선거에서 충청이 주인이 되는 선거혁명을 이루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퇴임의 변을 밝혔다.

심 지사는 "저는 지난해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한국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자 정당을 창당했다"며 "지금부터 정치인으로서 충청지역과 이 나라의 정치현실을 바꾸는 전도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정치를 국민의 곁으로 가져오고,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권한 속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문화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으로부터 시작해 정치 지형 변화와 정치 모델의 혁신을 일으키고, 충청인이 주변인에 머물렀던 시대를 마감 시키겠다"며 "강력한 응집력으로 충청이 주인이 되고 나라를 바꾸는 중심에 서서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지사는 66년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뒤 지난 95년부터 11년 간 충남도지사직을 맡아왔다. 심 지사의 잔여 임기 100일간은 유덕준 행정부지사가 도정을 대행한다.

심대평 지사직 11년 마감

24일 공식 퇴임… "충청發 선거혁명 이루겠다"

국민중심당 공동대표인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13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직 사퇴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갑순 기자

(2006년 3월 14일자 1면)

정치인 심대평 "地選 필승"

충청권 포스트 JP 포부 …
선거 진두지휘 정치실험 '촉각'

'행정의 달인' 심대평 충남지사가 13일 마침내 '도백(道伯)'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정치인 심대평'을 선언했다. 지난 1년간 행정과 정치를 오가며 정치실험을 해왔던 심 지사는 이날 지사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심 지사가 그리는 지방선거 필승 로드맵은 분권형 정당에 충청권의 맹주역할을 했던 자민련 김종필 전 총재(JP)의 명성을 되찾는 것으로 요약된다.

▲심 지사, 포스트 JP로 나서나 = 심 지사는 지난 12일 오전 계룡산 천황봉 산행 길에서 국민중심당을 '충청도당'으로 만들겠다고 확언했다. 자민련 바람이 불던 지난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에서 자민련이 압승했던 '전성기'를 되찾겠다는 게 심 지사의 야심 프로젝트다.

심 지사는 이날 "충청도 가슴에 피가 끓어야 한다", "심대평이가 바로 그 중심에 서겠다", "양반은 겻불을 쬐지 않는다"는 등 중심당의 실질적 오너로서의 선전 선동문구를 곳곳에서 썼다. 다소 이채로웠다는 게 산행을 같이 나섰던 도청 출입기자들의 얘기였다.

심 지사는 "'지역민들이 중심당은 분위기가 뜨지 않아 어렵다'는 등 다소 비관적 얘기가 주류지만 행정 40년 경력을 발판 삼아 충청도를 대표하는 정당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지겠다"고 다짐했다.

다소 격앙된 느낌을 줄 정도로 심지사는 민족의 명산인 천황봉에 올라 천지신명에게 자신의 의지를 다짐했고 '꿈'을 간절히 바랐다.

13일 오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심 지사는 자신이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 지사는 지사직 사퇴 문제도 최근 JP와 상의했다. 심 지사는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로 의례적인 인사였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JP가 갖고 있는 충청권의 상징적 의미를 심 지사는 감지하고 있는 듯 하다.

즉 JP의 정계 은퇴 후 무주공산인 충청권에 새로운 정치지도자로 나서겠다는 것이 심 지사의 정당창당론인 셈이다.

▲심대평 발(發) 정치실험 성공할까 = 심 지사는 '충청발(發) 정치실험'이 바로 지방선거 혁명이라는 기적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광역단체장 후보군이 가시화되고 충청 민심이 모아질 계기가 마련되면 충청도민들이 중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래서 심 지사는 '정치인 심대평'을 이날 공식 선언한 것이다.

'바람 선거' 보다는 올바른 정치모델을 개발하고 생활

정치인 심대평 "地選 필승"

충청권 포스트 JP 포부… 선거 진두지휘 정치실험 '촉각'

심지사 사퇴 의미와 전망

심지사 '행정달인'서 '黨대표'까지

공직생활 40년… 도지사만 4차례

(2006년 3월 14일자 3면)

속에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게 심 지사의 생각이다.

지방 선거 출마자들 역시 이런 사람 중에서 찾아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될 상황에서 심 지사는 여러 카드를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아직도 심 지사의 대전시장 출마설도 용도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심 지사의 24일 사퇴도 공직 사퇴마감 기간인 오는 31일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이래서 나온다. 빅매치로 전국적 관심사와 함께 중심당의 결속 및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중심당 일각의 바람이다.

충남 쪽에선 이인제 의원 카드에 대안으로 이명수 건양대부총장(전 충남도 행정부지사)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또 도청 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임형재 정무부지사의 천안시장 '징발'에 심 지사가 나선것도 이런 맥락이다.

❀ ❀ ❀

심지사 '행정달인'서 '黨대표' 까지

공직생활 40년…도지사만 4차례

심대평 충남지사가 40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행정통'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치인'이라는 역할에 올인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 지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4회 행정고시에 합격, 67년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청와대 비서실, 경기도 의정부시장, 충남도 대전시장,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대통령 비서실 등을 거쳐 88년부터 2년 반동안 관선 충남지사를 역임했다.

지난 70년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면서 JP와 인연을 맺은 심 지사는 95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민련 후보로 출마, 압도적 표차로 초대 민선 충남지사에 당선된 이래 내리 3선에 성공하면서 관선을 포함해 14년 동안 도백의 자리를 지켜 자민련의 충청권 입지를 굳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4월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우리당 돌풍에 밀려 충남에서 자민련이 4석을 얻는데 머물고, JP마저 정계를 은퇴하자 심 지사는 당 전면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3월 11년간 몸담았던 자민련을 탈당한 뒤 지지 세력을 모아 지난 1월 '분권형 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중심당을 창당하고, 신국환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후 중심당의 지지율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자 결국 정치에 올인 하겠다며 13일 도지사직 사퇴를 결심했다.

❀ ❀ ❀

중심당 전념위해 사퇴결심
'도청' 마무리 못해 아쉬워

■ 심지사 인터뷰

심대평 충남지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민선 3기 11년에 대한 보람과 아쉬움, 앞으로의 정치적 포부 등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관선·민선을 포함해 13년 7개월이라는 유례없는 도지사직을 수행했는데 소감은.

▲대전시와 분리되면서 대전시의 자생 기반을 구축해 놓은 것, 생계보호조례를 만들어 법적 보호를 못받는 도민들을 지원하고, 정부의 법 개정까지 이어져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에 큰 보람을 느끼지만 도청 이전 후보지를 외부적 여건 때문에 임기 말에 확정하고 다음 지사에게 추진에 대한 짐을 넘기고 간 것은 아쉽다.

-현안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약속과 달리 중간에 사임한다는 비난이 있는데.

▲나도 약속을 기억하지만 내가 나서지 않으면 중심당에 대한 평가나 기대가 5·31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서 사퇴를 결심했다.

호남고속철과 안면도 개발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는 몇 개월 사이에 종결될 사항이 아닌 만큼 오랜 시간을 두고 국가적 지역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한다.

-임기 중 사퇴 경위를 설명해 달라.

▲중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도청 이전 예정지 확정 후 고민했고, 신국환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나를 아껴준 여러분들과 상의했

다.

임기 전 사임이 선례로 남지 않을 수 있다는 후회가 될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도지사 정도의 지역 지도자라면 선례같은 것은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 여부와 낮은 중심당 지지율 극복 방안은.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이인제 선거대책위원장, 신국환 공동대표는 물론, 중심당의 핵심 당직자 뿐 아니라 전 당직자가 전력을 다해 중심당의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중심당 전념위해 사퇴결심
'도청' 마무리 못해 아쉬워

■ 심지사 인터뷰

심대평 충남지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민선 3기 11년에 대한 보람과 아쉬움, 앞으로의 정치적 포부 등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요지.

-관선·민선을 포함해 13년 7개월이라는 유례없는 도지사직을 수행했는데 소감은.

▲대전시와 분리되면서 대전시의 자생 기반을 구축해 놓은 것, 생계보호조례를 만들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도민들을 지원하고, 정부의 법 개정까지 이어져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illegible] 추진에 대한 짐을 넘기고 간 것은 아쉽다.

-현안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약속과 달리 중간에 사임한다는 비난이 있는데.

▲나도 약속을 기억하지만 내가 나서지 않으면 중심당에 대한 평가나 기대가 5·31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서 사퇴를 결심했다.

호남고속철과 안면도 개발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는 몇 개월 사이에 종결될 사항이 아닌 만큼 오랜 시간을 두고 국가적 지역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한다.

-임기 중 사퇴 경위를 설명해 달라.

▲중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도청 이전 예정지 확정 후 고민했고, 신국환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나를 아끼는 어른들과 상의했다.

임기 전 사임이 선례로 남지 않을 수 있다는 후회가 될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도지사 정도의 지역 지도자라면 선례같은 것은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 여부와 낮은 중심당 지지율 극복 방안은.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이인제 선거대책위원장, 신국환 공동대표는 물론, 중심당의 핵심 당직자 뿐 아니라 전 당직자가 전력을 다해 중심당의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최두선 기자 cds1126@

(2006년 3월 14일자 3면)

행정도시 건설 확정 '성장' 이끌어

성과 : 전국최초 생계보호조례 제정
농업道서 첨단산업道로 변혁
과제 : 호남고속철 분기역 문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심대평 충남지사는 민선 3기 도정을 수행하면서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충남의 인본행정과 외형적 성장 등에 전력해 왔다.

▲성과 = 심 지사는 인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국 최초로 생계보호조례를 만들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도민들을 지원했고, 이를 정부의 법 개정까지 유도해 전국적 시행을 이끌어 냈으며, 미국 슈라이너 병원과 협력, 도내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무료 시술을 통해 희망을 전달했다.

충남의 외형적 성장 부문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충남의 산업구조를 '전통농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바꾸고, 지난해 335억달러의 수출기록을 달성, 전세계 230여개 국가와 비교해도 4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충남·경기 상생발전협약 체결, 충청권 행정협의회 및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를 통해 인접지역과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했다.

특히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이 반균형론자들의 반대로 발목을 잡히자 선봉에 서서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연대해 행정도시 건설을 확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남겨진 문제들 = 심 지사는 도정의 주요 현안들을 마무리하고 지사직을 물러난다고 밝혔지만 충남도에는 과제로 남겨진 주요 현안들이 많다.

우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호남고속철 분기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당초 임기 내에 추진하려던 충남·경기 경제자유구역 신청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투자자 유치 실패로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추진도 불투명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충남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도청 이전 예정지를 임기 말에 가까스로 결정해 차기 지사에게 실질적인 추진을 넘기는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아쉬움은 상존해 있다.

오늘 道의회 의장에 통지

道 16일까지 권한대행 통지·보고 계획

■ 사퇴일정

심대평 지사는 13일 '정치'에 올인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사퇴 절차를 밟을 예정이

다.

심 지사는 24일 사퇴함에 따라 14일 도의회 의장에게 임기 전 사임 의사를 통지하고, 곧바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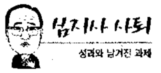
이는 지방자치법 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일을 기재한 사임통지서로 통지해야 하고, 당해 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도지사의 권한대행에 대해 14~16일 사이 도의회에 통지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동법 시행령 39조의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의회에 즉시 통보하고, 시·도는 행자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사임은 최소 10일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과 달리 자치단체장의 사임일 전까지만 보고하면 돼 일정상 약간 늦어져도 무방하다는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정도시 건설 확정 '성장' 이끌어



성과 — 전국최초 생계보호조례 제정 / 농업道서 첨단산업道로 변혁

과제 — 호남고속철 분기역 문제 /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사퇴 일정

오늘 道의회 의장에 통지

道 16일까지 권한대행 통지·보고 계획

/최두선 기자

심지사 사퇴 '나를 따르라'

임형재 정무부지사 등 공무원·도의원 출마 독려

/오주영 기자

(2006년 3월 14일자 4면)

※ ※ ※

심지사 사퇴 '나를 따르라'

임형재 정무부지사 등 공무원·도의원 출마 독려

국민중심당을 이끌고 있는 심대평 충남지사가 국민중심당 현역 선출직 및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발령을 내렸다.

징발 형태가 참여정부 장관들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심지사는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측근들의 지방선거 '참전'을 독려하고 있다. 중심당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사실상 징발령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들은 임형재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이명수 건양대부총장, 그리고 국민중심당 소속 도의원 5~6명.

심 지사는 지난주부터 계속 임 부지사에 대한 '애착'을 표시하고 있다. 천안시장으로 출마를 권유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임 부지사는 아직도 '장고(長考)' 중이다.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이명수 부총장에게도 심 지사는 남다른 애정 사인을 보내고 있다.

심 지사는 이들에게 지방선거에 '출장' 하라는 얘기를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중심당 소속 도의원 가운데 시장·군수에 나서는 의원들이 심 지사의 지사직 사퇴이후 중심당 바람몰이 차원에서 잇따라 도의원직을 던지고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태세다.

우선 오찬규(보령), 송민구(공주)의원이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중심당 보령시장과 공주시장에 도전장을 낼 예정이다. 다른 의원들도 잇따라 시기를 맞춰 지방선거에 '출전'하는 등 심 지사와 국민중심당을 엄호하고 나섰다.

광역 의원들의 경우,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로 등록에 앞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아직은 '미풍'에 그치고 있는 중심당과 심 지사 브랜드가 확산되고 있지 않지만 중심당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에 대한 '징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27

언 론 사 : 아세아일보(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오토갤러리 610호
대표이사 권 기 호

주 문 : 아세아일보(주)가 발행한 아시아일보 2006년 3월 20일자 1면『경기지사 가상대결, 김문수 1위』제하의 기사에 대해「주의」조치함.

이 유 : 아시아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판세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조사의뢰자,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항 각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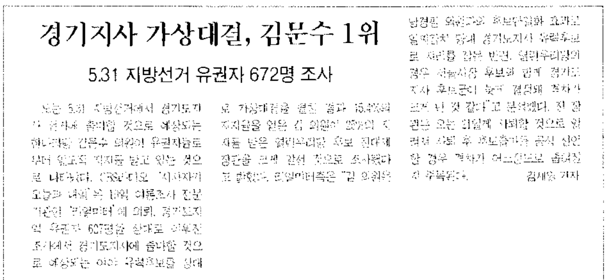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경기지사 가상대결, 김문수 1위

5.31 지방선거 유권자 672명 조사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은 19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경기도지역 유권자 627명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야 유력후보를 상대로 가상대결을 펼친 결과 45.4%의 지지율을 얻은 김 의원이 25%의 지지를 받은 열린우리당 후보 진대제 장관을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리얼미터측은 "김 의원은 남경필 의원과의 후보단일화 효과로 일찌감치 당내 경기도지사 유력후보로 자리를 잡은 반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경기도지사 후보군이 늦게 결정돼


경기지사 가상대결, 김문수 1위

5.31 지방선거 유권자 672명 조사

격차가 크게 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진 장관은 오는 21일께 사퇴할 것으로 알려져 사퇴 후 후보출마를 공식 선언할 경우 격차가 어느정도로 좁혀질지 주목된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33

언 론 사 : 부안저널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157-4
대표(발행인) 김 부 미 자

주 문 : 부안저널사가 발행한 부안저널 2006년 3월 15일자 3면 『전국 최고의 자치체로 급부상하는 부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부안저널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안군수)와 관련하여 현 군수인 특정 후보예정자의 재임시 군정 성과를 설명하면서 해당 지역단체와 특정 후보예정자의 각종 수상 내역 등을 2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전국 최고의 자치체로 급부상하는 부안!

민선3기 군정주요성과
지난 해 각종 상(賞) 32개 수상

전국최고의 자치단체

부안군은 새만금을 시작으로 문화영상산업, 생태공원 등 굴뚝 없는 관광산업을 전략적 마케팅하며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이미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과 일 중심의 행정을 개혁하여 친절마인드를 갖춘 일등공무원 양성과 수입개방을 이겨낼 새로운 고소득작목 개발로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고, 특히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의남자', '불멸의 이순신', '프라하의 연인' 등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하여 언론으로부터 집중적 조명을 받았고, 정부·언론·대외기관의 집중 찬사와 더불어, 전국 최고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바람 캠페인 "변혁의 바람"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뜨고 있는 부안군은 지난해 각종 상(賞) 32개를 휩쓸어 전국 최고 지자체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던 부안군의 지난 민선3기 군정주요성과를 더듬어 봤다.

32개 상을 거머쥐다

지난한 해 동안 부안군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이 정부와 중앙단위 기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무려 32개의 상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하면서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그 위상을 뽐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주요 수상 명세를 살펴보면, 지난 해 12월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비롯해 12월21일 '2005년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에서도 우수도시로 지정되어 3년 연속으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한 지자체가 1년 동안 받은 것 치고는 너무나도 많은 32개의 상을

'싹쓸이'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운영과 관련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렇듯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게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주체들에 행정자치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농촌진흥청, 소방방재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산업정책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조선일보사, 한국경제신문사, 사단법인 친환경생활국민운동본부 등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공신력을 가진 대외기관이 망라됐다는 점에서 부안군의 '싹쓸이' 겹경사 수상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 가운데 부안군이 가장 가치 있는 상으로 꼽는 것은 지난 해 8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산업정책연구원과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관하고 산업자원부와 참여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다면평가담당기관인 IBS 등 정부기관이 후원한 '제3회 지역산업정책대상' 평가에서 시장환경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월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단체상을 수상한 것이다.

부안영상테마파크의 완공

이는 부안군이 영상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각종 드라마 및 영화 촬영 유치정책의 성과로 지난 해 'KBS 불멸의 이순신', 'SBS 프라하의 연인' 촬영세트장과 최근 1000만 관객 유치를 달성해 영화계는 물론 사회전반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의 남자'의 대부분이 촬영된 '부안영상테마파크' 완공 등으

군정특집 전국 최고의 자치체로 급부상하는 부안!

민선3기 군정주요성과 지난 해 각종 상(賞) 32개 수상

전국최고의 자치단체

32개 상을 거머쥐다

부안영상테마파크의 완공

단체장 수여상도 2개나 받다

로 지난 해 부안군이 유치한 관광객이 760만 명에 달하는 성과를 거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또 부안군이 가진 향토부존자원인 누에와 뽕을 활용한 '부안누에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1·2·3차 산업이 복합된 융·복합농업을 실현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해낸 것을 정부·학계·언론이 모범 시책으로 공인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2월엔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업기반, 입지인력, 지원여건 등과 각종 지표를 상대점수화하여 평가하고 전경련 산하 1,533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합평가한 '제2회 기업하기 좋은 지역 대상' 심사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는 부안군이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지원과 규제완화 노력의 결실로 무공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인과 근로자의 사기진작,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풍토조성 등 '지역경제 살리기 군민운동'과 '기업사랑운동'에 대해 정부와 언론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 밖에 부안군에서는 ▲환경부주최 '맑은 물 사랑 실천 운동 평가'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및 경실련이 공동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하는 '제6회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에서 특별상을 2년 연속 수상 ▲환경부가 주관한 자연생태복원 우수사례에 줄포자연생태공원이 선정 ▲친환경적하수처리장 조성평가에서 주민참여분야 최우수사례로 선정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조기집행실태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인감제도 운영업무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신활력 추진실적평가 전국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추진평가 및 국민기초생활업무평가 전국 우수기관 ▲농림부의 가축방역특별포상 전국 최우수기관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어업추진실적평가 전국 장려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업무평가 및 오지개발사업 평가 전국 우수기관 ▲농촌진흥청의 친환경농업육성분야 우수농촌지도기관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부처 합동평가 전국 최우수 ▲전라북도의 지적행정평가, 쓰레기 줄이기 평가, 도로유지관리평가 전북최우수기관 등 중앙정부와 광역행정기관으로부터도 행정업무추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냈으며, 지난 해 12월 5일에는 전북에서는 최초로 친환경국제표준화규격인 ISO14001인증을 받아내 노르웨이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 가졌다고 하였다.

단체장 수여상도 2개나 받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안군이 수상한 군정 관련 수상에는 위에서 열거한 기관표창 외에도 단체장에게 수여된 상이 2개나 된다는 것이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금년 1월 '바둑공원조성' 추진과, 각종 국내외 바둑대회 유치 추진 등 한국바둑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기원으로부터 '단체장공로패'를 수여 받았으며, 2월에는 대한요트협회로부터 한국요트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마찬가지로 '단체장공로패'를 수여 받음으로써 부안군에 이어 부안군수도 '겸경사' 수상을 하였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35

언 론 사 : 주식회사 송백
광주시 동구 대의동 45-2
대표이사 김 영 용

주 문 : 주식회사 송백이 발행한 전남매일 2006년 3월 22일자 15면 『'지방재정평가' 조정 필요』 제하의 칼럼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전남매일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함평군수)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지방재정평가' 조정 필요

이 석 형 함평군수

행정자치부가 민선자치 10주년 및 지방재정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월 '2004 회계연도 재정운영상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전국 25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재정관리, 채무분야,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5개분야 30개 지표에 대해 조사, 분석, 발표한 자료이다.

이 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되면서 하위권에 머문 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비난의 눈초리가 따갑다.

물론 기존 지방재정 분석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재정분석제도의 혁신 방안을 마련, 시행한 평가라는 행정자치부의 취지와 발표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과 확신을 부여한 평가방식이라는 행정자치부의 발표와는 달리 지방재정분석 평가제도의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여러 부문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각 자치단체가 처한 재정여건의 다양성과 복잡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방재정 분석평가를 실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우리 군의 이의 제기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봤을 때, 경제구조가 기본적으로 허약한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경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영세한 기업체의 부도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상 세외수입 확충에 필요한 신규세원 발굴도 사실상 어려워 세입분야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재정규모가 빈약한 지자체의 경우는 기본적 세출비중지수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높은 비율 때문에 경상경비 절감에 애로가 있고, 지역적 여건으로 인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증가로 민간이전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행사·축전경비 산출비용에 있어서도 함평나비대축제처럼 국가가 지정한 우수축제의 경비는 당연히 비용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동 평가기준이 적용된다면 지방의 우수축제에 대한 위축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석 형
함평군수

'지방재정평가' 조정 필요

특히 지방채무 부문에서 국·도비와 수익자가 부담해야할 재원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포함시키고, 채무가 많아 재정운영이 부실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평가방법이다.

정부는 획일적 잣대로 '지방재정분석 평가제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재정규모가 비슷하거나 열악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수를 넣고 가중치에 따라서 평가등급을 산정, 동 평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운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39

언 론 사 : (주)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 훈

주 문 : (주)전북일보사가 발행한 전북일보 2006년 3월 30일자 5면 『산골오지에 월드시티 희망 심고 떠나 뿌듯』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전북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군수 재임시 역점 사업과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설명과 출마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산골오지에 월드시티 희망 심고 떠나 뿌듯"

■ 김세웅 무주군수 인터뷰

"낙후의 한을 풀기 위해 산이라도 옮겨 놓겠다던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떠날 수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서민 중심의 따뜻한 리더십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무주군을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로 일궈낸 김세웅 무주군수가 11년 동안의 군수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한다.

1%의 가능성으로도 99%의 불가능을 극복한 김세웅 무주군수. 실제 김군수는 1%의 가능성을 가지고 179개국 7000만 태권도인의 꿈의 성지, 태권도공원과 한류관광의 중심, 관광레저형기업도시를 유치해 냈다.

김 군수는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체득한 정치철학을 군정에 접목해 이를 무주만의 독특한 브랜드로 발전시킴으로써 가장 성공한 자치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3기, 11년 동안 김 군수는 전국 최초의 환경잔치인 반딧불 축제를 대한민국 환경축제로 정착시켰고 열린 행정, 공개 행정, 투명 행정을 추진해 관치행정의 낡은 틀을 벗겨냈다.

도전적 열정으로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해 온 김 군수에게 무주군수로서 달려 온 지난 11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퇴임을 앞둔 심정이 어떻습니까.

△막상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돌이켜 보면 보람과 기쁨, 성취감도 컸던 세월이었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골오지 낙후의 대명사라는 길고 모진 꼬리표를 떼어내고 세계가 주목하는 지구촌 태권도 중심도시이자 한류관광의 중심도시로서의 희망을 무주에 심고 떠날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어떤 마인드로 무주군을 경영해 오셨다고 자부하십니까.

△관치행정의 낡은 구습을 파괴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담장을 허물면서 시작한 지난 11년간 단 한순간도 "제발 낙후의 한을 풀어 달라"던 군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절규를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한눈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부터 복지, 교육, 문화, 체육, 지역경제, 농업, 건설 등 모든 부문에서 대도시 못지 않은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변화시켜 왔다고 자부합니다.

태권도공원과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를 비롯해 반딧불축제 그리고 부읍면장 제도를 폐지시켜 IMF 구조조정의 회오리를 피하고 인건비를 절감해 군 재정에 새살을 돋게 했던 일 등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결실로 맺어져 무주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과의 약속은 지키셨습니까.

△가난이 뼈 속까지 박혀 있는 우리 군민들의 낙후의 한을 풀기 위해 '산이라도 옮겨 놓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지금, 모처럼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은 무주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하고 군민들의 입에서는 "이제서야 살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과 여성, 청소년과 장애인을 우선으로 무주군민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여건을 마련한 것은 물론, 국책사업이라는 건전한 프로젝트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가치도 높여 놓았습니다.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지난 11년간 제가 가진 열정 모두를 다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에 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슨 일이든 철저한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때 무모한 짓을 한다며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열정과 철저한 준비로 유치를 해 냈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와 동시에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한다고 하자 욕심이 과하고 가능성 없는 일에 무모한 짓을 한다며 협조보다는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도전적 열정과 400여 공무원, 그리고 순수한 군민의 힘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해 냈습니다.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무주발전은 물론 전북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무주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이제 전라북도가 전 세계 179개국 7000만 태권도인의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진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세계적 관광 레저 중심도시로서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 '반딧불이'를 무주군의 고유브랜드로 정착시키셨는데요.

△전국 최초의 환경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반딧불축제를 비롯해 '무주' 하면 반딧불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이제 무주반딧불 브랜드는 청정환경, 청정무주로 확실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영양군과의 상표분쟁에서 특허청이 저희 무주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제 반딧불상표와 브랜드는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무주만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무주 반딧불이는 이처럼 낙후지역 무주를 청정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독보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해 냈으며,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들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은 반딧불 상표를 부착한 무주군의 농특산물들은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주반딧불이는 단순하게 무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낙후전북을 희망전북으로 견인하는 톡톡한 효자노릇을 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도지사 출마 계획을 밝히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산골오지 무주에 월드시티의 희망을 심었듯 낙후와 푸대접에 상처받은 전라북도에 밝은 미래와 희망을 일궈 내겠습니다.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들풀처럼 살아온 인생역정 속에서 얻은 '도전적 열정'이 있기에 저는 반드시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일궈냈던 무주의 영광을 전라북도의 영광으로 이끌어 내 전북도민들이 느끼는 낙후의 한을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저는 '새만금의 기적을 위한 말굽자석 플랜'이란 책자에서도 밝혔듯이 13억 중국시장의 부를 만경운하를 통해 전주시내 복판까지 끌어들이고 새만금의 효과를 전북발전으로 승화시켜 '새만금의 기적'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처럼 무주의 변화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태권도 메카로 부상하는 무주태권도공원과 한류관광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머지않아 우리 군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었던 낙후의 한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들 두 국책사업을 통해 무주는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태권도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창업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또다른 나의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골오지에 월드시티 희망 심고 떠나 뿌듯"

"낙후의 한을 풀기 위해 산야라도 훑어 놓겠다던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떠날 수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 중심의 따뜻한 리더십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무주군을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로 일궈낸 김계중 무주군수가 11년 동안의 군수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한다.

1%의 가능성으로도 99%의 불가능을 극복한 김계중 무주군수 김태 김 군수는 1%의 가능성을 가지고 17만명국 7000만 대한도인의 꿈이 실이, 태권도공원과 학유산관의 중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해냈다.

김 군수는 시선의 삶 속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군정에 접목해 이룬 무주만의 독특한 브랜드로 업적식 감으로써 가장 성공한 자치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선 그이 11년 동안 김 군수는 전국 최초의 환경관제인 민관합동 숙제한 대한민국 환경축제로 정착시켰고 관민 협력 공개 행정, 투명 행정을 추진해 관치행정의 낡은 틀을 벗어냈다.

도전적 업무으로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해 온 김 군수에게 무주군수실에서 만나 지난 11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퇴임을 앞둔 심정이 어떻습니까.

△산골 무주는 참으 최대하고 따뜻하 마을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돌이켜 보면 11년이 기간, 혜택받은 적은 때문이었다. 다만 전시행으로는 결할 수 없는 감동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어 온 많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무주군으로 낙후를 대물림하는 것이 못한 그러므로 세계로 주목하는 무주스 태권도 중심도시라는 관광레저형 중심도시로서의 비전을 무주에 심고 떠날 수 있어 매일이 한다 기쁘다.

-어떤 마인드로 무주군을 경영해 오셨다고 자부하십니까.

△군수실장을 맡은 지난은 마음으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제3 1년간 두 번씩이나 '지방 자치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군민들의 관심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군민들의 결정사항을 놓치지 않을 냉철함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 생존문제에서부터 시작해 먹거리, 교육, 문화, 복지, 지역경제, 농업, 관광 등에 이르기까지 대도시 복지 못지 않게 행복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왔다고 자부하고 싶다.

태권도공원과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를 비롯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확고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IMF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군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무주만의 독특한 브랜드로 업적식 감으로써 가장 성공한 자치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다.

-군관들과의 약속은 지키셨습니까.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지켰다고 생각한다. 군민들과의 약속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1년간 가난탈피 온힘 군민 행복지수 올리가 태권도공원·기업도시 전북발전에 성장동력'이라는 것이었다. 이 약속은 지난 11년간 지금 지금 모두가 느끼는 것은 확실히 무주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해 관광객이 이에서 '이제 여기 살고 싶다'고 말하는 분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과 여전, 성 노력을 인정해준 무주군민들 덕분이고 또 무주 공무원 여러분에게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싶다. 특히 무주의 미래를 설정 짧은, 국제사회에서는 관광의 트렌드를 먹을 수 있는 무주 지식도 없이 출장다녔다. 이러한 노력이 11년이 걸려 지금 결실 보듯이 이 중이었다고 생각한다.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에 관한 여기를 해봉을 수 없는데요

△무주는 지난해 초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방문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무주에 와 무주군 지난 1년간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무주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해 관광객이 이에서 '이제 여기 살고 싶다'고 말하는 분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과 여전, 성 노력을 인정해준 무주군민들 덕분이고 또 무주 공무원 여러분에게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싶다. 특히 무주의 미래를 설정 짧은, 국제사회에서는 관광의 트렌드를 먹을 수 있는 무주 지식도 없이 출장다녔다. 이러한 노력이 11년이 걸려 지금 결실 보듯이 이 중이었다고 생각한다.

-반딧불이 를 무주군와 고유브랜드로 정착시키셨는데요

△산골 지역의 환경적인 자원중에서 여러 반딧불이 중에서 특히 무주에만 서식하는 '운문산 반딧불이'는 특산이 생태계 보호로 인해 무주만의 브랜드로 정착했다. 정착주수로 학술은 인지를 구축했다.

전북 자난에 영광군과의 상표분쟁에서 '특허권'이 지적 무주군의 소송 결과중으로서 여러 반딧불이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주 반딧불이는 여러분 자부적인 무주는 결정 지역으로 대표적 제가는 특산물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전문화된 분야가 되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 산 국민보호부터 공감을 얻은 반딧불 상표를 보호하고 무주군민의 농특산물로 지정해 대형마트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데 성공적으로 보급 확대했다.

-도지사 출마 계획을 밝히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산골오지 무주에 월드시티의 희망을 심었듯 낙후와 푸대접에 상처받은 전라북도에 밝은 미래와 희망을 일궈 내겠습니다.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들풀처럼 살아온 인생역정 속에서 얻은 '도전적 열정'이 있기에 저는 반드시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일궈냈던 무주의 영광을 전라북도의 영광으로 이끌어 내 전북도민들이 느끼는 낙후의 한을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저는 '새만금의 기적을 위한 말굽자석 플랜'이란 책자에서도 밝혔듯이 13억 중국시장의 부를 만경운하를 통해 전주시내 복판까지 끌어들이고 새만금의 효과를 전북발전으로 승화시켜 '새만금의 기적'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처럼 무주의 변화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태권도 메카로 부상하는 무주태권도공원과 한류관광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머지않아 우리 군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었던 낙후의 한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들 두 국책사업을 통해 무주는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태권도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창업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또다른 나의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1년간 가난탈피 온힘
군민 행복지수 올리가
태권도공원·기업도시
전북발전에 성장동력

"

안 건 번 호 : 2006자심40

언 론 사 : (주)한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3가 64-18
대표이사 강 춘

주 문 : (주)한민일보가 발행한 전북연합신문 2006년 3월 31일자 4면 『모두가 잘사는 새 임실 만들기 '총력'』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전북연합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임실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하면서 군수 재임시 역점 사업, 군정 계획, 지역 축제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보도내용〉

모두가 잘사는 새 임실 만들기 '총력'

■ 인터뷰-김진억 임실군수

"농어촌 지역의 경제 거점지역 육성"

"임실,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김진억 임실군수는 임실을 사랑하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임실군의 재정자립도는 13.5%로 전북 최하위권 수준이다. 교육문화 여건이 취약하여 이촌 인구가 늘어나고, 노령화가 가속화 되어 노령층 인구가 25%에 달하고 있다. 농업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지역성장산업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농산물 가격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

임실군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실읍소도읍육성사업은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시설기반시설확충 등 정주여건을 건설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전시성 사업 등 외형중심의 하드웨어에서 탈피하여 전략적인 테마를 집중 육성하는 농촌혁신클러스터 전략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될 전망이다.

■ 소도읍 육성사업, 변화하는 새임실

임실읍이 2005년 행정자치부 소도읍가꾸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임실치즈피아, 희망의 햇빛마을, 지연산업 중심지구 등 3대 중점사업에 총 357억원이 집중 투자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임실치즈피아 조성사업은 지역산업구조를 다원화시키는 사업으로 5천평 규모로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주민과 외부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팜마켓, 특산물관, 농산물 가공 판매장 등을 갖춘 치즈피아 전원플라자와 임실치즈를 한곳에 전시한 치즈전시박물관, 치즈산업의 홍보 및 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임실상징공간 교차시설, 치즈공장, 지역농협, 개인농가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청정낙농길드 등을 갖추게 되어 국가적으로 치즈수입(연간 1천64억원 규모) 대체산업으로서의 효과를 증대하고 임실읍의 임실치즈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희망의 햇빛마을 조성사업은 3개 단위사업에 172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고추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태양열에너지 마을로 조성된다.(중략)

■ 병술년 개의 해는 '오수의견문화제로'

도심을 벗어나 시원하고 맑은 봄공기를 마시며 4월마지막 주말에는 임실군 오수면으로 한번 가볼만 하다.

(사)의견문화전승회 주관으로 임실군 오수면 오수의견공원일원에서 "오수의견문화제"가 4월 28일 오후 6시부터 난타공연, 전국애견동아리 페스티발, 불꽃놀이 등으로 화려하게 3일 일정으로 막이 오른다.

오수의견문화제는 "워리와 함께 세계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2회째 맞고 있는 명실상부한 애견애호가들의 축제의 장으로 애견가족 한마당 잔치, 김개인 생가 터울림 행사, 훈련견 시범행사, 오수개인형극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애견애호가들을 위해 "애견과 함께 하는 오수의견 기차여행"을 운행한다. 애견열차는 4월 29일 서울역을 출발하여 오수역에 도착하고, 4월 30일 오수역을 출발하여 서울역에 도착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

모두가 잘사는 새 임실 만들기 '총력'

■인터뷰 - 김진억 임실군수

"농어촌 지역의 경제 거점지역 육성"

◆소도읍 육성사업, 변화하는 새임실

◆병술년 개의 해는 '오수의견문화제로'

◆청정 임실에 참살이 과학영농 펼쳐

이날 행사장에서는 임실산으로 만들어낸 푸짐한 향토음식과 각종특산물을 만날 수 있어 웰빙 시대 건강을 챙길 수도 있다.

임실군은 오수를 "개의 메카"로 급부상시키기 위해, 63,524평 규모에 267억을 투자하여 세계 최대의 애견동물원, 전시관, 오수개 육종사업, 애견벨리사업 등을 200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중략)

■ 청정 임실에 참살이 과학영농 펼쳐

추곡수매폐지, 쌀협상비준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심이 더 이상 상처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농심을 위로하는 과학영농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임실군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영농자재지원, 콤바인, 이양기, 트랙터 등 농기계 지원, 기능쌀 저장건조시설 확충, 오수RP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친환경농업 등에 총 38억여원을 투입한다.(후략)

안 건 번 호 : 2006자심46

언 론 사 : 순천시민의신문사
전남 순천시 생목동 66-11
대표(발행인) 허 석

주 문 : 순천시민의신문사가 발행한 순천시민의신문 2006년 4월 12일자 6면 『순천의 경쟁력을 생각한다』 제하의 칼럼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순천시민의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순천시의회의원)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순천의 경쟁력을 생각한다.

■ 서 동 욱(순천시의회 의원)

흔히들 순천에 대해 표현하기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마땅히 제대로 있는 것 또한 없다"고들 한다. 우리 순천의 현주소를 냉정히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게 하는 적절한 표현이란 생각이다.

순천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전형적인 '소비도시'다.

도시 자체로 자족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한계가 있는 도시임에는 분명하다.

특히나 참여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의 주체가 국가단위에서 '도시'단위로 확장된 상황에서 과연 순천의 경쟁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땅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멀리 있는 도시는 차치하더라도 광양만권의 시·군간에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도시

간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기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도시만의 아름다운 매력을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지로 요약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전부터 순천은 광양만권의 교통, 교육, 문화, 금융, 유통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도로교통망의 발달과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부 기능에 대한 우위는 앞으로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교육과 문화를 매개로 한 쾌적하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주거 환경이다. 이는 다른 도시들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따라올 수 없는 우리 순천만의 장점이자 매력이기도 하다.

필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오늘도 인근도시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취학할 정도의 아이를 둔 젊은 엄마,아빠들이 많이 이사를 온다.

한결같이 아이들의 교육과 주변환경 등을 생각해서 선택했다고 한다.

순천의 경쟁력은 인근 도시들처럼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순천이라는 도시에 매력을 느껴 스스로 모여 들도록 해서 살게 하고 이곳에서 쇼핑도 하고 유흥도 즐기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지난 주 시민의 신문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발표한 순천시민들의 거주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89%의 시민들이 순천에 살고 있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만족하는 분야를 보면 환경분야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분야 17.3%, 주거분야 11.6%, 교통분야 10.6%로 뒤를 이었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도시로서 순천이 매력이 있다는 것이자 앞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도시락 싸들고 동천에서 순천만까지 산보나 자전거 하이킹을 가고 평일에도 문화예술회관에는 뮤지컬이나 연극이 공연되고 음식점과 재래시장들에는 대목처럼 손님들로 북적이고 굴뚝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이 유치되어 고급인력들이 모여들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육과 의료기관들이 유치되어 있는 도시.

바로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의 미래이지 않나 싶다.

더불어 생각하며

순천의 경쟁력을 생각한다.

서동욱〈순천시의회의원〉

2. 경 고

안 건 번 호 : 2006자심1

언 론 사 : (주)시민일보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대표이사 정 우 영

주 문 : (주)시민일보사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6년 2월 2일자 3면 『"강금실 전 장관과 맞붙고 싶다"』, 동년 2월 3일자 3면 『맹형규-강금실 '맞짱' 양상』, 동년 2월 9일자 4면 『"강금실 與 입당땐 지지도 추락할 것"』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시민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변을 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특정 후보예정자 2인의 양강 구도가 형성돼 그들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는 것처럼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강금실 전 장관과 맞붙고 싶다"

오는 5월 서울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31일 국회의원직을 과감히 사퇴한 맹형규 전 의원은 1일 "기왕이면 강금실 장관처럼 노 정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당후보와 맞붙고 싶다"고 밝혔다.

맹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서울시장 자리는 인기 스타 자리를 뽑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맹 전 의원은 '지금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나머지 의원들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 의원, 후보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선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양손에 떡을 쥐고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를 계속 쥐고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다"면서 "그런 기회주의적인 성향은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렇다고 다른 분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고 말했다.

맹 전 의원은 '원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공식 시장 후보로 등록될 때 의원직을 사퇴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고, 현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 다시 돌아갈 곳을 만들어 놓고 출마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은 통합의 리더십 갖춰야
黨 인재 영입 훼방놓을 생각 없어

그는 또 당에서는 자제령을 발동했다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맹 전 의원은 특히 현재 당내에서 외부인사영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 시장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외를 불문하고 훌륭한 경쟁력있는 후보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만 "그런데 이분들이 당에 소정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게 바로 경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 같은 국회의원들, 3선으로써의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이 있다"면서 "이분들이 똑같은 경선을 치러서는 그러한 기득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제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의원직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맹 의원은 '당에서 혹시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해서 배수진을 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솔직히 그런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서울시장뿐 아니라 당의 인재영입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맹형규 전 의원은 이날 '마지막'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으며 퇴장했다.

그는 회의에서 "(사퇴결정에)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5.31 지방선거을 사활을 걸겠다는 다짐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금실 전 장관과 맞붙고 싶다"

평화방송 출연 맹형규 前의원

서울시장은 통합의 리더십 갖춰야

黨 인재 영입 훼방놓을 생각 없어

(2006년 2월 2일자 3면)

❀ ❀ ❀

맹형규-강금실 '맞짱' 양상

맹형규, "몸집불리기 당당하지 못하다" 강 전 장관에 직격탄

최근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맹형규 전 의원이 한나라당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면서 열린우리당의 스타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의 맞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 동료의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며 금배지를 떼어낸 맹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해 "강금실 전 장관과 맞붙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2일에는 CBS에 출연해 "강금실 전 장관의 몸집불리기는 당당하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맹 전 의원은 이날 CBS 뉴스레이다에서 '여권에서 강금실 전 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 전 장관과 맞붙을 경우 승산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강금실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로 법무부장관 재직시절의 이미지만으로 강 전 장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이나 강금실 전 장관 본인이 아직 특별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강 전 장관이 겉으로 나서지는 않으면서 '김근태씨와 김혁규씨가 찾아갔다, 이렇게 삼고초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본인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옆에서 보면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하자면 몸집불리기를 하는 건데 전략적으로 당당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정말 나올거라면 당당하게 나서서 선거에 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맹 전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모른 채 최고 적임자라는 여론조사는 모순"이라며 "강 전 장관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 일대일 정책대결을 펼칠 것을 희망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맹 전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수도서울을 쪼개서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세력과 서울을 지키려는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는 또 "노무현 정권의 지난 4년을 평가하는 장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볼적에 여권으로서는 사실 여

간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강 전 장관을 지금 당당히 내놓지 않고 계속 몸 불리기를 전략적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맹 전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부 영입론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고 그것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창출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라면 우리가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맹 전 의원은 외부인사영입이 성사되더라도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맹 전 의원은 "현역의원과 외부인사는 공정한 경쟁의 여건, 기회 이런 것들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함께 경쟁하기 위해 제 자신의 프리미엄, 즉 기득권인 3선 의원직을 던지는 게 옳다라는 생각에서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는 외부영입인사와 똑같은 차원,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경선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한편 강 전 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기 위한 열린우리당의 당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당권경선에 나선 정동영, 김근태 후보 측도 자신이 당 의장이 돼야 '강금실 영입'을 할 수 있다며 모셔오기 경쟁에 합류했다.

정동영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박명광 의원은 "선정작업도 어느 정도 진행됐고 그 분과의 직, 간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근태 후보 대변인 우원식 의원도 "강금실 전 장관과 통화를 해서 본인이 고민하는 단초를 마련했고 상당히 많은 진전이 이뤄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오는 18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직후 출마 여부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맹형규-강금실 '맞짱' 양상

맹형규, "몸집불리기 당당하지 못하다" 강 전 장관에 직격탄

강 전 장관, 18일 전당대회 직후 최종결단 내릴듯

(2006년 2월 3일자 3면)

❀ ❀ ❀

"강금실 與 입당땐 지지도 추락할 것"

맹형규 서울시장 후보 서울 5개분할은 '선거판 흔들기' 발상

한나라당 맹형규 서울시장 경선후보(사진)는 8일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영입 1순위로 거론되는 강금실 장관에 대해 "지금은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막상 열린우리당 후보가 돼서 여론의 검증대상이 되기만 하면 그 때부터 지지도가 추락될 것은 뻔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맹 후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여당에 마땅히 나올 분들이 없는 것 같고 강금실 전 장관이 현재로는 가장 강력한 사람

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에서 강 전 장관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맹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은 강금실 후보로 해 놓고 한나라당에는 맹형규, 박진, 박계동, 홍준표 의원 등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는 것"이라며 "일대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금실 전 장관의 현재 인기나 지지도가 좀 높게 나온 것은 사실 아니냐'는 질문에 "약간 신비성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감춰져 있으니깐. 또 이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라고 가볍게 응수했다.

맹 의원은 이날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자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한다"면서도 "그런데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을 사분오열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맹 후보는 '서울시를 5개로 나누겠다는 것이 지방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 수도분열문제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은 이번 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을 쪼개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세력과 서울을 지키겠다는 세력의 한판 전투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것은 내년 대통령선거와도 연결이 된다"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 구도를 그대로 두고는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고 보고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놓겠다는 생각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금실 與 입당땐 지지도 추락할 것"

맹형규 서울시장 후보 서울 5개분할은 '선거판 흔들기' 발상

한나라당 맹형규 서울시장 경선후보(사진)는 8일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영입 1순위로 거론되는 강금실 장관에 대해 "지금은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막상 열린우리당 후보가 돼서 여론의 검증대상이 되기만 하면 그 때부터 지지도가 추락될 것은 뻔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맹 후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원린해서 오늘, 장신민입니다'에 출연, "여당에 마땅히 나올 분들이 없는 것 같고 강금실 전 장관이 현재로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에서 강 전 장관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맹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은 강금실 후보로 해 놓고 한나라당에는 맹형규, 박진, 박계동, 홍준표 의원 등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는 것"이라며 "일대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금실 전 장관의 현재 인기나 지지도가 좀 높게 나온 것은 사실 아니냐'는 질문에 "약간 신비성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감춰져 있으니깐. 또 이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라고 가볍게 응수했다.

맹 의원은 이날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자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한다"면서도 "그런데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을 사분오열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맹 후보는 '서울시를 5개로 나누겠다는 것이 지방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 수도분열문제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은 이번 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을 쪼개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세력과 서울을 지키겠다는 세력의 한판 전투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것은 내년 대통령선거와도 연결이 된다"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 구도를 그대로 두고는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고 보고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놓겠다는 생각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ley@sminilbo.co.kr

(2006년 2월 9일자 4면)

안 건 번 호 : 2006자심2

언 론 사 : (주)데일리줌신문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고 병 석

주 문 : (주)데일리줌신문사가 발행한 데일리줌 2006년 2월 13일자 28면 『글로벌 감각 탁월한 '여의도 젠틀맨'』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데일리줌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예정자를 인터뷰하면서 학력과 경력 및 출마변 등을 두 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제목과 본문을 통해 지극히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글로벌 감각 탁월한 '여의도 젠틀맨'

■ 한나라당 박 진 국회의원 인터뷰

남자 나이가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했던가? 한국 나이로 50세가 되던 지난해 박진(朴振) 의원은 전환점을 맞았다. 키 180cm인데 몸무게가 자꾸 늘어 95kg이나 됐다. 정치인으로 변한 뒤 술자리도 잦아졌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 시작한게 비만과의 전쟁이다. 해군장교 시절 진해에 근무할 때 관심을 가졌던 돌고래의 영민함과 민첩함을 떠올렸다. 실패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달려들어 3개월만에 18kg을 뺐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서 지난해 가을 '박진감 있는 돌고래 다이어트'라는 책을 써서 출판하고 새로운 결심을 했으니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것이었다.

-다이어트하는데 왜 하필이면 돌고래입니까

▲돌고래는 아주 특별하죠. 돌고래만큼 인간과 친숙한 동물이 없어요. 저는 어릴적부터 바다와 돌고래를 좋아해서 해군장교로 복무했어요. 우리 민족은 돌고래처럼 민첩하게 국제무대를 누벼야한다는 돌고래전략은 80년대초부터 생각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결심하고 돌고래를 떠올린 것은 당연하죠. 돌고래처럼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고, 돌고래처럼 많이 움직이고, 매일 한시간 정도 걷거나 달립니다.

-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폭탄주를 절대 안 마시겠다고 하고, 폭소클럽을 만들었다면서요

▲ 예. 하나의 생활수칙을 만들었는데 폭탄주를 소탕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만든 것이 폭소클럽(폭탄주 소탕클럽 - 물론 읽는 사람에 따라 폭소클럽은 '폭탄주 소비클럽'으로 변한다)입니다. 웃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진지하게 달려들었습니다. 299명의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가입하겠다는 사인을 45명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폭탄주 마시는 자리에 같이 앉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 진짜로 안 마셨나요?

▲폭소클럽의 대표인데 약속을 깰 수 있습니까? 폭탄주에서 뇌관을 빼고 맥주만 마셨죠.

(기자는 한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폭탄주의 묘미는 뇌관을 맥주 컵 속에 퐁 하고 떨어뜨리는 동작과 소리에서 나온다. 뇌관을 뺀다면 내용물이야 어떻든 이 재미가 사라진다. 그래서 혹자는 맥주 대신 사이다를 붓고, 뇌관으로는 맥주를 섞어 마시는 英연성 폭탄주를 제조해서 마시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블레어 총리·클린턴과 英 옥스포드대학 동창
국제적인 문화도시 '서울'로 경쟁력 키워야
"국회서 폭탄주 없애자 폭소클럽 만들었죠"

▲영국의 셴디(shandy)하고 비슷하네요. 영국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맥주 90%에 세븐업이나 스프라이트(모두 사이다와 비슷한 청량음료이다)를 10% 정도 섞은 셴디를 마십니다.

-영국에서 한 8년 지내셨죠?

▲제가 영국 블레어총리와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하고 대학동창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세인트 안토니 칼리지를 다녔는데, 블레어총리는 옥스퍼드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를 다녔어요.

클린턴 전 대통령과는 지금까지 20~30번 정도 만났습니다. 대통령 공보비서관을 한 인연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거나 할 때면 만났으니까요. 클린턴 전 대통령도 한때 옥스퍼드대학에 다닌 적이 있어서 아무래도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클린턴이 대통령 퇴임후 발간한 회고록의 한글판 출판차 한국에 왔을 때도 만났어요.

-외무고시를 대학 4학년때 합격하셨네요.

▲ 제 나이 만20세로 25명 뽑은 합격생중 차연소였습니다.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간 탓이기도 하죠. 중학교 무시험제도에 의해 정릉의 한 중학교로 배정됐는데 무허가 학교이던 중학교는 1년 뒤 폐교됐어요. 다른 중학

교로 가 석달쯤 다니다가 그만두고 검정고시학원을 6개월 다니다 고등학교를 남들보다 1년 일찍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다녔으면 75학번일 텐데 덕분에 74학번입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셨는데 자신의 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서울이 잘 살려면 획기적으로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 서울이 제 고향입니다. 뉴욕과 동경 런던 등에서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을 세계 4강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서울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데 주택, 환경, 문화가 제대로 공급이 안돼요. '이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3류도시로 전락합니다. 서울이 경쟁력 가지려면 세계가 찾는 젊고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방 후 60년동안 난개발한 서울은 푸른 서울, 젊은 서울, 글로벌한 서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제적인 세일즈를 하는 글로벌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정치 해보니까 어떠세요?

▲정치는 체력전이더라고요. 무척 바빠요. 정치가 보니까 서비스업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박진의원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답게 젠틀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강하게 풍겼다.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마티스와 불멸의 색채화가들' 전시회 홍보대사를 맡기도 하고, 강변북로를 월드컵대로로 명칭을 바꾸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명함엔 점자도 새겨 넣었다. "국립맹아학교를 처음 가서 김기창 교장선생님에게 명함을 드렸는데 가만히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이 이름을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앞 못 보는 분들을 위해 명함에 점자를 넣었죠."

돌고래가 솟구치듯 정치에서도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박 의원의 올해가 주목된다.

박진의원 연보

▲ 생일-1956년 9월 16일
▲ 본적 및 현주소-서울 종로구 명륜동
▲ 가족-부인 조윤희 씨 1남 1녀
▲ 병역-해군장교
▲ 이메일주소-parkjinkorea@hotmail.com

▲ 웹사이트-http:www.parkjin.net
▲ 1974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7 외무고시 차연소 합격
▲ 1978 서울대 법대 졸업
▲ 1980~83 해군장교 복무
▲ 1983~85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 1985~93 영국 옥스퍼드대학 정치학박사
▲ 1990~93 영국 뉴캐슬대학 정치학과 조교수
▲ 1993~96 대통령 비서실 공보비서관
▲ 1996~98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 1998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2001~02 한나라당 총재특별보좌역
▲ 2002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선거구 종로구)
▲ 2003 한나라당 공동대변인
▲ 2004 제17대 국회의원(국방위원회)
▲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한국의원외교포럼 회장, 한영협회 회장, 국회한미의원교협의회 부회장
▲ 주요저서-청와대비망록(2002), 박진의 북핵리포트(2003), 돌고래다이어트(2005), 번역서-더 라이트 네이션:미국 보수주의의 파워(2005)

안 건 번 호 : 2006자심10

언 론 사 : (주)전주매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1-18 성원오피스텔 14층
대표이사 이 대 수

주 문 : (주)전주매일이 발행한 전주매일 2006년 2월 15일자 1면 『김완주 시장, 도지사 출마 선언』, 2면 『김시장, 전북농협 개혁안 제시, '전북도백' 건곤일척 승부 '불꽃점화'』, 3면 『김완주 시장 고른 지지속 1위 달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전주매일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도지사)와 관련해 출마를 선언한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물 사진과 함께 공약 사항을 집중 보도하고, 해당 지역의 선거 판세를 분석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동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동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김완주 시장, 도지사 출마 선언

대중국 교역 확대 환황해 경제권시대 열겠다 다짐

5.31 전북도지사 선거를 위한 각당 후보자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완주 전주시장이 14일 열린우리당전북도당에서 '전북도백'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김시장은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은 15년동안 총 사업비 3조 4천억, 현재까지 투입예산 1조 7천억원의 새만금 사업 하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전북의 '선수 교체'를 통해 전북의 역사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전북의 인구는 현재 170여만명까지 줄어들 정도로 경제가 매우 낙후됐다"며 "그러나 이런 위기속에 기회가 있다며 전북은 대중국 교역을 통해 환황해경제권시대를 열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장은 이어 거대 중국시장 개척과 잘 사는 전북 건설을 위해 '3대 신산업혁신'과 '3대 핵심사업', '7대 전북 바꾸기' 등 '전북비전 3.3.7'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3대 산업혁신은 자동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부품소재산업과 식품생명산업,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이고 새만금의 성공적 완수와 전북 균형발전 5개년 계획, 21세기 광역연계 교통체계 구축 등을 3대 핵심사업으로 꼽았다.

또 7대 전북 바꾸기 사업은 중국시장 개척과 민생경제 살리기, 글로벌 1만 인재육성, 혁신도시 성공, 최고

김완주 시장, 도지사 출마 선언

대중국 교역 확대 환황해 경제권시대 열겠다 다짐

(2006년 2월 15일자 1면)

의 노인복지도시, 대한민국 문화중심 전북, 스포츠 전북 만들기 등이다.

김시장은 이날 강현욱 도지사의 민주당 경선 비리 사건과 관련, "민주주의에서 경선비리는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며 "지도자의 힘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시장은 "내달 초순·중순에 전주 시장직을 사퇴 할 예정이다"며 "이후 열린우리당 예비후보 등록을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시장은 이미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유성엽 前 정읍시장과 당내 경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김시장 출마선언은 공식 출마선언, 열린우리당 경선참여, 무소속 출마 등 다양한 선택을 놓고 '장고(長考)'를 하고 있는 강지사측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 ❁

'전북도백' 건곤일척 승부 '불꽃점화'

김시장 경선출마, 강지사 선택 압박… 지지층 내부결속 나서

차기 전북도지사 자리를 위한 유력 후보군의 한명인 김완주전주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전북 도백'을 향한 건곤일척의 승부가 불꽃점화되는 동시에 강현욱도지사의 선택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다.

김시장은 이미 열린우리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유성엽 前 정읍시장과의 '당내 경선'의 예정된 일정과 함께 강지사의 선택 -공식 출마선언, 열린우리당 경선참여, 무소속 출마 등-에 따라 우리당의 공천경쟁(오픈게임) 아니면 본선게임서 강지사와 '진검승부'가 불가피하다. 김시장은 우선 우리당 '당내경선'에서 유前 정읍시장과 공천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쳐 우리당 후보로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다.

유 前 정읍시장과 지지층이 비슷한 김시장은 오는 18일 우리당 당의장 선거 후 당내 경선 방식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본선에 앞선 '오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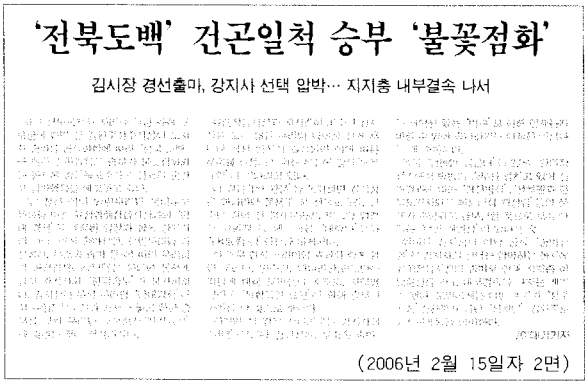
이 같은 '1차 관문'을 통과하면 김시장은 한나라당 문용주 전 전북교육감, 민주당 진념 전 경제부총리, 민노당 염경석 위원장 등 메인게임 '대항마'들과 '당대(對)당' 혈전을 하게된다.

이 경우 현직 프리미엄 효과와 함께 열린 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 민노당등 각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도, 지역별 성향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강지사의 '선택' -우리당 경선참여, 무소속 출마- 등 개연성 있는 '변수'로 인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속단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정동영-김근태' 등 2강이 당의장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 선거결과에 따라 '경선방식', '정치권과 전북도지사와의 파트너십 재정립' 등의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여 아직은 '여러 개연성'이 있다는 것.

여하튼 김시장의 이날 공식 '출마선언'은 강지사의 선택을 압박하는 동시에 유 前 정읍시장의 출마로 인해 지지층 이탈현상을 막고 내부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도민에게는 이번 계기가 '전주시장' 김완주가 아닌 '정치인' 김완주로 인식하게됨을 의미한다.


'전북도백' 건곤일척 승부 '불꽃점화'

김시장 경선출마, 강지사 선택 압박… 지지층 내부결속 나서

(2006년 2월 15일자 2면)

❁ ❁ ❁

김시장, 전북농협 개혁안 제시

김완주전주시장은 14일 전북농업인회관 1층회의실서 개최된 '전북농산업발전포럼심포지엄'서 전북농협 구조개혁을 위한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김시장, 전북농협 개혁안 제시

(2006년 2월 15일자 2면)

김완주 시장 고른 지지속 1위 달려

열린 우리당 경선 통과시 독주체제 유지

김완주 전주시장이 열린우리당 경선을 통과할 경우 본선투표에서는 강력한 대항마가 등장하지 않아 전북도지사를 향한 독주체제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시장과 한나라당 문용주 전 전북교육감, 민주당 진념 전 경제부총리, 민노당 염경석 위원장 등 4자 대결이 벌어질 경우 김시장은 44.1%의 득표로 2위를 차지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의 19.2%보다 더블스코어 이상을 기록하며 독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22.8%로 다소 많았으나 이들 부동층이 모두 진 전 부총리를 지지한다고 해도 김시장을 누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진 전 부총리의 출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문용주 전 전북교육감은 8.3%, 민노당 염경석 위원장은 5.6%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김시장은 20대로부터 51.9%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30대부터 50대까지는 40%대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는 등 전 연령대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았다.

60대 이상이 36.9%가 지지해 지지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였으나 이 마저도 2위 그룹과는 상당한 차이로 앞서나간 것이다.

민주당에서 진 전 부총리 대신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후보로 내세울 경우 김시장의 득표는 49.1%로 오히려 높아졌고, 부동층도 24.1%로 더 많아졌다. 결국 이 전 청장보다는 진념 전 부총리가 낫지만 그보다는 김시장이 낫다는 것이 전북도민들의 평가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에서 김시장 대신 강현욱 현 지사를 내세울 경우에도 강 지사가 민주당 후보들을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무려 33.9%에 달해 2위 그룹에서 부동층 공략에 성공할 경우 강 지사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무영 전 청장이 나설 경우 강지사는 36.8%를 득표하고, 이 전 청장은 17.3%, 문용주 전 교육감은 5.4%, 염경석 위원장은 6.6%를 득표해 이 전 청장이 부동층 33.9%에 대한 공략에 성공할 경우 승부는 안개 속을 헤매게 될 확률이 높다.

특히 이 전 청장의 경우 남성표가 23.7%로 높은 반면 여성표가 11.2%에 불과해 여성층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를 시급히 만들고, 나머지 부동층에 대한 공략을 강화한다면 승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에서 정균환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설 경우에도 강지사는 40.8%로 당선이 유력하지만 역시 부동층이 27.0%로 높은 것이 단점이다. 정 전 의원이 득표한 17.7%에다 부동층 공략에 성공한다면 이 또한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결과로 보면 열린우리당에서는 현직인 강지사보다 김시장이 당선가능권에 가장 근접한 후보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으로서는 강지사가 나오는 것이 승부수를 던지기는 좋지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또 민주당 출마예정자들로서는 김시장이 나올 경우 출마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 현재 상황에서는 전북도청 접수戰에서 김완주 전주시장이 독주하고 있으며, 다른 출마예정자들은 "고전할 것이 뻔한 싸움판"에 뛰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김완주 시장 고른 지지속 1위 달려

열린 우리당 경선 통과시 독주체제 유지

(2006년 2월 15일자 3면)

안 건 번 호 : 2006자심11

언 론 사 : (주)미디어줌신문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프레스센터빌딩 8층
대표이사 고 병 석

주 문 : (주)미디어줌신문사가 발행한 데일리줌 2006년 2월 22일자 9면 『청와대 용산이전, 민족 자존심 찾는 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데일리줌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해 특정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학력 및 주요 경력 등을 소개하고, 출마변과 공약사항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제목과 본문을 통해 지극히 우호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청와대 용산이전, 민족 자존심 찾는 일"

■ 열린우리당 이 계 안 국회의원 인터뷰

현대그룹에서는 알아주던 샐러리맨의 신화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계안(李啓安) 열린우리당 의원(54·동작구을), 46세에 현대자동차 사장에 올라 IMF 구제금융 이후의 혼란한 시기를 잘 극복한 뒤, 현대캐피탈회장을 맡던 그가 갑자기 여당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주변에선 수군거림도 많았고, 정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애매한 설명도 따랐다. 그렇지만 그에겐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것 이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Zoom 아직도 사람들이 왜 정치판에 들어왔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정치를 하기를 바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때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신 거에요.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아버지는 국사대관, 동양사대관 서양사대관과 잡지 사상계를 사주셨어요. 고3땐 '대학은 법대가서 판사되고 싶다' 하니까 형한테 물어보라 하세요. 형 이야기가 법대는 못간다 하데요. (당시만 해도 연좌제가 있었다) 결국 상대가게 됐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46살에 현대차 사장 돼서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갔더니 격려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와 네 마누라 자식 잘 키우게 된 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세요. 그 말이 씨가 됐고, 아버지 영향땜에 사회적으로 혜택 못받는 사람에 관심이 많죠.

이 의원의 부친은 진보정당 활동하느라 보안법으로 옥고를 몇차례 치뤘고, 여동생 이계숙씨는 한신대 운동권의 대모로 살며 후배들을 뒷바라지 하다 폐암으로 4년전 사망했다.

이계안의원이 현대중공업 시절 자금흐름의 이상을 발견하고 정주영 회장에게 쫓아가 부정을 바로잡은 사건은 아주 유명하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6시면 회사로 출근했던 이계안은 그래서 종종 이명박 현 서울시장과 비교되기도 한다. 이계안의원은 1월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의원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는 일요일엔 교회(이화여대 대학교회)가야 한다.

Zoom 최근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자는 구상을 발표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서울 스스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돼야 해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행정기관이 많이 빠져나가고, 용산 미군기지도 이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경쟁력있는 도시가

돼야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을 개방하겠다고 하고, 문화재청은 광화문을 복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대문안의 경복궁이나 창의문 창경궁 등은 복원해서 문화벨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2008년엔 미군기지가 이사가니까 용산땅 이용논의가 있는데, 용산미군기지 자리는 대대로 일본군 청나라군 몽골군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 청와대를 이전해서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자는 얘기죠.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115만평인데 9만평은 전쟁박물관으로 썼고, 나머지 2만 4000평은 미대사관 부지로 쓰고, 20만평은 국방부 용지로 사용하니까 남은 땅 90여만평에 청와대를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종로 등 강북일대 개발의 제한요건이 청와대가 있기 때문이므로 청와대 이전은 강북개발의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입니다.

외국군 주둔했던 곳에
대한민국의 상징 세워야

하이브리드카 지원
'서울을 문화환경의 도시로'

"소외 계층 돌아보라"
아버지 충고따라 정치입문

Zoom 이제 초선의원인데 서울시장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명박 현 서울 시장도 현대 출신인데, 현대가 다 하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 홍준표 의원이 된다면 고대가 다 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누구든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게 중요하죠.

저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98년 IMF구제금융을 받고 이듬해 자동차 업계가 어려울때 1만2000명을 줄이고도 노사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대규모 파업을 막았습니다. 현대직원이 5만명이 넘었으니까 서울시 인원 4만7천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저는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에서도 28년간 8개 회사를 옮겨 다녔습니다. 시장이 돼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안에서 양극화 해소하고, 복지제도 개선하고 일자리 만들어야죠.

Zoom 조직관리를 떠나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제를 일으키는데 청와대 이전 가지고는 충분하겠습니까?

=서울의 여러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방안이 하이브리드카 도입입니다. (하이브리드카는 기존의 자동차에 전기차의 기능을 추가한 자동차이다. 출발할 때처럼 큰 힘이 들어갈 때는 기름을 쓰지만, 주행중엔 전기를 쓰는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이다.)

서울시가 하이브리드카 사용을 지원하면 양산이 가능해져서 산업이 일어납니다. 물론 차 값이 비싸지긴 하겠지만, 상승분의 절반은 연비 좋아지는 부분으로 메우고 나머지 절반은 세금탕감한다든지 대기정화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겠죠. 환경에 가장 시급한 서울시에서 이니셔티브를 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한 건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여럿 해결할 수 있습니다.

Zoom 정치 해보니까 어떠세요?

=재계에서 일하면 2/8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돈 있는 20% 위해 만들고 살았잖아요. 정치에 오니까 80%가 유의미한 대상입니다. 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약하잖

"청와대 용산이전, 민족 자존심 찾는 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 계 안

이계안 의원 약력

외국군 주둔했던 곳에 대한민국의 상징 세워야
하이브리드카 지원 '서울을 문화환경의 도시로'
"소외 계층 돌아보라" 아버지 충고따라 정치입문

아요. 약자 편에서 일하는 기회죠. 정치 해보니까 사회 현상을 고민하게 되는데, 정치 자체는 내 소양에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업하던 사람에게 정치는 기대와 다른 것이 많습니다. 예측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일꾼이잖아요. 결국 잘 할 수 있는 일이 서울시장 하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술은 폭탄주를 한잔 마시면 그대로 뻗어버리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없고, 담배는 지금까지 장난으로도 물어본 적이 없다.)

이계안 의원 연보

1952 경기도 평택 출생
1971 서울 경복고 졸업
1975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76 육군 일병 복무(소집 해제)
1976 현대중공업 입사
1993 현대석유화학 이사
1996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전무
1998 현대자동차 CEO(사장 46세)
2001 현대캐피탈 현대카드CEO(회장)
▲ 회사박 경력
1996 서울시 공금운용자문위원회 위원
1998 서울현대학원(현대고등학교)감사
2002 학교법인울산학원(울산대)이사
▲ 현재
17대 국회의원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재정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후원회 회장
아산사회복지재단 자문위원
연세대 연세발전학부모회 회장

1997 여성신문사 명예평등부부 100쌍 선정
1999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월간중앙 공동 선정
한국의 대표적 전문경영인 50인 8위 선정

안 건 번 호 : 2006자심12

언 론 사 : (주)현대일보사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52-14
대표이사 권 오 륜

주 문 : (주)현대일보사가 발행한 현대일보 2006년 2월 22일자 2면 『지방화시대 걸맞는 의정활동 노력하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현대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하면서 의정활동의 구체적 내역 및 향후 의정계획 등을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지방화시대 걸맞는 의정활동 노력하겠다"

김의장, 남은 임기동안 의회 활동사항 밝혀

■ 김 경 차 동두천시의회 의장 인터뷰

"미군 재배치 이후의 경제위기 극복 · 경원선 복선전철 연내 개통등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김경차 동두천시의회 의장(사진왼쪽)은 효율적 시정운영을 위해 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고 나서겠다고 다짐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오는 6월말 4년 임기를 마감하는 김의장과 가진 인터뷰를 간추려 싣는

다. [편집자 주]

-제4대 후반기 의장직으로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저는 제2대때 동두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시의원으로서 참여한 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4대 시의원으로 현재까지 8년에 거쳐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소개한다면

의회와 집행기관과 상호 정례회 및 임시회를 통해 시정활동 정립에 노력 해왔습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 주거환경개선, 소방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건설적인 대안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시의 행정 업무처리가 시민들의 편리성에 맞도록 집행기관이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데 의회가 일조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직 의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새마을운동"과 "자원봉사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의 방향은

2003년 3월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침체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지역에 맞는 추진목표(새 희망 새 나라 새마을 운동)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고장 가꾸기 운동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주민공동생활 및 활동을 적극조성하고 더불어사는 지역복지 공동체 기반을 구축, 자립정신을 향상함으로써 새마을운동과 봉사활동에 발휘성을 보여주었으며, 현재로서는 지역 활성화에 열심히 임하는 단체로서 거듭 날 것입니다. 한편 올해도 다시 재임되었으니만큼 맡겨진 임기동안 적극적인 노력과 봉사에 힘 기울여 모범 사회단체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동두천시 전반에 경기가 타 지역에 비해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어떻게 풀이하겠습니까

이 곳의 경기가 특히 낙후된 것은 제일먼저 미군이 관내에서 이동 되어있어 경기침체가 부득이한 실정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한편 피혁공장(산업단지) 자체 역시 생산 수출에서 제외가 되다시피 됨으로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하고 싶습니다.

-경제 활성화 대책에 시와 의회 기획은 없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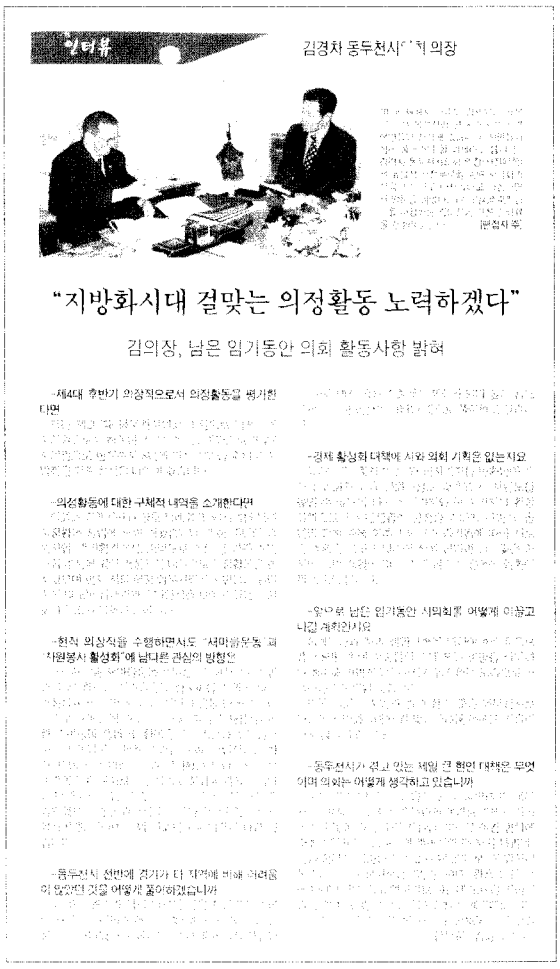
있습니다. 첫째 미2사단 군사기지를 반환받아 생산산업화와 교육 문화시설로 갖추고 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신시가지와 구 시가지를 활성화함으로서 시민생활에 안전을 기하게 하면서, 올 년말 전철 개통 이후 시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계획을 그곳에 맞추어 신설한다면 살기좋은 안전한 시민 생활에 맞는 경제 살리기 운동에 일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의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계획인지요

집행기관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풀어 8만 3천여 시민들의 기대 되는 희망을 하나하나 착수해 가면서 동두천시가 발전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동두천시로 만들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두천시가 겪고 있는 제일 큰 현안 대책은 무엇이며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경자 동두천시[illegible]의장

"지방화시대 걸맞는 의정활동 노력하겠다"

김의장, 남은 임기동안 의회 활동사항 밝혀

-제4대 후반기 의장직으로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소개한다면

-현직 의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새마을운동"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의 방향은

-동두천시 전반에 경기가 타 지역에 비해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어떻게 풀이하겠습니까

-경제 활성화 대책에 시와 의회 기획은 없는지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의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계획인지요

-동두천시가 겪고 있는 제일 큰 현안 대책은 무엇이며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전국적이라지만 동두천시 경우는 미군재배치 논란의 여파로 경제가 사장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여건 변화에 맞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안을 정부에 제출한 이후 2006년 2월 9일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서 현재로는 '반환공여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며, 한편 경원선 복선전철이 계획대로 금년내 반드시 개통이 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13

언 론 사 : (주)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590
대표이사 이 용 법

주 문 : (주)전민일보가 발행한 전민일보 2006년 2월 23일자 6면 『기업 적극 유치 경제활성화 주력』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전민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익산시장)와 관련해 '민선 3기 도내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 라는 형식으로 특정 지역단체장인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하면서 그의 시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시정 계획 및 출마변 등을 두 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지극히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기업 적극 유치 경제활성화 주력"

■ 민선 3기 도내 지자체장 - 채규정 익산시장

지난 2002년 제 3대 동시 지방선거 당시 채규정 익산시장은 민주당 내의 힘겨운 경선과정을 거쳤다. 전북의 지방정치를 독점하던 민주당이었으나 현직 시장의 무소속 출마와 함께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대체적인 선거전망은 치열한 '접전지역' 이라는 게 당시 분위기였다.

그러나 익산 시민은 시대적 흐름인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전북도 행정부지사 직을 과감하게 던져버린 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지난 4년간 익산시의 수장으로서의 업무 역시 지방자치라는 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그가 지휘봉을 잡았던 지난 4년 동안 익산시는 어떤 비전을 창출했고, 채 시장이 약속했던 청사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지난 4년 익산 시는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어떤 비전을 창출했다고 자평하십니까.

-민선 3기 취임시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새익산 창조' 를 위해 시민본위의 자치행정 실현, 지식기반 산업 육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농축산업 육성, 생산적 복지실현, 문화관광 도시기반 구축 등 6개 분야 94개 공약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기업을 위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친기업적 여건 조성, 최고의 행정지원체계구축, 산·학·연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지난해에만 동양물산기업(주), 태준제약, (주)농우바이오 등 국내유수기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총 42개 기업체를 유치해 2288억 여원의 투자 및 32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120 생활민원 현장처리제도' 운영해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시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지난해 서동축제와 천만송이국화축제를 성공적인 '시민 참여형 축제'로 개최했으며 '자원봉사 원년의 해'로 선포해 사랑과 나눔의 자원봉사 으뜸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시정 참여의 힘은 2006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유치,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지정으로 한양방 의료산업 중심도시 기반을 마련했으며 보석, 석재, 섬유 등 지역 전통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드라마 '서동요'를 제작·지원해 익산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웅포골프장 착공, 미륵사지 지구관광지 조성사업 확정 등으로 문화와 레저가 조화를 이룬 문화관광 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그 어느 시·군 단체장보다도 열정적으로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과는 완주군 이서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혁신도시가 익산에 유치되었을 경우 연관효과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혁신도시에 비견할 수 있는 익산시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말 KTX 호남고속철도 전북권 정차역으로 익산역이 확정됨에 따라 익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업무·유통·주거·문화산업기능이 복합된 용도로 개발해 원도심의 공동화를 해소하는 한편 기업 환경 및 관광여건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갈 방침입니다.

또 한양방의료·연구단지 특구를 15만평까지 확대해 '한양방산업단지'로 지정 받아 한양방 그리고 첨단 의료기기 산업이 조화를 이룬 한양방 의료산업 중심지로 가꾸어 나아가는 한편 친환경유기농생산물 및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농가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해 나아가고 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웅포골프장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레저와 문화가 어우러진 환경친화적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구축, 오는 2008년 월드컵 골프대회를 유치해 1만5000명의 고용창출과 3500여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해 공장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기 조성된 5개의 산업단지와 한양방산업단지, 왕궁농공단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산업 발전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42개 기업유치 3200여명 일자리 창출
역세권 중심 복합 문화산업단지 개발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15만평 확대

△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으로 익산역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익산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역세권 개발 계획은.

-역세권 개발을 위해 총 4061억원을 투자해 전북권 도시들과 시가지 외곽 연계 도로망 확충, 동·서역광장을 연결하는 복합역사 건설 등 주차 및 환승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 사람과 물류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효과를 공유해 전북지역의 성장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갈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에 익산역 건설 사업예산으로 2320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익산역 청사 신축은 물론 다양한 역세권 개발이 포함되어 있고 건교부의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역세권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 도로건설 사업은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교통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줄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일정은.

-지난 1997년 3월에 착공한 하나로 도로 개설 사업은 2004년에 신흥동에서 영등동 변전소 앞까지 4.3km구간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말에 총 사업비 580억원이 투자된 영등동에서 삼기면 서두리 지방도

718호선까지를 연결하는 연장 6.6km구간은 완공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나로 도로를 신흥동 시점에서 연무IC까지 총 26km구간을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는 2008년까지 서두리에서 백제로까지 1km구간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 마무리하고,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백제로에서 연무IC까지 14.1km 구간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익산시정과는 큰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공직생활과 민선시장의 업무차이점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민선시장 취임 이후 상당히 공격적인 행정을 통해 보다 많은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채시장의 생각은.

-인생에 있어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경험은 민선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 때로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 시민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시행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이라기보다 심사숙고하는 편입니다.

△ 채 시장에 대해 주위에서 일 욕심이 무척 많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역세권개발과 한양방특구 조성,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등 유통과 주거·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민들이 한 번 더 임기를 맡긴다면 어떤 일을 특히 더 해보고 싶습니까.

민선 3기 도내 지자체장 - 채규정 익산시장

"기업 적극 유치 경제활성화 주력"

42개 기업유치 3200여명 일자리 창출

역세권 중심 복합 문화산업단지 개발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15만평 확대

△ 채 시장에 대해 주위에서 일 욕심이 무척 많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역세권개발과 한양방특구 조성,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등 유통과 주거·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민들이 한 번 더 임기를 맡긴다면 어떤 일을 특히 더 해보고 싶습니까.

-지난 3년여 동안 저의 공직생활 30년의 노하우를 쏟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해결해야 할 일, 풀어야 할 매듭, 닦아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한양방산업단지 조성, 웅포골프장 완공, 왕궁농공단지 조성, 평생학습기반 구축,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등 시정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그 결실이 시민 여러분에게 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그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해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왕궁리유적전시관, 마한관, 미륵사지구 관광지 조성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완비하고 '백제왕궁터 보러오세요' 주제로 관광홍보에 힘써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선을 위한 출마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망은.

- 저는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재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시민이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에 대해 성급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저는 민선3기 익산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익산시민의 열망을 모아 전문행정가의 경험을 살려 살기 좋은 새익산건설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구체화 시켜왔기 때문에 승산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무엇보다 익산시와 익산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익산시민들의 선택을 믿습니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15

언 론 사 : (주)거창신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89-3 거창우체국 사서함 19호
대표이사 이 수 남

주 문 : (주)거창신문이 발행한 거창신문 2006년 2월 20일자 9면 『지사님 힘내세요!』 제하의 외부기고문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거창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남도지사)와 관련하여 현 도지사인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지극히 우호적인 내용, 다른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외부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그 후보예정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을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제1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지사님 힘내세요!

■ 최 민 식(대성고 23회 동창회장)

늦은 나이에 만학을 한 나는 모교인 거창전문대 졸업식에 토목과 후배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전문대의 이사장격인 거창이 배출한 큰 인물 김태호 지사께서 졸업식을 마치고 졸업생과

지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으며 떠나시는 길목에서 잠깐 뵈었는데 시종일관 표정은 밝았지만 현 정치 상황 때문인지 얼굴이 매우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사께서 16일 거창 도립전문대 졸업식에 참석한 바로 이날 김해의 송은복 시장은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남 도지사 출마 후보로서 흔들리는 도정을 이대로 지켜 볼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후 신항관련 협상안과 준혁신도시 문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김 지사를 싸잡아 비난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송 시장은 진해항에 2만톤급 6개의 선석을 추가로 건립해 진해항을 신항과 연계한 피더항(연결항)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전국 무역항 항만 기본계획에도 어긋나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한 엉터리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에 이어 3번째 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송은복 시장은 김 지사를 정면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에 경선 요구를 주장하였습니다.

요즘 강삼재 전 사무총장과 김해의 송은복 시장은 연일 김지사 흔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태호 지사를 거창의 자존심이고 자랑으로 생각해 왔던 저로서는 요즘들어 연일 공격을 당하는 지사님을 언론매체에서 대할 때마다 고향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김해의 송은복 시장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처신하라고… 아직 공식 선거전에 돌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정시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도지사의 도정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을 현명한 우리 도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김 지사가 누구입니까?

37세의 젊고 역동적인 나이에 주위의 예상을 깨고 도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일찍이 거창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언론의 스포트를 받지 않았는가. 우리 거창군민들은 김 지사 특유의 정치력과 친화력으로 현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삼재 전 의원, 송은복 시장 이들은 이미 구 시대의 흘러간 물이 아닙니까.

이원종 충북 지사님처럼 아름다운 용퇴를 하시면 존경받는 원로로 남으실텐데 민선 자치3선 시장까지 하고도 칠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정치적인 욕심이 남아서 아직 공식 선거전도 안 들어 갔는데 세번씩이나 김 지사 흔들기 기자회견을 하시는지 제발 용퇴를 못하시겠으면 자식같은 김 지사 그만 흔들고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년 전 도지사 경선때 우리 6만5천의 군민들은 하나로 뜰뜰 뭉쳐 오늘의 김 지사님을 탄생시켰습니다. 일당 백의 마인드로 인구 45만의 김해 시민들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 거창 전문대 졸업식때 살이 빠지고 수척한 김 지사를 뵈니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힘내시고 거창 군민들은 하나로 뭉쳐 지사님을 열열이 응원한다는거 결코 잊으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정치력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독자투고

지사님 힘내세요!

최 민 식
(대성고 23회 동창회장)

지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으며 떠나시는 길목에서 잠깐 뵈었는데 시종일관 표정은 밝았지만 현 정치 상황 때문인지 얼굴이 매우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사께서 16일 거창 도립전문대 졸업식에 참석한 바로 이날 김해의 송은복 시장은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남 도지사 출마 후보로서 흔들리는 도정을 이대로 지켜 볼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후 신항관련 협상안과 준혁신도시 문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김 지사를 싸잡아 비난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송 시장은 진해항에 2만톤급 6개의 선석을 추가로 건립해 진해항을 신항과 연계한 피더항(연결항)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전국 무역항 항만 기본계획에도 어긋나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한 엉터리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에 이어 3번째 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송은복 시장은 김 지사를 정면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에 경선 요구를 주장하였습니다.

요즘 강삼재 전 사무총장과 김해의 송은복 시장은 연일 김지사 흔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태호 지사를 거창의 자존심이고 자랑으로 생각해 왔던 저로서는 요즘들어 연일 공격을 당하는 지사님을 언론매체에서 대할 때마다 고향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김해의 송은복 시장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처신하라고… 아직 공식 선거전에 돌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정시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도지사의 도정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을 현명한 우리 도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김 지사가 누구입니까?

37세의 젊고 역동적인 나이에 주위의 예상을 깨고 도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일찍이 거창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언론의 스포트를 받지 않았는가. 우리 거창군민들은 김 지사 특유의 정치력과 친화력으로 현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삼재 전 의원, 송은복 시장 이들은 이미 구 시대의 흘러간 물이 아닙니까.

이원종 충북 지사님처럼 아름다운 용퇴를 하시면 존경받는 원로로 남으실텐데 민선 자치3선 시장까지 하고도 칠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정치적인 욕심이 남아서 아직 공식 선거전도 안 들어 갔는데 세번씩이나 김 지사 흔들기 기자회견을 하시는지 제발 용퇴를 못하시겠으면 자식같은 김 지사 그만 흔들고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년 전 도지사 경선때 우리 6만5천의 군민들은 하나로 뜰뜰 뭉쳐 오늘의 김 지사님을 탄생시켰습니다. 일당 백의 마인드로 인구 45만의 김해 시민들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 거창 전문대 졸업식때 살이 빠지고 수척한 김 지사를 뵈니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힘내시고 거창 군민들은 하나로 뭉쳐 지사님을 열열이 응원한다는거 결코 잊으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정치력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16

언 론 사 : 주식회사 대구뉴스
대구시 중구 동인동 3가 371-4
대표이사 임 덕 치

주 문 : 주식회사 대구뉴스가 발행한 대구신문 2006년 2월 24일자~28일자 각 5면 『선택 5·31지방선거』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대구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들의 동향을 6컷의 사진과 함께 4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정당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요 보도내용〉

선택 5·31 지방선거 D-96

서상기, 대구시장후보 공천신청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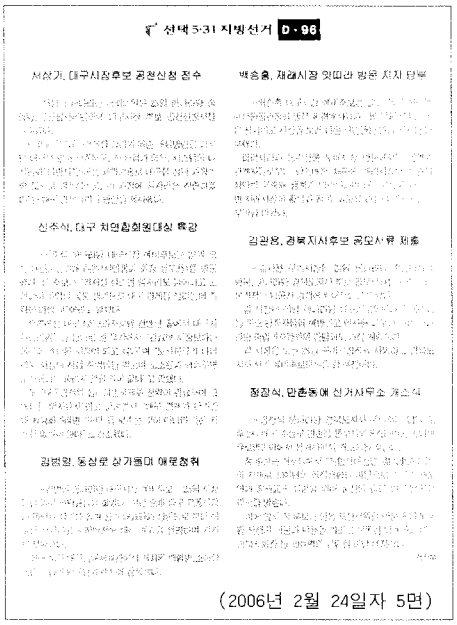
○…서상기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3일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대구시장 후보 공천신청서를 접수했다.(중략)

신주식, 대구 차연합회원대상 특강

○…신주식 한나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오전 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연합회(회장 성도용)를 방문했다. 신 후보는 "경제를 살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노인들이 취업할 곳도 생기므로 대구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중략)

김범일, 동성로 상가돌며 애로 청취

○…김범일 한나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시장 등을 돌며 바닥표심을 훑었다. 이날 오후 중구 교동시장과 동성로 상가를 돌며 상가 대표들과 상인들로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시장발전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며 지지를 부탁했다.(중략)


선택 5·31 지방선거 D-96

서상기, 대구시장후보 공천신청 접수

백승홍, 재래시장 찾따라 방문 지지 당부

신주식, 대구 차연합회원대상 특강

김관용, 경북지사후보 공모서류 제출

김범일, 동성로 상가돌며 애로청취

정장식, 만촌동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2006년 2월 24일자 5면)

김관용, 경북지사후보 공모서류 제출

○…김관용 구미시장은 24일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방문,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공모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당공천 경쟁에 뛰어든다고 밝혔다.(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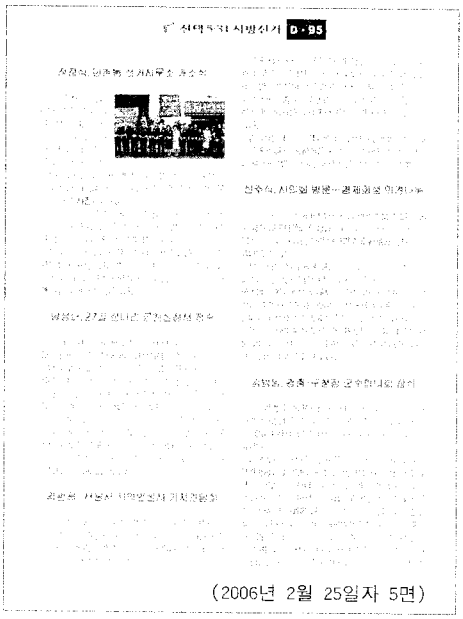
정장식, 만촌동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정장식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는 24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동부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글로벌빌딩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는다.(후략)

선택 5·31 지방선거 D-95

정장식, 만촌동 선거사무소 개소식

○…정장식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2시 김용수 한나라당 경북도당 고문, 이덕우 한나라당 대구시당 고문,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부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사진)을 가졌다.(중략)


선택5·31 지방선거 D-95

(2006년 2월 25일자 5면)

남성대, 27일 한나라 공천신청서 접수

○…남성대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는 27일 한나라당 중앙당에 공천신청서를 접수한다.(중략)

김관용, 서울서 지역언론사 기자간담회

○…오는 28일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등록을 앞두고 있는 김관용 구미시장은 24일 오전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방문, 차기 경북도지사 출마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공천신청서를 제출했다.(중략)

신주식, 시의회 방문… 경제회생 의견나눠

○…신주식 한나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강황 대구시의회 의장을 만나 "대기업에서의 28년간 CEO 경험과 체험을 살려 대구경제의 활로를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중략)

김범일, 경총·구청장 군수협의회 참석

○…김범일 한나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4일 대구경영자총협회 모임과 대구시구청장 군수협의회 모임에 잇따라 참석, 대구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집중 청취했다.(후략)

* * *

선택 5·31 지방선거 D-93

김광원, 대구 컨벤션센터서 출판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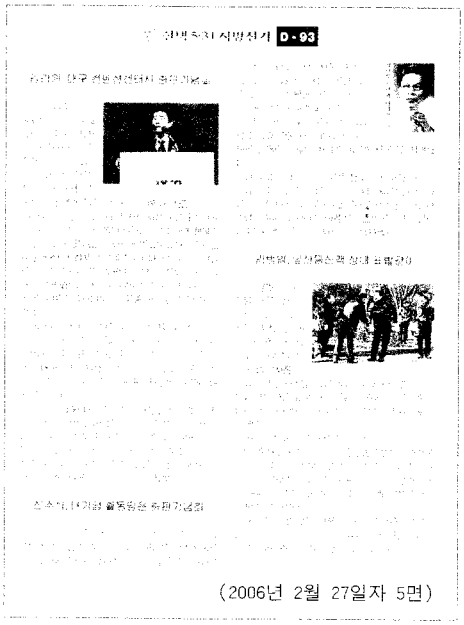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김광원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의 출판기념회가 25일 오후 3시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각계 인사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중략)

신주식, 대기업 활동담은 출판기념회

○…신주식 한나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전 CJ그룹 부사장)는 오는 28일 오후 5시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기업 해외 주재원 20여년 동안 느낀 점을 쓴 '쳐다보는 달과 바라보는 달' (사진) 출판기념회를 가진다.(중략)

김범일, 앞산등산객 상대 표밭갈이

○…김범일 한나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전 대구시 정무부시장)는 26일 등산객 등을 상대로 표밭갈이를 계속했다. (후략)


선택5·31 지방선거 D-93

(2006년 2월 27일자 5면)

선택 5·31 지방선거 D-92

김관용, 구미시장 퇴임… 본격 선거채비

○…김관용 구미시장은 27일 퇴임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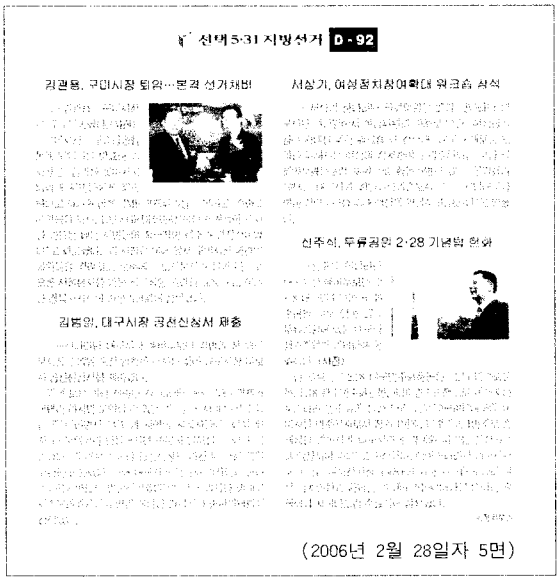
구미시청 구내방송을 통해 퇴임사를 발표한 김시장은 임기를 못마치고 퇴임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와 함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300억불의 도시, 1인당 GRDP3만6천불의 세계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결정적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시장은 이에 앞서 구미시청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고 오후에는 노사문제가 불거지는 코오롱 서울본사를 방문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고, 이의근 경북도지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김범일, 대구시장 공천신청서 제출

○…한나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김범일 전 대구부시장은 27일 오전 염창동 당사를 찾아 대구시장 후보자 공천신청서를 제출했다.(중략)

서상기, 여성정치참여확대 워크숍 참석

○…서상기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7일 한나라당 대구시당 대강당에서 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해 "대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택5·31 지방선거 D-92

김관용, 구미시장 퇴임…본격 선거채비

서상기, 여성정치참여확대 워크숍 참석

신주식, 두류공원 2·28 기념탑 헌화

김범일, 대구시장 공천신청서 제출

(2006년 2월 28일자 5면)

국회양성평등포럼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공감했다"면서 "대구시가 첨단과학기술도시 즉 디지털대구를 향한 전력투구를 위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주식, 두류공원 2·28 기념탑 헌화

○…신주식 한나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28 대구민주운동 재46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두류공원에 있는 대구학생민주의거 기념탑에 헌화했다. (후략)

안 건 번 호 : 2006자심18

언 론 사 : 전국매일(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5-5
대표이사 박 종 필

주 문 : 전국매일(주)이 발행한 전국매일 2006년 2월 28일자 1면 『국제도시 도약 초석 마련. 교육·문화예술 키울터』, 16면 『짜임새 있고 표정이 있는 야무진 도시』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전국매일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포천시장)와 관련하여 현 지방자치단체장인 특정 후보예정자의 시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및 향후 시정 계획 등을 여러 컷의 사진들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국제도시 도약 초석 마련 교육·문화예술 키울터

■ 박 윤 국 포천시장 인터뷰

"경기도 포천시는 이제 경기북부지역의 중추도시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규제를 완화시켜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도로를 뚫고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여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민선 4기 마무리 시점, 지난 4년이 자신의 생애에 가장 바쁜 시기였다는 박윤국(사진) 포천시장은 이번 임기에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차기에는 350만평 대단지에 건설되는 대형 신도시를 구상하며 이곳을 교육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그의 또 하나 야심이다.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재신임여부를 묻는 그는 이미 '다이나믹 2006'이라는 100여종의 역동적 포천건설의 프로젝트가 핸드북으로 만들어져 있다.

▲4년의 성과

박 시장에게 지난 4년의 성과는 무엇보다 농촌경제중심도시를 도시와 전원이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탈바꿈 시켜 군을 시로 승격시킨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산업과 교육, 문화를 육성하고 예술과 시민의 복지가 튼튼한 도시기반 구축에 주력했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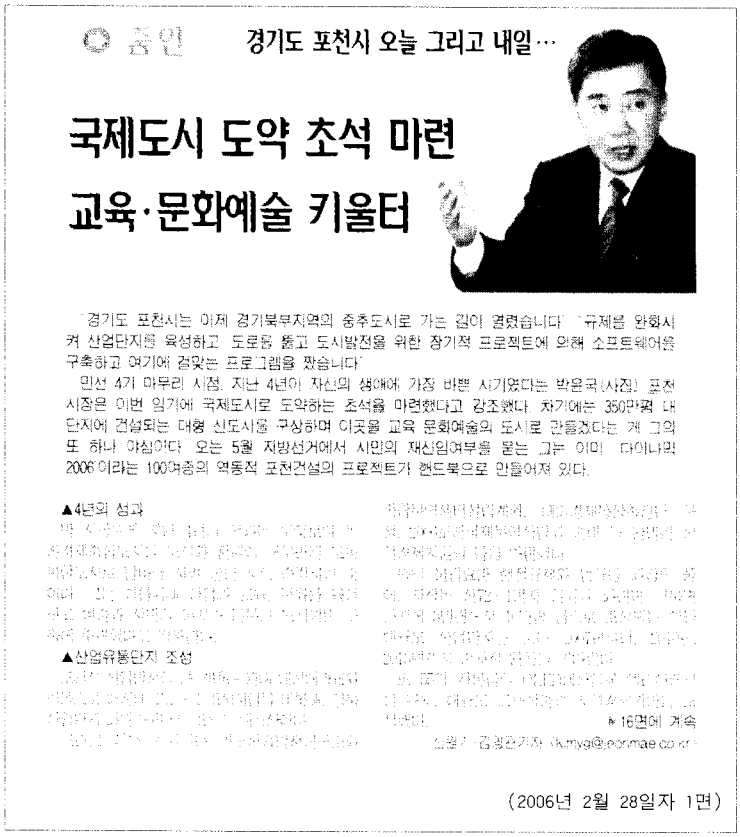
▲산업유통단지 조성

포천시 산업발전의 큰 기반은 관내 대진대학교와 공동으로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비롯해, 영북산업단지 화현가구단지 조성이 대표상이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가구산업발전연구소와 종합무역센터설립계획, 해외경제통상촉진단 구성, 2006포천국제무역상담회 준비 등 활발한 산업경제지원의 틀을 마련했다.

특히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법규를 과감히 풀어, 자작동 산72-1번지 일원과 화현면 영북면 등지에 3만평에서 10만평 급으로 조성되는 이들 대규모 산업단지는 오는 2007년부터, 2010년, 2013년까지 순차적 완공을 기다린다.

또 55억 자본금의 OLED생산업체 엘리아테크를 유치, 대규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기반을 포석했다.



오늘의 인물

경기도 포천시 오늘 그리고 내일…

국제도시 도약 초석 마련

교육·문화예술 키울터

"경기도 포천시는 이제 경기북부지역의 중추도시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규제를 완화시켜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도로를 뚫고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여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민선 4기 마무리 시점, 지난 4년이 자신의 생애에 가장 바쁜 시기였다는 박윤국(사진) 포천시장은 이번 임기에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차기에는 350만평 대단지에 건설되는 대형 신도시를 구상하며 이곳을 교육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그의 또 하나 야심이다.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재신임여부를 묻는 그는 이미 '다이나믹 2006'이라는 100여종의 역동적 포천건설의 프로젝트가 핸드북으로 만들어져 있다.

▲4년의 성과

▲산업유통단지 조성

▶16면에 계속

(2006년 2월 28일자 1면)

짜임새 있고 표정이 있는 야무진 도시

경기북부의 중추신경 포천시 미래를 말하다
대규모 산업유통단지 조성 고용창출 · 지역경제 '큰획'
도농복합도시 포부…복지 · 문화 하루가 다르게 변모

▲교육인프라 구성

경기도 포천시는 농촌경제를 도농복합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해가고 있다.

자녀교육열이 높은 사회구조상 산업인구를 유입시키는데 교육환경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

이 같은 자치교육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인구 6만당 1개 도서관 건립사업 구상, 200억원 규모로 중앙 소홀 일동 영중 등 4개 시립도서관건립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내 대진 중문 경복 등 종합대학교와 포천상의 공동 대학종합문화축제를 개최하고 100억원을 들여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포천인재장학재단 설립,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립, 그리고 중국 일본 인도 등 극동 동남아 국가와 국제청소년문화체험행사도 개최한다.

특히 좋은 학교 만들기, 우수고교 육성사업, 소규모학교 활성사업, 초등영어원어민교사 지원 등 다양한 교육사업프로그램에 45억원 규모의 국비와 도비를 확정받았다.

▲도시기능 충족 SOC 사업

도시는 무엇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과 근린시설 및 생활의 윤택이다.

포천시는 이를 위해 꾸준한 도로개발과 도시규모에 걸맞는 상하수도의 확장 및 하천개수, 폐기물 처리시설 등 복합도시의 기본구조를 갖추는데 괄목할 도시성장을 보였다.

시 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묶어, 중장기 계획에 의한 종합적 시내교통체계와 함께, 이동교리~의정부 시계, 이가팔리~고모리 구간, 중문의대~동교동, 마산리~가산면 구간 등 10여개 이상간 지선도로의 확·포장공사가 완공, 또는 조기준공을 바라보고 있다.

또 현재 연구용역중인 서울 동북지역 도시철도 7호선을 의정부를 경유해 포천시로 끌어오는 사업과 관내 공군기지를 지역공항화하는 사업, 서울과 동두천으로 가는 2개 민자고속도로, 남양주로 가는 제2순환도로 등의 광역교통체계들이 완성하면 포천시는 그야말로 사통팔달 교통도시의 나래를 달았다.

여기에 350만평 신도시 완성과 팔당권에서 공급받는 광역상수도사업 등 무궁한 도시발전의 길이 열린 것.

▲도농 균형발전

포천시의 도시발전 기본전략은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다.

2015년 목표 대규모 신도시, 광역고속터미널 활성 등 다양한 도시발전 전략 아래, 친환경 사과생력재배단지와 고추재배단지를 조성했고 250억원 규모의 관내 농축산물 매출을 위한 대형유통센터 건립계획도 세웠다.

또 육가공공장을 설립해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저농약 과수품질 인증제도를 시행, 농가매출증대와 명품 '콩' 참두릅 등 특용작물사업 추진 등 친환경농산물 개발로 영농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지동산촌마을 건설로 효율적 산림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 전략

포천시의 복지전략은 고령화 사회, 그리고 공교육, 복지정책 등이 부실한 국내현실을 지역사회에서부터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하성북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00평 규모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어렵게 살고 있는 전몰유족과 상이용사 등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종합복지관 옆에 지상 3층의 보훈회관이 들어선다.

금현리 농어촌노인복합단지는 노인들이 활동하면서 의료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여가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노후보장형 쾌적한 주거공간이다.

이동교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정서와 신체발달, 건전놀이문화 등 열린 교육의 장으로서 문화센터, 자치센터, 장애우센터, 스포츠센터가 있어 장애 비장애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교장소이기도 하다.

▲다양한 문화, 삶의 질 높여

포천시는 특히 자연경관 뛰어난 관광자원과 각종 명산품을 활용한 전국규모급 지역축제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

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에 한몫 하고 있다.

산정호수의 '명성산 억새축제'는 연인원 30만을 동원, 국내외 여행사들의 손꼽히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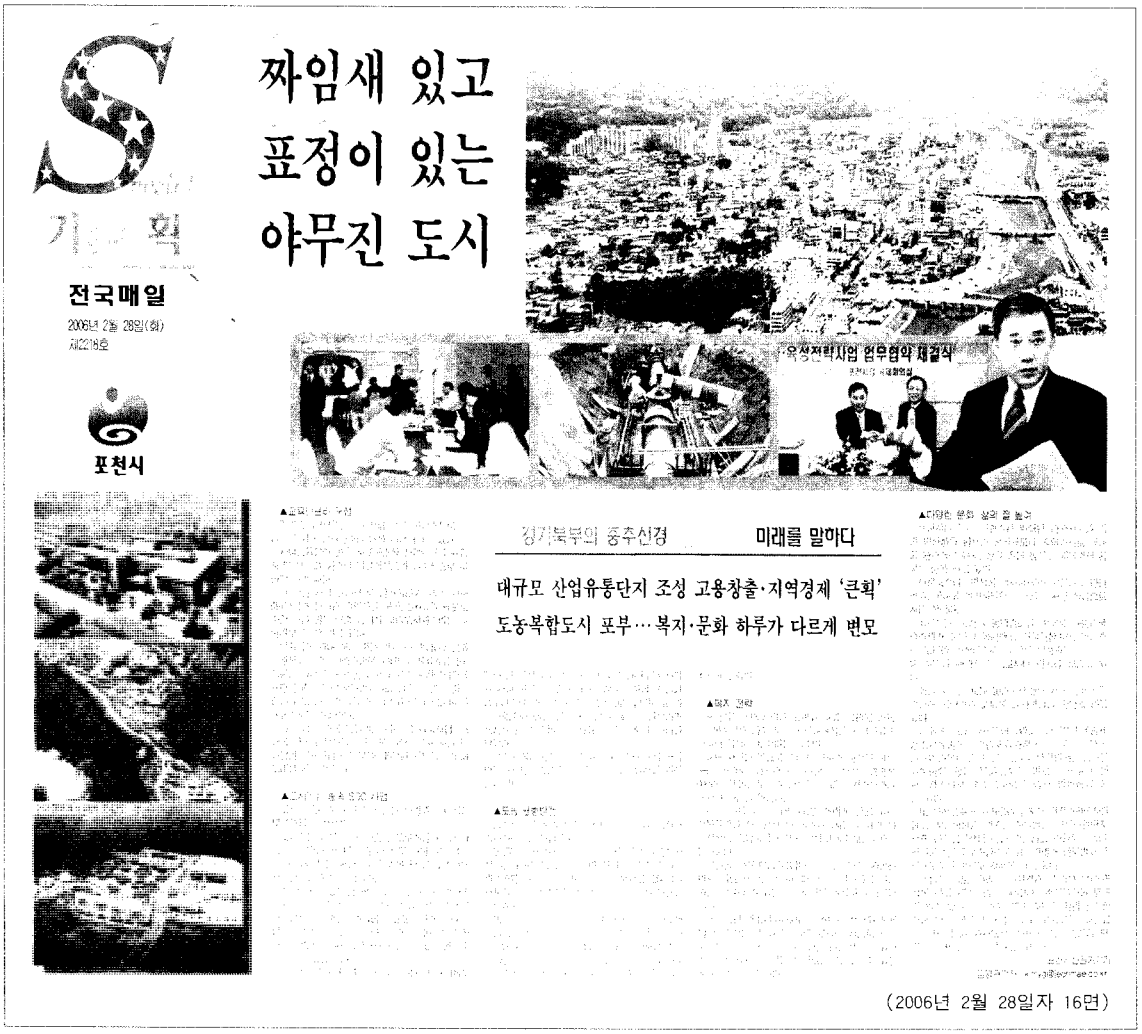
최근에는 포천 이동막걸리를 주제로 대한민국 술축제가 10만을 동원했고 개성인삼축제, 백운계곡 도리돌 동장군축제, 운악산 단풍축제 등이 관내 시민과 관광객 등으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들 축제는 보통 10만에서 20~30만 인파가 몰려들어 지역경제 회복에 효자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

이외에 포천국제무역박람회 전국민속예술제 청소년 예술제 종합체육관전국바둑대회, 38선 하프마라톤대회 등은 도시위상정립과, 교육문화예술이 있는 문화도시의 면모를 세우는 한편, 경기북부 중추도시로의 힘찬 발돋움이 되고 있다.

또 산정호수에 가족호텔을 지어 건강가족행사를 돕고, 시립박물관, 기지리 아트밸리, 영상산업단지, 국제한인교류센터 등을 건립하고 반월성지 보수공사와 산정호수종합리조트를 개발해 글로벌화 된 국제도시의 면모도 갖추어 가고 있다.

기름진 옥토, 수려한 자연경관, 경기북부최대면적에 문화유적이 많고 예로부터 충신열사와 명현이 많이 났다는 포천시, 15만 시민의 살림을 이끌어온 박 시장은 지난 4년을 남북통일의 시대, 교통 경제 문화 관광도시 기반을 세운 미래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일구었다고 자부한다.



S 기획

짜임새 있고 표정이 있는 야무진 도시

전국매일
2006년 2월 28일(화)
제2218호

포천시

유성전력사업 업무협약 체결식

경기북부의 중추신경 미래를 말하다

대규모 산업유통단지 조성 고용창출·지역경제 '큰획'
도농복합도시 포부…복지·문화 하루가 다르게 변모

(2006년 2월 28일자 16면)

안 건 번 호 : 2006자심26

언 론 사 : (주)수도권일보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39-3
대표이사 강 신 한

주 문 : (주)수도권일보사가 발행한 수도권일보 2006년 3월 20일자 3면 『김문수의원 지지 '45.5%'』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수도권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판세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만을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하고, 공표준수사항인 조사의뢰자,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동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동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김문수의원 지지 '45.5%'

여야 유력경기지사 후보 가상대결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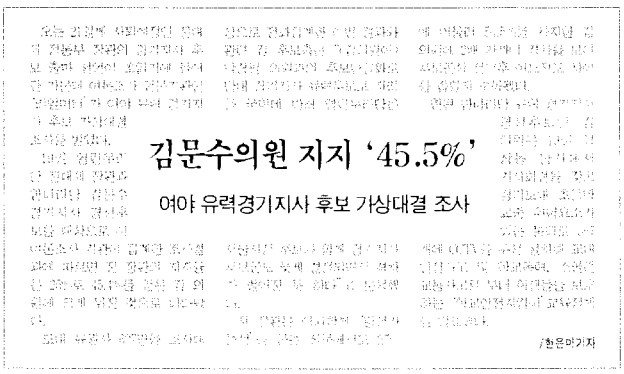
오는 21일께 사퇴예정인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경기지사 후보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여야 유력 경기지사 후보 가상대결 조사를 벌였다.

19일 열린우리당 진대제 장관과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 경선후보를 대상으로 이 여론조사 기관이 집계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 장관의 지지율은 25%로 45.4%를 얻은 김 의원에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유권자 627명을 조사대상으로 전화집계한 이번 결과와 관련 김 후보측은 "(김의원이) 남경필 의원과의 후보단일화로 당내 경기지사 유력후보로 자리를 굳힌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경기지사 후보군도 늦게 결정되면서 격차가 벌어진 듯 하다"고 분석했다.

진 장관은 이와함께 '당선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27%에 머물러 50.5%를 차지한 김 의원에 2배 가까이 격차를 보여 후보공식 선언후 어느정도 차이를 좁힐지 주목됐다.

한편 한나라당 유력 경기지사 경선후보인 김 의원은 19일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내 초등학교중 위험요소가 있는 통학로 367개에 CCTV를 우선 설치해 교내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학교안전지킴이'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김문수의원 지지 '45.5%'

여야 유력경기지사 후보 가상대결 조사

/한은마기자

안 건 번 호 : 2006자심28

언 론 사 : (주)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 훈

주 문 : (주)전북일보사가 발행한 전북일보 2006년 3월 2일자 18면 『'재의 나라'에서 개혁의 불씨 지피다』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전북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도지사)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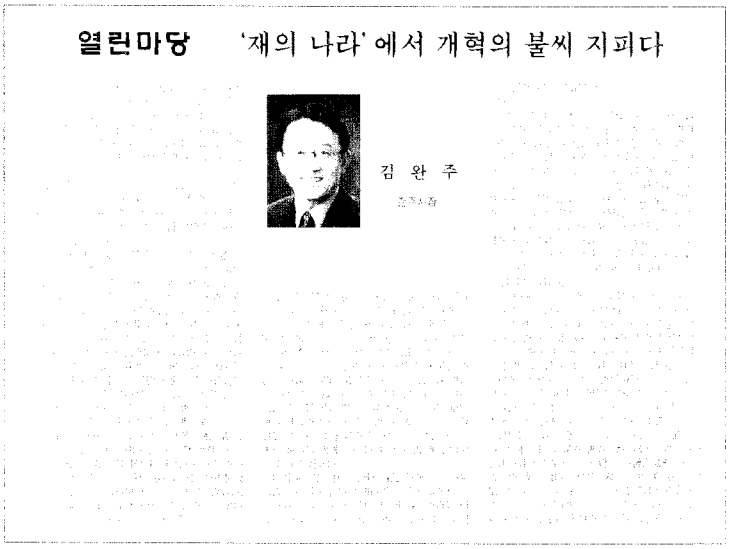
'재의 나라'에서 개혁의 불씨 지피다

김 완 주 전주시장

소설 〈불씨〉는 18세기 중반, 일본 요네자와번의 젊은 번주 하루노리가 이룬 개혁과 성공의 스토리다. 소설의 주인공 하루노리는 실존 인물로 그가 창안한 '전국의 사(辭)'는 지금도 일본 기업들의 기업강령으로 꼽히고 있다. 또 그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일본인으로 꼽은 위대한 인물이다.

15살의 나이에 양자의 신분으로 번주에 오른 그에게 부닥친 요네자와의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다. 요네자와는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상인들이 빚도 주지 않을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다.

심지어 평생 요네자와를 지켜온 가노(家老)들은 막부에 번을 반환하자는 제안을 할 정도로 요네자와는 피폐한 상황에 몰려 있었다. 수많은 요네자와의 번민들이 먹고 살길을 찾아 매일같이 번을 떠나 인구는 급감하고, 요네자와를 지탱해왔던 산업들은 경쟁력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여기에 요네자와의 미래를 건설할 새로운 산업이나 아이디어마저 고갈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요네자와번에 팽배한 패배감과 무기력이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고 관리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열린마당 '재의 나라'에서 개혁의 불씨 지피다

김 완 주

없이 반복할 뿐이었다.

이런 악조건에서 구슈의 작은 번에서 우에스기가라는 명문에 양자로 들어와 번주에 오른 하루노리는 철저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으로 요네자와를 일으켜 세웠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었다. 개혁을 향한 뜨거운 심장과 불타는 눈을 가진 젊은이들을 불러모았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어려운 요네자와번에서 단지 인간성만 좋다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인간이지."

그렇게 모아진 젊은 일꾼들은 요네자와 개혁의 깃발을 세웠다. 그들이 몇 달을 고민하며 세운 9항의 개혁 방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현실에서는 더 이상 강력할 수 없었다. '번이 행해온 종교행사는 전부 연기 또는 중지한다', '식사는 국 한 그릇 반찬 한 가지로 한다', '마님의 하녀는 9명으로 줄인다' 등은 요컨대 번의 형식주의를 타파하자는 단호한 결의였다. 하루노리 자신의 정책결의도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 번의 열악한 실태를 모든 번사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실태극복을 위한 목표를 세우며, 이것을 번사 전원의 협력을 받아 수행하겠노라고 밝혔고 이를 실천했다.

마침내 에도에서 요네자와로 들어가는 하루노리 일행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데 없어서 요네자와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커다란 반감과 함께 비웃음을 샀다. 그러나 하루노리는 기존의 관행을 철저하게 깨뜨리면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했다.

하루노리의 도전은 요네자와에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거의 모든 번사들이 하루노리를 경멸했다. 그러나 그의 진실을 알게 된 소수의 번사들은 목숨을 걸고 개혁에 동참했다. 하루노리의 제안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속속 일어났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쌀농사 대신 옻나무와 닥나무와 뽕나무를 심었고, 이를 원료 자체로 팔지 않고 가공해서 파는 이른바 가공산업을 일으켰다. 농민들의 손재주를 이용해서 목공예를 일으키고 잉어를 잘 키워 요네자와의 브랜드로 비싸게 파는 산업도 그가 창안했다. 마치 재만 남은 것 같은 폐허의 도시 요네자와에서 하루노리는 스스로 불씨가 되었다.

개혁에는 신분과 지위가 없었다. 그런 하루노리의 개혁은 끝없이 방해받았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정치투쟁도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강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개혁이 강력했던 것은 그가 추구했던 변화가 정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개혁은 반대자들이나 부패한 적대자들을 몰아내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구성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의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전북의 땅과 사람들이 지금 개혁을 원하고 있다. 개혁은 먼저 내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네자와는 지도자 한 사람을 바꿈으로써 만인의 행복을 얻었다. 전북도 지금 그런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나는 지금 230여년전 일본의 한 도시가 겪었던 개혁의 역사를 다시 읽고 있다. 진심으로 독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한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29

언 론 사 : (주)종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252-1 대신빌딩 705호
대표이사 김 화 조

주 문 : (주)종로신문사가 발행한 종로신문 2006년 3월 10일자 7면 『아쉬운 도덕정치의 구현』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종로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

방선거(종로구청장)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아쉬운 道德政治의 구현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불변한 것

남 상 해 (주)하림각 회장

일찍이 공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써 질서를 유지하면 백성은 법망을 뚫고 형벌을 피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한다. 도덕으로써 지도하고 예법으로서 질서를 유지하면 백성은 부정을 수치로 알고 정의를 찾게 된다" 곧 공자의 덕치주의 사상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政은 正이라 그대가 솔선하여 몸을 바르게 가지면 누가 감히 바르게 행하지 않으리요"라고 말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가 어지럽고 질서가 문란한 것은 모두 국민의 잘못으로 돌리고 위정자는 엄중 처벌을 능사로 삼고 온갖 가혹한 형벌로 통치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자는 통치자의 높은 인격과 도덕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위정자가 덕으로 정치하면 백성은 덕치의 감화를 받아 스스로 도의심을 정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윗사람이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은 행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호령하여도 백성은 따르지 않는다"(其身正 不命而行 其身不正 號令不後)고 설파한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되 먼저 몸가짐을 올바르게 솔선수범하면 국민이 감화되어 지도자를 따르게 된다는 공자의 이 말은 수천년의 시간이나 공간의 격세에 있지만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다.

현대사회는 사회생활이 매우 복잡하고 국민의 욕구 또한 극도로 분화 다양해졌으며, 이러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사회 곧 국가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일은 사회 공학적 기술이나 국민의 사회활동을 규제하는 법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하나의 조화로운 통합적 유기체로 이끌어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빈틈없는 법률 규제 수단만으로는 조화로운 국가경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경륜보다는 위정자의 확고한 도덕적 인격과 윤리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위정자가 도덕적 정치관을 가지고 조화로운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 또한 도덕적 생활의식에 따라 생활하게 될 것이며, 사회는 평온하고 사회정의는 구현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사회적 생활에 있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정자의 확고한 도덕정치에 대한 의지 및 도덕적 생활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곧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두터운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어 민·관 관계의 유대가 존속되어 국가발전을 이룩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의 도덕정치를 체험하지 못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얼룩진 파란과 굴곡만큼이나 암울하고 부끄러운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왔기 때문이다.

아쉬운 道德政治의 구현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불변한 것
남 상 해

안 건 번 호 : 2006자심30

언 론 사 : 주간 부천자치신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10 한빛프라자 701호
대표(발행인) 김 선 관

주 문 : 주간 부천자치신문이 발행한 부천자치신문 2006년 3월 11일자 10면 『실효성 없는 조세개혁』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부천자치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천시의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실효성 없는 조세개혁

이 환 희 논설주간

지난 6일 한 일간지에 게재된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라는 제목의 기사와 동일한 주제의 저녁 7시 및 9시의 모 방송 뉴스보도와 관련하여 관계인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당정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문과 방송 보도내용과 재경부의 해명자료를 종합해 볼 때,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당장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 관리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다가 번번이 입주민들의 반발 등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본란은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이론상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수도 없이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세당국이 또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당성과 불가능성을 환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조세이론상 부당한 이유는 아파트 관리비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필수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생활필수품이나 생활필수용역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과징수가 불가능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한 자가 존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한 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며, 외관상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용역제공자가 아니라 입주민들의 관리업무를 소정의 수수료만 받으면서 보조하고 있는 보조자에 불과한 것이다.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관리용역을 보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 받는

것이므로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은 될 수 없는 것이며, 관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명백한 사실이다.

셋째, 조세당국이 세수확보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위탁관리 아파트는 자치관리 아파트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것이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당초 목적했던 세수확보는 전혀 하지도 못하고, 주택관리업자들만 도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전문적, 직업적 관리를 할 수 없게 하는 불이익만 안겨 주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세개혁이라는 비난만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견할 수 있는 상식적인 문제이다.

넷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부가세를 영구면제하고, 초과 아파트에는 2008년 이후부터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현행법률이 시행된다면 공동주택의 핵심요소인 공동체의식이 실종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입주자와 초과 입주자는 주차장, 헬스장 등의 이용권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희망의 창

이 환 희 논설주간

실효성 없는 조세개혁

안 건 번 호 : 2006자심31

언 론 사 : (주)시민일보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대표이사 정 우 영

주 문 : (주)시민일보사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6년 3월 17일자 5면 『요덕, 충격과 감동의 휴먼드라마』, 동년 3월 21일자 5면 『안전 서울 5대 프로젝트』 각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시민일보사가 제4회 전국동시지

방선거(서울시장)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요덕, 충격과 감동의 휴먼드라마

박 진 한나라당 의원

"거기 누가 있다면 이 비명 소리 듣고 있는지. 거기 누가 있다면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요. 바람아 불지 마, 불지 말아라. 태양아 뜨지 마, 뜨지 말아라. 연약한 촛불이 꺼질테니, 연약한 촛불이 꺼질 테니…."('촛불같은 생명' 中)

그곳 요덕에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절망의 삶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당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자유까지도 빼앗긴 비참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자매요, 동포였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2시간40분

지난 14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전야제에 참석했다. 탈북 출신 감독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뮤지컬,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탄압이 가해진 뮤지컬, 국민의 후원으로 무대에 서게 된 뮤지컬…. 전야제에 참석하기 전 '요덕스토리'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다.

저녁 8시, 평양무용단의 북한무용으로 요덕스토리의 막이 올랐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인공인 '공훈배우' 강련화 가족의 요덕수용소행, 인권을 유린하는 겁탈과 고문, 끔찍한 공개처형의 현장….

한 편의 뮤지컬로 각색된 장면들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말살 현장이 생생히 다가왔다.

이어지는 "아버지, 남조선에만 가지마시고 공화국 이곳 요덕에도 와주소서, 아버지 제발!"이라고 절규하는 태식의 노래와 강련화의 아들 요덕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수용소 사람들, 그리고 죽음….

처음에는 마음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촛불 같은 생명'과 '기도'를 들으며, 무참하게 인권이 유린되는 고문의 현장을 보며, 그 속에서 싹트는 애틋한 사랑을 느끼며 나는 결국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렇게 충격과 감동으로 2시간40분의 공연이 끝났다.

북한 인권 유린을 방조하는 노무현 정권

요덕스토리는 지금도 함경남도 산골짜기에 실재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이다. 북한에서는 제15호 관리소라고 불려지고 있다. 지금도 요덕수용소의 수감자들은 결혼과 출산 같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요덕이 인권의 사각지대를 넘어 21세기 마지막 남은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요덕을 비롯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수십만의 수감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누구인가? 다 우리의 형제자매이고 동포 아닌가?

인권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곧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그렇기에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말살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정면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한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있다. 이번 요덕스토리의 공연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비료를 줘서 사람들이 탈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인권 개선",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정권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각종 의혹 사건을 왜 지금 파헤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일이지만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함이다. 그런 정권이 과거의 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정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무참한 인권유린에 침묵하고 이를 방조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정부가 생각하는 인권이란 말인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고사하고 공개처형, 고문, 기아 등 최소한의 생존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참상을 갖은 궤변으로 외면하는 것이 이 정부가 생각하는 인권이란 말인가?

탈북 출신 정성산 감독은 온몸을 던져 이를 고발하고 절규하고 있다. 요덕스토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어떤 보고서보다도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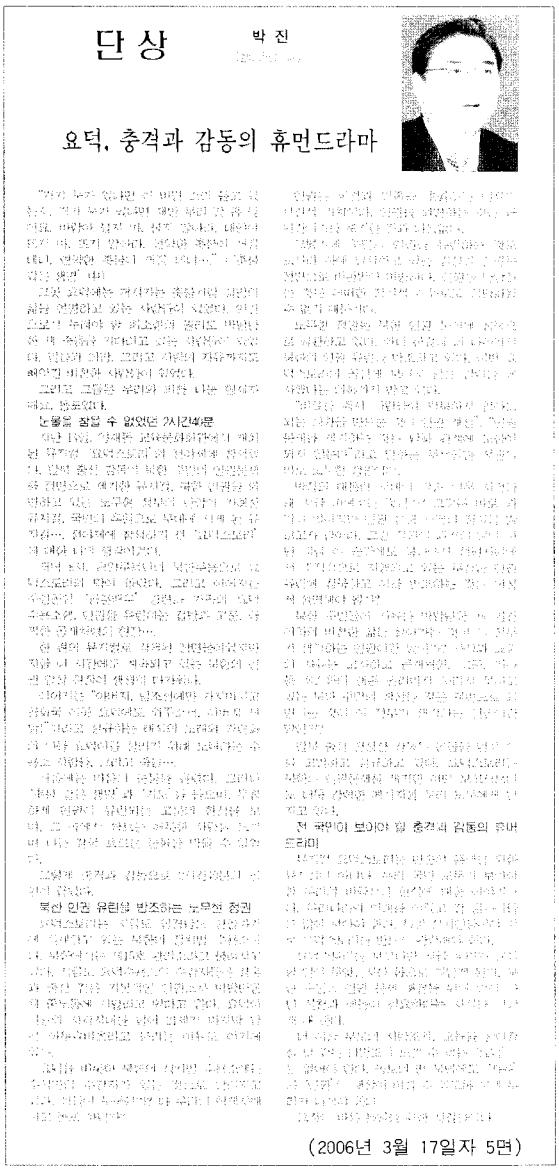
전 국민이 보아야 할 충격과 감동의 휴먼드라마

뮤지컬 요덕스토리는 단순히 흥행을 위한 뮤지컬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보아야 할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이들도 많이 보아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이야 말로 요덕스토리를 반드시 관람해야 한다.

요덕스토리를 보고나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깨닫게 된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더 이상 부모의 사랑조차, 오늘을 살아갈 실 날 같은 희망조차 느낄 수 없는 '요덕'이는 없어야 한다. 동토의 땅 북녘에도 '자유'와 '인권'의 햇살이 비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른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다.



단 상 박 진

요덕, 충격과 감동의 휴먼드라마

(2006년 3월 17일자 5면)

안전 서울 5대 프로젝트

박 진 한나라당 의원

지난 16일은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명 '발발이', '빨간 모자'로 대표되는 성범죄 역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의 범죄는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어린이와 여성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73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5건 증가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 역시 증가추세다.(2004년 6959건, 2005년 7323건) 특히 서울의 경우 1991년

인구 10만명당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률은 9.2건이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30.6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는 어린이와 여성 등 신체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로서 어린이와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로부터의 해방-안전 서울 5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성범죄와 유괴 방지를 위한 '서울 SOS 프로그램' 도입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의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치안서비스인 '서울 SOS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긴급구조 단말기(가칭 '서울 SOS 단말기')를 보급해야 할 것이다.

서울 SOS 단말기는 위성추적장치(GPS)를 이용해 범죄 발생 현장 및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SOS 단말기로 구조요청을 하면 기동 순찰대가 5분 이내에 사건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한다.

두 번째로는 서울 전역의 공원, 버스 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긴급 SOS 신고 벨을 부착해 목격자가 최소한의 의지로 신속히 범죄현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범죄와 유괴범죄 조기 해결을 위한 '서울형 앰버 경보제' 도입

앰버 경보제(Amber Alert)란 현재 미국 40개 이상의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일단 아동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해당지역의 TV, 라디오 방송은 물론 도로 현황판이나 체육관 전광판 등을 통해 즉각 범인과 피해자의 인상착의, 차량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도 증가추세에 있는 어린이 납치 및 성범죄 발생 시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형 앰버 경보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3. 미아 찾기를 위한 '유아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울시의 주도로 신생아 출생 시 희망자에 한하여 무상으로 DNA 정보를 채취해 부모의 DNA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화 된 DNA 정보는 평소에는 비밀금고의 형태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되, 유괴 사건이나 실종 사건 발생시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DNA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찾기운동본부센터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등 밝기 50% 상향 및 보안등 추가 설치'

현재 우리나라 가로등의 밝기를 살펴보면 조도 기준

단 상 박 진

안전 서울 5대 프로젝트

(2006년 3월 21일자 5면)

은 OECD 기준(15~30룩스)과 동일하지만 그 실상은 겨우 절반 정도만이 기준에 부합할 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조명시설이 야간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야간영업 상점과 그 주변의 조명을 밝기를 50% 이상 높인 이후 범죄가 65% 이상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기준 미달 가로등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조도 기준을 현행보다 50% 상향 조정해 어두운 골목을 밝혀야 한다. 또한 12m 미만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물에 설치된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면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5. 주민투표 실시로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강남구의 예에서 알 수 있듯 방범용 CCTV 설치는 5대 범죄 예방 및 검거에 이미 그 효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우범지역부터 설치하되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의결로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줄리아니(Rudolph W. Giuliani) 전 뉴욕시장은 범죄 없는 뉴욕을 약속한 이후 범죄분석예방시스템인 'CompStat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세청과 함께 마피아 소탕 작전을 벌이는 등 범죄 퇴치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뉴욕의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줄리아니 전 시장은 아동범죄와 성범죄 해결을 위해 비판 여론을 무릅쓰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불과 8여년 만에 뉴욕의 강간범죄를 40% 이상 감소시켰다.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지던 뉴욕을 안전한 세계문화 관광지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것이다.

오늘 제안한 '범죄로부터의 해방-안전 서울 5대 프로젝트' 역시 강력한 추진력과 어린이와 여성 대상 범죄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32

언 론 사 : (주)경동신문
서울시 광진구 능동 237-5
대표이사 구 직 회

주 문 : (주)경동신문이 발행한 경동신문 2006년 3월 16일자 8면 『경동 인터뷰 - 광진구의회 추윤구의원(중곡4동)』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경동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진구의원)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기사를 보도하면서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과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및 의정철학 등을 3컷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주민불편 제로에 도전하는 중곡동 오토바이 순찰맨"

京東인터뷰 - 광진구의회
추 윤 구 의원(중곡4동)

추윤구 의원은...

추윤구 의원 의정철학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

건주의가 아닌 지역과 광진구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야 한다는 것'.

웬만하면 적당히 눈감아주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까지도 시시콜콜 따지며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악질'이라고까지 매도하지만, 극성(?)스럽다 할 정도의 의정과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추 의원의 꿈은 '주민불편 제로'인 중곡4동을 만드는 것.

이를 위해 추윤구 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의 뒷골목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고민을 청취해 보다 나은 중곡4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의회 선거때마다 최고의 득표율을 자랑하며, 주민들의 끝없는 사랑과 지지를 받아온 추 의원의 원동력은 바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만을 생각하며 펼쳐온 의정활동이다.

"구민들과 지역을 위한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원이 안챙기면 누가 챙기겠느냐"고 반문하는 추윤구 의원은 "앞으로도 성실하고 꾸준한 의정활동으로 그 동안 받아온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 ❁ ❁

▲지난 2대부터 4대까지의 구의원으로 재임하셨고, 2대의회 부의장과 3대의회 의장을 역임하셨는데 광진구의회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먼저 중국 4동 주민여러분의 힘찬 성원과 격려로 광진구의회에서 3대에 걸쳐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우리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즉, 어디에 도로를 만들것인가, 가로등은 설치할 것인가, 녹지공간을 만들것인가와 같은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며,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우선순위에 따라 구 행정과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기초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지역 발전이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빨리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돼 정착됐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발전이 이뤄졌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는 우리 구의 경우 의원 모두가 그동안 행정을 잘 감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의정과 구정에 반영하는 등 기초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지역의 발전과 구 전

京東 인터뷰 광진구의회 추윤구 의원(중곡4동)

"주민불편 제로에 도전하는 중곡동 오토바이 순찰맨"

추윤구 의원은...

체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의원님은 그동안 지역의 생활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계획안이 있다면.....

저는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조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하기 위해 복지, 환경, 도로, 하수, 녹지, 교통, 주차, 보안등 설치 등 각종 생활불편 요소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아울러 웰빙시대를 맞아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 설치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우리 중곡동지역은 크게 용마산긴고랑권과 복개천권, 아차산역권, 군자역권, 중곡역권, 중랑천권 등 6개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특성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체적인 밑그림을 연구,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곡동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정신병원이라 불려지고 있는 국립서울병원 이전문제와 변전소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촉구하는 범구민대책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립서울병원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고심과 대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보사부 등 관계기관에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서울국립병원의 설립 당시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현실에서 중곡동 4개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국립서울병원의 이전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변전소의 경우는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신양빌라를 거쳐 변전소로 들어가는 특고압전선을 2006년까지 한전에서 지하매설할 계획이어서 나름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주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지역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서 활발한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선거때마다 최고의 득표율을 올리며, 주민들의 끝없는 사랑과 지지를 받아온 만큼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만을 생각하며 펼쳐온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며, 지역발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일인가만을 생각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34

언 론 사 : 아세아일보(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오토갤러리 610호
대표이사 권 기 호

주 문 : 아세아일보(주)가 발행한 아시아일보 2006년 3월 27일자 2면 『경선 패배해도 선대위원장 맡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아시아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여수시장) 판세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그 조사결과에 대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만을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하고, 공표준수사항인 조사기관·단체,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

정보도의무), 동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동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경선 패배해도 선대위원장 맡겠다"

여수시장 오현섭 예비후보 자신감 피력

전남 여수시장 오현섭 예비후보(56.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에 패배하더라도 민주당 재건을 위해 당선자의 선대위원장을 맡겠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오 후보는 이날 민주당 후보들간의 과당 경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후보간 상호 비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당내 경선에 패배하더라도 민주당 재건 차원에서 당선자를 위해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을 민주당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오 후보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발언으로 지난 23일 여수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8%대의 지지율을 얻은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실제 오 후보는 이날 지난 3월초 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두자리 숫자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 민주당 예비후보 3명 중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하고 김충석 시장이 50%대의 지지율을 얻지 못한 것은 18%의 지지율을 얻은 자신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해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여수MBC가 여수시민 5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충석 여수시장이 33.2%, 오 후보가 18%, 변호사 이정훈 후보가 5%의 지지도를 보였다.

오 후보는 이어 "경선과정에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TV토론회와 시민단체 초청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오 후보는 "이 같은 검증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이 치러지더라도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며 거듭 자신감을 표출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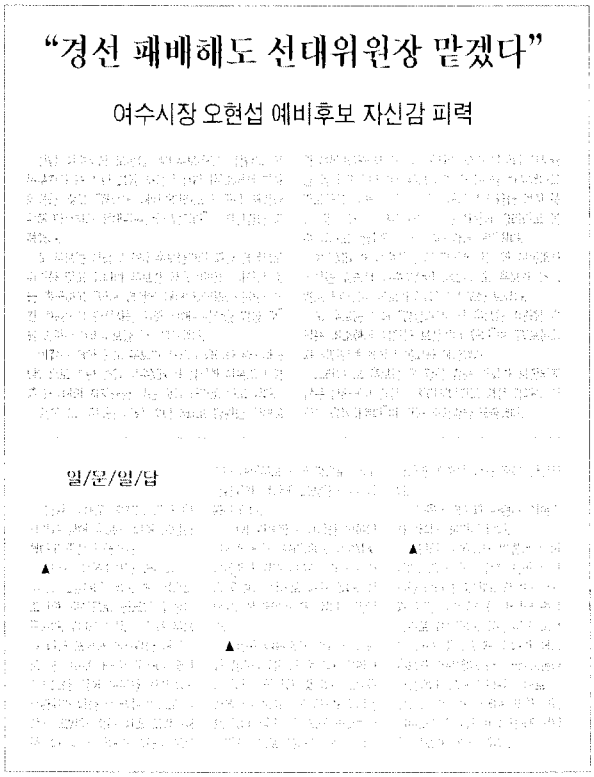
일/문/일/답

-당원 상대로 지지도 조사 한 시기와 상대 후보에 의해 고발당했다고 주장한 근거는.

▲당원 여론조사는 출판회 이후 3월 2일부터 했다.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공표할 입장이 못된다. 김충석시장, 이정훈 후보와 나를 포함한 세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두자리 숫자 지지도를 얻어 우위를 차지했다. 선관위가 나를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최초 고발자때문이다. 어느 상대가 했는지 모르지만 예비후보가 한 것으로 안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이후 상황은 없다.

-현역 단체장은 여야를 막론해 여론조사에서 유리하다. 여수MBC 여론조사 결과 여수만 격차가 가장 좁혀진 상태로 나와 있다. 선대위원장 제안은 자신있다는 말인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염두한 것이


"경선 패배해도 선대위원장 맡겠다"

여수시장 오현섭 예비후보 자신감 피력

일/문/일/답

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노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지지도가 몇퍼센트 였냐. 국민 지지도를 축소해서 시민지지도로 본다면 현 시장은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방식에 불만이 많다.

▲당의 여론조사 방침엔 이의 없다. 조사 전에 선거운동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경선은 당원과 시민 각각 50%를 반영해 종합점수로 결정된다. 실은 어제 오전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어느 후보가 거부했다. 당의 mtv토론을 거절했다. 그래서 당원 상대로 정견발표 기회가 안됐다. 또한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데 선택할 정보가 차단돼 있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36

언 론 사 : (주)시민일보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충호빌딩
대표이사 정 우 영

주 문 : (주)시민일보사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6년 3월 27일자 5면 『천막정신이 한나라당의 살길이다』, 『낙후지역 개발에 대해』 각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시민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천막정신이 한나라당의 살길이다

박 진 한나라당 의원

2년 전 17대 총선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2004년 3월, 당시 한나라당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었다. 거듭되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차떼기'로 대표되는 당의 부패이미지는 불식되지 않았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오만으로 비춰졌다. 국민들은 하나둘씩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당원들은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낭떠러지에 서 있었다.

천막당사,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택했다

2004년 3월24일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여의도 국회 앞의 구당사 앞에 모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리고 당의 현판을 들고 찬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다. 한나라당 천막당사의 시작이었다.

나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한나라당의 대변인을 역임했다. 그 와중에 차떼기 사건이 터졌다. 한나라당의 입으로서 사과논평을 수없이 발표했고 7번을 국민 앞에 머리 조아려 사과를 했다.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닌 실천이라고 주장해왔기에 천막당사 입주는 남

다를 수밖에 없었다.

종로에서 선거를 치르느라 자주 올수는 없었지만 3개의 천막과 7개의 컨테이너가 자리 잡은 천막당사에 올 때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8개여월간 함께 했던 당 대변인 행정실을 비롯한 사무처 당료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반드시 당선으로 보답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종로 선거는 한마디로 사투의 연속이었다. 종로를 잃는 것은 사실상 서울을 잃는 것이었다. 열린우리당은 김홍신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고 선거 전 여론조사는 18% 대 40%였다. 국민들의 돌아선 가슴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지 실감한 순간이었다. 방법이 없었다. 고개 숙여 반성하고 눈물로 호소했다. 선거 하루 전에 와서야 제 손을 잡고 "한나라당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말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출구조사에서도 8% 차이로 뒤졌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한나라당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시련이라 생각하고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결과는 588표 차의 승리, 깨끗하고, 투명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표 역시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아들의 잘못을 회초리로 때리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나라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 역시 한나라당의 부패와 오만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한나라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천막정신은 '통철한 자기반성'이다. 국민들이 등을 돌렸던 이유는 부패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이었다. 그러나 천막당사를 통해 진정한 자기반성만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천막정신은 언제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굳은 다짐'이다. 자기 개혁에 소홀한 조직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굳은 다짐만이 한나라당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천막정신은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한나라당은 천막당사에서 권력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다시는 국민에게 부끄러운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일만이 국민에게 떳떳한 길임을 깨달았다.

지금 천막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내일은 천막당사 입주 2주년이다. 당에서도 천막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천막당사 입주 2주년을 맞아 모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천막정신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잊은 것은 아닌지, 지난 2년 간

단 상

박 진

천막정신이 한나라당의 살길이다

(2006년 3월 27일자 5면)

천막정신을 잘 지켜왔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당사와 연수원 건물을 헌납했다.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며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걸었다. 국민 앞에 언제나 고개 숙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 아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한나라당의 도덕성은 다시 추락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와 공천 잡음은 천막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5.31 지방선거, 천막정신으로 돌파하자!

천막정신을 잊은 한나라당은 미래로 나아가는 뉴한나라가 아닌 국민에게 버림받았던 도로한나라일 뿐이다. 오만에 빠져 잘못하고도 책임질 줄 모르고, 구정치의 악습을 되풀이한다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달라진 뉴한나라를 선보이는 첫 전국단위 선거이다. 공천과정부터 경선, 그리고 본선에서까지 모든 후보들이 천막정신의 정신을 되살려 정도를 걷는 것만이 국민에게 한나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천막정신'으로 돌파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천막정신의 초심을 되살려 거친 들판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

천막정신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다. 이제 천막정신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한나라당을 이끌 한나라당의 정신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 ● ●

낙후지역 개발에 대해…

이 계 안 열린우리당 의원

지난 3월23일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가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반값 정책에 대하여 비판한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 반값 공약은 일시적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을지는 몰라도 저 뿐 아니라 심지어 이명박 현 시장도 이미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공약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개발이익 환수, 토지의 국공유화를 전제로 하는 토지임대제가 개발이익 환수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전혀 어긋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김종철 후보가 "보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의원이 이렇게 파격적이고, 상당히 진보적인 안을 냈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혹세무민'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홍 의원 본인도 토지임대제를 말하면서 개발이익 환수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자 홍 의원 본인에게 일관된 철학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파트 반값' 공약이 그럴듯하게 보인 것은 바로 '아파트 반값'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파트반값 공약에 투영되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집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23일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가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반값 정책에 대하여 비판한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 반값 공약은 일시적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을지는 몰라도 저 뿐 아니라 심지어 이명박 현 시장도 이미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공약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개발이익 환수, 토지의 국공유화를 전제로 하는 토지임대제가 개발이익 환수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전혀 어긋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김종철 후보가 "보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의원이 이렇게 파격적이고, 상당히 진보적인 안을 냈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혹세무민'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홍 의원 본인도 토지임대제를 말하면서 개발이익 환수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자 홍 의원 본인에게 일관된 철학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파트 반값' 공약이 그럴듯하게 보인 것은 바로 '아파트 반값'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

이 계 안
(열린우리당 의원)

낙후지역 개발에 대해…

일 것입니다.

아파트반값 공약에 투영되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집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3월 27일자 5면)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께서도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정책 공약에 관하여 토지기본법에 기초한 국공유지 확대와 공공개발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토지를 국공유화하고 공공개발을 통하여 서민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대안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서울시장후보로서가 아닌 대통령후보로서 헌법개정을 전제로해야 비로소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명박 시장이 추진중인 뉴타운개발에 관한 토지가격의 상승문제와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제가 각종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부분과 일맥 상통하고 있으며, 매우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좀더 현실적인 정책을 생산하고 정책을 중심으로한 논쟁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타운에 대한 저와 김 후보의 문제인식이 같고 따라서 각자 진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정책보완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선거운동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하여 각 당의 후보들이 보다 진전된, 현실적인 공약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안없는 비판이란 비판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37

언 론 사 : 새여수신문 주식회사
전북 여수시 학동 67-18 3층
대표이사 김 미 진

주 문 : 새여수신문 주식회사가 발행한 새여수신문 2006년 3월 13일자 1면 『박주선과 호남 - 시련에서 영광으로』 제목의 저술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새여수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의 광고를 광고금지기간(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게재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2항,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제1항】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소외와 박해의 땅 호남에 틔운 희망의 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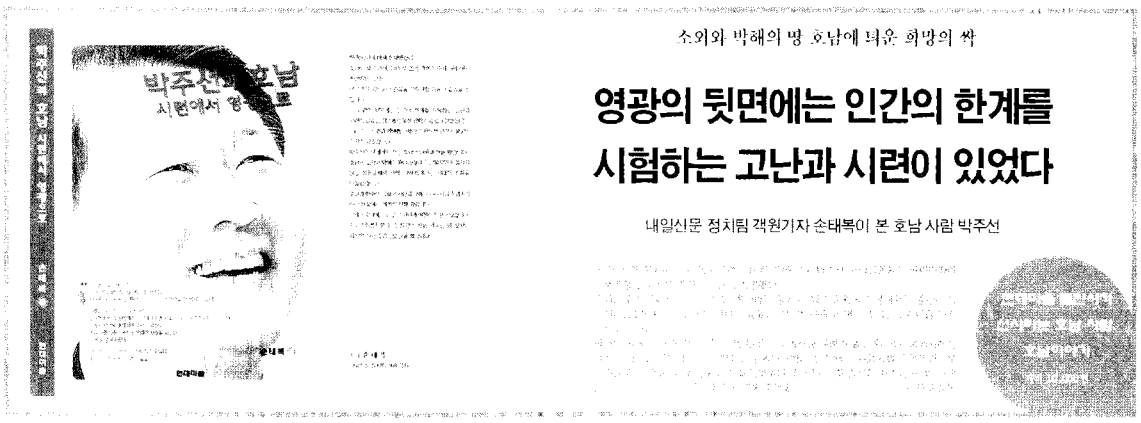
영광의 뒷면에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

내일신문 정치팀 객원기자 손태복이 본 호남 사람 박주선

이 책은 한 정치인의 영광과 시련에 대한 기록이다. 박주선 전 국회의원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정치부 기자의 눈으로 조명했다.

호남의 인재, DJ 정부 개혁 실세, 촉망받는 정치인. 박 전의원에게 붙어있는 영광의 이름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시련이 있었다.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는 그 시련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박 전의원에 대한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는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치권에선 검찰권 남용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의 논리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정치부 기자 출신인 저자는 세 번 구속과 무죄가 이뤄질 당시의 정치적 배경에 주목했다. - 저자 손태복



안 건 번 호 : 2006자심41

언 론 사 :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
서울 중구 순화동 2-6 중앙문화센터빌딩 6층
대표이사 이 장 규

주 문 :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가 발행한 월간중앙 2006년 3월호 246~251쪽 『하림각 회장 남상해. 질긴 꿈으로 세상을 보듬은 남자』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월간중앙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종로구청장)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의 유년 시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경험담과 향후 계획 등을 여러 컷의 인물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여섯 쪽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하림각 회장 남 상 해
질긴 꿈으로 세상을 보듬은 남자

"무작정 상경한 '철가방' 소년, 남은 삶
'국가 봉사'로 돌린다"

한국에서 가장 큰 중국음식점인 '하림각'의 남상해 회장. 유년시절부터 청년기까지 그의 인생은 고생과 인고로 점철

되어 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그는 '꿀꿀이죽'으로 연명하면서 신문배달·물장수·구두닦이·중국집 배달원 등 사회 밑바닥에서 가난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그는 한번도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오늘 우리 시대의 거상(巨商)의 반열에 올라 있다. 그는 지난 2월10일 이런 인생역정을 정리해 펴낸 자서전 〈역전의 명수, 남상해를 아십니까?〉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남상해 회장을 하림각 사무실에서 만났다.

"저희 가게에 오셨으니 자장면을 먹어야지요."

지난 2월13일 정오,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 회장실에서 첫 대면하는 순간 남상해(南相海·69) 회장은 자장면부터 주문했다. 그의 하림각 사무실은 사방이 표창장과 상패로 가득했다. 일생 동안 자장면을 판 수입으로 거상(巨商) 반열에 들어서면서 사회봉사에 공을 들인 흔적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부터 유명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도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이곳은 특히 정치인들의 외상값으로 유명하다더니….

자장면이 들어오자 그는 허리를 굽혀 차를 따르며 '서빙'을 시작했다. 하림각은 9,200평의 대지에 본관·신관 및 맥반석 사우나 등 5개 동(棟)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주방장급 요리사 10명을 포함해 100여 명의 종업원, 한꺼번에 3,000여 명의 손님과 1,50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매머드급 중국집이다. 그는 이 한국 최대 규모 중국음식점의 주인이고, 무엇보다 연세 높은 어른 아니던가? 시중을 사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식사 손님 시중은 평생 그의 몸에 밴 일이었다.

맨손으로 시작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피와 눈물이 배 있게 마련이다. 자수성가한 사람에게는 부를 세습해 정상에 오른 이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고의 세월을 그냥 왔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흔이 다 된 나이-. 이제는 음식 시중 드는 것과는 결별해도 좋을 정도가 됐지만 남 회장은 전혀 그런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혹 이게 바로 '초심' 아닐까? 그 초심이 지금도 수많은 식객을 불러 모으는 원천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주워 담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남상해 회장은 1938년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성황리에서 12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고향은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생가와 지척이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한 아버지 남삼성(南三性) 씨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남 회장으로서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러나 광복 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생활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아버지가 직업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귀국 후 우리 집안은 찢어지는 가난에 시달렸어요. 산에서 딴 솔잎과 쑥 같은 나물을 한 줌의 쌀겨에 섞어 쑨 죽으로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연명하다 보니 채독이 올라 식구들이 쓰러지기도 했죠. 여섯 살 난 누이동생이 '오빠 나는 죽는 것은 괜찮은데 흰 쌀밥이나 한 그릇 먹고 죽으면 원이 없겠어'라고 말할 때는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더군요. 그날 밤 여동생은 굶주림과 채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채독으로 죽은 여동생의 마지막 말

이렇게 형·누이동생 등 남매 세 명이 굶어 죽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소년 남상해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단신으로 서울로 도망쳐 나왔다. 아니 한 입이라도 더는 것이 집안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먼저였는지 모른다. 아무튼 그때 그의 나이 열 살이었다.

말을 잇던 남상해 회장이 갑자기 숙연해졌다.

"형과 누이가 죽던 날도 어머니는 남은 자식을 위해 장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거적에 싸인 자식의 시신을 한동안 응시하던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광주리를 이고 방을 나서더군요.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어느 곳도 그가 편안히 누울 자리는 없었다. 1948년 12월 어느 날 언 땅을 파 자신의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마련해 삶의 둥지를 열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얻은 첫 '주택'이었다.

"그 무렵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열한 살 무렵 창신동 산꼭대기 굴집에서 살았는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당시 구두닦이를 하고 있었는데, 고향 소식을 아는 한 동네 사람이 '며칠 전에 자네 동생이 또 하나 굶어 죽었다'고 하더군요. 살기가 싫어 동대문에서 쥐약을 샀어요."

그의 자살은 미수에 그쳤다. 며칠 후 소년 남상해는 명동의 어느 중국음식점 앞에 서있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였다. 변변한 공장조차 없던 시절이어서 중국음식점에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다. 배달원으로써 달라고 그는 주인을 조르기 시작했다.

물동이 나르는 일로 중국음식점 취직

"나이가 너무 어려 안 된다"고 거절하는 주인과 옥신각신하기를 한 시간여. 결국 주인은 물동이를 나른다는 조건으로 그를 불러들였다. 소년 남상해는 체구는 작았지만 시골에서 지게 지는 일에 이골이 났던 터였다. 삽시간에 네 번이나 물지게를 져 날랐다. 주인은 감동했다. 55년에 걸친 그와 중국음식점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는 이 중국음식점에서 주방보조로 7년간 일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온갖 요리 재료를 깎고 자르고 다듬는 일을 거듭하면서 중국요리의 기본을 익혔다. 그리고 저녁에는 꾸준히 야간학교에 다녔다.

"요즘은 학원에서 요리 강습을 하지만 당시로서는 요리법을 주방장에게서 1대 1로 배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리사마다 나름의 비법이 있게 마련이었지만 자신의 후계자가 아니면 절대 전수해 주지 않아요."

남상해 회장의 회고담은 계속 이어졌다.

"당시 화교 주방장도 한국인인 제게 요리비법을 전수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때문에 완전히 눈동냥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지요. 나는 집중력이 강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눈으로만 배우고도 몇 년 만에 요리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었죠."

23세 되던 해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막 발족한 국제관광공사에서 요리사를 모집한 것. 요리사로서는 최고의 직장인 이 기회를 그가 놓칠 리 없었다. 중식부 요리사 5명 모집에 300여 명이 몰려 경쟁률은 60대 1이 넘었지만 그는 당당히 합격했다. 당시 그에게 시험문제로 주어진 요리는 '홍문기(닭 날개 요리)'였다.

그 후 1년은 가혹한 교육기간이었다. 그를 가르치는 요리 선생이나 동료도 모두 중국인이었다. 그는 외로운 투쟁을 해야 했다. 맛의 장인이 되겠다는 오기의 날을 세우고 밤을 새우며 연습을 거듭해 기량을 키워 나갔다. 1963년 교육이 끝나고 발령이 났다. 워커힐 호텔 중식부 조리부장. 그로서는 최고의 직장이었다.

시중 중국음식점 주방장보다 세 배나 많은 월급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좋은 직장에서 생활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였다. 단신으로 상경한 이후 안정된 생활을 시작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거래하던 은행의 여직원이 중매를 섰다. 평소 성실성을 눈여겨본 덕분이었다. 그렇게 만난 아내와 1967년 결혼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이던 시절에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독립'이라는 한 단어가 맴돌고 있었다. 중국음식점 주인이 되는 것이 그의 최고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월급쟁이로는 큰돈을 벌지 못하고, 그렇고 그런 인생살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그 좋은 직장을 4년 만에 그만두고 험난한 독립의 길로 나섰다. 1967년 그는 서울 중구 초동에 '동승루'라는 중국음식점을 냈다. 그의 나이 29세였다. 하지만 말이 음식점이지 실상은 허름한 흉가였다. 임차료가 턱없이 싸다는 이유로 임차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에서 장사했던 이들은 모두 망하거나 넋이 빠져 나갔다고 했다. 그도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피곤한 몸으로 잠을 청하려고 하면 저절로 문이 스르르 열리는가 하면, 어떤 날에는 누군가 머리맡에 앉아 물끄러미 쳐다보거나 목을 눌렀다고 한다.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 때문에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어머니가 그 흉가에서 물을 떠놓고 빌었어요.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아들 살려주고 장사 잘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부터는 장사도 잘되고 별일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곡절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거짓말처럼 악몽이 사라지고 손님도 몰리더군요."

미신이라고 웃어넘길 일일 수도 있지만 그의 역정과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그는 1년 만에 가게를 늘려 2층집을 사서 새로 개업했다. 철저한 위생관념 아래 개미처럼 일하는 그의 중국음식점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16평 남짓한 식당에서 하루에 밀가루 8포대를 소비했다고 한다. 이후로도 그는 계속 가게 규모를 늘려나가 마침내 한국 최대 규모의 하림각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남다른 경영철학이 있다.

"비결이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스스로 터득한 것이 조금 있지요. 처음에 소규모로 식당을 운영할 때는 저도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재료만 많이 가져와 많이 팔면 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다 보니

그런 식으로는 힘들더군요."

이렇게 열린 말문 끝에 남 회장의 경영 비결이 담겨 나왔다.

"원가 계산과 이익 규모를 정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음식 재료도 A, B, C급이 있습니다. 요리사도 수준이 천차만별이고요. 그 밖에 기물·세금·임차료 등 계산이 쉽지 않더군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배워나갔습니다."

29세 때 흉가(凶家)에서 처음 개업

남 회장은 최근 관광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관광에 눈을 뜬 것은 음식점을 대규모로 확장하면서부터다. 사업을 하면서 음식업과 관광업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수출에만 매달리지 말고 관광산업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제조업이나 정보기술(IT)산업과 달리 관광산업은 공해도 없고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납니다. 제 생각이지만 관광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볼거리가 별로 없어요."

스스로 문제제기를 거듭하면서 그는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종로구의 관광 청사진을 수립했던 것. 종로는 70%가 산이고, 주로 주거지로 구성돼 있으며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반들이 모여 살던 문화공간이다. 이런 장점을 살려 외국인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아이디어다.

"홍콩처럼 서울 종로구에 야간 관광열차를 만드는 겁니다. 사직동 - 인왕산 - 팔각정을 돌아 종로구청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외국인에 대한 먹을거리 제공 계획도 밝혔다.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관광 오면, 3,000~4,000원 선의 아침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한국음식을 먹여야 합니다. 음식은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일본은 도쿄(東京)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국가적으로 요리사를 양성했습니다. 일본은 이후 2002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를 또 대대적으로 길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제가 전국음식업협회 회장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가적으로 조리사를 길러야 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 박 진 의원…수술실에서 보낸 8시간

나라의 얼굴이 음식이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명제 아닌가 싶었다. 다시 남상해 회장의 말을 들어 보자.

"어느 나라든 가서 음식을 먹어 보면 그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자국 국민은 아주 우수한 요리로 평가하는데 외국인이 기피한다면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좁아지고 있고 외국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음식이지요. 음식에 대한 느낌이 나쁘면 그 나라 전체의 인상도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중국인은 해삼을 매우 좋아한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먹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여러 나라 사람의 구미에 맞는 해삼요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4월4일 그에게 인생관을 바꿀 만한 일이 벌어졌다. 그때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종로구의 박 진 의원과 일생일대의 인연을 맺게 된다. 4월4일 저녁 7시 무렵, 그는 하림각 앞 차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길을 건너다 택시에 치였던 것이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퉁겨 오른 그는 도로에 떨어져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마와 뒤통수에 큰 상처를 입고 다리뼈도 자동차 바퀴에 깔리는 바람에 으스러졌다. 다행히 회사 앞에서 다친 덕분에 종업원과 가족들이 달려 나와 강북삼성병원으로 그를 옮겼다.

공교롭게도 사고가 난 날은 공휴일이었다. 외과수술을 해야 할 주요 의료진이 모두 부재한 상태였다. 이때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박 진 의원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박 의원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며 병원 사람들을 다그쳤다고 한다. 병원장의 비상 호출에 외과수술팀이 달려왔고 그는 곧바로 수술받을 수 있었다.

오후 7시15분께부터 다음날 새벽 3시 무렵까지 무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다. 그런데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는 뜻밖의 말을 들었다.

"박 진 의원이 굳이 수술실에 들어가겠다고 우겨 수술시간 내내 환자의 발을 마사지했다. 참으로 대단한 정성이었다."

국회의원이 환자의 다리를 수술하는 8시간 내내 마사지하고 있으니 의사들도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 환자가 누구인데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

그러나 박 의원의 대답은 오로지 "이 사람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박 진 의원의 부친은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서 평생 개업의를 지낸 내과의사였다. 때문에 박 의원은 수술 환자의 신경을 되살리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 마사지가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친으로부터 배워 알고있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옷이 피범벅이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술시간 내내 남 회장의 발을 마사지해 그의 삶을 이어 가도록 조치했던 것이다.

박 의원은 그가 수술받은 다음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한 달 보름 내내 출근하다시피 문병했다. 때문에 남 회장은 이제 박 진 의원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선다.

"친형제라도 그렇게까지 돌보기가 쉽지 않은 법입니다. 박 진 의원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 자신의 위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도리와 책임감을 다하는 그의 모습이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남 회장은 인생의 무상함을 절감했다. 보상문제 때문에 자신을 친 택시기사를 만나 보니 세 식구가 한 달 수입 8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택시기사에게 그는 도저히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때문에 그는 무조건 자신이 잘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삶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관심사가 자꾸 힘겹고 어려운 서민들을 어루만지는 봉사로 쏠리기 때문이다.

"음식장사를 하려는 사람들, 삶이 버겁고 힘들어 세상에 정이 떨어진 사람들, 꿈을 꾸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남상해 회장의 남은 인생은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그려질 것 같다.

"저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 손자도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청소년 · 노인에 따스한 눈길 긴요

준비하는 일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청소년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합니다."

나이듦의 지혜와 미덕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그는 노령화시대로 너무 급히 들어서는 사회 변화에도 눈길을 보내고 있는 듯 했다.

"70~80대 노인들을 받들며 살 것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일제 강점과 6 · 25전쟁을 겪었습니다. 또 자기를 희생하며 자식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대우해 드려야 합니다."

중국음식점으로 일가를 이룬 남상해 회장의 다음 카드를 의미 있게 지켜보아야 할 듯 싶다.

남상해의 7가지 성공 노하우

-대통령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말라=아무리 힘들어도 기만 살아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반대로 기가 죽으면 패인이 될 각오를 해야 한다.

-항상 장사가 안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비 올 때를 대비하라'는 서구 속담의 의미와 같다. 비관하는 것과는 다르다. 대비하는 자만이 실패를 면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일찍 시장으로 출근하라=이른 아침 길에서부터 하루는 새롭다. 보통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쏙쏙 눈에 들어온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좋은 물건은 시장에 먼저 도착하는 상인의 것이다.

-음식 배달원에게도 꼭 위생복을 입혀라=음식은 위생이다. 그리고 그 위생은 우선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위생복을 입은 배달원은 사복차림 때와는 행동거지가 다르다. 깨끗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바쁠 때일수록 더욱 친절하라=참으로 힘든 일이다. 하지만 친절하고자 노력하면 바쁜것도 즐겁다. 그러다 스르르 바쁨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기는 듯하다. 친절에 손가락질하는 고객은 절대 없다.

-맛을 높이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라=프로페셔널한 정신이다. 음식의 본질은 맛 아닌가? 공부하고 시도하는 자를 당할 방도는 없다. 창조적 상상력으로 맛을 키워야 한다.

-고객보다 종업원을 먼저 만족시켜라=만족한 종업원은 고객에게 만족을 돌려준다. 만족의 의미와 성취감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고품질 서비스의 출발점도 바로 여기다.

특별초대석 | 한국 최대 중국식당 주인장

하림각 회장

남상해

한국에서 가장 큰 중국음식점인 '하림각'의 남상해 회장. 유년시절부터 청년기까지 그의 인생은 고생과 인고로 점철되어 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그는 '꿀꿀이죽'으로 연명하면서 신문배달 · 행상 · 구두닦이 · 중국집 배달원 등 사회 밑바닥에서 가난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오늘 우리 시대의 거상(巨商)의 반열에 올라 있다. 그는 지난 2월10일 이런 인생역정을 정리해 펴낸 자서전 〈역전의 명수, 남상해를 아십니까〉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남상해 회장을 하림각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영재 월간중앙 기자

"무작정 상경한 '철가방' 소년, 남은 삶 '국가 봉사'로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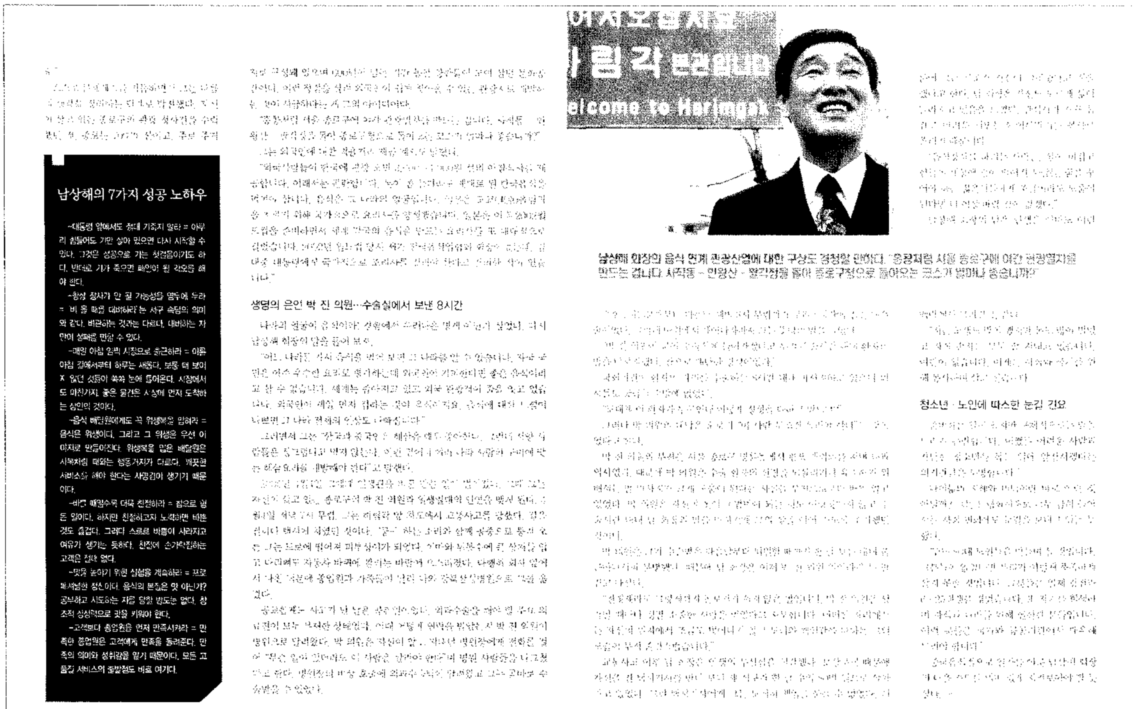
질긴 꿈으로 세상을 보듬은 남자

채독으로 죽은 여동생의 마지막 말

웅동이 나르는 일로 중국음식점 취직

서울 하늘 아래 어느 곳도 그가 편안히 누울 자리는 없었다. 1948년 12월 어느 날 언 땅을 파 자신의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마련해 삶의 둥지를 열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얻은 첫 '주택'이었다.

29세 때 흉가(凶家)에서 처음 개업



(2006년 3월호 246~251쪽)

안 건 번 호 : 2006자심43

언 론 사 : (주)종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252-1 대신빌딩 705호
대표이사 김 화 조

주 문 : (주)종로신문사가 발행한 종로신문 2006년 3월 22일자 7면 『5·31 지방선거, 종로 체통살려야』, 3월 29일자 『서울 돔구장 유소년 전용 야구장 건설하자』(6면), 『지역갈등 해소가 국가발전의 첩경』(7면) 각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종로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 서울시 종로구청장)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제2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5·31지방선거, 종로 체통살려야

(주)하림각 남 상 해 회장

우리가 오늘날 국민의 많은 혈세를 써가면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참다운 민주정치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자는데 지방자치의 목적이 있다할 것이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논한다면 1948년 대한민국 입헌민주공화국이 수립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배웠고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의 참뜻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인 것은 대소간에 선거만 끝나면 지역 감정이나 정적간의 감정이 극도로 표출돼 상호 반목과 갈등이 확산됨으로써 정말 이대로 가다간 지방자치로 인해 국가발전이 정체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오는 5.31 동시 지방선거 역시 예외는 아닐듯하다. 문제인 것은 각 정당마다 후보자 선정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당 후보가 정당한 검증을 거친 후보인지에 대해 유권자가 판단하기에 생소한 면이 없지 않다. 또한 한 정당을 대표하여 출마하는 후보도 광역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어느역을 막론하고 중요한 책무를 띠고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질이나 인성 등을 충분히 검증한 후에 선택한다는 유권자로서의 자질도 여기에서 예외일순 없다.

어떤 명분이나 개인사정 친분 등에 의해 잘못 선택한 선량직은 후일 그가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그 피해가 바로 그를 선택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에 가까울 만큼 적중함을 인지한다면 자신에게 분에 넘치는 것들로 요란하게 치장한다거나 격에 맞지 않는 약속들을 남발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현재 우리의 선거법은 당선만 되면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는 한 4년과 5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 헛점을 노려 당선만 되고 보자는 잘못된 선거풍조 때문에 유권자만 멍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종로는 오는 5.31동시 지방선거를 지혜롭게 치루고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후보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종로가 정치 1번지다운 면모를 과시함으로써 과거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명사칼럼

5.31지방선거, 종로 체통살려야

사이올운동서울시회회장
도덕정치국민운동연합 총재
(주) 하 림 각 회장
남 상 해

(2006년 3월 22일자 7면)

지역갈등 해소가 국가발전의 첩경

(주)하림각 남 상 해 회장

전쟁이 발발하면 '국민 총력전'이라는 용어가 대두된다.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의 비상사태 하에서는 반드시 전투원인 군인만 전쟁을 치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전쟁에 임하여야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역사상 이와같은 '국민총력전'은 수없이 많다.

예컨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국 각지에서 관군도 아닌 농민군이 스스로 전지(戰地)를 향하여 달려갔었다. 기록을 보면 여산송씨부대(礪山宋氏部隊)니, 광산김씨부대(光山金氏部隊)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일정한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채 농기구, 가정 연장 등을 휴대하고 통솔자를 따라 전쟁터로 향했던 것이다. 행주산성의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로서 특히 행주치마는 그 대표적인 국민총력전의 하나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지구상 유일의 화약고가 이 땅인데 그 동안 정치인들의 장난(?)으로 만들어진 동서 지역대립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업을 앞두

고 있는 현실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민족적 비극중의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지역간 대립을 해소시키지 않고서는 남북통일의 과업이 설사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국민 총화단결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동서 지역갈등해소부터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통일을 앞둔 국민총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모두 지역갈등 해소를 외쳐대고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이슈로 등장하지만 항상 일과성 구호에 그치고 마는 이 지역갈등은 이제 정치적 이슈에서 또는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가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에 있어서도 공연히 지방색으로 등장하여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큰 문제인 것이다.

그간 지역간 갈등문제를 해소해 보고자 민간차원의 문화예술교류, 또는 체육교류 등 매우 바람직한 분위기까지 조성된 듯이 보이더니 그나마 요즈음은 휘지비지(諱之秘之) 되고 있다. 이와같은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청소년 국토순례 수련운동을 학생단체가 스스로 자생시키는 방법이 있다.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청소년수련운동으로 지역간 갈등을 해소시킨 예가 과거 독일에서 실증되었다. 독일은 원래 지방색이 매우 강한 나라로 유명했는데, 프로이센, 삭센, 바이에른 등이 그 예다. 그런데 1893년 베를린의 한 국민학교 교사가 반더포겔운동을 벌인 것이다.

철새운동인 이 반켈운동은 휴일이나 방학 때는 룩색에 도시락을 지참하고 기타 등 악기를 연주하면서 포크송을 부르고 이웃지방의 산이며 마을을 걸어다녔던 기록이 있다. 나중에 이 반켈운동은 독일전국으로 번져 각 지방의 춤이나 민요를 부활시켰을 뿐만아니라 청소년간에 활발한 지역교류를 만들어 지방색을 허물어뜨리고 말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정치적 이념을 떠난 순수 학생들의 수련 국토순례 활동은 휴전선의 철조망까지 무너뜨리는 큰 힘으로 확산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유스호스텔운동을 전개한 것이나 15년 계획으로 성공시킨 서독의 황금계획 등도 정부에서는 수련의 장만 마련해준 후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장에는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운동은 꼭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치뤄질 5.31 지방선거 역시 지역특색을 버리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는 종로의 특색을 보여야 하겠다.

지역갈등 해소가 국가발전의 첩경

(2006년 3월 29일자 7면)

❀ ❀ ❀

"서울 돔구장 유소년 전용 야구장 건설 하자"

WBC 세계 4강, 인프라 확보로 뒷받침해야…

박 진 국회의원

3월 16일, 야구 종주국 미국의 애너하임 마운드에 태극기가 꽂혔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 영원한 라이벌 일본을 연파하고 6전 전승으로 한국이 세계 야구월드컵(World Baseball Classic) 4강에 진출하는 감동적인 순간, 온 국민은 또다시 하나가 되었다.

믿음의 야구로 선수단을 이끈 김인식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 불굴의 투혼으로 그라운드를 수놓은 선수단 모두에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내친 김에 세계 정상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야구 세계 4강의 의미는 남다르다. 올해로 출범 25년을 맞는 한국의 프로야구에 비해 야구 종주국인 미국의 프로야구 역사는 131년, 아시아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일본의 프로야구 역사는 71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예멤버로 펼친 이들과의 진검승부에서 연전연승을 기록했다는 것은 한국 야구가 이미 세계 수준에 도

달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악한 야구 인프라 속에 일군 성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미국은 30개 팀의 메이저리그를 비롯해 마이너리그가 16개 리그 176개 팀, 독립리그가 6개 리그 92개 팀, 대학야구가 31개 리그 291개 팀이 있다. 일본 역시 12개의 프로팀과 무려 4,200여개의 고등학교 야구팀이 있다.

시설 역시 차이가 많다. 첨단 구장의 척도로 평가되는 돔구장의 경우 미국은 1965년 개장 당시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던 휴스턴의 애스트로돔을 비롯해 8개의 돔구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역시 WBC 예선전이 열린 도쿄돔을 비롯해 6개의 돔구장이 있다.

그런데 우리 야구의 현실은 어떤가? 돔구장은 벌써 수년째 공약(空約)으로만 되풀이되고 있다. 돔구장은 고사하고 2005년도 우승팀인 삼성 라이온즈가 사용하는 대구야구장의 수용인원은 12,000명에 불과하다. 8개 구단 중 2만명이 넘는 구장은 잠실과 사직, 문학 등 세 곳뿐이다.

수용인원을 떠나 그 시설을 보면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있는 질 낮은 인조 잔디, 보호대가 부실한 외야펜스, 작은 양의 비에도 경기를 할 수 없는 배수시설 등 열악함 그 자체다.

선수들이 뛰는 그라운드가 이 정도인데 관중을 위한 편의시설을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한 야구평론가는 "한국에는 선수들이 경기할 그라운드만 그려져 있을뿐, 관중을 위한 파크가 없다"라고 지적했을 정도이다.

이제 한국 야구도 세계 4강에 걸맞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그 출발은 돔구장과 유소년 야구장 건설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미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세계 4강 도시를 위한 박진의 新 서울구상 ABC"를 통해 서울 동북지역 멀티 돔구장 건설과 중랑 하수처리장 부지에 유소년 야구장을 건설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돔구장 건설은 야구팬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이미 2004년 현재 잠실 학생체육관 부지에 돔구장 건설을 발표했으나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고, 동대문운동장 부지 돔구장 건설 문제 역시 교통 등의 문제로 논의가 중단됐다. 신임 KBO 총재가 관교 지역 돔구장 건설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다. 제가 이미 제안한 서울 동북지역 돔구장의 부지 선정은 노원구에 위치한 도봉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지하철공사 창동 차량기지를 이전해 약 7만평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동북지역 돔구장이 필요한 이유중 하나는 돔구장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문화활동에 이바지하는 복합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디트로이트의 포드 필드,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서울의 동북지역은 스포츠공간은 물론 각종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동북지역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멀티형 돔구장이 건립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또한 강남북 불균형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서울 돔구장 유소년 전용 야구장 건설 하자"

WBC 세계 4강, 인프라 확보로 뒷받침해야…

박진 국회의원 특별 칼럼

애너하임 마운드 태극기 감격으로 태양열 집열판 친환경 멀티형 가능

(2006년 3월 29일자 6면)

일반적으로 돔구장은 약 7천여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은 기업의 민자 투자 및 외자 유치, 투자 기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신생팀 창단, 스포츠 토토 수익금의 활용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총 공사비 5억 달러가 투입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스카이 돔(로저스 센터)의 경우 온타리오 주정부와 토론토시가 3천만달러를 부담했고, 30개의 주요 캐나다 기업과 3대 주류회사가 각기 5백만달러를 부담하는 등 민관의 협조로 이뤄졌다. 공사비를 부담한 회사들은 그 대가로 1년 사용료가 수십만 달러를 호가하는 스카이 박스 1개씩을 제공받았다.

서울에 건설될 돔구장은 천연잔디 사용이 용이한 개폐식으로 설치하되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축구 경기는 물론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멀티형 돔구장으로 건설할 경우 돔구장의 수익을 높여줄 것이다. 돔구장이 단순히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그라운드가 아닌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파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객실에서도 경기관람이 가능한 특급 호텔, 중형 규모의 놀이공원, 야구 박물관, 돔구장과 연계된 쇼핑 몰, 전문병원, 영화관, 스포츠 관계사 및 언론사가 입주 가능한 오피스 공간 등을 함께 건립해야 한다.

돔구장 건립과 함께 중요한 것은 유소년 야구장의 건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소년 전용 야구장은 서울의 장충동 리틀야구장과 공주의 박찬호 리틀야구장, 대구의 금호강 리틀야구장 세 곳이다. 그나마 장충동 리틀야구장은 개장된 지 오래돼 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시설에서 한국의 야구 꿈나무를 키울 수 없다.

신설될 유소년 전용 야구장은 중랑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 후 확보되는 약 12만평의 부지 중 일부를 사용하면 된다. 그 예산은 서울시의 예산과 더불어 정부의 체육진흥기금 등에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세계 4강은 결코 기적이 아니다. 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열악한 야구 인프라를 외면한다면 4년 후 개최될 WBC에서 우리는 변방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야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지금이야말로 돔구장과 유소년 전용 야구장 건설을 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서울시와 KBO, 프로야구 구단 및 기업, 정부가 머리를 한데모아 한국 야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우리가 4강을 달성한 WBC는 이번이 첫 번째 대회였다. 4년 후, 또는 8년 후에는 서울 돔구장의 마운드에도 자랑스런 태극기를 꽂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 선수단의 불굴의 투혼에 찬사를 보내며 우승을 다시 한번 기원한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44

언 론 사 : (주)매일경제신문사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30
대표이사 장 대 환

주 문 : (주)매일경제신문사가 발행한 매일경제 2006년 4월 8일자 A21면 『나는 더 큰 꿈을 따라 걸어왔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매일경제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에 대한 홍보기사를 게재하면서 그의 인생담 및 주요 경력과 특정 기업 사장 및 장관 재직 시 성과 등을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나는 더 큰 꿈을 따라 걸어왔네

열정을 경영하라
진대제 지음, 김영사 펴냄

벽촌에서 자란 소년은 커서 국내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힘겨운 유학길에 오른다.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 IBM에서 주목받는 연구원으로 승승장구한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조국 반도체 산업을 일으켜 일본을 삼켜버리겠다"며 사표를 던지고 귀국한다. 일본을 삼키겠다니, 그의 은사는 그를 가리켜 "세상에서 복구멍이 가장 큰 놈"이라고 농담 반으로 꾸짖었단다.

그가 바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세계 최초로 16MD램을 개발해 한국에 반도체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주인공인 그가 자신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진솔한 고백서를 던졌다. '열정을 경영하라'.

책에 소개된 소년 진대제의 삶은 여유롭지 않았다. 고교 시절 매일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해야 했지만 도시락 두 개를 싸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장학금은 그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다. 심지어 대학 진학 후 해외 유학까지도 국비 장학금을 받아간 진대제였다.

그가 IBM과 삼성전자에서 성공을 마치고 입각한 밑바탕에는 그러한 경험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집이 가난해 월사금도 제대로 낼 수 없었던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라에서 지급한 장학금으로 공부했다.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것은 내 조국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사람으로 태어나 그런 상황에서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안 가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현장 기술자와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장관이란 세 가지 직책을 경험했지만 그 활동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21세기 화두인 디지털 신세계를 누비는 개척자였고 한국을 오늘날 IT강국으로 만든 현장의 최전선에 늘 서 있었다는 점이다.

87년 35살 젊은 나이에 이사가 된 후 92년 상무, 95년 부사장, 2000년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사장이 됐지만 아직 그가 걸어야 할 길은 멀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으로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일하던 그는 2003년 참여정부의 정통부 장관이란 공직에 차출됐다.

연봉은 삼성 사장 시절의 보름치 월급에 불과했단다.

그러나 그는 세계 초일류 기업과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가 향후 10년, 15년 뒤 무엇을 먹고살것인지 연구하던 차에 입각해 한국 국민이 앞으로 10년, 15년 뒤 먹고살 거리를 고심하게 됐다.

더욱 웅대한 포부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진 장관은 이 책을 통해 정통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내놓은 전략이 지금 이 한국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역설한다. 그는 자신이 정통부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와 들고 다니는 디지털TV 'DMB' 등이 한국의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 신성장 동력이라고 확신한다.

그의 IT부국론 뒤에는 또 매우 튼튼한 CEO 리더십도 자리잡고 있다. 그는 책을 통해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10년후 삼성전자' 고민하다
수십억원 연봉도 포기하고
'10년후 대한민국' 설계 나서

나는 더 큰 꿈을 따라 걸어왔네

열정을 경영하라 진대제 지음, 김영사 펴냄

CEO인 그로브 인텔 창업자의 말을 소개한다.

"위기 상황에서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회사는 살아남으며 위대한 회사는 이를 기회로 발전시킨다"라고. 즉 기업 경영자는 끊임없이 내부와 주변을 돌아보며 기업에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 예민하게 관찰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책인 'IT카우보이'가 쓴 진솔한 자기 고백이자 이 세상 모든 CEO와 리더에게 던지는 금쪽같은 명구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45

언 론 사 : (주)투데이뉴스신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90 대운빌딩 2층
대표이사 추 교 진

주 문 : (주)투데이뉴스신문사가 발행한 투데이뉴스 2006년 4월 12일자 6면 『지역 발전 녹색도시 건설 앞장』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투데이뉴스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정부시장)와 관련하여 현 시장인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하면서 전국 지방행정 혁신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소감과 각종 시정 사업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지역 발전 녹색도시 건설 앞장"

김문원 의정부시장 행정혁신 총리표창 소감 밝혀

■ 김문원 의정부시장 인터뷰

경기 의정부시는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시책들을 도출, 이를 꾸준히 추진해 지난해 전국지방행정 혁신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10억 상금)을 수상했다.

이밖에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평가 우수기관, 조달청 주관 전자계약추진 우수기관, 경기도로부터는 법무행정평가 최우수기관, 물가안전관리 최우수기관, 공공근로평가 최우수기관 등 다방면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랑천과 부용천 되살리기에 이어 자연친화적 테마공원을 잇따라 조성, 녹색환경도시로 탈바꿈 되고 있는 의정부시의 김문원 시장을 만나봤다.

Q 작년 지방행정 혁신평가결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청렴도 측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소감은.

A 의정부시가 지난 63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이래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10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이 돼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 한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시가 발전의 발전을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1000여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Q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 폐쇄와 관련, 일부에서는 선거용 인기를 위해 실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A 잘 알다시피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의 폐쇄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한수이북시군 주민과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선거용 인기를 위한다면 당연히 연기하지 말고 의정부시민을 위해 폐쇄했어야 한다.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도 있지만 인근 시군 주민과의 화합차원에서 연기 한 것이다.

Q 13년 동안 지연돼 오던 경전철 사업이 오는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경전철건설 사업은 지난해 협상을 완료하여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금년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시설공사에 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하지 못했지만 오는 4월 협약을 체결, 2011년 초 완공할 예정이다.

Q 특히 국도3호선 의정부 구간 우회도로 착공은 미군기지 이전과 맞물려 있는데.

A 시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93년 12월부터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를 착공 하였으나 미2사단 담장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해왔다.

이에 시는 94년 3월3일부터 미군부대와 대체시설 이전 공사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SOFA(한미주둔지위협정) 규정에 따른 미군부대 내 오수처리장 건설요구에 대한 검토와 대체시설 이전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문제, 대체시설 이전공사 및 설계용역비 등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무려 5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우리공직자들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INTERVIEW 김문원 의정부시장

경기 의정부시는 실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시책들을 도출, 이를 꾸준히 추진해 지난해 전국지방행정 혁신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10억 상금)을 수상했다.

이밖에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평가 우수기관, 조달청 주관 전자계약추진 우수기관, 경기도로부터는 법무행정평가 최우수기관, 물가안전관리 최우수기관, 공공근로평가 최우수기관 등 다방면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발전 녹색도시 건설 앞장"

김문원 의정부시장 행정혁신 총리표창 소감 밝혀

최근 들어서는 중랑천과 부용천 되살리기에 이어 자연친화적 테마공원을 잇따라 조성, 녹색환경도시로 탈바꿈 되고 있는 의정부시의 김문원 시장을 만나봤다.

Q 작년 지방행정 혁신평가결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청렴도 측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소감은.

A 의정부시가 지난 03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이래 정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10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이 돼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 한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시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우리 1000여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Q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 폐쇄와 관련, 일부에서는 선거용 인기를 위해 실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A 잘 알다시피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의 폐쇄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한수이북시군 주민과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선거용 인기를 위한다면 당연히 연기하지 말고 의정부시민을 위해 폐쇄했어야 한다.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도 있지만 인근 시군 주민과의 화합차원에서 연기 한 것이다.

Q 13년 동안 지연돼 오던 경전철 사업이 오는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경전철건설 사업은 지난해 협상을 완료하여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금년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시설공사에 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하지 못했지만 오는 4월 협약을 체결, 2011년 초 완공할 예정이다.

Q 특히 국도3호선 의정부 구간 우회도로 착공은 미군기지 이전과 맞물려 있는데.

A 시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93년 12월부터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를 착공 하였으나 미2사단 담장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해왔다.

이에 시는 94년 3월3일부터 미군부대와 대체시설 이전 공사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SOFA(한미주둔지위협정) 규정에 따른 미군부대 내 오수처리장 건설요구에 대한 검토와 대체시설 이전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문제, 대체시설 이전공사 및 설계용역비 등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무려 5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우리공직자들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Q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한 방침은 정해졌는지.

A 앞으로 반환 예정인 미군 공여지는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50여년 이상을 군시설로 사용해 오면서 우리시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환예정 지역은 우리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장 넓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고속발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앞으로 반환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로서 시민공원을 조성함은 물론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의 부가 가치를 최고조로 상승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야말로 살맛나는 의정부시가 되도록 개발해 나가겠다.

Q 올해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A 국도3호선을 가로지르는 방호벽 철거와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과 철거, 중랑천의 생태공원화 사업, 대규모 직동 및 추동공원 개발, 중랑천 및 부용천 공원화 사업, 경전철 착공, 미군 공여지 행정타운조성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Q 최근 감사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A 지난 2월 21일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인사담당 직원의 착오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마치 시장인 내가 인사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알렸으며, 또한 시정운영과정에서 아주 경미한 인사 오류를 마치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과대평가를 해서 주의 통보를 받기도 전에 언론 발표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Q 의정부시민들로부터 의정부의 '이명박'이라는 닉네임을 얻고 있는데 중랑천 개발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말한다면.

A 일부 언론에서 서울 청계천 이명박 시장과 의정부 중랑천 김문원 시장이 하천개발을 통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우리 의정부는 중랑천이 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꼭 개발해야 하며 개발 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랑천은 지난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김 시장께서는 언론인 기자로부터 해서 정치인, 기관장, 지자체장 등 경력이 화려한데 남은 생은 어떤 일을 하는데 쓸을 계획인가.

A 우선 의정부시민들께 국회의원 2번과 시장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헌신해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의정부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휴식처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녹색도시로 탈바꿈하는데 노력 할 것이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48

언 론 사 : (주)광주타임스신문사
광주시 남구 사동 84-6
대표이사 박 성 호

주 문 : (주)광주타임스신문사가 발행한 남도일보 『민주당 텃밭 '제2의 DJ'로』(2006. 4. 21.자 3면), 『위기의 민주당 구할 '구원투수' 나선다』(2006. 4. 26.자 1면), 『'중앙당이 경쟁력 깎아내려', '우리 호남인들 똘똘 뭉쳐야'』(2006. 4. 26.자 3면), 『박광태·박준영 '공동번영 상생협력' 선언문 발표』(2006. 4. 27.자 1면) 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남도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시장, 전남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 후보예정자들의 선거 전략과 주요 공약사항 및 출마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제목과 본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정당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민주당 텃밭 '제2의 DJ'로

시·도지사, 중앙당 대신해 진두 지휘
열세지역 후보지원 '패키지 전략' 구상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석권을 통해 차후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민주당의 선거전략에 박광태·박준영 양 시도지사가 선봉에 섰다.

과거시절 DJ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토대로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분위기를 주도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는 최근 한화갑 대표가 의원직 상실위기에 몰리는 등 당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진데다 DJ를 대신할 만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이고 이 지역에서 양 시도지사를 능가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박 시장이 광주를, 박 지사가 전남을 각각 진두지휘하며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당내 공천 과정에서부터 양 시도지사의 패키지 선거 의도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패키지 선거 첫 프로젝트로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아직까지도 선관위 예비등록을 하지 않은 양 시도지사는 오는 26일께 동시 등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동시 등록에 앞서 민주당 승리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5월 16일부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연설회에 양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패키지 투어를 할 계획이다.

일단 광주의 경우 당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북구와 현역 구청장과 승부를 펼치게 돼 다소 열세지역으로 분류된 서구에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역시 도청 이전으로 소외감이 강한 동부지역과 일부 무소속 현직 단체장이 버티고 있는 지역에 박 지사가 직접 선거 지원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간 '윈윈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측은 "과거에는 정당연설회를 통해 열세지역 후보를 지원했지만 요즘은 정당연설회가 없어진 만큼 개인연설회를 십분 활용할 계획"이라며 "물리적으로 기초의원 선거구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까지는 패키지 연설회를 통해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측도 "현재 시점에서 양 시·도 지사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당이 불씨를 지핀다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 불씨를 최대한 키우면서 양 지역에서 극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는 큰 틀에서 방향을 논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며 "향후 논의를 거듭해가면서 양 시·도지사의 예비후보 등록 시점과 기초단체장 후보들과의 공동 선거운동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텃밭 '제2의 DJ'로

시·도지사, 중앙당 대신해 진두 지휘
열세지역 후보지원 '패키지 전략' 구상

(2006년 4월 21일자 3면)

위기의 민주당 구할 '구원투수' 나선다

박광태·박준영 '양朴' 5·31 지방선거 사령탑
중앙당 돈공천 파문딛고 광주·전남 진두지휘

5·31 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돈공천 파문 등으로 '9회 2사 만루' 위기에 빠진 민주당 광주·전남지역에 '양박(兩朴)'이 구원투수로 나선다.

광주에서는 박광태 시장을 중심으로 5명의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필승전략을 마련하고 공약개발과 로고송도 함께 사용키로 하는 한편 전남에서는 박준영 도지사를 필두로 22명의 시장·군수 후보들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과거 '김대중(DJ) 시절' 강력한 카리스마를 토대로 중앙당 차원에서 모든 선거를 진두지휘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는 한화갑 당 대표의 리더십이 현저히 떨어진데다 최근 갑작스럽게 터진 돈공천 파문 등으로 중앙당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박'의 구원투수 등판일은 26일.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선관위에 나란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공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공동번

영협약식'을 갖고 선거 필승을 다짐한다.

하지만 27일께 각각 광주와 전남에서 양박을 중심으로 공천자 전원이 모여 축제형식으로 치를 예정이었던 필승결의대회는 취소키로 했다.

다만 '당이 돈공천 파문에 휩싸인 것에 대해 지역민께 사죄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다'는 심기일전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박광태 시장이, 전남에서는 박준영 지사가 각각 선거 사령탑을 맡아 시·도지사 선거는 물론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4대 선거를 총괄한다는 전략이다.

광주의 사령탑 박 시장 측은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야당에 밀리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광주에서 총력전을 펼칠 기세여서 더 이상 돈공천과 같은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집안단속을 하면서 '바람선거'를 차단하고 후보간 공동대응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각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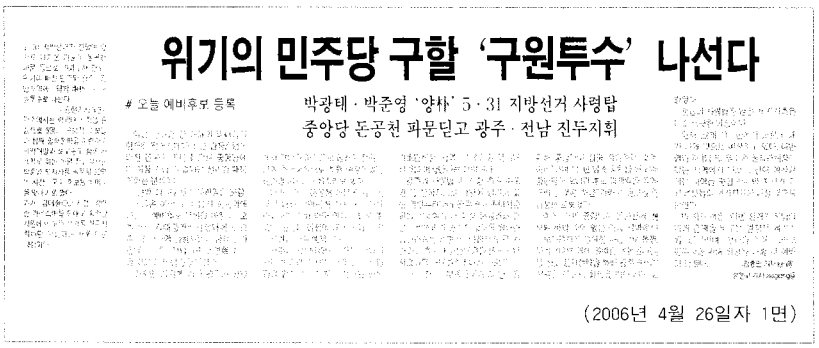
박 시장은 "부족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중앙당이 집중 지원하는 것이 순리"라며 "30년 넘게 정치를 해오며 중앙당이 오히려 후보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울고 싶은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이미 중앙당이 돈공천에 연루돼 바랄 것이 없는 이상 지역에서 후보자들끼리 겸허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취약지역에 화력을 총동원하는 등 상호 윈윈전략을 통해 광주에서의 석권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의 사령탑을 맡은 박 지사측은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현재 22개 시·군에서 고르게 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열린우리당 및 무소속 현직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 다소 고전이 예상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박 지사가 직접 후보들의 선거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 측은 "이번 선거가 전남의 미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을 위해,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의 민주당 구할 '구원투수' 나선다

박광태·박준영 '양박' 5·31 지방선거 사령탑
중앙당 돈공천 파문딛고 광주·전남 진두지휘

(2006년 4월 26일자 1면)

"중앙당이 경쟁력 깎아내려"

박시장 기자간담회 '불편한 심기' 노출

"죽고 싶은 심정이다. 중앙당이 오히려 후보들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고 있다." 최근 불거진 민주당의 '돈공천'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광태 〈사진〉 광주시장이 중앙당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 관심을 모았다.

박 시장은 25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보가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밀어주고 도와주는게 중앙당이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까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공천과 관련해) 광주·전남은 깨끗하다고 자신한다"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당의 돈 공천 의혹은 이유야 어쨌든 민주당을 지원해준 지역민들에게 누를 끼쳤다"면서 "불미스런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구하고 더욱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한화갑 대표의 특별당비라는 주장과 달리 중앙당을 직접 겨냥해 비판한 것은 역풍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앙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이번 선거를 '인

물론'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박 시장이 "바람을 타기 보다는 진솔하고 겸허하게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후보들의 경쟁력으로 지지도를 올릴것"이라고 밝힌 점에서 엿볼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회견은 지난 민선3기 광주시정을 소회하고 재선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임기동안 288개 기업과 삼성전자 유치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술회한 박 시장은 "2010년까지로 계획된 '1등 광주' 건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민선 4기에 취임해 못 다한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이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서울시장 후보는 "알맹이 없는 이미지정치의 거품이 빠지면 결국 누가 수도 서울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인지 서울시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서울 박주선, 광주 박광태, 전남 박준영의 3박(朴)이 힘을 모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민주당을 살리는 3박자'가 되자"고 역설했다.

한편, 박 지사의 이날 박주선 후보 사무실 방문은 전남지사 후보 경쟁 당시의 앙금을 씻고, 공천 비리로 얼룩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당력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서울 등 수도권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도 회복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 ❁ ❁

"우리 호남인들 똘똘 뭉쳐야"

박지사, 박주선 서울시장 후보와 환담

박준영〈사진〉 전남지사는 25일 "민주당은 농어민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다"면서 "농민의 아들인 박주선 후보가 반드시 서울시장에 당선돼 민주당과 호남인의 자부심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주선 후보 사무실을 방문,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박주선 후보의 모습을 보니 힘이 난다"며 "수도권에 계시는 광주·전남 향우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번 만큼은 우리 호남인들이 똘똘 뭉쳐서 한나라당에 빼앗긴 서울 시장을 되찾아 주길 바란다"고 선전을 당부했다.

박 지사는 또 "민주당은 조순 서울시장, 고건 서울시장을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당이다. 이번에는 박주선 후보가 서울시장에 반드시 당선돼 민주당의 자존심을 세워 달라"면서 "평소 합리적인 성품과 입법·사법·행정을 두루 거친 경륜과 높은 추진력을 앞세워 인물중심의 선거전이 된다면 박주선 서울시

"중앙당이 경쟁력 깎아내려"

박시장 기자간담회 '불편한 심기' 노출

"기막힌 심정 사죄 또 사죄"

"우리 호남인들 똘똘 뭉쳐야"

박지사, 박주선 서울시장 후보와 환담

"반드시 당선 자존심 회복"

(2006년 4월 26일자 3면)

❁ ❁ ❁

박광태·박준영 '공동번영 상생협력' 선언문 발표

"광주·전남에 새로운 도약의 씨앗 뿌리자"

민주당이 '사과상자 4억' 파문과 공천반발 탈당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본격적인 '민주당 구하기'에 나섰다.

두 사람은 26일 오전 시·도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을 마친 뒤 "광주·전남의 공동번영 성과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정책도 차질없이 완성해야 한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두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공동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광주·전남공동번영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은 본디 둘이 아닌 하나인 만큼 농어업의 현대화 및 기업화와 훌륭한 인재양성 등 더불어 번영할 수 있는 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광주·전남은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각각 추진하면서도 문화관광정책 수립과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건설, 엑스포 여수 유치, 혁신도시 건설, 전남산업 구상 등을 공동 추구해 왔다"며 "광주·전남에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씨앗이 뿌려지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두 예비후보는 또 "역사의 고비마다 항상 외롭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왔던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역량을 믿는다"며 "광주·전남 공동 번영의 한길로 힘차게 나가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두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광주·전남 5·31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광태·박준영
'공동번영
상생협력'
선언문 발표

"광주·전남에 새로운 도약의 씨앗 뿌려지고"

(2006년 4월 27일자 1면)

안 건 번 호 : 2006자심49

언 론 사 : 항도신문(주)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99-6
대표이사 김 재 훈

주 문 : 항도신문(주)이 발행한 항도신문 『'소리없이 강한' 정시장 민생 챙기기』(2006. 4. 12.자 5면), 『동북아 시대 '목포발전 큰 그림 그리겠다'』(2006. 4. 28.자 5면), 『정종득 시장, 지방선거 출마 공식선언』(2006. 5. 5.자 1면)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항도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목포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기사 등을 게재하면서 시정 추진 현황과 주요 공약사항 및 선거 전략 등을 3컷의 사진과 함께 집중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정당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소리없이 강한' 정시장 민생 챙기기

하당 돌며 공한지 정비 등 23건 시정 지시

'소리없이 강한' 야전사령관으로 정평이 난 정종득 시장이 이번엔 민생을 챙겼다.

정 시장은 지난 31일 국장들과 하당지역 5개동 동장들을 대동한 가운데 하당 전지역을 돌며 공한지를 둘러봤다.

정 시장의 이날 현장점검은 목포방문의 해와 목포해양문화축제에 대비 시내 곳곳에 산재한 공한지를 정비, 임시주차장과 꽃밭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항목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된 것.

정 시장은 가장 먼저 용당아파트 경계 철조망이 녹슬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조경수 등 나무 식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문태중·고 돌담을 철재 휀스로 교체할 것을 학교측과 협의하고, 용해동 동아아파트 육교 옆 쓰레기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갓바위 입구~무형문화재 전수관 사이 개인주택 주변 청소와 무화과밭에 있는 비닐하우스 정비, 갓바위 해양관광지 공사장 주변 휀스정비, 중바위 횟집뒤 개인주택 정비 등도 즉각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정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롯데마트옆 공한지 정비와 하당평화광장 주변 포장마차 정비 등을 강력 주문했다.

평화광장 9개소 등 650명 주차장 조성
건축자재 23필지·쓰레기 1200톤 수거 처리

이와함께 부흥상가 사거리 공한지 정비, 제일여고 앞 자동차정비업소옆 공한지 정비, 정비완료 공한지 꽃밭 조성, 도청입구 사거리 도로변 산속 쓰레기 정비, 백년로 등 차선도색, 영흥고 및 하당웨딩홀앞 주변 정비, 백년로변 베냐민 중고타이어 앞 정비, 9호광장 검정천 정비, 삼호빌라건너편 공한지 정비, 서남방송 건너편 테니스장 주변 정비, 열린교회 앞 쓰레기 정비 등 23건을 시정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는 357필지에 달하는 공한지에 방치된 흙더미와 잡초, 쓰레기를 정비하는 한편 컨테이너박스 12개소, 건축자재 32필지, 쓰레기 1200톤을 수거 처리할 방침이다.

또 간이화장실 9개소를 정비하고 47개소에 금잔화 펜지등 9만본을 식재해 꽃밭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미 평화광장 주변 9개소에 임시주차장 310면을 조성한 것을 비롯 하당 원형토지 롯데마트 주변 4개소에 340면 등 모두 650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소리없이 강한' 정시장 민생 챙기기

하당 돌며 공한지 정비 등 23건 시정 지시

평화광장 9개소 등 650명 주차장 조성

건축자재 23필지·쓰레기 1200톤 수거 처리

(2006년 4월 12일자 5면)

동북아 시대 "목포발전 큰 그림 그리겠다"

■ 정 종 득 목포시장 와이드 인터뷰

"목표여 다시 일어서자! 경제계 40년 경륜으로 목포 재도약을!" 표방하며 혜성처럼 나타난 2005년 봄.

"유달산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추고 삼학도 푸른 파도가 용솟음치는 목포 재도약의 그날이 올때까지 목포시민과 함께 희망찬 대행진을 계속 하겠다"고 천명한 정종득 후보가 "잘사는 목포! 경제시장"이라는 단 9자의 슬로건을 앞세워 목포 상륙에 성공한다.

건설업계 CEO 출신이 정치인을 거치지 않고 행정가로 변신한 최초의 사례라는 진기록을 남긴 그가 지난해 5월 2일 목포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는 1일로 취임 1돌을 맞는다.

그는 지난 1년동안 "결초보은의 심정으로 여생을 오로지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목포권 발전을 위해 발로뛰는 시정을 펼치며 휴일도 없이 줄기차게 앞만보고 달려왔다.

특히 정 시장은 '원도심개발 사업단'을 발족시켜 원도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많은 치적을 남겼다. 그 치적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난해 목포권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를 무려 6천300억원이나 확보해 경제 CEO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정 시장은 국비확보를 위해 8개월동안 무려 8차례나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이같은 괄목상대의 성과를 거둬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정 시장의 지난 1년은 당 태종의 '정관(貞觀)의 치(治)'와 병견될 만큼 손색이 없다.

정 시장은 24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도 다 때가 있듯이 목포가 바로 하늘이 예비해 놓은 땅"이라고 전제하고 "목포가 동북아시대 중심 축으로 부상하는 호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정농공단지~북항·해양대~삼학도~평화광장 연결
해양관광 일주도로 건설
유달산·삼학도·깃바위·북항·고하도권 등 5개 거점
관광도시化 富창출

한마디로 정 시장은 "목포는 기회의 땅이요, 축복받은 땅"이며 "목포는 이제 희망만이 남았다"는 것.

"이처럼 목포가 동북아시대 중심 축으로 우뚝서는 호기를 맞고 있는 이 때 향후 4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라며 "큰 그림을 그릴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예정에 없이 이뤄진 인터뷰에서 정 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해 45분간 '목포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 마치 한 권의 정관정요(貞觀政要)를 읽는 듯했다. 앞으로 정 시장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시정백서"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언제나 후보로 등록하시는지요?

▶ 5월 1일 오전 9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를 하고, 오전 11시 출마기자회견을 가진 뒤 2일 후보로 정식 등록할 생각이다. 잠정적인 것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본다면?

▶ 빠른 시일내에 시정업무를 파악했다. 공약사항을 한가지라도 더 실행에 옮기기 위해 토·일요일도 반납하고 불철주야 앞만보고 뛰어왔다.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시정을 빠르게 파악했고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지지부진한 사업들을 다시 재개·촉진시키는 한편 중요한 프로젝트는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전력투구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새로 했던 일은 원도심사업단을 발족시켜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중·장기 대책을 세워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

가장 먼저 원도심의 뉴타운식 재개발이다. 대성·양동지구는 이미 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추진중이고, 서산·온금지구는 국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5월말까지 제안서를 내도록 하는 초청장을 발송했다.

또 구 가톨릭병원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600억원을 투자해 성당성지화 사업이 추진된다. 이 곳에는 대주건설에서 300억원을 들여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 노인위양시설과 청소년 문화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은 천주교측이 150~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주민 관광·편의시설에는 약 15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남교동 공설시장은 시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해 부지를 65억원에 매입했다. 1만 2천평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개발하되 지하 3개 층은 주차장, 지상 1, 2층은 상가로, 지상 3층~20층까지는 아파트로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도급순위 1~50위까지 대형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빠른시일내에 착공토록 하겠다.

광동상가는 선창에 건어물 상가들이 밀집돼있어 이들을 수용하는 '수산물종합센터'로 개발할 방침이다. 부지는 이미 부동산신탁과 합의가 이뤄져 시에서 부지를 매입, 이 것 역시 연내에 착공될 것으로 본다.

이와함께 경찰서~터미널간 도로는 2006년 말까지 기필코 완공토록 하겠다. 또 목포대교는 작년 11월 착공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11년 완공 목표인데 문제는 3000억원의 예산확보다. 국비가 차질없이 확보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에 길이 남도록 하겠다.

-구상중인 목포 발전의 큰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 첫째, 목포를 해양관광중심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달산권·삼학도권·갓바위권·북항권·고하도권 등 5개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관광시설을 확

충·보완해 목포가 관광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유달산권에는 야간경관조명을 시설해 호평을 받고 있고, 유달산에 위치한 콘크리트 정자 3곳을 한옥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5월말 완공되면 또다른 명소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본다.

삼학도 복원공사는 2011년까지 1천243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제분 문제는 이미 2010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계약을 체결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더불어 삼학도에는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도 건립된다.

갓바위권 관광거점은 해양공원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갓바위 앞에서 평화광장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도록 하겠다.

또 북항권은 해양대·리라유치원·덕산마을 일대 12만평을 숙박단지·카지노·어린이 해양과학관 등이 들어서는 관광특구로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리라유치원 뒤편에 높이 200m 이상의 '목포타워'를 건립해 서남권 최대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고하도권은 50만평을 개발해 골프장·청소년 야영캠프장·숙박시설 등을 갖춘 종합유원지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함께 유달산 경관조명을 비롯 이미 설치된 원도심과 평화광장 주변에 루미나리를 설치하고, 고하도 용머리 2.3㎞에 걸쳐 야간조명을 추진중에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명실공히 목포를 빛의 도시로 탈바꿈시켜 세계적인 야간경관이 뛰어난 도시로 건설하겠다.

또 평화광장과 삼학도, 신안비치 앞바다를 오가는 길이 150m의 바다음악분수를 만들어 목포관광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삼향천과 입암천은 친환경적으로 개발, 생태공원을 조성중에 있어 시민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특히 정 시장은 재선하게 되면 산정농공단지~북항~해양대~목포수협~삼학도~갓바위~평화광장~남악신도시를 연결하는 '해양관광 일주도로 건설'을 임기내 기필코 매듭짓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00억원이 소요되는 삼학대교 건설 사업을 임기중에 완공시켜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J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를 흡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목포를 해양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 4선석이 가동되고 있는 목포신항은 2단계로 3선석이 건설중에 있으며 3단계 5선석도 완공시켜 목포신항을 12선석의 국제적인 항만으로 육성하겠다.

또 수협·해경·해양경찰본부 등 기관들이 이전해 있는 북항은 수산·어업중심항으로 육성하고, 금년말 물양장이 완공되면 300억을 들여 씨-푸드 타운을 건설해 북항 일대가 수산어업중심항으로 발돋움 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시대 "목포발전 큰 그림 그리겠다"

정종득 목포시장 와이드 인터뷰

산정농공단지~북항·해양대~삼학도~평화광장 연결 해양관광 일주도로 건설

유달산·삼학도·갓바위·북항·고하도권 등 5개 거점 관광도시化 富창출

(2006년 4월 28일자 5면)

내항은 국내·국제여객선 중심의 여객중심항으로 키우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의 남항은 관광여객선·요트 등 관광레저중심항으로, 대불항은 분양율이 80%대에 육박하고 있어 물동량을 취급하는 중심항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이처럼 신항·북항·내항·남항·대불항 등 5대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워터프론트 시범 항만'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불꺼진 항에 불을 다시 밝혀 3대항 6대도시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다.

셋째는 행정·교육·문화중심도시로 육성이다.

무안 기업도시와 영암·해남의 관광 레저도시가 빠른 시일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목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서 1단계로 무안·신안을 통합시켜 인구 50만의 도시를 만들고, 2단계로 영암·해남을 통합시켜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도청이전에 따른 77개 유관기관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해 2~3년내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다.

또 목포는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초등학교 29개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 14명을 이미 배치시켰으며 추가로 15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오는 6월말에는 중앙초교를 리모델링한 영어 체험마을이 문을 열고, 초·중등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영재교육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

특히 재선되면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물론 하당에 시립 특수 목적고를 신설하고, 남악신도시에 전남도에서 추진중인 특수목적고가 조기 신설될 수 있도록 해 목포를 교육중심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

이와함께 1단계 650억과 2단계 200억 등 총 850억이 소요되는 국제축구센터를 차질없이 완공해, 목포가 명실공히 축구의 메카로 부상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더불어 부주산 일대를 축구장·테니스장·산악자전거 경기장·농구장·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체육공원으로 집중 육성시키겠다.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목포가 배출한 예술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장주원 전시관·이난영 공원을 조성한 것을 비롯해 박화성 기념관, 차범석 기념관 건립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특히 목포출신 작가들을 위해 미술작품 상설전시장을 건립하고 동양척식회사와 구 시청건물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한편, 원도심에 문화의 거리·청소년 쉼터·청소년놀이광장 등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목포해양문화 축제를 가일층 발전시켜 앞으로 3년내 국내 제일의 축제로 만들고 5년내에 국제적인 축제로 개발·발전시켜 나가겠다.

-5·31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가 있다면?

▶ 목포시민과 목포발전을 위해 "결초보은의 심정으로 오직 고향발전에 분골쇄신 하겠다"는 각오 하나만으로 휴일도 반납한 채 부단없는 전진을 계속해 왔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장기 계획들을 차질없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줘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린다.

-선거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 특별한 선거전략이 따로 없다. 지난 1년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왔듯이 지난 1년동안 한 일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잘 설명드리고,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다.

-시정을 수행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순수한 목포발전을 위한 시책들이 일부 곡해로 인해 올바르게 수용되지 않고 난항을 겪을때 마음이 아팠다.

또 하나 무슨 일을 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타당성 조사·용역·시의회 승인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제약 때문에 2~3년이라는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 어려움이 많았다.

❀ ❀ ❀

정종득 시장, 지방선거 출마 공식 선언

"번영·축복의 땅으로 만들겠다"

정종득 목포시장이 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후보인 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저를 있게한 고향을 위해 다시 한번 봉사할 기회를 가지려 한다"면서 "목포를 '기회와 희망의 땅'에서 '번영

과 축복의 땅'으로 변모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정 시장은 "작년 5월 2일 시장에 취임하는 자리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목포발전을 위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다"며 "이말을 실천하기 위해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과 열정으로 목포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으며, 그 결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발전을 견인할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성사시키는 결실을 맺었다"고 술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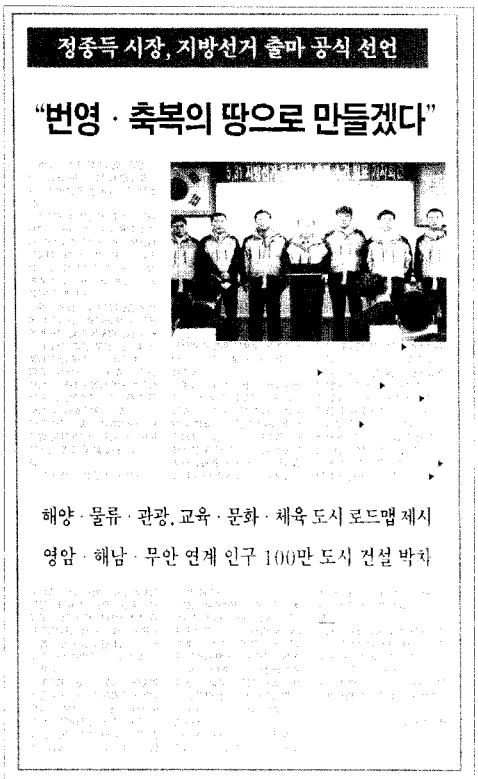
이어 정 시장은 지난 1년간의 시정발자취와 관련 "우선 목포를 '동북아 해양·관광·물류의 거점도시'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해 목포대교 착공, 삼학도 복원화 사업, 목포신항의 활성화 등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가시화 시켰다"고 밝혔다.

해양·물류·관광, 교육·문화·체육 도시 로드맵 제시
영암·해남·무안 연계 인구 100만 도시 건설 박차

또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 가톨릭병원 활용대책과 대성지구, 서산·온금지구 주택재개발을 통한 주거중심 뉴타운 건립문제를 매듭지었다"면서 "남교동 구 중앙공설시장, 광동상가 재건축 문제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 시장은 전남의 행정수도로써 이에 걸맞는 교육·문화의 도시로서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왔으며,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난 1년간 목포시장의 대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역설했다.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다시 한번 21세기 목포도약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밝힌 정 시장은 "목포에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씨앗이 뿌려지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며 "5.31 지방선거에서 다시 25만 시민들의 겸허한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종득 시장, 지방선거 출마 공식 선언

"번영·축복의 땅으로 만들겠다"

해양·물류·관광, 교육·문화·체육 도시 로드맵 제시

영암·해남·무안 연계 인구 100만 도시 건설 박차

(2006년 5월 5일자 1면)

이날 출마기자회견에서 정 시장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내고향 목포를 ▶격조높은 해양·관광·물류의 중심도시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도시 ▶교육환경이 가장 좋은 교육·체육도시 ▶도청 이전에 따른 남도행정·문화의 중심도시 ▶영암·해남의 해양레저형, 무안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연계한 인구 100만의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거점도시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도시 ▶균형잡힌 환경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출마회견에는 정종득 시장후보를 비롯 황정호·이호균 도의원 후보와 목포기초의원 9개선거구 19명의 후보 등 5.31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 22명 전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51

언 론 사 : (주)서울매일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
대표이사 김 기 수

주　　문 : (주)서울매일이 발행한 서울일보 2006년 5월 16일자 20면 『점검/한나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 박주원』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서울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안산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약력과 출마변 및 주요 공약사항 등을 여러 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한나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 박주원

"깨끗하고 풍요로운 안산 건설"

♦ 안산시장에 도전 동기

▲ 저는 24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그동안 접해왔던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국민의 행복과 정부를 비롯한 단체와 기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과 통합을 통한 질적 도약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시승격 20년을 맞이한 안산시는 깨끗하고 참신한 시장, 강력한 추진력을 보유한 강직한 시장, 21c지방자치제와 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시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그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 안산시의 시급한 지역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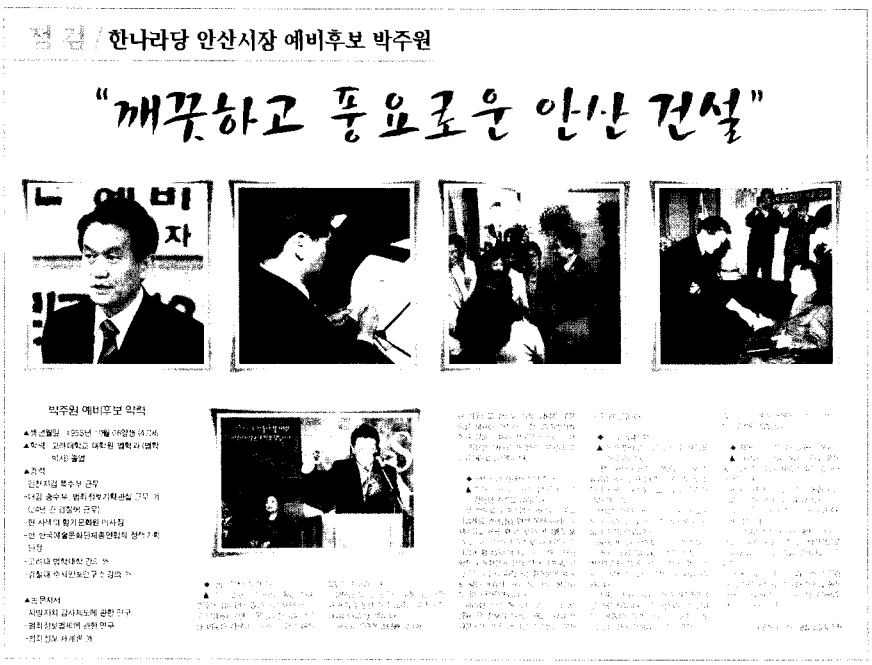
▲ 현재 안산시는 크게 4가지의 지역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기업의 99.2%가 중소기업체로 영세성을 면치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고 평균 30%가 넘는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상가의 문제로 대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문제이고, 두 번째는 불균형적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 셋째로, 안산시민의 질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넷째로 낮은 체감치안율의 도시치안 불안과 도시의 안전문제입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의 원인은 정보의 공유, 즉 정보의 제공, 가공, 전달의 전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부재가 주 원인입니다.

♦ 주요 공약사항

▲ 제가 만들고 싶은 안산의 3개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안산을 경기도 제1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


점검 / 한나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 박주원

"깨끗하고 풍요로운 안산 건설"

박주원 예비후보 약력

구 100만의 광역도시, 소득 4만 불의 부자도시로서 안산시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국제도시의 기준이 되는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의 벤치마킹을 통해 안산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국제 기준을 시스템으로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안산을 하나의 거대 가족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안산시를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함께 어우러져 숨쉬는 도시, 상호간에 정보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 도시전체가 행복의 향기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활동해온 시민의식 운동에 대해

▲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문화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통합의 리더로서 60만 명의 회원과 함께하는 '사색의 향기'는 제가 현재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정책기획단장직을 역임하면서 예술과 문화가 우리사회에 좀 더 발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마음, 깨끗한 행동을 통해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3C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박주원 예비후보 약력

▲생년월일 : 1958년 10월 06일생 (47)세

▲학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졸업

▲경력

-인천지검 특수부 근무

-대검 중수부, 범죄정보기획관실 근무 外

(24년 간 검찰에 근무)

-현 사색의 향기 문화원 이사장

-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 단장

-고려대 법학대학 강의 外

-경찰대 수사안보연구소 강의 外

▲논문저서

-지방자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범죄정보법제에 관한 연구

-범죄정보 체계론 外

안 건 번 호 : 2006자심52

언 론 사 : 주식회사 신경인매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201
대표이사 안 태 덕

주 문 : 주식회사 신경인매일이 발행한 경인매일 2006년 5월 17일자 3면 『도민소득 3만불 '경제도지사' 약속』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경인매일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전략을 소개하면서 각종 선거홍보내용을 선거포스터와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동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도민소득 3만불 '경제 도지사' 약속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 선거 홍보전략 만전

법적 선거기간으로 정해진 5.18일부터 투표일인 31일까지 13일 동안 본격 선거홍보전략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벽보나 플랜카드, 문자메세지 전송 등이 가능해지고 유세전을 위한 어깨띠나 동일한 유니폼, 모자 착용 등도 가능해져 대면중심의 거리선전전 양상을 띌 전망이다.

도민소득 3만불 '경제 도지사' 약속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 선거 홍보전략 만전

경제도지사

진대제①

법적 선거기간으로 정해진 5.18일부터 투표일인 31일까지 13일 동안 본격 선거홍보전략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벽보나 플랜카드, 문자메세지 전송 등이 가능해지고 유세전을 위한 어깨띠나 동일한 유니폼, 모자 착용 등도 가능해져 대면중심의 거리선전전 양상을 띌 전망이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 진대제 선거캠프는 16일 5.31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필승 홍보전략을 내놓았다. 도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만들고 도민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캐치프라이즈와 인물 슬로건을 '경제도지사'로 통일했다.

전체 홍보물에 들어가는 기호에 태극문양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해 진 후보의 애국심을 강조했고, 월드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홍보컨셉으로 월드컵 평가전 일정을 뒷면에 새겨넣은 월드컵 명함과 연령대별 공약을 위한 맞춤명함도 선보였다.

선전벽보나 유세차, 현수막 등은 심플하면서도 간결한 메시지를 담아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블루오션을 컨셉으로 메인을 잡았고, 유세전을 위한 어깨띠, 유니폼, 모자 등도 '경제도지사'를 부각시킨 간결한 문구에 블루칼라의 조화를 담아냈다.

진 후보가 그동안 인지도면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에 현저히 밀린다는 판단아래, TV토론회나 미디어를 통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해 왔지만 18일부터는 이들 홍보물을 이용해 경기도 전역을 돌며 '바닥민심잡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편 진대제 선거캠프 김성호 총괄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진 후보가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에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다며 막판 대역전극을 위한 3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인지도를 높여 10% 이내로 지지도를 차이를 좁히는 1단계, 19일 SBS토론회와 25일 있을 선관위 주최 방송 3사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4~5%로 접근하고, 벽보나 벽정 홍보물 발송이 시작되는 26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역전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은 중앙당과 진대제 선거캠프에서 리서치 기관과 계약을 맺고 자체조사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됐으며 지난 13일 조사에 따르면 진 후보가 김 후보에 11.5%정도 뒤쳐지고 있지만 근소한 상승폭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53

언 론 사 : (주)울산매일신문사
울산시 남구 삼산동 1488-4 리버타운빌딩 2층
대표이사 정 길 남

주 문 : (주)울산매일신문사가 발행한 울산매일 2006년 5월 20일자 3면 『지방선거 현장-표심잡는 후보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울산매일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울산광역시)와 관련, 후보자들의 동향을 다루면서 전체 후보자중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 위주로 선별하여 그들의 거리유세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황 등을 각각의 현장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지방선거현장 - 표심잡는 후보들

"한표 부탁합니다" 빗속 강행군

필승다짐

19일 오전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한나라당 엄창섭 울주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려 엄 후보와 당직자들이 필승을 결의하고 있다.

출근길 눈도장

19일 북구 화봉동 도로에서 한나라당 강석구 북구청장 후보가 출근길 근로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지호소

한나라당 남구청장에 출마한 김두겸 후보가 19일 오전 태화로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무소 개소

19일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서 한나라당 울주 제2 다 선거구 광역의원 천명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파이팅"

18일 남구 옥동에서 무소속 남구나 선거구 기초의원 박기성 후보(왼쪽 두번째)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우중유세

19일 오전 중구 성안동 도로 한 복판에서 한 후보가 우중 거리 유세를 벌이고 있다.

지방선거 현장

표심잡는 후보들

"한표 부탁합니다" 빗속 강행군

필승다짐

출근길 눈도장

지지호소

사무소 개소

"파이팅"

우중유세

안 건 번 호 : 2006자심54

언 론 사 : 주식회사 광역일보
울산시 남구 신정1동 1285-1 태형빌딩 4층
대표이사 조 희 태

주 문 : 주식회사 광역일보가 발행한 광역일보 2006년 5월 20일자 16면 『빗속 민심잡기 발품』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광역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울산광역시)와 관련, 후보자들의 동향을 다루면서 전체 후보자중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 위주로 선별하여 그들의 거리유세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황 등을 각각의 현장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5·31 지방선거 D-12

빗속 민심잡기 발품

19일 울산지역에는 하루종일 굵은 빗줄기가 보였지만 마음이 급한 '5.31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표밭 가꾸기는 그치지 않았다. 차량을 이용한 유세가 여의치 않은 후보들은 아케이드와 상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일부 후보자들은 형형색색의 비옷을 장만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거리를 누비기도 했다. 빗속 선거운동이 펼쳐진 하루를 담아보았다.

우중에도 한표를 위하여

19일 울산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이 비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한나라당 박맹우 후보 운동원-범서읍 천상리·왼쪽, 열린우리당 심규명 후보 운동원-태화로터리·오른쪽)

이번에도 엄창섭

19일 열린 울주군수 한나라당 엄창섭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엄창섭 후보와 최병국, 정갑윤 국회의원, 박맹우 시장 후보 등이 필승을 다짐하는 만세를 하고 있다.

한표 부탁합니다

심완식 한나라당 남구의회 의원(남구 라 선거구)이 19일 야음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일 한나라당 김춘생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울주 3선거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춘생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위)

대학생 표심잡기

광역의원 동구 1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숙자 후보가 울산과학대 일원에서 학생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필승기원

19일 한나라당 조충제 울주군의회 의원(울주군 1선거구)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조충제 후보와 최병국 시당위원장 등 참석인사들이 축하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사진 아래)

을주2선거구 천명수 후보 개소식

울산광역시의회 울주 2선거구 한나라당 천명수 후보가 19일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55

언 론 사 : (주)경기도민일보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540-4
대표이사 박 영 호

주 문 : (주)경기도민일보가 발행한 경기도민일보 2006년 4월 26일자 3면 『경기도의 에펠탑 구상 중』, 동년 5월 16일자 3면 『화성 병점高서 '애국심' 강조』, 동년 5월 24일자 3면 『김문수, 양평시장 유세』 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경기도민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동향과

주요 공약사항 등을 3컷의 현장사진과 함께 3회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경기도의 에펠탑 구상 중"

김문수, 조계종 방문 지관스님과 의견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도를 상징할 만한 대형 전통 조형물 건축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조계종을 방문, 지관 총무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고 조언을 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파리의 에펠탑처럼 경기도를 상징하는 전통 조형물을 지으려 한다"며 "석가탑과 다보탑처럼 종교적 의미를 떠나 우리의 전통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조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형물 위치와 관련해서는 "고양 인근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딛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에펠탑 구상 중"

김문수, 조계종 방문 지관스님과 의견

(2006년 4월 26일자 3면)

* * *

화성 병점高서 '애국심' 강조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 일일교사 나서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스승의 날을 맞아 일일교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화성시 병점동 소재 병점고등학교를 방문, 1학년 학생 3개 반 120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초청강연을 했다. 학생대표로부터 감사의 꽃을 받은 김 후보는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김 후보는 "병점고등학교의 교훈인 정행과 솔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바르게 행동하되 자신이 먼저 나서 행동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국들 사이에 남북으로 나뉜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 병점高서 '애국심' 강조

김문수 한나라당경기지사 후보 일일교사 나서

(2006년 5월 16일자 3면)

김 후보는 "언제나 앞서 나간다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솔선하는 행동이야말로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며 "저도 중학교 때부터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병점고등학교는 내년에 현대식 기숙사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멀리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한 학교와 좋은 시설에서 열심히 공부할 기회를 가진 만큼 선생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

김문수, 양평시장 유세

유병덕 후보와 정책협약 맺어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김문수 후보가 23일 양평군을 방문 용문사거리와 양평시장에서 유세활동을 펼쳤다.

양평 5일장을 맞아 군민과 시장상인 등 200여명 및 한나라당 양평군수 유병덕 후보,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는 유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두 후보는 정책협약에서 △불합리한 수도권 중복규제 개선 △친환경산업 육성 △대규모 체류형 체험 관광단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양평뉴타운 건설, 중앙선 복선전철화, 양평영어마을 조기완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키로 했다.

정책협약을 마친 김 후보는 "힘있는 한나라당 도지사 김문수와 양평군수 유병덕이 함께 손잡고 양평을 제대로 발전시켜 내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김문수, 양평시장 유세

유병덕 후보와 정책협약 맺어

(2006년 5월 24일자 3면)

한편, 유세를 마친 김 후보와 유 후보는 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안 건 번 호 : 2006자심56

언 론 사 : (주)중앙일보사
서울시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주 문 : (주)중앙일보사가 발행한 중앙일보 2006년 5월 30일자 6면 『서울 · 부산 · 충남 · 광주 유권자 3차 패널조사 -충남 '박대표 테러'에 영향 받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6. 5. 25.부터 5. 31.까지(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중앙일보가 특정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위 해당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위 기간 중에 인용·보도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제1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보도내용〉

서울·부산·충남·광주 유권자 3차 패널조사

충남 '박 대표 테러'에 가장 영향 받아

중앙일보·SBS·동아시아연구원(EAI)·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기획한 지방선거 패널 조사는 경마식에 머물렀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조사 시점 사이에 일어난 특정 사건과 이슈·캠페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의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3차 조사에선 EAI 소속 교수들이 서울·부산·충남·광주 4개 지역으로 나눠 1~3차 패널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적 사항을 종합 분석했다. 전화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24~26일 만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서울 646명, 부산 631명, 충남 602명, 광주 630명)을 대상으로 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충남은 ±4.0%포인트, 나머지 지역은 ±3.9%포인트다.

서 울
'현 정부 중간평가'로 선거 인식

서울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 즉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지역일꾼 뽑는 선거'란 응답이 다른 지역은 40%대에 이르는데 비해 서울은 29%였고, '중앙정부평가'란 응답은 광주·충남이 10% 미만인데 비해 서울은 21%에 달했다.

정당 및 후보 선호 이유에서도 '지방'보다 '전국'을 의식하는 투표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당 선호 이유의 경우 '지역발전 노력'(12%)보다 '이념이나 정책'(34%), '다음 대통령 당선 가능성'(26%)을 더 고려했다. 후보 선호 이유에서도 '서울시를 이끌 자질'(28%)보다 후보의 '인품이나 도덕성'(54%)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열세는 낮은 정당지지도 외에 선거이슈 선점 실패 때문이었다. '지방권력 교체론'은 1차 때 이미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였고 3차 땐 71%로 늘어났다. 강 후보는 서울시청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자리에 신축하는 것을 찬성한 의견이 1차 때 이미 70%를 넘었고,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정수기 광고도 2, 3차 조사에서 서울 유권자 5명중 4명 이상이 '문제가 없다'거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답해 이미 이슈가 아니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

❀ ❀ ❀

부 산
"지지 후보 안 바뀌었다" 가장 높아

다들 이번 선거는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고 한다. 부산이 특히 그랬다. 후보 지지 이유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동일한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지지 후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선 '두고 봐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은 데 비해 부산에서만 선거 결과가 '뻔하다'는 응답이 2차와 3차 조사 모두 더 많았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역시 4개 지역 중 가장

냉담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약화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게다가 이번 3차 조사에선 부산에서만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지역주의 약화)보다 우세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4개 지역 중 부산 유권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서현진 성신여대 교수

● ● ●

충 남
한나라당 지지율 꾸준히 올라가

행정수도 이전이 업적인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충청권의 고전은 예상 밖이다. 현직 도지사(심대평)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중심당도 마찬가지다. 세 차례 패널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한나라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차 때 39%에서 2차 때 45%, 이번 조사에선 54%로 나타났다. 게다가 박근혜 대표 피습으로 인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지역도 충남이었다(20%). 한나라당 상승세는 비례대표 정당 지지와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1차 조사 때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를 묻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29% 대 22%였다. 그러나 이번 3차 조사에선 41%대 21%로 두 배 정도 차이가 났다.

충청권에서의 한나라당 상승세는 열린우리당 혹은 후보에 대한 여론 악화에 따른 것이 아니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부동층을 끌어들여 지지도 우위가 나타난 측면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로 충청권 지지층 확보에 나선 열린우리당의 기대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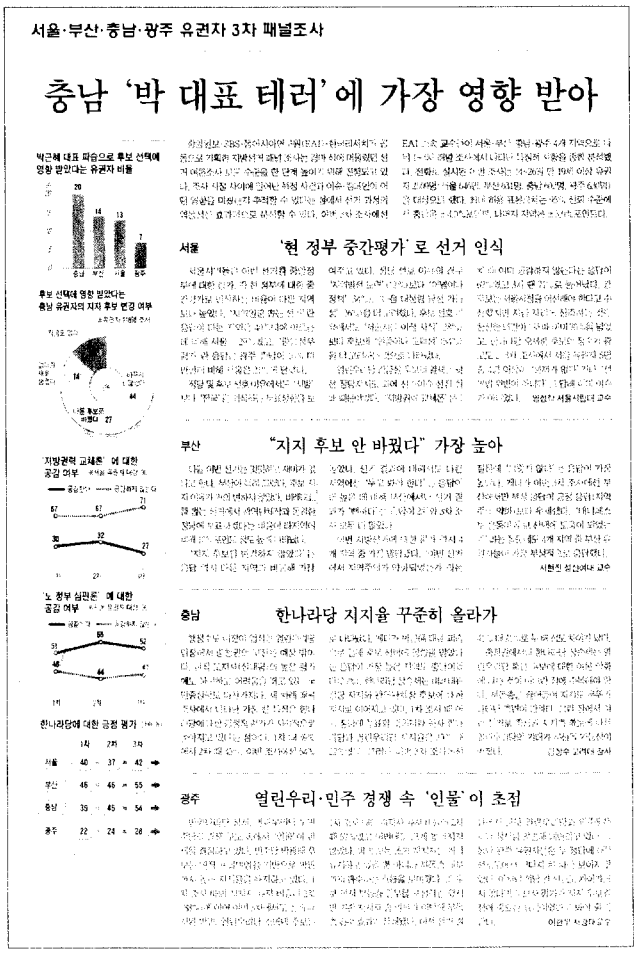
김장수 고려대 강사

● ● ●

광 주
열린우리·민주 경쟁 속 '인물'이 초점

반한나라당 정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인물'이 판세를 결정하고 있다. 민주당 박광태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막판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1차 조사 때의 지지자 유지 비율이 2차(88%)에 이어 이번 3차에서도 높게 유지된 반면, 열린우리당 조영택 후보는 1차 조사 때의 지지자 유지 비율이 2차때 57%였고 이번에도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박 후보는 초기 지지자를 거의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층 일부까지 흡수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조 후보 역시 부동층 일부를 포섭하긴 했지만 기존 지지자 중 일부가 이탈해 부동층 흡수 효과가 상쇄됐다. 이전 선거 결과에서 보듯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호남 정서를 양변해 대변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 유권자들은 두 정당에 대한 선호도에서 그다지 큰 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정당 간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다면 후보자 평가가 지지 후보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


서울·부산·충남·광주 유권자 3차 패널조사

충남 '박 대표 테러'에 가장 영향 받아

서울 '현 정부 중간평가'로 선거 인식

부산 "지지 후보 안 바꿨다" 가장 높아

충남 한나라당 지지율 꾸준히 올라가

광주 열린우리·민주 경쟁 속 '인물'이 초점

3. 경고문 게재

안 건 번 호 : 2006자심3

언 론 사 : 아세아일보(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7
대표이사 권 기 호

주 문 : 아세아일보(주)는 아시아일보 2006년 2월 14일자 2면 『성남 문화예술 최고 20년 앞당겼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아시아일보 2면에 별지 목록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함.

이 유 : 아시아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성남시장선거)와 관련, ▲ 특정 후보예정자가 성남시 문화예술을 10~20년 앞당겨 고급문화예술을 접하게 만들었다는 등 그의 치적을 사실과 의견의 구분 없이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하고 ▲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 선언에 대해 특정 정당에 공헌도 없는 행정 부시장급 공천이 범람한다고 우회적으로 폄하 보도하고 ▲ 특정 정당의 후보예정자들 중 현 성남시장이 당선에 유리하다며 경선순위를 예측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지극히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수 있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케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제6조(사실보도)제3항, 제7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각 위반】

이에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동일 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문」 게재를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유효봉)는 아시아일보 2006년 2월 14일자 2면 『성남 문화예술 최고 20년 앞당겼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아시아일보가 위 기사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성남시장)와 관련해 ▲특정 후보예정자가 성남시 문화예술을 10~20년 앞당겨 고급문화예술을 접하게 만들었다는 등 그의 치적을 사실과 의견의 구분 없이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하고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 선언에 대해 특정 정당에 공헌도 없는 행정 부시장급 공천이 범람한다고 우회적으로 폄하 보도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예정자들 중 현 시장이 당선에 유리하다며 경선순위를 예측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지극히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수 있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케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제6조(사실보도)제3항, 제7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각 위반】

〈보도내용〉

"성남 문화예술 최고 20년 앞당겼다"
4기 민선시장 준비하는 이대엽 시장

이대엽 시장은 영화배우에서 국회의원, 성남시장으로 변신을 시도, 많은 사람은 그를 거물이라 하며 정치인 및 행정가라 한다.

영화배우로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한 국회의

원3선으로 성남발전에 일등 공신을 했고 성남시장으로 성남 문화 예술을 10~20년 앞당겨 고급 문화 예술을 접하게 만들었다.

성남시 제3기 민선 시장으로 성남시 문화 예술을 10~20년 앞당긴 이대엽 시장은 제4기 민선시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예비후보 군단에서나 성남 여러당 후보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아 성남시민 일부에서는 재선되어 임기 중 많이 남아있는 성남사업을 마무리시켜야 한다고 했다.

양인권 전 부시장이 시장후보 선언이후 인사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누가 승진하나를 따질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니까 동요하지 말아야한다.

성남시장 후보는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전국적으로 당에 공헌도 없는 행정 부시장급 공천이 너무 많이 신청되어 검증되지 않은 것 가체를 걸러야 되지 않나 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공천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이 배신을 할때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 했다.

우리 사회에서 의리와 지조를 지키는 자는 그리 흔치 않다. 한나라당 후보로 거물 이대엽 현시장을 비롯하여 김주인 상공회의소회장, 임석봉 전시장, 김용식 성남도시 발전연구소장, 이관용 성남발전포럼 대표, 이태순 현 도의원, 신영수 도시경쟁력 연구소장, 이완구 성남 경기도민회장, 양인권 전부시장 등 남한산성위에 9용이 떴다.

어느 용이 북쪽에서 남하할런지?

공천이냐 경선이냐 L시 의원 일부와 K도의원 등 경선으로 가야한다.

경선으로 갈 때는 현 이대엽시장이 유리한 가운데 이관용, 김주인 순위로 알려졌다.

"성남 문화예술 최고 20년 앞당겼다"

4기 민선시장 준비하는 이대엽 시장

이대엽 시장은 영화배우에서 국회의원, 성남시장으로 변신을 시도, 많은 사람은 그를 거물이라 하며 정치인 및 행정가라 한다.

영화배우로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한 국회의원3선으로, 성남발전에 일등 공신을 했고 성남시장으로 성남 문화 예술을 10~20년 앞당겨 고급 문화 예술을 접하게 만들었다.

성남시 제3기 민선 시장으로 성남시 문화 예술을 10~20년 앞당긴 이대엽 시장은 제4기 민선시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예비후보 군단에서나 성남 여러당 후보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아 성남시민 일부에서는 재선되어 임기 중 많이 남아있는 성남사업을 마무리시켜야 한다고 했다.

양인권 전 부시장이 시장후보 선언이후 인사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누가 승진하나를 따질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니까 동요하지 말아야한다.

성남시장 후보는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전국적으로 당에 공헌도 없는 행정 부시장급 공천이 너무 많이 신청되어 검증되지 않은 것 가체를 걸러야 되지 않나 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공천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이 배신을 할때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 했다.

우리 사회에서 의리와 지조를 지키는 자는 그리 흔치 않다. 한나라당 후보로 거물 이대엽 현시장을 비롯하여 김주인 상공회의소회장, 임석봉 전시장, 김용식 성남도시 발전연구소장, 이관용 성남발전포럼 대표, 이태순 현 도의원, 신영수 도시경쟁력 연구소장, 이완구 성남 경기도민회장, 양인권 전부시장 등 남한산성위에 9용이 떴다.

어느 용이 북쪽에서 남하할런지?

공천이냐 경선이냐 L시 의원 일부와 K도의원 등 경선으로 가야한다.

경선으로 갈 때는 현 이대엽시장이 유리한 가운데 이관용, 김주인, 순위로 알려졌다.

이성규기자 sung0114@hanmail.net

안 건 번 호 : 2006자심6

언 론 사 : 아세아일보(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7
대표이사 권 기 호

주 문 : 아세아일보(주)가 발행한 아시아일보 2006년 2월 3일자 2면 『100만 성남시민 위한 일꾼은 누구?』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아시아일보 2면에 별지 목록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함.

이 유 : 아시아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성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남시장 선출을 위한 정당 및 각 정당별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고, 특히 객관적 대표성이 결여된 표본과 비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예정자들의 지지도 순위를 나열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케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항 각 위반】

이에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동일 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문」 게재를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유효봉)는 아시아일보 2006년 2월 3일자 2면 『100만 성남시민 위한 일꾼은 누구?』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아시아일보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성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남시장 선출을 위한 정당 및 각 정당별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았고, 특히 객관적 대표성이 결여된 표본과 비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예정자들의 지지도 순위를 나열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케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항 각 위반】

〈보도내용〉

5·31일 지방 선거

100만 성남시민 위한 일꾼은 누구?

지난 지방자치제 선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3형제 사건으로 여당 새천년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에게 무너졌다.

전 김대중 대통령 아들 흔히 3형제사건을 '홍삼트리오' 사건이라 한다.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이대엽 시장이 김병량 시장을 이긴 것도 김대중 아들 사건 및 파크뷰사건으로 온나라가 권력형 비리에 얼룩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호되게 받았다.

현재는 인지도에서나 현 이대엽 시장이 앞서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전직시장들은 비리에 연루되어 차후에 구속되기까지 해 현 이대엽시장이 모든 것에 안전하다 할 수 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시장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현 성남시장 이대엽 외 임석봉 전 시장, 김주인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김용식 성남도시 발전연구소장, 이관용 성남발전 자치포럼대표, 이태순 현 도의원, 신영수 도시경쟁력연구소장, 이완구 성남경기도민회장 등이며, 열린우리당에서는 이재명 변호사, 이찬구 전국회의원, 민주당에서는 장영화 변호사, 이윤수 전 국회의원, 민주노동당에 김미희 현 민주노동당 중앙의원, 김준기 변호사, 차후에도 국민신당 등 여러 당에서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들은 행사장마다 얼굴 알리기에 바쁘다. 악수, 인사, 선거와 같은 전쟁이 시작됐다. 뛰고 또 뛰어 후보 얼굴 이름 알리기에 바쁘다. 우리의 고유명절(설)에는 누가 떡국을 잘 먹었는가가 5월 31일이 말해 줄 것이다.

또한 열린우리당 K시의원 및 민주당 L시의원 여러 의원이 한나라당 대 타당연합으로 뛰고 있다. 이윤수 전직 국회의원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고 한나라당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장후보 외에 새로운 인물이 있다는 (설)도 있다.

각 정당 지지도는 다음과 같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시민의 왕래가 많은 주요 지점에서 시민200명을 대상으로 거리조사를 했다.

· 한나라당 : 이대엽, 임석봉, 김주인, 김용식, 이관용, 이태순, 신영수, 이완구씨

· 열린우리당 : 이재명, 이찬구씨
· 민주당 : 장영화, 이윤수씨
· 민주노동당 : 김미희, 김준기씨

중원구 상대원시장 : 50명, 수정구 종합시장 : 50명, 분당구 야탑역 : 40명, 서현역 : 30명, 미금역 : 30명.

설문조사 내용

1. 성남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한나라당 : 현 이대엽 시장 : 64명(32%), 전 임석봉 시장 : 9명(4.5%), 이관용 : 14명(7%), 김주인 : 4명(2%), 이태순 : 2명 (1%), 김용식 : 0명, 신명수 : 0명, 이완구 : 0명

열린우리당 : 이재명 변호사 : 24명(12%), 이찬구 : 3명(1.5%)

민주당 : 이윤수 전 국회의원 : 21명(10.5%), 장영하 변호사 : 8명(4%)

민주노동당 : 김미희 : 7명(3.5%), 김준기 : 2명(1%)

지지자없음 : 42명(21%)

2. 5월31일 지방자치선거에서 어느당을 지지할 것인가?

1) 열린우리당 : 21명 (10.5%)
2) 한나라당 : 68명 (34%)
3) 민주당 : 11명 (5.5%)
4) 민주노동당 : 13명 (6.5%)
5) 국민중심당 : 4명 (2%)
6) 지지정당없음 : 83명 (41.5%)

5 · 31일 지방 선거

100만 성남시민 위한 일꾼은 누구?

지난 지방자치제 선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3형제 사건으로 여당 시천년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에게 무너졌다.

전 김대중 대통령 아들 existing 3형제사건을 '홍삼트라오' 사건이라 한다.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이대엽 시장이 김병량 시장을 이긴 것도 김대중 아들 사건 및 파크뷰사건으로 온나리가 권력형 비리에 얼룩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호되게 받았다.

현재는 안지도에서나 현 이대엽 시장이 앞서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전직시장들은 비리에 연루되어 차후에 구속되기까지 해 현 이대엽시장이 모든 것에 안전하다 할 수 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시장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현 성남시장 이대엽 외 임석봉 전 시장, 김주인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김용식 성남도시 발전연구소장, 이관용 성남발전 자치포럼대표, 이태순 현 도의원, 신명수 도시경쟁력연구소장, 이완구 성남경기도민회장 등이며, 열린우리당 에서는 이재명 변호사, 이찬구 전국회의원, 민주당에서는 장영화 변호사, 이윤수 전 국회의원, 민주노동당에 김미희 현 민주당노동당 중앙의원, 김준기 변호사, 차후에도 국민신당 등 여러 당에서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들은 현시점마다 얼굴 알리기에 바쁘다. 악수, 인사, 선거와 같은 전쟁이 시작됐다. 뒤고 또 뒤어 후보 얼굴 이름 알리기에 바쁘다. 우리의 고유명절 (설)에는 누가 떡국을 잘 먹었는가가 5월 31일이 될 줄 것이다.

또한 열린우리당 K시의원 및 민주당 L시의원 여러 의원이 한나라당 대 타당년합으로 뛰고 있다. 이윤수 전직 국회의원을 영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고 한나라당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장후보 외에 새로운 인물이 있다는 (설)도 있다.

각 정당 지지도는 다음과 같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시민의 왕래가 많은 주요 지점에서 시민200명을 대상으로 여리조사를 했다.

· 한나라당: 이대엽, 임석봉, 김주인, 김용식, 이관용, 이태순, 신명수, 이완구 씨
· 열린우리당: 이재명, 이찬구 씨
· 민주당: 장영화, 이윤수 씨
· 민주노동당: 김미희, 김준기 씨

중원구 상대원시장 : 50명, 수정구 종합시장 : 50명, 분당구 야탑역 : 40명, 서현역 : 30명, 미금역 : 30명.

설문조사 내용

1. 성남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한나라당 : 현 이대엽 시장 : 64명(32%), 전 임석봉 시장 : 9명(4.5%), 이관용 : 14명(7%), 김주인 : 4명(2%), 이태순 : 2명 (1%), 김용식 : 0명, 신명수 : 0명, 이완구 : 0명

열린우리당 : 이재명 변호사 : 24명(12%), 이찬구 : 3명(1.5%)

민주당 : 이윤수 전 국회의원 : 21명(10.5%), 장영하 변호사 : 8명(4%)

민주노동당 : 김미희 : 7명(3.5%), 김준기 : 2명(1%)

지지자없음 : 42명(21%)

2. 5월31일 지방자치선거에서 어느당을 지지할 것인가?

1) 열린우리당 : 21명 (10.5%)
2) 한나라당 : 68명 (34%)
3) 민주당 : 11명 (5.5%)
4) 민주노동당 : 13명 (6.5%)
5) 국민중심당 : 4명 (2%)
6) 지지정당없음 : 83명 (41.5%)

이성규 기자sung01114@hanmail.net

안 건 번 호 : 2006자심9

언 론 사 : 주식회사 종로문화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0-4
대표이사 이 병 기

주 문 : 주식회사 종로문화사는 종로저널 2006년 2월 13일자 1면 『남상해 회장 출판기념회 대성황』, 5면 『'신이 내리신 사람', '종로의 정신적 보배요 등불'』, 『나는 오늘도 희망의 자장면을 만든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종로저널 5면에 별지 목록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함.

이 유 : 종로저널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종로구청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3컷의 사진과 함께 지극히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해당 후보예정자의 기고문을 연재하는 등, 2개 면에 걸쳐 특정 후보예정자를 집중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제11조

(외부기고)제1항 각 위반】

이에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동일 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문」 게재를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유효봉)는 종로저널 2006년 2월 13일자 1면 『남상해 회장 출판기념회 대성황』, 5면 『'신이 내리신 사람', '종로의 정신적 보배요 등불'』, 『나는 오늘도 희망의 자장면을 만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종로저널이 위 기사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종로구청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3컷의 사진과 함께 지극히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해당 후보예정자의 기고문을 연재하는 등, 2개 면에 걸쳐 특정 후보예정자를 집중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제11조(외부기고)제1항 각 위반】

〈보도내용〉

남상해 회장 출판기념회 대성황

3천여명 축하객 몰려…
지난 10일, 하림각 신관 1·2층 인산인해 이뤄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의 남상해 회장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지난 10일 문전성시를 이루며 성황을 보여 화제시 됐다.

역전의 명수 '남상해를 아십니까?'라는 책을 출판, 기념하는 이날 행사에는 무려 3천여명의 축하객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하림각 신관 2층 약 1000여석을 가득 메우면서 자리가 모자르자 주최측은 1층 별도의 방에 대형스크린과 함께 하객들을 유치했으며 이날 인사차 잠시 들렀다가 돌아간 하객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약 3천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축전과 함께 이수성 전 국무총리, 강재섭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최영희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상득, 박계동, 정형근, 박진 국회의원을 비롯 장기표, 이명박 서울시장 부인 등등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외빈으로 참석했으며, 종로구에서는 이두학 전 구의회 의장, 정흥진 전 구청장, 최창혁 민주평·통회장, 예상호 문화원장, 정창희, 이헌구 시의원, 김이환, 홍기서, 오금남, 이종환, 서순보 구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외에도 김영종, 이노근, 천상욱, 배성한, 양경숙씨 등 각종 직능단체장들을 포함 일반 축하객 3천여명이

남상해 회장 출판기념회 대성황

3천여명 축하객 몰려…

지난 10일, 하림각 신관 1·2층 인산인해 이뤄

(2006년 2월 13일자 1면)

몰려 명실공히 출판기념 축제의 분위기를 낳았으며 1백여개의 각종 축하 화환과 꽃바구니가 더욱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시켰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주종탁 아리수포럼 사무처장의 남상해 회장 약력소개(관련기사 5면)와 한나라당 서울시당 홍보위원장의 사회로 남회장의 인사말과 내빈 축사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또한 남회장은 이날 자신의 인생역전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감동의 분위기를 낳아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 ❀ ❀

'神이 내리신 사람'

이수성 전 국무총리, 대찬사

한마디로 '감동의 도가니'였다. 3천여명의 축하 인파 그리고 온갖 찬사 속에서 빛나는 남상해 회장의 인생 드라마는 출판 기념회장을 감동의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배고픈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열살 나이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구두닦이와 신문팔이 그리고 물장사와 중국집 배달원 등의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오늘의 인생 역전을 이뤘다"는 남 회장의 회고담은 일순간 장내를 숙연케 하면서 이윽고 부인 엄정숙씨를 눈물짓게 했다. 가슴으로 이어지는 '찡'한 분위기가 이심전심으로 많은 축하객들을 울리며 감동케 하는 순간이었다.

"인생은 역전의 미학(美學)입니다. 그리고 꿈은 이뤄집니다. 꿈을 꾸는 만큼 노력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혹독한 역경을 보기 좋게 역전 시키십시오."

남 회장은 이번에 출간된 책을 통해 삶이 버겁고 힘겨운 사람들과 세상에 정이 떨어져 등을 돌린 사람들 그리고 꿈을 키우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 날 출판기념회 소감을 피력했다.

남 회장의 이날 화두는 결국 '꿈과 노력과 역전'이었다. 그리고 메시지는 '힘을 내서 성공하라'는 것이었다. 지난 2000년도에 '나는 오늘도 희망의 자장면을 만든다'라는 책을 통해 자장면으로 수십억원을 번 인생성공 스토리를 풀어서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남 회장이 이번에는 지난번 책에 대한 종결판으로 자신의 인생역전 완성본을 만들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많은 저명인사들의 축사속에서 빛나는 남회장에 대한 평가였다.

"신이 내리신 사람입니다. 저는 남상해 회장을 안다는 것 만으로도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른 이수성 전 국무총리의 이 평가 한마디는 비단 그가 국무총리였다는 사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총장의 학자였다는 의미에서 매우 놀라운 찬사임에 틀림없다.

보기 드문 출판기념회장의 감동 물결
땀으로 꿈을 이룬 인생 역전 성공 이야기로…
사회 봉사적 삶의 자세도 찬사 이어져…

"남상해 회장은 땀으로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강재섭 국회의원, 그는 남 회장의 인생 대역전 성공스토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했다. 한나라당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한때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앞으로도 큰일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강 의원의 이런 찬사는 남회장의 오늘날 성공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특제기획

대성황 보인 남상해 회장 출판기념회

'神이 내리신 사람'

이수성 전 국무총리, 대찬사

보기 드문 출판기념회장의 감동 물결
땀으로 꿈을 이룬 인생 역전 성공 이야기로…
사회 봉사적 삶의 자세도 찬사 이어져…

(2006년 2월 13일자 5면)

"남상해 회장의 인생 성공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산물입니다." 역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상득 국회의원, 그도 역시 남 회장의 인생 대역전 성공을 이렇게 단언하며 찬사를 보냈다.

"남상해 회장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한때 재야 민주운동가로 활약하면서 국회의원도 지낸 바 있는 장기표 전 국회의원, 그는 남 회장의 수많은 직함이 모두 사회봉사자의 일이라며 이러한 분은 처음 봤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남상해 회장은 불운을 행운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전의 명수입니다." 박진 국회의원은 요즈음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로 크게 거론되는 정치 유망주다. 지난번 남 회장의 교통사고 시 신속한 수술을 진행시켜 성공적 치료를 도운 인연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소중한 사이이지만 박 의원은 이날 남 회장의 인생 역전과 함께 많은 사회봉사 정신을 크게 찬양했다.

이외에도 박계동 국회의원과 정형근 국회의원 등이 남상해 회장의 인생역전 성공담을 축하하며 남 회장의 봉사적 삶의 모습에 존경심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부암동 하림각 신관 1,2층에서 진행된 남상해 회장의 출판기념회장은 이처럼 수많은 축하객 인파와 남회장의 인생대역전 성공담 그리고 놀라운 찬사와 평가로 감동의 물결을 이루며 대성황 속에 막을 내렸다.

❀ ❀ ❀

구암 남상해 회장 약력 소개

"종로의 정신적 보배요 등불"

-아리수 포럼 주종탁 사무처장-

구암 남상해 회장님은 의령남씨 삼성공과 부인 김원수 님의 11남매 중 넷째 아들로 1938년 경남 의령군 정곡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친께서 일본에서 교편을 잡은 관계로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초등교육을 2학년까지 받게 됩니다.

구암 남상해 회장님께서는 총회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를 졸업하셨고, 중앙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총동창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총동창회 수석 부회장, 해외에서는 카자흐공화국 국립대학 명예철학박사와 미국 루이지이나 종합대학 경영학 박사를 하셨고, 한국대학 태권도연맹 제8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사단법인 한국·뉴질랜드 문화교류협회 명예회장, 도덕정치 국민연합 총재, 전국직능단체총연합 총회장, (전)사단법인 한국음식업 중앙회 회장, (전)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이어 전국 새마을협의회 회장과 서울시 새마을회 회장, 현재 (주)하림각 대표이사 회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당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공헌을 해 오셨습니다.

중앙위원회 서울시 연합회 상임고문, 종로지구당 위원장 대행과 이회창 대통령 후보 직능담당 특별 보좌역을 지내셨고, 제15대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종로구 대책본부장, 중앙상무위원회 문화 체육분과 위원장, 종

구암 남상해 회장 약력 소개

"종로의 정신적 보배요 등불"

- 아리수 포럼 주종탁 사무처장 -

(2006년 2월 13일자 5면)

로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등 많은 당직을 맡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헌으로 1996년 새마을 훈장 협동장, 올림픽 기장증 수상, 국제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무궁화 사자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단국대 총장표창과 중앙대학교총장 감사패 및 공로패 수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감사패 수상 등 29개 단체로부터 감사패와 23개 단체에서 표창장 수상, 12개 단체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셨습니다.

이같은 구암 남상해 회장의 활약에 대해서 각종 매스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00년 2월 7일 MBC TV 뉴스데스크에서 하림각 남상해 회장의 꿈 이룬 성공사례, KBS TV 아침마당 목요초대석에서 '자장면으로 30억을 번 남자'로 초청받았고, 2001년 9월 9일 MBC TV 성공시대에서는 '희망의 자장면' 남상해 회장으로 널리 소개 된 바 있습니다.

이 프로는 성공시대 종영 기념 설문조사에서 다시보고 싶은 감동적 인물 1위에 선정된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SBS라디오 봉두완의 SBS전망대 전화 인터뷰,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중앙일보, 한국경제 신문과 조선일보 종합여성지 Feel과 7개 매체에 인터뷰 및 성공스토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구암 남상해 회장의 저서로는 1995년 '변화와 개혁이 나라를 살린다'를 시작으로 '북악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희망의 자장면을 만든다', '생활 한문'과 이번에 여러분께서 보시는 〈하림각〉회장 남상해의 성공비결과 인생이야기를 담은 '역전의 명수, 남상해를 아십니까?' 등 모두 5권의 저서를 내셨습니다.

(주)삼성 입직원 대상으로 강연한 것을 비롯 국세청 임직원 대상 강연, 한남대학교 강연과 그 외에 각 군부대, 교도소, 학교 등의 강연 등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곳곳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산업화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대부분이 궁핍한 시대의 아련한 기억을 몇 가지씩 갖고 있습니다만, 하얀 밥 한 그릇을 먹는 게 소원이었던 여동생의 죽음을 보았고, 자식이 굶어 죽는 날마저도 엿 광주리를 이고 장사하러 나가야만 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더 이상 처절한 가난이 싫어 무작정 상경했던 열살의 꿈 많던 소년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집 '하림각'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 20년째 경영자로 우뚝 섰습니다.

회장님의 인생역정은 요즘 미국 피츠버그 시내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한국에까지 그 열풍을 몰아온 미식축구 영웅 하인즈 워드 모자의 성공담처럼 우여 곡절로 가득합니다.

구암 남상해 회장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하늘이 준 선물로 기꺼이 받아 들여 반드시 최고로 바꾸고 야마는 역전승의 기록에 있습니다.

수많은 대형 조직의 책임을 맡아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뛰어난 경영수완과 행정능력에 따라 계속적으로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14년째 계속하고 있는 종로구 노인에 대한 경로잔치는 일과성 전시성의 봉사가 만연하고 있는 세태에 진정한 봉사의 의미와 아름다운 경로효친의 미풍을 종로사회에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강인함과 꿈을 상실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구암 남상해 회장님의 불굴의 개척정신과 자립정신은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사회적 위기감이 넘치는 이때에 더욱 큰 의미와 영향력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구암 남상해 회장님은 진정으로 사랑의 옷과, 겸손의 허리띠와 봉사의 신발을 신고, 우리 이웃과 종로 사회에 참다운 용기와 봉사의 정신을 감염시킨 종로의 정신적 보배요 등불이기에 남회장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약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 ❁ ❁

"나는 오늘도 희망의 자장면을 만든다"

생각을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 열빈, 다리원 그리고 하림각

{하림각(賀琳覺)-세계에서 제일 큰 중국집}

치안본부에서도 수도 경비 사령부에서도 하림각이란 이름에 신경을 써왔다. 왜 집가(家)자를 쓰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하기야 하림각 위치가 청와대와 가깝다보니 관계기관에서 신경을 곤두세울만도 하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십분 이해한다고는 해도 상호 하나에 그처럼 국

가의 주요 기관들 모두가 정도 이상으로 예민해지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 전,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도 일간 심의부터 거쳤고 다 짓고 나서는 준공검사를 하기도 전에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 나와서 한바퀴 둘러보기까지 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다 서늘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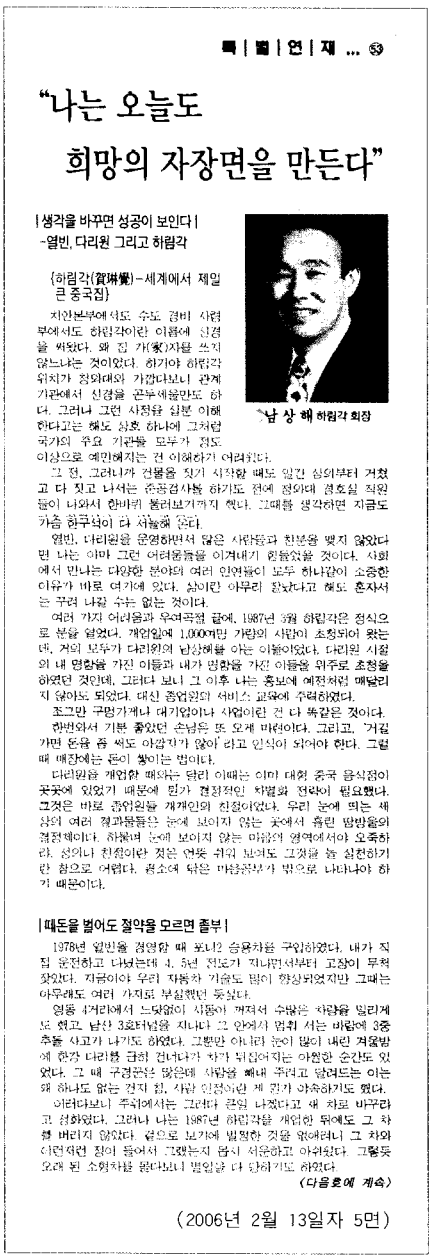
열빈, 다리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인연들이 모두 하나같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삶이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혼자서는 꾸려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1987년 3월 하림각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개업일에 1,000여명 가량의 사람이 초청되어 왔는데, 거의 모두가 다리원의 남상해를 아는 이들이었다. 다리원 시절의 내 명함을 가진 이들과 내가 명함을 가진 이들을 위주로 초청을 하였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 그 이후 나는 홍보에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종업원의 서비스 교육에 주력하였다.

조그만 구멍가게나 대기업이나 사업이란 건 다 똑같은 것이다.

한번와서 기분 좋았던 손님은 또 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거길 가면 돈을 좀 써도 아깝지가 않아'라고 인식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매장에는 돈이 쌓이는 법이다.

다리원을 개업할 때와는 달리 이때는 이미 대형 중국 음식점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결정적인 차별화 전략이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종업원들 개개인의 친절이었다. 우리 눈에 띄는 세상의 여러 결과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의 결정체이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서야 오죽하랴. 성의나 친절이란 것은 언뜻 쉬워 보여도 그것을 늘 실천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평소에 닦은 마음공부가 밖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특 | 별 | 연 | 재 ... ⑤

"나는 오늘도 희망의 자장면을 만든다"

| 생각을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
-열빈, 다리원 그리고 하림각

남 상 해 하림각 회장

{하림각(賀琳閣)-세계에서 제일 큰 중국집}

지안본부에서도 수도 경비 사령부에서도 하림각이란 이름에 신경을 써왔다. 왜 집 가(家)자를 쓰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하기야 하림각 위치가 청와대와 가깝다보니 관계기관에서 신경을 곤두세울만도 하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십분 이해한다고는 해도 삼호 하나에 그처럼 국가의 주요 기관들 모두가 정도 이상으로 예민해지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 전,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도 일간 심의부터 거쳤고 다 짓고 나서는 준공검사를 하기도 전에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 나와서 한바퀴 둘러보기까지 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다 서늘해 온다.

열빈, 다리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인연들이 모두 하나같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삶이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혼자서는 꾸려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1987년 3월 하림각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개업일에 1,000여명 가량의 사람이 초청되어 왔는데, 거의 모두가 다리원의 남상해를 아는 이들이었다. 다리원 시절의 내 명함을 가진 이들과 내가 명함을 가진 이들을 위주로 초청을 하였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 그 이후 나는 홍보에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종업원의 서비스 교육에 주력하였다.

조그만 구멍가게나 대기업이나 사업이란 건 다 똑같은 것이다.

한번와서 기분 좋았던 손님은 또 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거길 가면 돈을 좀 써도 아깝지가 않아'라고 인식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매장에는 돈이 쌓이는 법이다.

다리원을 개업할 때와는 달리 이때는 이미 대형 중국 음식점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결정적인 차별화 전략이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종업원들 개개인의 친절이었다. 우리 눈에 띄는 세상의 여러 결과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의 결정체이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서야 오죽하랴. 성의나 친절이란 것은 언뜻 쉬워 보여도 그것을 늘 실천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평소에 닦은 마음공부가 밖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 때돈을 벌어도 절약을 모르면 졸부 |

1978년 열빈을 경영할 때 포니2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내가 직접 운전하고 다녔는데 4, 5년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고장이 무척 잦았다. 지금이야 우리 자동차 기술도 많이 향상되었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부실했던 듯싶다.

영동 4거리에서 느닷없이 시동이 꺼져서 수많은 차량을 밀리게도 했고, 남산 3호터널을 지나다 그 안에서 멈춰 서는 바람에 3중 추돌 사고가 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눈이 많이 내린 겨울밤에 한강 다리를 급히 건너다가 차가 뒤집어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그 때 구경꾼은 많은데 사람을 빼내 주려고 달려드는 이는 왜 하나도 없는건지 참, 사람 인정이란 게 뭔가 야속하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주위에서는 그러다 큰일 나겠다고 새 차로 바꾸라고 성화였다. 그러나 나는 1987년 하림각을 개업한 뒤에도 그 차를 버리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것을 없애려니 그 차와 이런저런 정이 들어서 그랬는지 몹시 서운하고 아쉬웠다. 그렇듯 오래 된 소형차를 몰다보니 별일을 다 당하기도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2006년 2월 13일자 5면)

안 건 번 호 : 2006자심20

언 론 사 : 격주간 만연신문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97-3 대광 1차 아파트 101-105
대표(발행인) 임 일 주

주 문 : 격주간 만연신문사는 격주간 만연신문 2006년 2월 14일자 2면 『할머니의 폭설상처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3월 8일자 1면 『전형준 화·발·연 회장, 자서전 'CEO전형준의 도전과 희망' 출판기념회 성황』, 5면 『전형준 화발연회장, 조선대학교 객원연구원 위촉』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발행되는 격주간 만연신문 2면에 별지 2목록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함.

이 유 : 격주간 만연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화순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동정을 여러 차례 지극히 우호적으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동일 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문」 게재를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유효봉)는 격주간 만연신문 2006년 2월 14일자 2면 『할머니의 폭설상처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3월 8일자 1면 『전형준 화·발·연 회장, 자서전 'CEO전형준의 도전과 희망' 출판기념회 성황』, 5면 『전형준 화발연회장, 조선대학교 객원연구원 위촉』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격주간 만연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화순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각종 동향을 여러 차례 지극히 우호적으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보도내용〉

"할머니의 폭설상처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화순발전연구회, 청풍면 이수호씨 양계사 철거작업 지원

사)화순발전연구회는 폭설 피해를 입은 청풍면 이수호 할머니집의 양계사 철거를 도왔다.

청풍면 차리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면서 닭을 키우는 이수호(60) 할머니는 지난 폭설로 양계사 2동이 전부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2동 중 1동은 화순군의 피해복구 지원으로 철거했지만 인부를 불러 치우려해도 빠듯한 시골 살림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 다른 한 동은 무너진 채 이제껏 방치돼왔다.

그런 이수호 할머니 집에 지난 2일 전형준 (사)화순발전연구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이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양계사를 철거해 주겠다며 할머니집을 찾아왔다.

화순발전연구회원들은 약 200여평 규모의 양계사 1동을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 구부러진 철골

등은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철거하면서 지붕에 덮여진 보온덮개와 차광막 등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된 이수호 할머니는 "무너진 양계사를 보면서도 일손과 비용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귀하신 분들이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회장은 "몇년전에 남편이 죽지만 않았어도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런 경우 "나아닌 누구라도 도움의 손길이 주어졌을 것이다"며 "늦게나마 복구지원으로 내부모에게 효도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폭설상처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화순발전연구회, 청풍면 이수호씨 양계사 철거작업 지원

화·발·연 전형준 회장

사)화순발전연구회는 폭설 피해를 입은 청풍면 이수호 할머니집의 양계사 철거를 도왔다.

청풍면 차리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면서 닭을 키우는 이수호(60) 할머니는 지난 폭설로 양계사 2동이 전부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2동 중 1동은 화순군의 피해복구 지원으로 철거했지만 인력을 불러 치우려 해도 마땅한 [illegible]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 다른 한 동은 무너진 채 이제껏 방치돼 왔다.

그런 이수호 할머니 집에 지난 2일 전형준 (사)화순발전연구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이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양계사를 철거해 주겠다며 할머니집을 찾아 왔다.

화순발전연구회원들은 약 200여평 규모의 양계사 1동을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 무너진 철골 등은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철거하면서 지붕에 덮여진 보온덮개와 차광막 등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된 이수호 할머니는 "무너진 양계사를 보면서도 일손과 비용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귀하신 분들이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회장은 "몇년전에 남편이 죽지만 않았어도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런 경우 "나아닌 누구라도 도움의 손길이 주어졌을것이다"며 늦게나마 복구지원으로 내부모에게 효도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성술 기자

(2006년 2월 14일자 2면)

＊ ＊ ＊

전형준 화·발·연 회장

자서전 'CEO 전형준의 도전과 희망' 출판 기념회 성황

"어려움은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해결된다"

화순발전연구회 전형준 회장의 자서전 'CEO 전형준의 도전과 희망'과 '희망을 안고 뛰는 나의 삶' 출판기념회가 지난달 24일 군민회관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 민용태교수, 군의원, 도의원 등, 각 기관사회 단체장과 주민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전형준 회장에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선물, 삶의 지표가 되게 했던 전 회장의 초등학교 6학년 당시의 담임교사와 청풍면 차리 출신 민용태 고려대교수가 기념회장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또 서울 등 각지에서 보내온 100여개의 화환이 군민회관 입구와 주차장을 가득 메웠으며 많은 인파들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150인치 대형 큐브와 40~50인치의 PDP 3개가 소회의실 등에 배치됐다.

광주 MBC 홍진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돼 행사 전과정을 수화로 통역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전형준 회장의 고향 사랑 마음 등을 담은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이날 기념회장에서는 전형준 회장이 어린시절의 가난을 극복하고 다산건설이라는 중견기업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배움에 대한 열망을 채우기 위해 고등검정고시를 거쳐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담은 영상메시지가 상영됐다.

영상메시지에는 전 회장이 화순고등학교에서의 특강하던 모습과 화순발전연구회장으로 취임하던 모습, 화순에서의 봉사활동 모습 등을 담았다.

이날 'CEO 전형준의 도전과 희망'의 서평을 쓴 김현기 박사는 "전형준 회장은 부지런함과 성실함, 남을 위해 조건없이 베푸는 마음과 고향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 평하고 "전회장의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을 위해 조건없이 베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청풍면 차리 출신 민용태 교수도 축사를 통해 "전형준 회장은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견뎌낸 전형적인 화순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다"며 "이는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질"이라고 평했다.

특히 고건 전국무총리와 강운태 전장관, 최인기 도당 위원장도 축사를 보내와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저자 인사말에 나선 전형준 회장은 "두 권의 책은 50여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진솔한 삶의 기록"이라며 "글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전 회장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목민심서라는 책을 안겨준 스승과의 만남이 가장 큰 행운이었고 목민심서는 자신을 누구 앞에서든 당당할 수 있게 했으며 지금의 성공을 이루는 바탕이 됐다"고 털어놨다.

또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50세를 맞아 십기일전해 남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자신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과정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펴 냈다"고 설명하고 이날 전형준 회장은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이며 모두가 힘을 모을 때 희망이 성공으로 변하게 되고 어려움은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해결할 수 있다"는 말로 기념회를 마쳤다.

전형준 화.발.연 회장

자서전 'CEO 전형준의 도전과 희망, 출판기념회 성황

"어려움은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해결된다"

"남을 위해 조건없이 베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2006년 3월 8일자 1면)

전형준 화발연회장 조선대학교 객원연구원 위촉

"낙후된 화순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전형준 (사)화발연 회장이 조선대 지역사회발전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조선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 전의천 원장을 비롯해 연구원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하고 객원 연구원 위촉장은 조선대 김주훈 총장을 대신해 지역사회발전연구회 전의천 원장이 수여했다.

지역발전연구원의 전임연구원인 박용현 교수는 "전형준 회장의 향토애와 지역사회 봉사, 공헌 등에 감동했다"며 전 회장을 "고향지킴이로서 선산을 지키기 위해 화순에 온 사람"이라고 칭했다.

이날 전형준 회장은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역정보화를 위한 학계, 재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발전연구원의 객원연구원이 됨으로서 낙후된 화순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8년에 설치된 조선대 지역발전연구원은 각종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구, 봉사, 교육, 문화 활동을 연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연구원에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저명학자 및 전문가 중에서 연구원장(운영위원회의 심의)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하며, 재위촉은 할 수 없으며 기간은 2년이다.

전형준 화발연회장 조선대학교 객원연구원 위촉

"낙후된 화순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전형준 (사)화발연 회장이 조선대 지역사회발전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조선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 전의천 원장을 비롯해 연구원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하고 객원 연구원 위촉장은 조선대 김주훈 총장을 대신해 지역사회발전연구회 전의천 원장이 수여했다.

지역발전연구원의 전임연구원인 박용현 교수는 "전형준 회장의 향토애와 지역사회 봉사, 공헌 등에 감동했다"며 전 회장을 "고향지킴이로서 선산을 지키기 위해 화순에 온 사람"이라고 칭했다.

이날 전형준 회장은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역정보화를 위한 학계, 재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발전연구원의 객원연구원이 됨으로서 낙후된 화순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발전연구원에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저명학자 및 전문가 중에서 연구원장(운영위원회의 심의)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하며, 재위촉은 할 수 없으며 기간은 2년이다.

김복영 기자

(2006년 3월 8일자 5면)

안 건 번 호 : 2006자심38

언 론 사 : (주)시민일보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대표이사 정 우 영

주 문 : (주)시민일보사는 시민일보 2006년 3월 29일자 『"차기 서울시장은 맹형규" 51.6%』(1면), 『"민생안정에 모든 것 걸어라"』(3면) 각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시민일보 1면에 별지 2목록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함.

이 유 : 시민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표본오차율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예정자를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하고, 현 정권의 선거전략에 대한 그의 견해를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동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동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2항 각 위반】
이에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동일 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문」 게재를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유효봉)는 시민일보 2006년 3월 29일자 『"차기 서울시장은 맹형규" 51.6%』(1면), 『"민생안정에 모든 것 걸어라"』(3면) 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시민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표본오차율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예정자를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하고, 현 정권의 선거전략에 대한 그의 견해를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동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동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2항 각 위반】

〈보도내용〉

"차기서울시장은 맹형규" 51.6%

홍준표 후보 가능성 32.1%… "외부영입 반대" 76.6%

시사저널, 한나라 대의원들 설문 조사
맹형규 전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서울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내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대의원들은 맹 전 의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맹 전 의원은 51.6%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홍 의원은 32.1%, 박 진 의원은 5.7%였다. 박계동 의원은 2.2%, 권문용 전 구청장은 1.8%로 극히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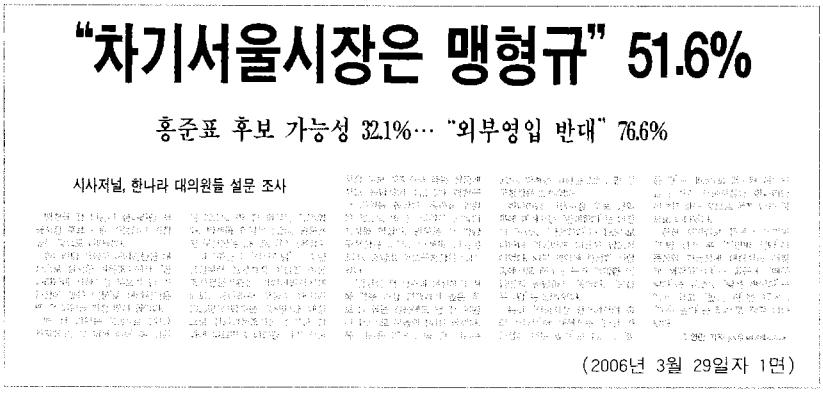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한나라당 서울시 대의원 1323명(응답자는 738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44.2%가 맹형규 전 의원을 꼽았다. 홍준표 의원은 32.1%, 박 진 의원은 9.1%의 지지를 얻었다.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은 3.5%, 박계동 의원은 2.7%,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0.4%였다.

'강금실 전 장관과 본선에서 겨룰 경우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꼽는 질문에도 맹 전 의원이 43.6%로 부동의 1위를 굳혔다. 홍 의원은 37.8%, 박 진 의원은 9.2%, 박계동 의원은 2.2%, 권 전 구청장은 2.0%였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영입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6.6%, '찬성한다'는 19.9%로 나타나 영입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외부영입에 찬성한 사람 중에서도 66%는 누가 적합한 인물인지 응답하지 못했다. '모름 무응답'은 3.5%였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46.1%, '높은 편'은 46.6%로 조사돼 대의원들은 차기 서울시장을 한나라당이 차지하는 것으로 굳게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일보 등에서 제기된 '지방 선거 후 '이명박 신당'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낮다'는 47.2%, '낮은 편이다'는 23.6%였고 '높은 편'은 17.8%, '매우 높다'는 5.4%로 각각 나타났다.



"차기서울시장은 맹형규" 51.6%

홍준표 후보 가능성 32.1%… "외부영입 반대" 76.6%

시사저널, 한나라 대의원들 설문 조사

(2006년 3월 29일자 1면)

❀ ❀ ❀

"민생안정에 모든것 걸어라"

맹형규 전의원, 노무현정권 지방선거 올인 맹비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맹형규 전 의원은 28일 "노무현 정권은 지방선거에 '올인' 말고, 민생안정에 모든 것 걸어야 한다"고 점잖게 충고했다.

맹 후보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www.mhk21.net)에 게재한 글을 통해 "노무현 정권 3년에 대한 총평은 '실패'와 '무능'이다"라면서 "많은 사례를 들 것도 없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 3년차 정권 지지도가 20%대에 불과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민생은 방치한 채 오로지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면 "실로 5.31 지방선거가 왜 노무현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선거인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맹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라는 국정 최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선거 승리만을 위해 주요 부처장관들을 일시에 차출했다"며 "이로 인해 국정은 더욱 혼란해지고,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권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각각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충남 등 전국 주요 지역에 선거용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것.

맹 후보는 또 "노무현 정권의 최근 국정 운영은 여권의 지방선거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여권의 총사령탑인 청와대가 직접 지휘하고 정부는 지원 사격을 하며, 열린우리당은 행동으로 옮기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자치부가 나서 서울시 주요사업을 감사할 것이라

고 한 데 이어 감사원이 감사계획을 발표하는 등 마치 서울시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시도한 바 있다는 게 맹 후보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맹 후보는 "이윽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방권력 심판론'을 제기하고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맹 후보는 특히 열린우리당이 최근 노 대통령의 '양극화' 발언 이후 실업계 고교를 찾아다니는 것에 대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나 대책 마련은 아예 접어둔채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노골적인 선동 정치에만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청와대 연출, 정동영 의장 주연 '노정권 사람들' 조연으로 펼치는 대 국민 선동극을 보며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들은 무능한 '제2, 제3의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정부의 실패에 이어 지방의 미래마저 송두리째 앗아가게 내버려둘 만큼 결코 어리석지 않다"며 "노무현 정권은 '국정 포기·지방선거 올인'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도탄에 빠진 민생 안정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게 맹 후보의 지적이다.

"민생안정에 모든것 걸어라"

맹형규 전의원, 노무현정권 지방선거 올인 맹비난

(2006년 3월 29일자 3면)

안 건 번 호 : 2006자심50

언 론 사 : 양천신문사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19-23 경동빌딩 5층
대표 오 민 호

주 문 : 양천신문사는 양천신문 2006년 5월 8일자 『추재엽 현 구청장 재신임 출마선언』(1면), 『추재엽 구청장 5·31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선언 全文』(2면)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양천신문 2면에 별지 1목록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함.

이 유 : 양천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 양천구청장)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변과 출마선언 전문(全文)을 두 면에 걸쳐 인물사진 2컷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

성) 각 위반】

이에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동일 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문」 게재를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유효봉)는 양천신문 2006년 5월 8일자 『추재엽 현 구청장 재신임 출마선언』(1면), 『추재엽 구청장 5·31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선언 全文』(2면)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양천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 양천구청장)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변과 출마선언 전문(全文)을 두 면에 걸쳐 인물사진 2컷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보도내용〉

추재엽 현구청장 재신임 출마 선언

한나라당 탈당… 자치구 최초 무소속 연대

당원 2천여명과 함께 한나라당을 동반 탈당한 추재엽 현 양천구청장이 오는 5·31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구청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재신임 주민 심판을 받게 됐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지난 4일 다목적회관에서 추사모(추재엽을 사랑하는 모임) 인사 및 영·호남·충청 향우회원, 무소속 출마 지방의원 및 기초의원 등 1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5·31지방선거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선언을 하고 "오는 지방 선거에서 한번 더 맡겨주시면 으뜸 양천을 완성해 내겠다"는 슬로건을 천명했다.

1천여명 운집 출정식
"지방정치 중앙권력과 분리돼야"

추재엽 양천구청 예비후보자는 "50만 양천구민이 가증스럽고도 비열한 권모술수와 정치공작의 시험대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기에 처절한 결단을 내렸다"며 "혼탁한 작금의 상황속에서도 저를 믿고 힘을 보내준 동지의 은혜, 정성을 잊지 않고 새기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금품수수, 공천배제'의 건과 관련하여 "정당의 공천권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오늘의 공천 구조를 볼때 구청장이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되는 비참한 결과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개혁적이고 참신한 정치인으로 자칭해 온 한나라당 원희룡, 오경훈 위원장이 흑색선전과 상대비방으로 우리 고장을 더럽히고 있다"고 강변하고, 지역주민의 존엄한 눈과 귀를 직시하라고 단명했다.

또한 추 후보는 "50만 양천구민을 호도하고 비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두사람을 고발하였다"고 말해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의 법적대응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추 후보는 "이번 5·31 지방선거는 양천구청장이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냐, 양천구민의 일꾼이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살기 좋은 양천, 쾌적한 양천, 따뜻한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장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개인자격으로 방문하여 추 후보를 격려하였으며, 한광섭, 이규석, 오두옥, 신성호, 강웅원, 김희걸, 장행일, 전희수, 김인철, 김흥수, 한규대, 이상섭, 서병완 등 무소속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치구 최초로 일명 '무소속 연대'를 사실상 기정 사실화 했다.

특히, 한광섭, 오두옥, 김희걸 후보는 이들을 대표하여 무소속 출마의 변을 밝히고 원희룡·오경훈 양대위원장의 정치행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작금의 지방자치

가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조속히 탈피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한광섭 후보는 특히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양천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주민들의 알 권리와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할 지방선거가 탐욕의 밀실공천으로 인해 한낮 정치인의 밥그릇으로 추락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한 후보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제시하며 "당선자의 90% 이상이 중앙정치가 배제된 무소속 출신"임을 강조하여 지방정치는 중앙권력과 분리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건네 받은 김희걸 의원은 "금번 공천결과는 돈공천, 자기 수족 공천, 낙하산 공천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이 정치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품으로 안겨줘야 하는 것이 절대 절명의 과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또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예속물이나 정치권력을 향한 사람들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오두옥 후보 또한 "이번 공천이 양대 위원장의 사리사욕에 의한 '사천'임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닌 사람도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되물었다. 오 후보는 지난 '한나라당 필승결의대회 유인물'의 문구인 '당원들의 손으로 뽑은 우리 후보들을 모두 당선시켜 한나라당의 열망이 담긴 5·31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야 한다. 우리 양천구 한나라당의 능력과 깨끗함을 보여주자'를 가리키며 "언제 우리 당원이 참여해서 후보를 뽑았는가, 지금까지는 한나라당의 능력과 깨끗함이 없었다는 얘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재엽 현구청장 재신임 출마 선언

한나라당 탈당… 자치구 최초 무소속 연대

1천여명 웅집 출정식

"지방정치 중앙권력과 분리돼야"

2면 ..... 추재엽 구청장예비후보 출마선언 全文

(2006년 5월 8일자 1면)

추재엽 구청장 5·31지방선거 무소속 출마선언 全文

양천구민 여러분 한번 더 맡겨주십시오

으뜸 양천 완성 초석 다짐 천명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결연하고도 비장한 각오아래 외롭고도 힘든 여정의 일단을 피력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50만 양천구민이 가증스럽고도 비열한 권모술수와 정치공작의 시험대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기에 처절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의 심정을 밝히기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저에게 용기와 힘을 보태준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온갖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한 작금의 혼탁한 상황속에서도 추재엽을 믿고 힘을 보내준 동지, 바로 여러분이 있기에 비열하고 가증스러운

공갈과 협박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정성, 여러분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그 모든 것은 결코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라고 재삼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추재엽은 5.31 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으뜸 양천구민의 냉엄하고도 준엄한 심판을 받겠습니다. 우리 양천은 지난 4년 놀랍게도 발전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강남의 교육환경을 넘어섰으며 교육부는 2005년에 양천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자 노력한 1200여명의 공무원과 50만 양천구민의 소리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목동·신월동 지역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우리 양천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경전철 유치, 목동·신월동 뉴타운 개발이야말로 그동안 잠들었던 양천을 깨우는 우리의 염원입니다. 소외받고 버림받았던 이웃을 쓰다듬고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으뜸양천은 이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지방정부는 더 이상 정쟁과 정당의 싸움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정당의 공천권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오늘의 공천구조를 볼 때 구청장이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되는 비참한 결과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비롯된 추악하고도 비열한 행태에 우리의 이웃은 경악하고도 절망하였습니다. 명색이 개혁적이고 참신한 정치인으로 자칭해 온 한나라당 원희룡, 오경훈 위원장은 흑색선전과 상대비방으로 우리의 고장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9일 원희룡, 오경훈 의원의 더럽고도 가증스러운 공작적 작태에 대해 그대들이 제기한 의혹의 실체를 밝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법조인으로 오늘의 그 자리에 선 원희룡 의원이야 말로 누구보다도 법의 심판에 대해 잘 알 것입니다. 인간이 지녀야 할 신의와 우의보다도 법논리 앞세우기를 좋아하는 원의원, 왜 그대는 침묵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천 구민 여러분!

저는 평생동안 누구를 고발하거나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저 개인의 명예를 넘어 50만 양천구민을 호도하고 비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두 사람을 고발하였습니다.

저 추재엽은 한나라당을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한나라당을 떠나야 할 사람은 저 추재엽이 아니라 원희룡의원 그대입니다. 왜 당신은 본인의 정치철학과 체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최고위원이라는 직위까지 누리고 있습니까.

그대의 정치적 이념과 소신은 인간적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보수정당에 맞지 않으니 이제 그만 한나라당을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그대를 발탁한 이회창 총재에게 그대가 옹립한 최병렬 대표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그대는 배신의 칼날을 드리대고 그분들을 끌어 내렸습니다. 이제는 그토록 극찬하였던 박근혜 대표에게도 배신의 칼끝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골과 배신이 그대의 정치이념이라면 진정 그대가 설 자리는 보수정당이 아닌 좌파정당이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대의 오만하고도 방자한 정치 작태는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약은 쥐가 밤눈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법조문을 많이 알고 그것을 어떻게 피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신의와 양심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은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만 하는 비렁뱅이 벼슬입니다. 그대들은 주민의 가슴과 마음을 공유하기에 앞서 표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정녕 그대들이 빌고 얻고자 했던 것이 주민의 표뿐이었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자기들의 당선을 위해 온갖 지원을 강요받았던 저로서는 동지적 입장에서 그들의 지원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하면서 갖은 고초를 겪었지만 그것도 그들의 목적에는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청했던 수많은 불법비리들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일 잘하고 깨끗하여 구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저 추재엽이 그렇게도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민심이 당신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그렇게도 분통터지고 괴로웠습니까.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해야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대들의 가증스럽고 비열한 행위에는 저 추재엽도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원희룡, 오경훈 위원장 두 젊은 정치인의 「위선의 굿판」에 춤을 추고 있는 한나라당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님들! 지금은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웃음뒤에 감추어진 두 개의 칼날이 항상 당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살기좋은 양천, 쾌적한 양천, 서로를 아끼고 보살펴 주는 따뜻한 양천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양천은 대한민국 제1의 지자체를 위한 태동의 첫발을 올렸습니다. 한번 더 맡겨주십시오. 저 추재엽은 할 수 있습니다.

4년전의 양천과 지금의 양천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더 멉니다. 이번 5.31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냐, 양천구민의 일꾼이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결코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고마운 이웃이 있기에 이루어 놓은 일의 성과는 결코 훼절될 수 없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5월31일 심판의 그날!

진실한 노력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변의 진리가 입증되는 그날을 위해 저 추재엽은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재엽 구청장 5 · 31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 선언 全文

양천구민 여러분 한번 더 맡겨주십시오

으뜸 양천 완성 초석 다짐 천명

추재엽 구청장

(2006년 5월 8일자 2면)

제2장 시정요구

시정요구인의 권위를 이용하여 측근이 부인 명의로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익을 취하는 등 불공정 경선 및 후보 줄세우기가 현실화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1
시정요구인 : 이 원 복 (한나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자)
피시정요구인 : 인천일보
접 수 일 : 2006년 3월 8일
처 리 결 과 : 반론보도문 게재결정

보도내용

이원복 위원장 시장출마 선언

이원복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마침내 인천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공식 선언한다.

이원복 위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당 위원장직 사퇴 및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단독 후보 추대나 외부 영입 보다는 축제 형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해야 실제 선거에서 더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젊고 참신한 인물로 시정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출마를 결심했다는 출사표를 밝힐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를 통해 결의했던 '시도당 위원장 지방선거 출마 금지' 방침이 당헌 당규상 강제 규정이 아니고, 지난해 12월 새롭게 개정된 당헌으로 인해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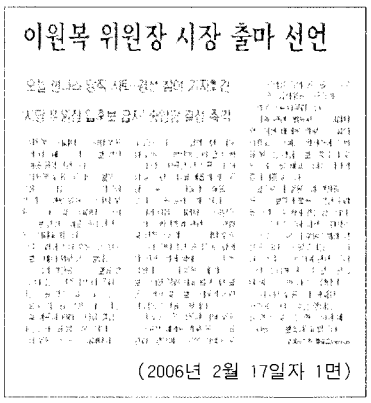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조직관리 및 선거 운동의 총책인 시당 위원장직이 상당기간 공석으로 남게 돼 선거준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됐다.

특히 이 위원장의 시장 후보 출마를 둘러 싸고 벌어졌던 불공정 경선 및 후보 줄세우기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시당 위원장으로서 대의원 명부 등 조직을 관리해왔으며, 최근엔 시의원·구청장·구의원 등의 공천을 좌지우지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까지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벌써부터 한나라당 안팎에선 대의원 명부 유출설이 나돌고 있으며, 지방선거에 출마를 원하는 각급 후보자들이 이 위원장에 줄을 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

앞으로 이 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타 후보들이 불공정 경선 우려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재선 도전에 나서는 안상수 인천시장 측은 이 위원장과의 경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시장 측은 이와 관련 "굳이 출마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하지만 아직 중앙당이 현직 시도당 위원장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원복 위원장 시장 출마 선언

(2006년 2월 17일자 1면)

❀ ❀ ❀

불공정 경선 우려 "역시나"

이원복 前 한나라 시당위원장 측근 여론조사업체 운영

이원복 전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의 측근이 부인 명의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측근은 이 전위원장이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중점적으로 영업에 나서 그동안 제기됐던 불공정 경선 및 후보 줄세우기 등의 의혹을 지울 수 없게 됐다.

28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및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원복 전 시당위원장의 비서 출신 윤 모씨는 부인 이모씨의 명의로 지난해부터 여론조사 업체인 (주)KRI를 설립, 운영해 왔다.

이 업체는 5·31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연수구청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남 모씨와 관련한 ARS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호황을 누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KRI는 그러나 여론조사를 빙자해 후보를 홍보한 사실이 적발돼, 사전 선거 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수구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되는 등 선관위의 주목을 받아왔다. 결국 같은 혐의로 현재까지 선관위로부터 재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윤 모씨의 신분.

회사 설립 당시 이원복 전 시당위원장의 비서를 맡고 있었으며, 이 전위원장이 현직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권한을 행사할 당시에도 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현재 후보 경선 캠프에서 실무 담당자로 활동하며 당원들을 접촉하며 경선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윤 씨는 "집 사람이 개인적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론조사 업체 경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며, 불법적인 선거운동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강제로 후보 출마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적은 없으며 오히려 부탁을 해야할 입장"이라며 "여론조사를 급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비만 받고 업무를 대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5·31 지방선거와 같은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현직 시당위원장의 최측근이 민감한 시기에 선거용 여론조사 업체를 차려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지역정가에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여론조사 수주 과정에서 현직 시당 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알게 모르게 작용했을 개연성과 함께 이 업체가 ARS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외부 유출이 금지된 CMS(당비 자동이체) 당원명부를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이 업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제보와 새로운 혐의 사실이 발견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불공정 경선 우려 "역시나"

이원복 前 한나라 시당위원장 측근 여론조사업체 운영

(2006년 3월 1일자 1면)

이원복 前 위원장 측근 파문

한나라 시당 '속앓이'

이원복 전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 측근의 선거용 ARS여론조사업체를 운영(본보 1일자 1면 보도)과 관련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신속히 진상 규명에 착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1일 "언론보도를 보고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면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시당 당직자들은 대체로 시당위원장의 권위를 측근이 악용, 사익을 취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후보 줄세우기 등 불공정 경선의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점에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상섭 중·동·옹진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시

당위원장의 측근이 선거용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불공정 경선 문제도 현실화됐다"면서 "다른 운영위원장들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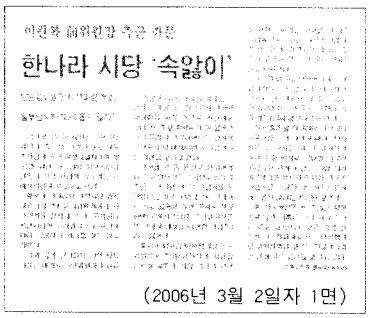
홍일표 남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좋은 일이 아니다. 시당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일종의 시장 경선과 관련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또(ARS 여론조사업체 경영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측근이 보게하는 안 좋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남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도 "큰 일이다. 당사자인 이원복 전 시당위원장 쪽은 물론 한나라당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한편 홍종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윤 모씨는 이 전 위원장의 개인 수행 비서로 시당과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일반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한 것 아니겠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 사무처장은 또 "CMS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원 명부에는 우선 전화번호가 없으며, 당사자들에게 확인해보니 일반 전화번호부를 활용했다고 하더라"고 해명했다.

결국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이 보이는 현실의식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원복 前위원장 측근 파문
한나라 시당 '속앓이'
(2006년 3월 2일자 1면)

시정요구이유

1. 2006년 2월 17일자 1면 『이원복 위원장 시장 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대의원명부를 관리하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관여하여 불공정 경선 및 후보 줄세우기 논란에 싸여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대의원명부는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공천심사위원회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지침대로 구성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

2. 2006년 3월 1일자 1면 『불공정 경선 우려 "역시나"』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의 측근이 부인 명의로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면서 CMS 당원명부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홍보하여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고 민감한 시기에 여론조사업체를 차려 사익을 취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시정요구인 측근의 부인이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측근이 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3. 2006년 3월 2일자 1면 『이원복 前위원장 측근 파문, 한나라 시당 '속앓이'』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의 권위를 측근이 악용하여 여론조사업체 운영을 통해 사익을 취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켜 불공정 경선의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보도하였으나, 측근 부인의 여론조사업체 운영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었으며 불공정 경선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근거가 없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시정요구인이 대의원명부를 관리하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제 손으로 마무리하여 불공정 경선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으나, 대의원명부는 아직 작성되지도 않아 시정요구인이 이를 관리·유출했다는 의혹은 불가능하고, 공천심사위원회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시정요구인의 측근이 부인명의로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며 특정후보를 홍보한 사실 때문에 선관위 재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과 CMS당원명부를 여론조사에 활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시정요구인으로 인해 불공정 경선의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어 이원복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사과드립니다.

반론보도문 게재결정문

주　　문 :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인천일보 1면에 별지1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신 청 취 지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인천일보에 별지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인천일보 2006년 2월 17일자 1면, 같은 해 3월 1일

자 1면, 같은 해 3월 2일자 1면에 시정요구인과 관련하여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까지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 '대의원 명부 등 조직을 관리', '각급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줄서기', '측근의 여론조사 업체 운영으로 불공정 경선 및 후보 줄세우기 현실화', '시당위원장의 권위를 측근이 악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다' 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위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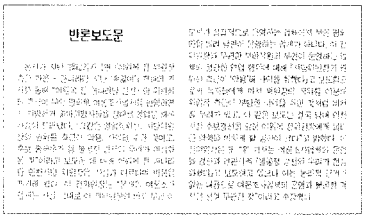
살펴보건대, 시정요구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는 문제가 된 보도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그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하겠으나,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서의 기재에 진술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다만, 문제의 보도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기자의 주관적 추측에 의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에 비해 시정요구인측의 반론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시정요구인이 2006년 3월 8일자 시정요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접수시킨 이후 같은 해 3월 16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일에 참석하여 시정요구 취지의 변경(정정보도문 게재요구→반론보도문 게재 요구)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적정한 해명성 반론게재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요구 후 보도문

인천일보 : 『반론보도문』 (2006년 3월 25일자 1면)
내 용 : 본지가 지난 3월2일자 1면 『이원복 전 위원장 측근 파문 - 한나라당 시당 '속앓이'』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원복 전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의 측근이 부인 명의로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같은 영업행위는) 시당위원장의 권위를 측근이 악용, 사익을 취한 것이고, 후보 줄세우기 등 불공정 경선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이원복 전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해 왔다. 이 전위원장은 "문제의 여론조사 업체는 사실 그대로 이 전위원장의 비서 부인 이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이지 부인 명의만을 빌려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다. 이 전 위원장과 무관한 부하직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정당한 영업 행위에 대해 『시당위원장의 권위를 측근이 '악용'해 사익을 취했다』고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마치 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위원장 측근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고, 이 같은 보도는 결국 당내 인천시장 후보경선을 앞둔 이원복 전 위원장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이 전위원장은 또 "위 기사는 여론조사업체의 운영을 경선과 연관시켜 『불공정 경선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여론조사업체의 운영과 불공정 경선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론보도문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는 불공정한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2
시정요구인 : 유 성 훈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예비후보자)

피시정요구인 : 금천뉴스
접 수 일 : 2006년 3월 9일
처 리 결 과 : 경 고

보도내용

■금천구 한 인 수 구청장 인터뷰

오는 20일 금천구 최대 규모의 야외공연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대규모의 시민광장이 시흥본동에 준공된다. 이는 "한인수(사진) 구청장이 내놓은 '구정발전(區政發展) 4개년 중장기 계획' 중 '도심 속의 공원과 여가공원 확충'이라는 대명분을 실행에 옮긴것이다"고 주민들은 평한다. '금빛공원'의 준공을 계기로 금천뉴스는 금천구(衿川區)출신 첫 구청장인 그의 구(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구정발전에 대한 성과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금빛공원'은 '금빛실천' 이지요

-그동안 금천구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고들 평가합니다. 이번 금빛공원의 개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난 해 6월 지역인사 및 2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본동 광장 조성공사 기공식'이란 행사로 첫 삽을 들었다. 최근 광장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금빛공원"으로 명명되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원이 탄생된 것이다.

여타 광장이나 공원과는 달리 도심 한복판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야외 공연장으로 최대 1000여 명이 행사를 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은 공원으로 '금빛'이라는 이름처럼 금천구의 멋진 자산이 새로 탄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빛공원의 구석구석을 그림같이 작품처럼 꾸며 놓았는데,

배고픈 시절은 과거다. 낙후된 금천구란 말도 조만간에 옛말이 될 것이다. 금천구 구민들이 선진국형 문화를 향유하며 구민문화가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것들을 현실화하고 있다. 그 예로 불과 몇 년전만해도 안양천이 범람하여 역류해 이웃의 자동차가 물속에 잠기고 마치 제3세계에서나 봄직한 광경이 매년 금천구에서 발생 했었다. 내 임기동안 올해로 박미고개 배수펌프시설을 완벽히 갖추었으니 어떤 폭우가 와도 걱정이 없다. 4년 동안의 노력과 경험은 금천구를 더욱 무한(無限)하고 가능(可能)한 구(區)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했다. 광장 지상에는 공연을 관람하거나 집회를 가질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소나무 등을 다수 심어 산책로를 조성했다. 선진국형 조경 수준을 '금빛공원'에 갖춘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도 설치해 가족 단위의 휴식, 여가공간도 마련했다. 다른 구(區)에서 유사 공원을 짓는다면 견학할 만한 공원이다. 20일 준공식에 이명박 서울시장도 올 것이다. 손색없는 금빛공원이라고 자부한다.

-공원의 주변상가 상인들이 공원개관을 기대하고 있어 특별해 보이는데,

금빛공원을 중심으로 시흥본동 893번지(시흥사거리서 은행나무 방면 300m)일대가 앞으로 상당히 변하게 될 것이다. 공원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물론 인근 상가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광장은 지상 1800평, 지하 2500평정도 규모로 지역광장으로는 최대 규모다. 또한 광장 지하에는 에어로빅, 요가, 태권도, 탁구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며 지역 경제뿐 아니라 생활환경개선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동 금천문화원 부지에 '폭포공원'을 준비하는 등 일부에서는 독산동에는 문화공원이 없다며 시흥동과 독산동을 차별화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독산동은 과거 서둘러서 개발이 되어 오고 있는 편이다. 시흥동 지역보다 독산동이 공단도 있어 윤택하다.

오는 20일 '금빛공원' 준공식, 금천의 문화역사(文化歷史) 시작

'금빛공원'은 '금빛실천'이지요

(2006년 2월 20일자 1면)

❀ ❀ ❀

미래를 여는 첫단추, 이제시작!

1면에서 이어

가산동의 정보화도서관 건립이나 독산동 체육공원과 금천체육문화센터가 독산동에 위치해 있다. 특별히 내가 시흥동 출신이라고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로 분열을 조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낭설(浪說)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문화시설을 개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차별없는 업무를 한다. 나는 2002년 금천구청장에 금천 출신 구청장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취임한 후에도 나는 초·중·고교 시절 마을 친구들과 물고기를 잡고 멱을 감았던 추억과 낭만의 금천을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금천구를 위해 하나된 금천으로 다양한 연구를 한다.

-그동안 구민의 숙원이던 구청사건립과 서남권 중심도시를 건립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금천구는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지역이며 구 한가운데 군부대가 있어 지역 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금천은 과거 공직자들에겐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 정도로만 인식돼 왔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각종 순위에서 꼴찌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했다. 1995년 3월 구로구에서 분구, 신설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청사를 마련하지 못해 한달에 월세를 8000만원씩 내는 셋방살이의 서러움도 겪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9일 금천구복합구청사 시대를 열었다. 시흥역 앞 신축공사현장(시흥동 113번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종합복합청사 건립에 들어갔다. 시흥역 주변은 금천구 신청사를 비롯하여 주거·업무 복합단지, 의료시설, 경찰서 등 각종 공공·민간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금천 발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시흥역이 광명시와도 접해있기 때문에 이곳에 민자역사와 함께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체계' 구축에 대하여,

93년도 서울시 예산결산위원으로 있을 때 금천구에 서울지하철, 지금의 신안산선 같은 지하철 유치 노력을 하면서 교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서울 지하철이여서 그때는 석수역을 출발하여 시흥사거리 독산을 거쳐 영등포로 가는 지하철 건설에 예산까지 확보했으나 여건상 무산된 적이 있다. 금천구는 교통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하다. 이번 신안산선의 초기예산 32억원의 국회 결정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한다. 강남순환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영등포구 양화동~ 서부간선도로~ 강남구 일원동)도 올해 착공된다.

-디지털 산업단지의 패러다임변화에 대한 노력은,

산업단지는 이제 과거 40년전의 공단개념이 아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국가공단에서 해제해 관리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 금천구의 일관된 주장이다. 취임이후 '국가공단 해제, 관리권 자치단체 이양'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쏟아왔다. 우선 개발이 시급한 지역부터 용도변경과 더불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산업단지공단 산업촉진활성화법안의 잣대가 공장형 IT산업 등에 맞지 않아 금천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과 괴리감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수정되고 기업의 업무지원시설도 현실화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산업공단이 금천구에 폐해를 준 규모는 500억원이 되니 더 이상 산업공단의 오물청소를 해주는 금천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입장을 정부의 한 부처에 분명히 했다. 현실에 맞게 산업공단도 변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확신한다. 가산동 디지털 산업단지 내 패션의 거리가 형성되어 서울뿐 만아니라 전국에서 손님들

민퍼블 - 금천구 한 인수 구청장 '금빛공원'은 '금빛실천'이지요!

미래를 여는 첫단추, 이제시작!

1면에서 이어

(2006년 2월 20일자 3면)

이 찾아오고 있다. 금천구를 알리는데도 한 몫을 한다.

-한내(안양천)에 갈대를 심는 등 지역하천을 정비하고,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 '2005 친환경 경영 대상'을 받은 금천구가 되었는데,

금천의 녹지 비율은 물론 주민 휴식 공간 역시 다른 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안양천이라고 불린 이름도 옛 이름을 찾아 금천 한내로 바꾸었다. 80억원을 들여 기아대교~광명교간 6.03km를 정비하고 생태공원과 체육시설, 자전거 도로 등 휴식공간을 조성해 2004년 6월부터 구민들을 맞이하게 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한내 주변에 공개 에어로빅 강좌가 열려 구민 수백 명이 함께 운동하는 장관도 연출된다. 한내는 이미 구민의 품속에서 숨쉬고 있다. 지속적으로 가치 있게 개발할 곳이다.

-그동안 매년 26억원 내외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은 구 발전과 국가산업화와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뉴타운지구 개발의 경우, 금천구의 또 다른 발전가능성을 갖게 만들었는데,

2005년 5월 19일 시흥3동 시계경관 및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던 약 22만평을 해제했다. 30년간 개발제한지역으로 각종건축규제로 인해 저밀도 개발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시흥2동, 3동, 4동, 5동 일대 192000평을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로 확정이 되었다.

이는 미래를 여는 금천구 도심개발의 단추를 열게 한다. 95년 30만 명이었던 금천 인구가 지금은 27만 명으로 줄었다. 경제와 교육이 다른 구에 뒤떨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떠나 안타깝다.

그래서 금천구 구심(球心)을 만들어 한국형 Land Mark도시로 개발(시흥역~군부대~시흥사거리~기아자동차~대한전선을 잇는 19만평)할 것이다. 광역전철 신안산선과 금천구청사가 있는 시흥역 역세권의 개발로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금천구의 메카로 발전시킬 것이다.

-소외된 금천을 멋지게 관리해서 내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꿈이라고 했는데,

금천구의 최대 장점은 개발과 성장 잠재력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국가공단에서 해제되고, 금천구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꼴찌 금천구가 크게 비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같은 금천발전을 위한 단기·장기 계획이 무리 없이 추진되면 향후 10년 안에 금천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은 만년 꼴찌인 금천구이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강남구를 따라잡을 날이 올 것이다.

한인수 구청장에게서 금천 출신 첫 구청장으로서의 자부심과 구에 관한 애정을 각별히 느낄 수 있었다.

* * *

드디어... 금빛공원 열다!

금천구에서는 친환경적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2002년 10월 공사에 들어간 금빛공원(시흥다목

(2006년 2월 27일자 6~7면)

적 광장)의 준공식을 20일 가졌다.

금천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시흥본동 893번지 일대에 2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1,810평 규모의 문화, 체육활동 공간인 금빛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이웃간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게 된 셈이다.

그 이름도 찬란한 금빛공원, 실제로 공원에 들어서면 이름만큼이나 빛이 나는 듯 꾸며져 있다. 어린이 놀이터와 산책로를 비롯하여 벽천분수 등을 만들어 주민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시설과 함께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를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무대 및 관람석 등 공연시설도 조성했다.

특히, 시흥 다목적 공원을 일반공모를 통해 '금빛공원'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 금빛공원은 웰빙시대에 맞추어 주민들의 건강유지 및 취미생활이 가능하도록 지하 680평 규모에 라커룸과 샤워실을 갖춘 헬스장, 골프연습장, 다목적실 등 최신식 피트니스시설과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 문화 및 휴식, 체육공간으로서 차세대 도심 공원으로 자랑할 만하다.

또한, 공원 안의 수목을 느티나무수목터널, 왕벚꽃나무 순환산책로, 소나무 숲, 자산홍 및 산철쭉 군락지 등과 같이 구역별로 테마화해 공원 어디를 거닐어도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금천구에서는 관내 주변 곳곳에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친환경적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녹음이 우거진 도심 속 공원 및 문화 공간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푸르고 건강한 금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준공행사는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한인수 금천구청장을 비롯하여 각계 주요인사 및 주민 2500여명이 참여했고, 풍물놀이 및 청소년 동아리팀의 댄스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가 더해져 주민 축제의 장이 되었다.

시정요구이유

2006년 2월 20일자 1면 『'금빛공원'은 '금빛실천'이지요』, 3면 『미래를 여는 첫단추, 이제 시작!』, 동년 동월 27일자 6~7면 『드디어...금빛공원 열다!』 등 재하의 기사에서 금빛공원 준공과 관련하여 사진과 함께 현 구청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여 시정요구인을 비롯한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지극히 불공정하기에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사항

권고, 주의, 경고 등의 제재조치

경고 결정문

주　　문 : 금천뉴스 2006년 2월 20일자 1면, 3면 『'금빛공원'은 '금빛실천'이지요』, 동년 2월 27일자 6면, 7면 『드디어...금빛공원 열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신 청 취 지 : 1. 2006년 2월 20일자 1, 3면 『'금빛공원'은 '금빛실천'이지요』 제하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금천구청장)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인물사진을 2회에 걸쳐 게재하고, 그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보도함.

2. 2006년 2월 27일자 6, 7면 『드디어... 금빛공원 열다!』 제하의 기사에서는 공원준공식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현 금천구청장의 사진을 여러 컷 게재하였음.

3. 위 기사는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홍보성 기사로 신청인을 비롯한 여타의 금천구청장 출마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

4. 위와 같은 금천뉴스의 불공정 보도행위에 대한 주의, 경고 등의 재재조치를 요구함.

이　　유 : 금천뉴스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금천구청장)와 관련해 특정 후보예정자(현 구청장)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하면서 그의 구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구정 계획 등의 우호적 내용을 인물사진과 함께 보도하는 등 그의 치적을 2주 연속 2개 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시정요구인이 여타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3
시정요구인 : 김 준 형 (열린우리당 목포시 제2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피시정요구인 : 서남신문
접 수 일 : 2006년 4월 5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이의원의 독특한 사람감싸기

민주당 함께 한 후보 외면, 당원 불만 고조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광역의원을 선정하는 경선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목포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쯤 열린우리당을 거쳐 와야 한다는 항변 아닌 항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런 소문은 목포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일부 당직자들이 제2선거구 ARS여론조사 기초데이터를 이용 당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요구하는 회유를 펼치면서 확산되고 있다.

또 제1선거구의 당원들에게 전 목포시의원 출신인 문창부씨 지지를 당부하는 등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사태가 진화되지 않고 있다.

제1선거구 경선에 참여한 문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6.5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도의원 경선후보로 참여 논란이 되고 있는 권실장에게 후보를 내주었던 전력이 있는 후보다.

이의원의 독특한 사람감싸기
민주당 함께 한 후보 외면, 당원 불만 고조
'자기 사람 심기', 일부당직 충성 혈안
당심고려 하지 않은 시당 운영 미숙원인

공교롭게도 논란이 되고 있는 두 후보는 지난 6.5재보궐에서 우리당 당적을 지니고 있었으나 문후보가 먼저 당적을 바꾸고 권후보는 지난 1월23일 우리당 당적을 버리고 민주당 입당 두 입지자가 사이 좋게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의 입지자로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자기 사람 심기', 일부당직 충성 혈안
당심고려 하지 않은 시당 운영 미숙원인

또 문후보는 이상열국회의원사무소 부위원장, 권후보는 이상열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역이라는 직함을 명함에 넣고 현지역위원장의 힘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목포민주당 광역의원을 선정하는 경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준 없는 영입인사와 이들을 이용한 코드인사를 이용한 특정후보 밀어주기 경선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현의원이 본인 정치입지 강화를 위해 자기사람 심기에 과욕을 부려 이런 내홍에 직면하게 됐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후원당원의 명부가 특정후보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목포민주당의 한 협의회장은 "당이 특정인 중심으로 흘러가다보니 정체성이 없는 후보들을 내세워 기준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상열의원에 대한 충성심 강한 일부 당직자들이 자기사람 심기에 혈안 돼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이 어려운 시기에 떠난 사람들을 데려와 부랴부랴 특정직함을 부여해 이를 이용하는 것은 당원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모 후보는 "5월 지방선거에 나설 예정인 열린우리당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입지자의 선거운동 지원을 받고 있다" 등의 또 다른 구설수에 올라 민주당 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권후보 지원설에 지목된 열린우리당 목포 제2선거구 광역의원 입지자인 김모씨는 당에서 사실을 확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며 기초의원 입지자 정모씨는 정황을 확인했으나 정씨가 소명을 통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우리당 목포당원협의회는 정씨의 처리 방침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입지자인 김모씨의 민주당후보 선거 지원설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권후보에 대한 목포민주당의 적극적인 선거 지원에 과거 몸담았던 우리당의 선거 지원 등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정요구 이유

2006년 3월 30일자 2면 『이의원의 독특한 사람감싸기』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특정 후보의 선거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열린우리당에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후보가 탈당한 이후 한 번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3월 30일자 2면에 『이의원의 독특한 사람감싸기』 제목으로 "권후보 지원설에 지목된 열린우리당 목포 제2선거구 광역의원 입지자인 김모씨는 당에서 사실을 확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며...", "열린우리당 입지자인 김모씨의 민주당 후보 선거 지원설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열린우리당 목포시 광역의원 제2선거구에 공천 신청한 입후보 예정자 김준형씨는 민주당 권후보가 탈당한 이후 한 번도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조차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로 인하여 열린우리당 목포시 광역의원 제2선거구에 공천 신청한 입후보 예정자 김준형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시정요구 후 보도문

서남신문 : 『정정보도문』 (2006년 4월 21일자 2면)
내 용 : 지난 3월 30일자 2면 '이의원 독특한 사람감싸기' 제목으로 "권후보 지원설에 지목된 열린우리당 목포 제2선거구 광역의원 입지자인 김모씨는 당에서 사실을 확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며..." "열린우리당 입지자인 김모씨의 민주당 후보 선거 지원설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열린우리당 목포시 광역의원 제2선거구에 공천 신청한 입후보예정자 김준형씨는 민주당 권후보가 탈당한 이후 한번도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조차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인 김준형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공천이 유력하다고 보도되어 시정요구인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4
시정요구인 : 1. 서덕원 2. 정송학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예비후보)
피시정요구인 : 시민일보
접 수 일 : 2006년 4월 19일
처 리 결 과 : 정정보도문 게재결정

보도내용

한나라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
광진 권혁모 · 강서 김도현 유력

한나라당은 17일 발표하려던 지방선거 공천비리 의

혹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결과를 18일로 연기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미 수사의뢰한 김덕룡, 박성범 의원에 이어 최근 재기된 5~6건의 공천비리 의혹에 대해 오늘(17일)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발표를 하루 연기한다"고 밝혔다.

17일 시민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추가로 발표할 공천비리 연루자는 서울지역 P 모씨와 Y 모씨 등 원외 당원협의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 가운데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3곳 가운데 광진구는 권혁모 부구청장이, 강서구는 김도현 당원협의회장이 각각 후보로 결정될 전망이다. 광진구와 강서구의 경우 시당은 중앙당에 공천결정을 맡기기로 한 상태다.

또 강남구는 맹정주씨와 이정기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나라당은 25개 구청장 후보 가운데 ▲도봉 최선길(현 구청장) ▲중구 정동일(일동인터네셔날 회장) ▲서대문 현동훈(현 구청장) ▲동작 김우중(현 구청장) ▲구로 양대웅(현 구청장) ▲영등포 김형수(현 구청장) ▲중랑 문병권(현 구청장) ▲강동 신동우(현 구청장) ▲서초 박성중(전 부구청장) ▲송파 김영순(전 정무차관) ▲종로 김충용(현 구청장) ▲용산 박장규(현 구청장) ▲성동 이호조(성동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동대문 홍사립(현 구청장) ▲양천 이훈구(현 시의원) ▲관악 김효겸(현 관악구의회 의장) ▲노원 이노근(전 부구청장) ▲강북 김현풍(현 구청장) ▲은평 노재동(현 구청장) ▲마포 신영섭(마포경제살리기운동 공동대표)씨 등 모두 20명의 구청장 후보에 대해 최고위원회 추인을 마쳤다.

그러나 한인수 금천구청장과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시당에서 후보로 결정을 내렸으나, 아직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여야 모두 공천비리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열린우리당은 티끌만한 과오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고를 하고 나섰다.

한나라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
광진 권혁모·강서 김도현 유력

서울 원외 당원협의회장 공천비리 오늘 발표

시정요구이유

2006년 4월 18일자 1면 『한나라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 광진 권혁모·강서 김도현 유력』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3곳 가운데 광진구는 권혁모 부구청장이, 강서구는 김도현 당원협의회장이 후보로 결정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으나, 4월 19일 현재까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는 서울시 5개구에 대해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해 계류중인 상태인데도 특정인이 구청장 후보로 유력하다고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선거운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4월 18일자 1면 '한나라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 광진 권혁모·강서 김도현 유력' 제목의 기사에서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3곳 가운데 광진구는 권혁모 부구청장이, 강서구는 김도현 당원협의회의장이 각각 후보로 결정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한나라당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에서는 광진구 구청장 공천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논의되거나 심사, 의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송학 씨 등의 광진구청장 예비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본지는 특정후보를 부각한 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 공정보도, 진실보도, 유권자 중심의 보도 등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정보도문 게재결정문

주　　문 :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시민일보 1면 우측 하단에 별지 1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크기는 이 건 기사 부제목(서울 원외 당원협의회장 공천비리…)보다 2P 큰 활자로 하고, 본문의 활자크기는 이 건 기사 본문의 활자와 동일하게 한다.

신 청 취 지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시민일보에 별지2 기재의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시민일보 2006년 4월 18일자 1면 『한나라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 광진 권혁모·강서 김도현 유력』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3곳 가운데 광진구는 권혁모 부구청장이, 강서구는 김도현 당원협의회장이 각각 후보로 결정될 전망이다' 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위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과문의 게재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시정요구인이 구하는 사과문의 게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1991년, 사죄광고건)을 내린 바가 있어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고, 한나라당 광진구청장 후보예정자가 시정요구인2로 확정된 현 시점에서 지난 4월 18일자 피시정요구인의 추측 보도는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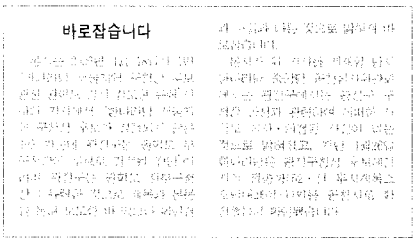
이에 우리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요구 후 보도문

시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2006년 5월 1일자 1면)

내　　용 : 본지는 2006년 4월 18일자 1면 '한나라당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 광진 권혁모-강서 김도현 유력'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3곳 가운데 광진구는 권혁모 부구청장이 후보로 결정될 전망' 이라며 광진구는 권혁모 전부구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제목과 본문을 통해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본지가 위 기사를 게재할 당시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광진구에서는 광진구 구청장 공천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도 심사·의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 4월 26일 한나라당은 광진구청장 후보예정자인 정송학(52·전 후지제록스 호남대표이사)씨를 공천자로 확정했음이 확인됐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추모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시정요구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주장을 보도하여 선거운동에 피해를 입었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5

시정요구인 : 홍 건 표　　(現 부천시장, 한나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

피시정요구인 : 부천자치신문

접 수 일 : 2006년 4월 24일
처 리 결 과 : 기 각

보도내용

부천시 화장터 건립을 반대한다!!

홍건표 시장 어찌 안색이 그리 어두운가?

최근 홍건표시장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흐리고 어둡다고 하는데, 얼굴은 자기 실생활과 내면세계의 거울이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재임동안 정책 결정한 것 중 제일 치적을 뽑는다는 부천시 화장장건립 추진이 홍시장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 애를 태우는 중이라 한다.

홍 시장은 화장터건립 장소를 시민들에게 비밀, 독선, 거짓말을 해가며 선정하였고 시의회의 부적절하다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화장장시설 결정을 한 후 동 장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안한 마음이 눈꼽만큼 생각났던지 해당 피해지역에 인센티브를 준다며 역곡동에 100억원 예산을 반영하고, 역곡 남·북부역 확장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반대연합회가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나 이길 수 있다고 장담까지 하고 있다.

또한 전 부천시 행정력과 통반장을 동원하여 할당을 주면서 서명을 받게 하고, 쥐꼬리만한 활동예산을 지원해주는 노인회, 기독교 등 종교단체까지 동원하여 각종 행사장, 역 광장, 교회, 가가호호 등을 방문하여 총 30만여 명에게 서명 받았기에, 아무리 정부가 반대해도 홍시장은 소송을 불사하며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그리고 측근들이 모두 2년 후로 연기하자는 안과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여월지구 주민들이 들어와 소송 제기할 것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닌다.

따라서 이는 양식 있는 시민들과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부천시가 온통 죽은 자를 처리하기 위한 화장장 이슈로 시끄러운데, 이 소식이 시장 후보 공천 받는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연초 동 초도순시 때 관계주민들로부터 행정 실정과 정책오류의 반대에 따른 항의로 뜻사람들이 길을 막고 계란세례와 항의하는 바람에 몇 시간 지장을 받았다고, 그때 모였던 시민들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모두 사정기관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함에 따라 시민 이십여 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신통한 조치가 없게 되자 체면이 구겨졌다고 투덜대고 다니며, 머슴이 엉뚱한 생각을 하며 주인의 재산을 몽땅 둘러매고 시궁창 길로 가고 있는데, 주인이 바른 길로 가라고 채찍을 들자 왜 간섭하느냐며 기분 나쁘다고 주인을 고발함으로써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는 시민 여론이 확산되자, 적반하장으로 주인이 먼저 사과해야 머슴이 취하할 수 있다며 생색내며 떠들고 다닌다.

셋째는 양식 있는 시민들은 홍시장의 잦은 실정과 자질 부족, 비인간적인 태도 등을 이유로 연일 퇴진운동과 당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공천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무실에서는 홍시장을 두둔하면서 주민이 모이는 공개석상에서는 고집불통인 문제아라고 말하는 김문수의원까지 물고서 태도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같이 왕따 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니 무척 괴로울 것이라 생각이 든다.

더구나,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20일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화장장 등 시설계획 건립에 대하여 독단으로 결정하는 홍건표시장의 취지와 반대되는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공개 추진하게 됨에 따라, 행정에 마인드가 없는 홍시장 및 추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즉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철저히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시설의 입지계획 시는 법령절차를 이행하기 전 입안단계에서 광역단체에서 사전 검토 조정한 후 건교부와 협의하여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시달하였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그동안 시행되던 것에 광역단체에서의 계획수립과 조정가능지역 우선 활용방안 고려, 수립 전에 주민의견 수렴, 관련 행정기관(인근 지자체)과 협의, 입안 전에 건교부와 협의 등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이제 부천시가 화장장을 짓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단계과정을 걸쳐가면서 해야 되고, 부천시에서 재요구해도 경기도에서는 관리계획 입안하기 전에 광역도

시계획을 통해 설정된 조정가능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고, 부천시 주민의견을 수렴 후 수립하고, 수도권관리계획협의회(서울, 인천, 경기도 해당 국장으로 결정?) 협의시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수립해야 되는데, 양식 있는 부천시민들의 각 단계별로 강력한 반대투쟁과 구로구에서 서울시에 사생결단으로 강한 압박을 하면, 서울시나 경기도 건교부에서도 흔쾌히 입안 또는 수립이나 승인하지는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시설의 설치계획을 입안하기 전에도 개발제한구역 밖의 적정부지 여부, 광역도시계획의 조정가능지역 활용여부, 입지의 타당성, 설치의 시급성 등에 대하여 검토 조정한 후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게 되어있다.

홍건표 시장 어찌 안색이 그리 어두운가?

(2006년 4월 1일자 14면)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에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자기지역은 가급적 피하게 피해가 적은 발치이면서 남의지역 주택가 앞에 설치하려는 악덕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을 막고자, 즉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대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장사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통칭 "장사시설 유치지역의 주민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자 사단법인인 환경분쟁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동 법률(초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이 추진 중인 초안의 주요내용은

장시시설의 설치계획을 국토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게 하고, 택지개발사업을 개발할 때는 화장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해당기관에 납부하게 하며, 또한 장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인 등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케 하고, 해당 지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확실히 지원하고, 각종 재난, 환경, 교통 영향평가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사 등 처리방법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도록 기록하고 있다.

상기 법규 제정과 절차 등의 개정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피해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행정은 주민의 중지를 모아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합리성이 내포된 결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의 홍시장의 비밀 독선 거짓말로 행정을 펴고 또한 문제 제기가 되면 그때 땜방으로 보완조치를 하려는 추진방식은 이에 역행을 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이라고 본다.

이렇게 돌아가는 국민정서 시류, 국가 행정 비전과 추세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동안 지역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여 시민들이 손해 본 것은 어디에서 배상 받아야 하나?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들은 지도자 선택을 잘해야 한다.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한다. 또한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고도 한다. 앞으로 사람 고르는데 잘 상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백년대계의 부천시를 생각하며 반성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지난 20일 자 건교부에서 시달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과 동 지침 일부를 발췌 첨부하오니, 동 계획 수립절차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우리가 단계별로 실천할 것을 발췌하여 주변 분들께 알려서 우리 부천시 발전이 역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 :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지침 주요 개정 내용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지침 일부 발췌 내용

2006. 3. 28.
부천시화장터건립반대투쟁위원회

❀ ❀ ❀

부천시 화장터 건립을 반대한다!!

홍건표 시장 이제는 변해야 산다?

홍건표 부천시장은 취임 이후 뜬구름 없이 부천시 도시계획지도를 바꾸는 춘의동 화장장 건립을 들고 나와 시끄럽게 되자, 시의회의 정책질의 답변에서 동 화장장 부지를 "밀실, 독선, 거짓말을 하며 결정하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실토하였고, 또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동 지역은 공설화장장건립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제시"를 하였음에도, 동 화장장 옆 500여 미터에 부천시 젖줄인 까치울정수장과, 200여 미터에 1천 가구가 살고 있는 구로구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나만의 화장장 건립이라며 절차를 어겨가면서 급히 시설 결정하였고, 경기도에 G/B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는데 3. 20 건교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다시 처음부터 단계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 상태에 있다.

도시 생활에서 매장 문화가 화장 문화로 바뀌면서 화장장시설은 필요하나, 생과 사를 구분하여 생활하는 우리 국민 정서로 볼 때 너무나 중대하고, 지역 개발과 환경에 크게 저해되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천시의 '민-민' · '민-관' 갈등과 구로구민의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와 보건복지부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과 국가정책 추진 시류 변화 등에 비추어 관계법규를 대폭 수정함으로써 부천시의 이 사업은 이제 어렵게 되었다고 보고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Ⅰ. 부천지역 내의 문제로 건립위치와 추진 절차상 그리고 지역지도자, 시민들의 여론 수렴의 문제점 등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로, 화장장 건립 장소가 매우 부적절하다. 현오시설인 화장장은 전국 모두 다 주거지역에서 1,000여 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고도 200~300미터 이상의 산속이나 주민들의 왕래가 없는 지역에 있어, 인체에 환경오염 등 문제가 적지만, 춘의동 부지는 주변 500여 미터 내에 2천5백 세대 1만여 명이 거주하고, 동 부지와 30미터 거리 및 고도 차이인 산등성이는 매일 2만여 명이 찾는 등산로 이며, 특히 뚜껑 없는 2천여 평의 까치울정수장이 500여 미터 내에 있고, 200여 미터에 구로구 온수동의 1천여 연립주택 일대가 30년동안 제한된 고도 및 시계경관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개발의 붐을 타고 있는데 찬물을 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적지가 아닌 비효율적인 도시계획이라고 보며, 또한 다이옥신 등이 나오고 유골이 비산되면 몸에 축적되어 기형아 발생 등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예견되며, 만약 구로구민들로부터 "200여 미터 거리에 부천시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였어도 결정 했을 것이고, 구로구민들은 사람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게 될 경우" 이웃과 같이 하늘을 등지고 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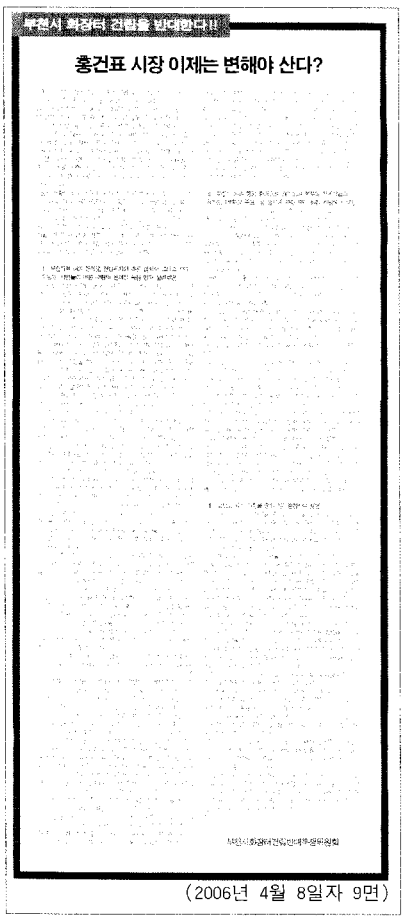
둘째로, 추진방법에 문제가 많다. 우선, 홍 시장은 화장장 도시계획시설 절차 추진 중에 관련 법규를 너무나 많이 무시하고 결정하였다. 관련 주민 공청회 개최와 공사익 간 비교형량 검토도 없이, 인접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도 않고, 기초조사 시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건교부 승인이 없는데도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결정하였음은 법규를 망각한 행정을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동 화장장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집회에 총 12회 연인원 4만여 명이 집결하여 강력한 반대시위를 하였고, 동 반대 인터넷 까페 1천 8백여 명 동호인의 활발한 반대 활동과, 동 반대 탄원에 17만여 명이 서명하여 경기도, 건교부, 복지부, 주요정당 대표 등에 전달하여 해당기관에서 시민의견 수렴하고 피해 없게 검토하라는 권고 지시와, 부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춘의동 화장장건립을 원천 백지화 하라"고 외쳤음에도, 홍 시장은 본인의 뜻과는 다르다고 모두 뿌리쳤고, 많은 절차를 생략하면서 부적절하게 시설결정하였음은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행정위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음은 홍시장은 연초 동 초도순시 때 반대주민들이 가는 길을 막고 항의하는 바람에 지장을 받았다고, 그때 모였던 시민 수백명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모두 사정

기관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함에 따라 당해 시민 수십여 명이 조사를 받게 하고 있음은, 마치 머슴이 주인 재산을 몽땅 둘러매고 시궁창 길로 가고 있는데, 주인이 바른 길로 가라고 채찍을 들자 주인을 고발한 경우와 같이 비쳐짐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는 시민 여론이 확산되자, 적반하장으로 주인이 먼저 사과해야 취하한다고 하기 때문에, 홍 시장의 비인간적인 태도 등을 이유로 연일 퇴진운동을 벌이는 등 민-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동 반대연합회가 현재 화장장건립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코웃음을 치면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까지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 다음은 홍 시장은 작년 말에 경기도에 요청한 동 계획변경(안)이 금년 초에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처리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화장장 짓기 10만명 서명운동"을 벌리면서 동네 노인, 일부 종교인들 동원과 그리고 각동과 통반장에게 할당을 시켜 가정방문은 물론 졸업식장 등 행사장까지 찾아가서 받음으로 양식있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또한 홍 시장은 총 30만여명에게 서명을 받았기에 아무리 정부가 반대해도 부천시가 소송을 불사하며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그리고 홍 시장은 측근들이 모두 2년 후로 연기하자고 하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여월지구 주민들이 들어와 소송 제기할 것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하며, 또한 3월31일자에 추모공원추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으로 새로운 내용도 없으면서도 금번 5.31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30여만명의 찬성서명을 받았다고 밑줄을 그어서까지 설명함으로써 민민과 민관 간에 갈등을 불러 일으켜 충돌케 하고 있음은 단체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보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부천시 화장터 건립을 반대한다!!

홍건표 시장 이제는 변해야 산다?

(2006년 4월 8일자 9면)

셋째로, 부천지역의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10월 26일 부천시 원미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 각 후보자들은 물론 지역지도자,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도 모두 동 건립반대를 외쳤고, 특히 열린우리당 의장은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반대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후 당-정협의회를 통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한나라당 출신 당선자인 임해규 의원은 그 장소에 영어마을을 건립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고자 지난 3월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원, 교수, 화장장 전문가 등이 모여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의 법제실과 예산 정책처에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대표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5.31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여서 소속 당 후보자들이 같이 다니며 선거유세를 해야 되는데, 만약 홍시장이 한나라당 시장후보가 되면 화장장 찬성, 같은 당 시·도의원 후보들은 화장장 반대를 외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임해규 의원과 정당인들은 어떻게 지지요구를 해야 되는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중앙당의 현명한 처사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본다.

Ⅱ. 부천시 외의 행정 환경으로 경기도와 정부의 지역개발과 국가도시계획상 주요시설 설치에 관한 주민 화합 차원에서 보면

첫째로, 경기도는 이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부천시에서 작년 4월에 요청한 공설화장장건립을 위한 동 계획변경(안)을 반려하면서 이해관련 주민의 의견수렴과 인근 지방자치단체(구로구 등)와 협의하여 추진하라고 권고 한 바 있고, 또한 지난 해 12월에 요청한 부천시 만의 화장장건립 변경(안) 건도 금년에 수립하

는 G/B 관리계획5개년계획(안)에 포함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지시 하였고, 또한 동 개정지침에 의거 처음부터 다시 단계를 거쳐 추진해야 하는 형편에 있다.

둘째로, 건설교통부는 금년 3월 20일에 개발제한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장 등 시설계획을 건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공개 추진이 되도록 기존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시달하였다.

즉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철저히 보전·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시설의 입지계획을 할 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광역단체에서 사전검토 조정한 후 건교부와 협의 완료된 후 수립할 수 있도록 동 지침을 개정 시달 하였기에, 이제 홍시장의 나만의 화장장을 짓기 위한 동 관리계획변경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셋째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에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임을 인식하고, 악덕 자치단체장이 자기지역은 가급적 피해가 적은 발치이면서 남의지역 주택가 앞에 설치하여 이웃 시민 간의 갈등을 증폭 시키는 것 등을 막고자, 통칭 "장사시설 유치지역의 주민참여·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자 사단법인인 환경분쟁연구소에 용역의뢰하여 동 법률(초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주요내용은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대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장사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설치계획을 국토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게 하고, 장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주민, 시민단체 등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케 하며, 지역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설치지역에 인센티브를 확실히 지원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조사·처리방법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도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Ⅲ. 끝으로 상기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하여 보면

자치단체장은 모든 행정을 주민의 중지를 모아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합리성이 내포된 결정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 동안 홍 시장은 화장장 건립을 비밀 독선 거짓말로 추진하였고, 또한 문제 제기가 되면 그때마다 땜방식으로 보완 조치를 하는 추진방식은 이에 역행을 한다고 본다.

국토개발계획 아래 지역개발을 논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사실을 기초로 객관적인 분석과 주민들의 화합을 엮어 결정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임에도, 광역시설로 해야 되는 시설을 나만의 시설이라며 먼저 지역에서 결정을 해놓고 국가계획에 맞추려는 비합리적인 결정에 대하여 찬반 구분과, 시민들을 이해관계가 많은 자 보다 적은 자를 부축함에 따라 오류와 이해관계가 적은 자들이 판을 치는 민 민간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민 관간의 반목을 일삼고 있음은 시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정부에서도 매우 우려스럽게 여겨, 보건복지부는 화장장 유치지역의 주민갈등을 조정하는 법규제정을 검토를 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도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하면서 민원을 적극 해소하라 하였고, 또한 경기도에서도 이해관계 시민 의견수렴과 참여 그리고 이웃 구로구와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홍 시장은 상기 여건으로 인하여 나만의 화장장을 짓기 위한 동 관리계획변경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천시는 처음부터 단계과정을 거쳐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관리계획 입안하기 전에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설정된 조정가능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며, 부천시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 후에도, 수도권관리계획협의회(위원은 서울, 인천, 경기도 녹지국장으로 결정?) 협의를 거쳐 수립 한 후, 각각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양식 있는 부천시민들의 각 단계별로 강력한 반대투쟁과 구로구민들이 서울시에 사생결단으로 불법·부당성을 제기 하면, 서울시나 경기도 건교부에서도 흔쾌히 입안 또는 수립, 원만한 협의나 승인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지역 민심과 지역지도자, 시민단체 등의 변화 그리고 국민정서 기류·국가 행정 비전에 따라, 홍 시장은 빨리 변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본다. 만약 이 상황에서도 고집만 부린다면 부천 정치판에서 버림받게 되고, 현대행정의 마인드가 없는 자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부천역사에 오점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본다.

부천시화장터건립반대투쟁위원회

시정요구이유

2006년 4월 1일자 14면 『홍건표 시장 어찌 안색이 그리 어두운가?』, 동년 동월 8일자 9면 『홍건표 시장 이제는 변해야 산다?』 등 제하의 기사에서 시의회가 춘의동은 공설화장장 건립장소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인이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화장장 건립장소로 급히 결정하였고, 지역주민 30여만 명의 찬성서명을 받은 것은 시민들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이며 시민들은 지도자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보도하였으나, 화장장 건립은 적법하게 추진하였고 화장장 건립 찬성서명을 받는 것은 시정업무를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행위일 뿐이다. 또한 '지도자 선택을 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기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추모공원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대표로 추모공원 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답사, 타 화장시설견학, 시민토론회 개최 등의 공개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이 토론에서 제외된 3개소의 후보지 중에서 민가에 밀접하지 않으며 주민에게 피해가 가장 작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하였음에도 비밀, 독선, 거짓말이라는 보도로 부천시 명예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부적절하다는 권고라고 하였으나 2005년 7월 15일 제12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의견으로는 현 부지는 주민의 반대여론이 극심하고 협소하므로 장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아니라 광역장사시설을 재검토하고 인접시와 협의 불가능시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추진하라는 의견이며, 추모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위법을 행한 적이 없으며, 아직까지 본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공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허위과장된 내용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에서 활동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노인복지법령의 규정에 따라 노인회에 한정되는 것으로 5,100만원에 이르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약 190만원의 노인회지회 운영자금과 경로당 운영, 사회봉사활동, 비품구매, 환경정비사업 등에 매년 2,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쥐꼬리만하다고 비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예산의 지원에 대한 수혜자의 비하, 기독교 등의 종교단체에는 지원하는 예산이 전혀 없음에도 시장이 기독교인임을 은연중에 드러내어 마치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해야 할 언론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역곡1동 초도순시시 지역주민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 (중략) … 이로 인한 시정의 피해 또한 심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가담자 3명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서 수사과정에서 1명의 피고소인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소를 취소하여 2명만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마치 그때 참석하였던 모든 주민을 고발한 것으로 확대 과장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중략)

또한 일부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추모공원 사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천반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일반 시민이 시장의 자질을 문제삼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인인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후보 예정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추모공원조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민 대표의 논의로 이루어져 왔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신문공고와 관계도서의 열람등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땜방으로 보완조치를 하려는 추진방식이나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보도내용과는 판이하게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시장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단일 수 없으며 … (중략) … 마지막으로 지도자 선택을 잘하자는 보도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보도하는 우를 범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기각 결정문

주　　문 :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주간 부천자치신문에 별지1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시정요구인 주장

피시정요구인은 '홍건표 부천시장이 부천시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제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는 요지의 '부천시화장터건립반대투쟁위원회'의 의견광고를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주간 부천자치신문 2006년 4월 1일자 14면 『홍건표 시장 어찌 안색이 그리 어두운가?』, 동년 4월 8일자 9면 『홍건표시장 이제는 변해야 산다?』 각 제하로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위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피시정요구인이 제출한 2006년 4월 27일자 '화장장 광고 게재에 대한 홍건표 부천시장의 시정요구에 대한 반론'에 의하면 피시정요구인은 "이 사건 광고는 '부천시화장터반대추진위원회'가 부천자치신문사와 정식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를 납부하여 게재된 '광고'일 뿐이어서 광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광고주인 '부천시화장터반대추진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함이 마땅하며, 피시정요구인에게는 광고게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요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당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사의 범위에는 일반기사뿐만 아니라 광고도 포함되어 있음이 법률상 분명하고(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1항), 언론기관이 갖는 당연한 권리인 광고게재여부 결정권은 광고의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언론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권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시정요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문제의 '부천시화장장건립'에 대해서는 장기간 부천시민들간에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로 분쟁이 계속되어온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광고도 금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인 2005년 6월 4일부터 이번 선거와는 무관한 분쟁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일이슈에 대한 광고가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 게재된 점, 광고문안에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화장장건립반대'에 초점을 맞춘 의견광고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광고게재를 일반의 불공정 선거기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도 전에 특정 후보자가 유리하다고 보도하고 여타 후보자들에 비해 시정요구인의 초라한 모습의 사진을 게재하여 의도적으로 편파 보도했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6
시정요구인 : 유 승 규 (국민중심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피시정요구인 : 강원도민일보
접　수　일 : 2006년 5월 1일
처 리 결 과 : 기 각

보도내용

심 전시장 출마땐 표심 분산 우세 김 지사 영향받을 수도

■ 4자구도 유력 지사 선거 판세 분석

5·31 지사선거가 열린우리당 이창복-한나라당 김진선-국민중심당 유승규-무소속 심기섭 후보가 격돌하는 4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 진영의 계산이 분

주해지고 있다.

심기섭 전강릉시장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5월초 무소속 출마선언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어서 이미 출마가 확정된 김진선 이창복 유승규 후보외에 심기섭 전강릉시장이 가세하는 4자구도가 유력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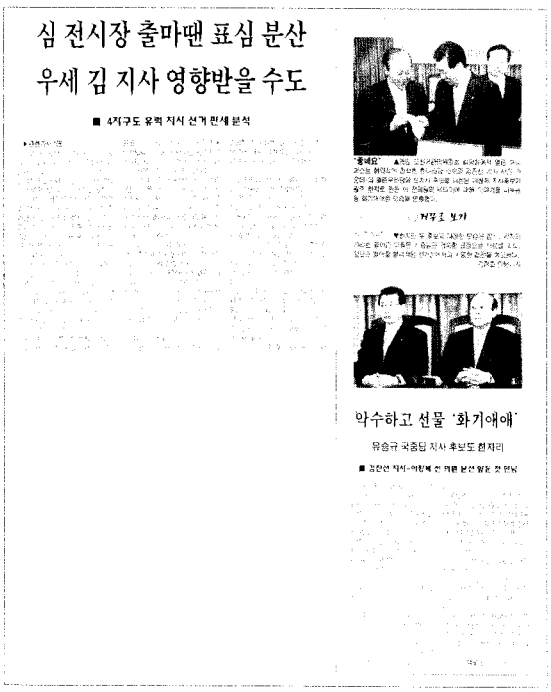
현재 각당 관계자들은 이들 4명의 후보중 김 지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데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도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60%대 안팎에 이르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의원은 3선을 노리는 김 지사에 비해 인지도와 지지도가 낮지만 원주지역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데다 집권여당의 지원을 받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심 전시장은 강릉에서 국회의원과 3선 시장을 역임하는 등 영동권 '정치지도자'로서의 무시 못할 관록을 갖고 있고 유 전의원은 도내 당조직이 사실상 없다시피해 인지도와 지지도에서 타 후보들과 열세에 있어 선전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지사선거에서는 심 전시장의 출마여부가 판세를 가늠할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심 전시장 출마땐 표심 분산
우세 김 지사 영향받을 수도

■ 4자구도 유력 지사 선거 판세 분석

악수하고 선물 '화기애애'

유승규 국중당 지사 후보도 한자리

■ 김진선 지사-이창복 전 의원 본선 앞둔 첫 만남

심 전시장이 불출마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양당대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이 전의원에 비해 인지도와 지지도가 앞서고 있고 높은 당지지도를 등에 업은 김 지사의 우세가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심 전시장이 본선에 합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며 심 전시장의 출마여부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내심 김 지사와 한나라당의 무게를 버거워하고 있다.

그만큼 심 전시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상황은 다소 복잡해진다.

강릉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심 전시장이 선거전에 가세하면 역대 지사선거에서 김 지사의 든든한 지원세력이었던 강릉의 표심이 일정부분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전의원이 자신의 출신지역인 원주에서 표심결집을 호소하고 시민들이 이에 호응할 경우 김 지사는 또 하나의 지원세력을 잃을 수 있다.

물론 이는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실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심 전시장의 출마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

"좋네요" ▲25일 도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협약식에 참석한 한나라당 소속의 김진선 지사(사진 가운데)와 열린우리당의 도지사 후보로 내정된 이창복 지사후보가 원주 한지로 만든 이 전의원의 넥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거꾸로보기

"…" "…" ▼하지만 두 후보의 다정한 모습은 잠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이들은 시종일관 엄숙한 표정으로 서로를 의식, 앞으로 벌어질 본격적인 선거전에서의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 ❀ ❀

악수하고 선물 '화기애애'

유승규 국중당 지사 후보도 한자리
김진선 지사-이창복 전 의원 본선 앞둔 첫 만남

한나라당 소속으로 3선 도전에 나서는 김진선 지사와

열린우리당 도지사 후보로 확실시되는 이창복 전의원이 본선을 앞두고 25일 춘천에서 도지사 후보로서 첫 만남을 가졌다.

25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매니페스토협약식에 참석해 나란히 자리를 잡은 김진선 지사와 이창복 전 의원은 경쟁자임을 뒤로한 채 행사 중에 손을 맞잡고, 선물을 주고 받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진선 지사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국민과의 정책 계약이고 엄숙한 약속"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뢰성 있는 제대로 된 정책들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복 전 의원은 "매니페스토 협약식은 선거문화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라며 "매니페스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창복 전 의원은 협약식을 마치고 김진선 지사와 유승규 전 의원 등 각 당 도지사 후보들에게 원주한지로 만든 넥타이를 선물해 시선을 끌었다.

한편 이날 협약자리에는 국민중심당 강원도지사 후보인 유승규 도당위원장도 참석해 도지사 후보 4명중 3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정요구이유

1. 2006년 4월 26일자 5면 『심 전시장 출마땐 표심분산, 우세 김지사 영향 받을수도』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은 도내 당 조직이 없다시피해 인지도와 지지도에서 타 후보들과 열세에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객관적인 근거없는 의도적인 표현으로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하기도 전에 당선가능성과 거리가 먼 후보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2. 동년 동월 동일자 동일지면 『거꾸로보기』 코너에서 행사에 참석한 여타 정당 예비후보자 2인만을 집중부각하고 그들 뒤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있는 시정요구인의 모습을 게재한 것은 의도적인 편파보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기각 결정문

주　　문 :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한 강원도민일보 2006년 4월 26일자 5면 『심 전시장 출마땐 표심분산 우세 김지사 영향 받을 수도』 제하의 기사 및 『거꾸로 보기』 코너의 기사와 관련, 편파성 보도에 대해 시정하라.

이　　유 : 1. 시정요구인 주장

피시정요구인은 위 기사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원도지사)가 열린우리당 이창복, 한나라당 김진선, 국민중심당 유승규, 무소속 심기섭 후보가 격돌하는 4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현재 각당 관계자들은 이들 4명의 후보 중 김 지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데 이견을 달지 않고 있고, 특히 유 전의원은 도내 당 조직이 사실상 없다시피 해 인지도와 지지도에서 타 후보들과 열세에 있어 선전여부가 주목된다' 며 이창복 후보와 김진선 후보의 행사사진 2컷을 해설기사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위 기사에서 ▲ 시정요구인에 대한 보도는 거의 하지 않고 특정 후보가 거의 확실히 당선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특정정당 후보예정자 2인의 행사사진을 집중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두 후보예정자의 선거로 비춰지게 하고, ▲ 해당사진 중 1컷에 두 후보예정자 뒤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있는 시정요구인의 모습을 담은 것은 시정요구인이 피시정요구인의 경쟁사인 강원일보에서 선거홍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다분히 의도적인 편파 보도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에 대해 우선, ▲시정요구인의 보도는 전혀 없었다. ▲시정요구인이 피시정요구인의 경쟁사인 강원일보에서 선거홍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오해하고 편파 보도하였다는 등의 시정요구인 주장은 이 사건 기사에서 이미 시정요구인에 대해 적은 분량으로나마 다뤄졌다는 점과 피시정요구인의 오해 또한 다분히 시정요구인의 추측일 뿐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는 각각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원도지사)와 관련해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판세분석기사로 지지율, 소속정당 등을 감안해 후보예정자별로 지면할애를 차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그 차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판단컨대, 우리 헌법은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을 규정

하는 외에도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을 규정하는 동시에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도 보장하고 있어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예정자들간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어야 하고, 특정 후보예정자로 하여금 다른 후보예정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보장도 일반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372등).

따라서, 언론사가 특정 선거의 후보예정자 모두를 다루는 판세분석 보도에서 여론조사결과 지지도 순위,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예정자를 차별 보도할 수 있으므로 다소 부각 보도된 후보예정자가 여타 후보예정자에 비하여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유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특정 후보자 2인의 사진과 선거공약을 시정요구인에 비해 지나치게 부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7
시정요구인 : 김 광 을 (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피시정요구인 : 경향신문
접 수 일 : 2006년 5월 3일
처 리 결 과 : 기 각

보도내용

'선택 5·31' 지방선거 열전지대

김범일, 이재용에 20%차 앞서

5·31 대구시장 선거는 무려 7명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준비 중이다.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의 '독주'를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가 추격하는 구도다. 김후보가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 역할론'으로 수성을 노리는 가운데 이후보는 대구의 경제침체를 공격 포인트로 삼아 '대구시정 심판론'을 펴고 있다.

◇관전 포인트=우리당은 대구시민에 친근한 이후보를 앞세워 친(親)한나라당 정서를 넘는다는 구상이다. 이후보는 무소속으로 남구청장을 재선하면서 퇴폐업소와의 전쟁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이후보측은 "대구에서 어르신들이 손을 꼭 잡아주는 정치인 두 사람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재용 전 남구청장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지난달 27일 대구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후보는 인지도에서 김후보를 63.2%대 45.4%로 앞섰다. 지지하는 이유로도 '능력과 자질'(35%)이 첫번째로 꼽혔다. 그는 그러나 우리당에 소속된 이후 2002년 시장선거와 2004년 총선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이후보는 경제를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그는 "김후보가 경제를 책임지는 정무부시장을 지냈다"며 "경제파탄의 책임자가 대구시장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김후보 역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꼽는다. 하지만 강조점은 '참여정부 심판론' 쪽에 두고 있다. 2007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판세와 전망=현재로선 김후보의 주장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대구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민의 55.6%가 '정권재창출역할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김후보 지지자의 74.7%가 지지 이유를 '한나라당이어서'라고 답했다.

김후보는 지난달 30일 KBS 여론조사에서 이후보를 36.1%대 23.7%로, 지난 1일 MBC 여론조사에서 40.6%대 22.5%로 각각 여유있게 앞섰다. 앞서 실시된 지난달 27일 대구일보 조사에서 8.4%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게 제일 근접한 성적이다.

이후보의 추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후보측은 지더라도 우리당이 지난 4·30 재보선 당시 경북 영천에서 얻은 48%나 10·26 대구동을보선에서 얻은 44% 수준은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 ❁ ❁

"지역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군소정당·무소속후보들

민주노동당 이연재(43), 국민중심당 박승국(66), 무소속 백승홍(62) 후보 등 군소 후보도 '지역 경제살리기'를 앞세우고 있다. 다만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다.

학생·노동가 출신인 민노당 이후보(전 시당위원장)는 당의 '색깔'을 공약에 반영하고 있다. 그는 "서민이 행복한 대구"를 강조한 뒤 "대기업 유치보다 중소기업 육성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시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임금보장, 대형유통점 신설 불허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도 제시했다. 이후보는 그러나 "대구시가 대구 4차 순환도로(상인동~범물동)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일부 민간시행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강행하고 있다"며 앞산터널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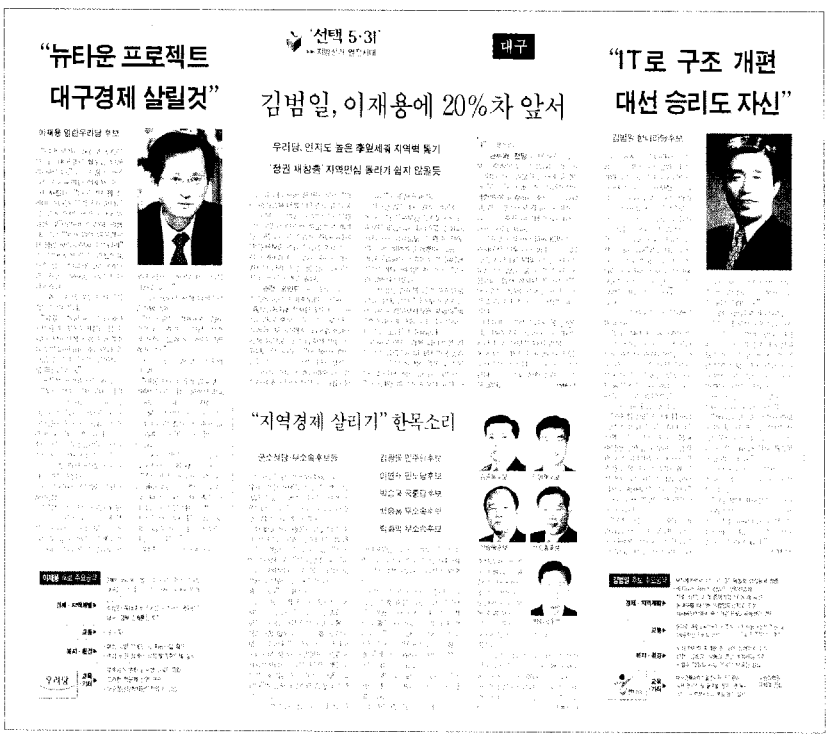
반면 민주당 영남권 인재영입특위위원장인 김광을 후보(45)는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앞산터널공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 의원 출신인 국중당 박후보는 '개발'중심이다. 그는 봉무단지~팔공산 관광 벨트화로 대구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후보는 "한나라당의 역대 민선 시장들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소홀히 했다"며 한나라당과의 차별성 부각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무소속 백후보(전 의원)는 5대 프로젝트를 내세워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전통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대도시형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그것이다.

무소속 박화익 후보(51·신천사랑운동본부 대표)는 대구를 친환경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패션·첨단 정보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해법의 중심에 있다.


"뉴타운 프로젝트 대구경제 살릴것"

'선택 5·31' 지방선거 특별취재

대구

김범일, 이재용에 20%차 앞서

"IT로 구조 개편 대선 승리도 자신"

"지역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 ❁ ❁

"뉴타운 프로젝트 대구경제 살릴 것"

■이재용 열린우리당 후보

"이번 선거는 대선 전초전이 아니라 대구경제 회생을

위한 결승전이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51·사진)는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꿈틀대고 있어 이번 선거는 예전과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가 과연 대구경제를 살릴 적임자인지를 봐달라"며 '경제시장론'을 강조했다. 이후보는 '야심작'으로 3백만평 규모의 뉴타운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왜 이재용 후보가 대구시장이 돼야 하나.

"힘있는 여당 후보가 나와야 시민들의 고통과 좌절을 풀 수 있다. 남구청장 시절 퇴폐업소를 일망타진했던 추진력과 의지로 '절망의 도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

-쟁점 공약과 승부처는.

"도시·행정·교육 3대 골격을 개조하는 신대구 프로젝트다. 그 중 하나로 서대구공단과 내당동·비산동 등 도심 3백만평 뉴타운을 개발하겠다. 개발수익금으로 약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장학재단 설립, 노인교통비 보조, 출산육아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의 장·단점은.

"장점은 대구시의 경제담당부시장을 지낸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재직시 시청 빚이 늘어나는 등 경제 파탄의 주범이기도 하다. 부시장 때 실현하지 못한 식상한 장기계획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 조해녕 시장 업적으로 승계할 것은.

"대구·경북 경제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산업안전밸리 추진에 노력하는 점은 긍정 평가한다."

-인지도는 높은데 지지율이 낮다.

"여론조사 추이가 김후보는 하향선이고 나는 상향선이다. 김후보는 정당, 나는 자질·능력으로 지지받는다. 특히 경제회생 적임자 조사에서 내가 23%, 김후보는 10%대로 2배 이상 높다.

-대구정서에 안맞는 열린당과 거리두기를 할 것인가.

"주위에서 '왜 하필 열우당에 들어갔노'라고 할 때 나는 '남구당, 대구당의 사무총장'이라고 한다. 개인 욕심이 컸으면 한나라당에 벌써 들어갔을 것이다. 집권여당 후보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 ❁ ❁

"IT로 구조 개편 대선 승리도 자신"

■김범일 한나라당후보

대구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 것이 본선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한나라당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55·사진)는 국회의원 등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공천을 따냈고 주변으로부터 당선의 8부 능선을 넘었다는 말을 듣는다. 정작 김후보는 "정치는 생물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손사래를 친다. 그런 김후보는 대구의 친(親)한나라당 정서의 이면에 현정부에 대한 대구시민의 실망감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 김후보가 대구시장이 돼야 하는가.

"나는 30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2년8개월간 대구시 부시장으로 재직한, 경제회복을 위한 준비된 후보다. 또 대선 승리를 통해 대구의 명예를 되찾아오는 일의 적임자는 분명 한나라당의 후보 김범일이다."

-내세울 주요 공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IT산업으로의 변화를 꾀하겠다. IT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을 통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대구에 진출한 대형 주택건설업체와 대형산매점이 지역기업을 협력업체로 활용토록 유도하겠다."

-이재용 후보의 장·단점을 평가한다면.

"장점으로는 여러 번의 선거경험을 통해 시민들과의 감성적 만남에 강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단점을 찾는다면 지난번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상대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모습이다."

-현 시장을 평가한다면.

"조해녕 시장은 원칙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해 왔다. 다만 취임 초기에 겪은 지하철 참사로 인해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나는 발로 뛰는 시장, 시민들에게 가까운 시장이 되겠다."

-부시장으로 대구경제 침체에 책임이 있다는 평가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나는 정무부시장으로서 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한나라당에 편향된 지역정서의 덕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편향적인 지역정서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실정을 먼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정책에 실망하고 의도적 소외와 푸대접에 분노하게 됐다."

시정요구이유

2006년 5월 3일자 6면 「'선택 5·31' 지방선거 열

전지대·대구」 코너 중 『김범일, 이재용에 20%차 앞서』 제하의 기사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후보 2인의 사진과 관련기사를 부각 보도하여 시정요구인을 비롯한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심대한 불이익이 예상되기에 상기 두 후보와 같은 크기로 시정요구인의 기사 게재를 요청한다.

기각 결정문

주　　문 :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한 경향신문 2006년 5월 6일자 6면 『'선택 5·31' 지방선거 열전지대 대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시정요구인에 대한 기사와 사진을 한나라당 김범일,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예정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라.

이　　유 : 1. 시정요구인 주장

피시정요구인은 위 기사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구시장) 후보예정자 7인을 소개하면서 일부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한나라당 김범일,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예정자간의 판세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들만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위 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 2인에 대해 기사본문과 인물사진, 인터뷰기사 등을 통해 부각 보도하여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며 시정요구인에 대한 기사와 인물사진을 그들과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기사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구시장)와 관련해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판세분석기사로 지지율, 소속정당 등을 감안해 후보예정자별로 지면할애를 차별한 것으로 보이는바 차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판단컨대, 우리 헌법은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는 외에도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을 규정하는 동시에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도 보장하고 있어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예정자들간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어야 하고, 특정 후보예정자로 하여금 다른 후보예정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보장도 일반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372등).

따라서, 언론사가 특정 선거의 후보예정자 모두를 다루는 판세분석 보도 및 소개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 지지도 순위, 유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예정자를 차별 보도할 수 있으므로 다소 부각 보도된 후보예정자가 여타 후보예정자에 비하여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유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예비후보자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을 배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8
시정요구인 : 강 태 희 (무소속 고양시장 예비후보)
피시정요구인 : 조선일보
접　수　일 : 2006년 5월 4일

처 리 결 과 : 주 의

보도내용

고양시장 후보

'일산호수공원'으로 대표되는 인구 91만의 고양시. 문화·체육·복지시설들이 꾸준히 들어서면서 '품격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 능력을 갖춘 한국국제전시장(KINTEX)과 지자체의 기획에서 출발해 국제적 행사로 발돋움해가는 고양세계꽃박람회를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분위기. 수장(首將) 자리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경기북부권 최대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최근 강현석 시장 재공천을 결정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에선 세 명의 예비후보들이 30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들 네 사람에게 지역현안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물어봤다.

❁ ❁ ❁

열린우리당 김유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1998년 시의원에 당선됐다. 현재 고양여성민우회 정책위원장과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운동가 출신 유일 여성 후보
"좋은 '콘텐츠'로 '하드웨어' 채우겠다"

-고양시 최대 현안은.

"시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 구체적으론 교육·교통·문화 콘텐츠를 원한다. 하드웨어적 기반은 이미 마련된 만큼,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주민이 발의한 예산안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할 것이다.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들을 유치하고 영상산업 발전도 도모하겠다. 농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

-교육 인프라 확충 요구가 많은데.

"연예·예술 전문대학들을 적극 유치, 지원하겠다. 실업계고를 특목고로 전환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도서관 확충,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의 질 향상도 필요하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데.

"강금실 전 장관의 경우에서 보듯,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호응이 높아졌다. 여성은 '살림 행정' 능력을 갖고 있다."

-시장 적임자로서 내세울 덕목은.

"8년 동안 시의원으로 일했다. 시의 현안을 잘 안다. 도시경영 아이디어와 리더십도 많이 키웠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시민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인 만큼, 선거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포용력·배려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여성 후보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한다."

❁ ❁ ❁

열린우리당 나진택

건국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 창립발기인 정책위원장과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했고, 2004년 총선에선 한명숙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한명숙 총선캠프 출신 40대 후보
"전철 5호선 대곡역-가좌까지 연장"

-고양시 최대 현안은.

"교통문제다. 고양시 통과 우회도로 공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다. 친환경 모노레일도 건설하겠다. 광역교통망 체계를 정비, 현재 방화까지 와 있는 전철 5호선을 대곡역으로 해서 식사·중산·탄현·가좌까지 연결하는 것도 추진하겠다."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은.

"먼저 애니메이션고·예술고·컨벤션고 등 특성화 고교를 설립할 것이다. 이와 함께 4년제 종합대학을 설립하거나 유치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이 개정 노력을 하겠다. 또 원당에 있는 농협대학을 국내 최고의 생명공학연구대학으로 육성시키겠다."

-시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강점은.

"여론은 현재 나 같이 역동성 있는 40대 후보를 시장

으로 원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18년 동안 고양시에 살면서 시민운동과 정치활동을 했다. 덕분에 시에 있는 인적자원을 누구보다 많이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무한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 시정에 적극 참여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 시의 인재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고양시민을 대변해 중앙정부에 할말을 할 수 있는, 당찬 시장이 필요하다. 그런 시장으로서, 내가 나서겠다."

❁ ❁ ❁

열린우리당 오정규

고교를 졸업하고 1979년부터 중소기업(주물공장)을 운영해 왔다. 1998년부터 고양시 시민회 활동을 시작, 2002년엔 회장직을 맡아 왔다. 작년에 대학(서남대 법학과)에 입학한 늦깎이 대학생이다.

27년간 중소기업 운영한 시민단체 대표
"은평구 신사동까지 고속화도로 건설"

-고양시 최대 현안은.

"고양시는 잠만 자는 베드타운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도 61%밖에 안 된다. 교통 문제도 너무 심각하다. 출근 시간대에 자유로를 통해 서울 마포까지 가는 데 1시간 반이나 걸린다."

-어떻게 해결할 건가.

"도시계획정비법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중소기업 공단이 들어서게 해 일자리를 만들겠다. 대화동~서울 은평구 신사동을 잇는 고속화도로를 만들어 교통문제도 해결하겠다."

-교육인프라 확충 요구도 많은데.

"동국대 의대와 경희대 공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일산 서구에 편중된 4개 실업계고 일부를 덕양구 행신동 쪽에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에 대해선.

"비영리 자원봉사를 하며 고교생·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매년 고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행주산성·서삼릉 등을 현장학습도 시켜준다."

-시장 적임자로서 내세우는 강점은.

"27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쌓은 경영마인드다. 누구보다 시정운영을 잘 할 수 있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교통대책을 세우고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를 80~90%까지 끌어올려 더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겠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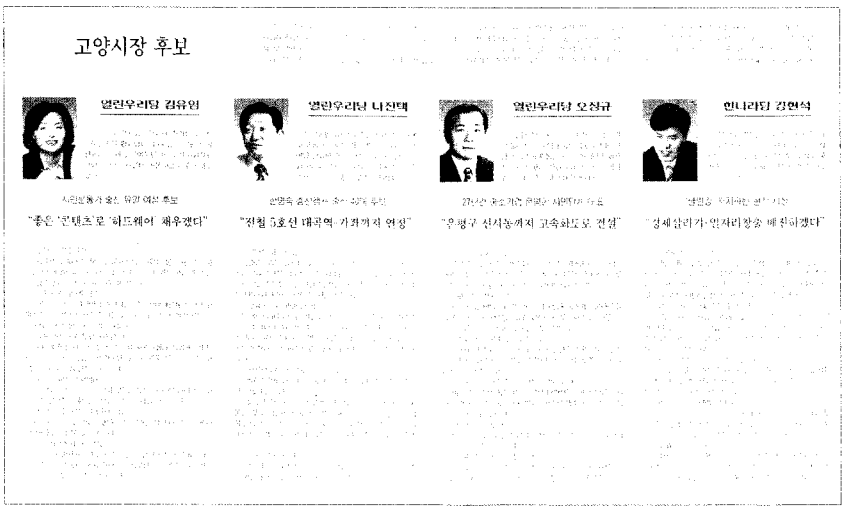
한나라당 강현석

경북 의성 출신으로 고려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했다. 민정당 공채 4기로,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국장·홍보국 국장을 지낸 당직자 출신. 2002년 고양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클린강' 자처하는 현직 시장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매진하겠다"

-고양시 최대 현안은.

"교통문제다. 철도 건설이 근본 해결책이다. 내년 말쯤 경의선 복선화가 마무리되면 체증이 제법 해소될 것이다. 버스 중앙차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여름엔 대중교



통 흐름도 더 원활해 질 것이다. 부족하면 경전철·지하철 등을 추가로 짓겠다."

-교육 인프라 확충 요구가 많은데.

"특목고·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요구가 많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안 된다고 한다. 현 정권이 아닌 차기 정권에선 가능할 거라고 본다. 국제고 등 특성화 학교도 세울 필요가 있다. 서울 소재대학 이전도 검토하겠다."

-재선된다면 어디에 역점을 둘 건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다. 킨텍스 규모 전시공간 2개를 더 짓고 방송·영상산업 단지 조성과 'EA스포츠' 등의 해외 유명 게임업체 유치도 추진할 것이다.

-여론 시각은 어떻다고 보나.

"종합운동장, 덕양어울림누리, 노래하는 분수대 등을 지었다. 경의선 문제도 모든 조건을 합리적으로 분석, 복선화로 결론 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성과들을 잘 평가해 주실 거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진정 누가 바른 사람인지, 누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선택해 주셨으면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차기 정권은 어느 당이 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시정요구이유

2006년 4월 20일자 A8면 『고양시장 후보』 제하의 기사에서 고양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을 소개하면서 열린우리당 후보자 3인과 한나라당 후보자 1인에 대한 사진과 공약사항을 보도하였으나 무소속 후보자인 시정요구인을 배제하였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주의 결정문

주　　문 : 조선일보 2006년 4월 20일자 A8면 『고양시장 후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신 청 취 지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들의 인터뷰 및 얼굴사진만을 다룬 조선일보의 불공정 보도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

이　　유 : 조선일보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 고양시장)와 관련해 『고양시장 후보』 라는 제목하에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특정 2개 정당 후보예정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기사를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고, 여타 후보예정자는 단순소개조차도 배제한 것은 이 사건 기사 보도전 이미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2006. 4. 3.) 시정요구인을 비롯한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사항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시정요구인을 배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9
시정요구인 : 이 정 우 (민주당 보성군의원 예비후보)
피시정요구인 : 보성다향신문
접　수　일 : 2006년 5월 4일
처 리 결 과 : 경 고

보도내용

5·31 지방선거 — 보성군 의회(제 '가' 선거구) 출마자 공약·정책 비교

"보성을 위한 희망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김 용 욱 민주당 후보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입니다.

살아있는 이상 늘 새로운 할일이 있고 그것에 온힘을 기울이는 삶은 즐겁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보성 현실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낙후와 소외 속에 들려오는 체념과 한숨소리를 들으며 희망은 보성을 변화하는 출발 속에서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그 오랜 경력의 정치인을 제치고 참신하고 때묻지 않은 지역일꾼이 대거 등장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깨끗한 지역일꾼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미래는 과거와는 다른 희망과 도약의 시대입니다. 보성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되고 새로운 생각과 꿈이 명멸하는 변화와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제 준비하고 변화하지 않는 삶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김용욱이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경영 마인드와 합리적인 책임의식, 그리고 신뢰받는 지방일꾼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성실한 후보로써 보성 군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담고 넘실대며 밀려오는 수입개방과 소외와 낙후를 온몸으로 이겨내며 보성군민속에서 보성 군민과 함께 하는 김용욱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 지극정성으로 보성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하는 지역일꾼 상을 확립하여 '일등보성'을 만들겠습니다.

둘, 보성 사랑 네트워크로 새로운 이미지 브랜드를 가진 특화상품개발과 유통망 확충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셋, 침체된 보성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유지하여 보성의 젊은이들에게 고용창출의 희망을 전해주겠습니다.

넷, 주암호 - 녹차단지로 이어지는 문화관광연결체제 구축으로 다변화된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보성 지역 중·고등학교를 최우수학교로 육성하여 자녀들이 자부심을 갖고 고향에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따스하게 보살피는 환경을 만들어 삶을 이어가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보성에 여성고용센터의 신설과 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대로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여덟, 보성읍과 웅치에 친환경·고소득 작물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일대혁신을 일으키겠습니다.

❁ ❁ ❁

"땀 흘려 얻은 새마을 운동 경험을 이제 고향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김 종 규 무소속 후보

안녕하십니까? 김종규입니다.

푸른남녘의 들에 이제 새싹이 움트는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덩달아 저의 가슴도 박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면을 통해 존경하는 보성군민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되어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25년간의 뜨거운 청춘을 새마을운동 사업에 헌신하였습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잘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오로지 한길만을 걸어왔습니다.

보성군민의 어려운 삶과 그늘진곳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의 영달과 사익을 버리고 보성군민속에서 보성군민과 함께 보성의 새로운 도약을 펼치기 위해 감히 보성군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길이었고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다가올 것이라고 믿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보성군민께서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과 신뢰를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고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방일꾼은 인기나 조직 그리고 돈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능력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성경제가 어렵고 농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보성읍 상권이 침체되고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변해야 삽니다 바꿔야 삽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한다는 굳은 일념으로 저 김종규가 제 무너진 보성경제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제 저는 보성군의원이 된다면, 하나, 자치단체와 동반자 관계가 아닌 감시

및 감독 그리고 견제기능의 지방의회로 만들겠습니다.

둘, 정부보조금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셋, 보성·웅치와 연계되는 사업을 시행하여 보성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웅치의 특산물인 복분자, 오디, 올벼쌀에 대한 상품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 우리고장의 관광명소를 개발하여 보성에서 쉬고 갈 수 있도록 방갈로, 펜션 등을 적극 장려하고 5일장 주변 주차난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인재양성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보성고등학교를 최우수학교로 만들기 위해 교육역점화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 고령화에 의해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대비하여 노인 보조금을 확대하고 장애우들에 대한 시설개선, 농·배수로시설에 대한 기반 조성 등을 통해 농촌을 부흥시키고 새마을 운동의 실천사례들을 교훈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 ● ●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성 살림을 맡겨야 합니다"

■박 준 선 무소속 후보

안녕하십니까? 백준선입니다.

보성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농촌이 황폐화 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땀과 눈물로 일구어 놓은 보성의 상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과 보성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임기 4년의 기간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아 사업의 연속성과 개발의 지속성을 위해 이렇게 다시 출마의 길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곳 고향에서 정직과 성실을 좌우명으로 삼고 피폐된 농민과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며 지방 일꾼으로서 보성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농민의 요구와 바램 그리고 서민의 아픔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농민들과 서민들의 불편한 목소리와 힘들어 죽겠다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너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듣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소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일꾼으로써 또한 농민의 대변자로써 서민과 상인들의 친구로써 그들의 입장을 대신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출마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방의원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나해서도 안됩니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여 그들과 호흡하고 그들의 아픔을 대신하여 줄 수 있는 깨끗한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4년 간의 지방의원으로 이미 검증된 사람으로써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보내주신다면 보성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제가 아직 이루지 못한 몇가지 정책들을 꼭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먼저 문화유적지 복원에 따른 관광자원개발로 침체된 보성읍의 상권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판소리를 보존·중흥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문화센터를 국책 사업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로 녹차브랜드를 활용한 농촌의 소득증대에 관심을 기울여 살기 좋은 보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의 녹차와 웅치의 올벼쌀등 대표적인 소득 작물의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고소득작물의 지속적인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인에 대한 장수 수당지급과 노인회관 운영비 및 난방비를 더 지원토록 하고 농촌청년들의 고용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확충과 재정지원 등으로 마음놓고 맞벌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영어 타운이 조성되는 보성 남초등학교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보성 문화원 원사 신축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건물이 너무 낡고 협소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고장의 문화활동공간이라는 자부심에 걸맞게 다각도로 교섭을 벌여 국·지방비를 들여 원사 신축에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통해

보성군민 생활 향상 시키겠습니다"

■임 영 수 무소속 후보

존경하는 보성군민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항상 외롭고 소외 받는 우리 이웃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큰 뜻을 품고 오로지 보성의 발전에 매진해왔다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고장이 낳은 위대한 인물 박주선 전 의원님과 묵묵히 일해 온 지난 세월들이 제겐 가장 보람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저 임영수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통해 보성군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보성의 내일을 생각하며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왔습니다.

식물은 과일에 의해서 평가되고 사람은 행동에 의해서 인정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 임영수가 걸어온 지조와 소신의 세월을 부디 기억하여 주십시오.

즉흥적인 발상, 눈치에만 급급한 사람, 한번도 조직을 이끌어 보지 못한 사람에게 보성 살림을 맡기는 것은 운전석에 면허 없는 사람을 앉히는 것처럼 위험하고 불안한 일입니다.

뒷받침해 줄 조직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보성의 산적한 문제를 풀어 갈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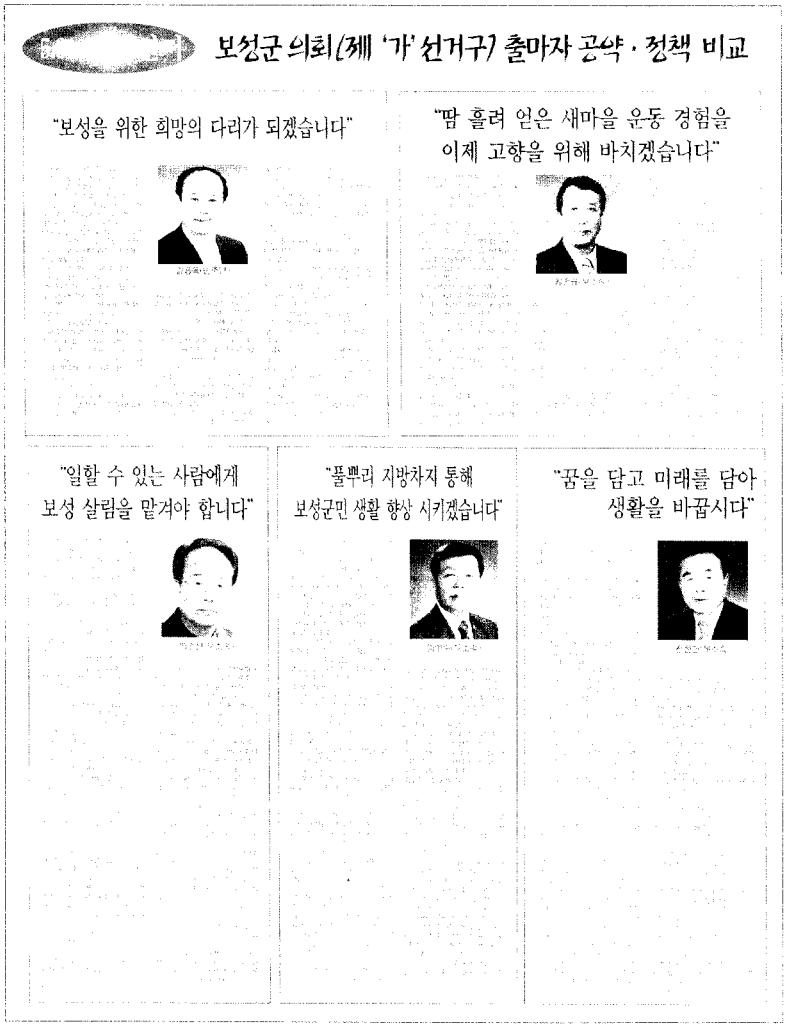
이미 보성살림을 파악하고 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여 다져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또한 정파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깨끗한 사람으로 보성군민의 마음속의 생각을 모두 들을 수 있다고 자부하기에 감히 이렇게 다시 출마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일꾼을 뽑아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지역주민의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어느 정당이 논공행상에 따라 나눠먹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 살림살이를 어느 누가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인물선거이지, 정치꾼을 뽑아 정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게 하는 정치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보성의 도약과 발전은 지조와 소신의 인간성에서 시작됩니다.

보성의 미래와 도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느 정당이 아니라 믿음으로 뭉쳐진 깨끗한 사람들의 자기희생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저의 향후 정책과 공약 그리고 보성에 대한 청사진은 이렇습니다.

하나, 보성상권의 중흥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 보성의 실정에 알맞은 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를 상품화 및 관광자원화 하여 숙박과 위락시설로 연계시켜 과거 보성의 영광을 재현하겠습니다.



둘, 보성의 인재를 개발하고 우수학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재양성기금을 민자로 조성하여 이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내고 보성읍내의 보육시설도 확충하여 명실상부 우리 보성이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다변화된 고품질 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고소득과 연결하는 친환경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실의와 좌절에 신음하는 우리 농민의 아픔을 달래겠습니다.

넷,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 방지를 위하여 노인우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비와 생활비 등 경로보조와 관련된 재정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중소기업의 유치를 통해 농촌청년들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꿈을 담고 미래를 담아 생활을 바꿉시다"

■ 정 찬 관 무소속 후보

군민 여러분께 삼가 인사 올립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예로부터 이웃과 궂은일, 좋은 일을 서로 나누는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합니다.

항상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평생을 몸바쳐 일해 왔던 풍부한 행정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의 길을 걷고자 주민의 대표자이며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 오로지 보성의 발전과 활기찬 미래만을 기원하는 저 정찬관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또한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의로운 고장 보성의 전통을 이으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제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는 것이 저를 낳아주고 키워준 보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선택이라는 마음으로 답답하고 억눌린, 그리고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의정활동의 테두리를 벗어나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 성실과 진실을 받들고 겸손하게 열과 성을 다하여 비리에 물들지 않고 청렴결백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자체 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 확립.

저는 한 때 보성군 예산 부서에서 2번에 걸쳐 4년여 동안 군살림을 깊이 있게 해온 관계로 예산에 밝아서 예산관련 분야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 한푼의 예산도 함부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자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할 것이며 행정의 일관성에서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동반자의 입장으로 도울 것은 돕고 견제 할 것은 견제하여 지방의원 본연의 사명인 군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주민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지방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면,

-주민과 함께,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을 위하여-

1. 각 읍면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유통과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2.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으로 숙박과 위락시설을 확충하여 보고 즐기며 체험하고 쉬어 가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3.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복지향상을 위해 생계비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취업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4. 작목 반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보존 및 군비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5. 지역현안사업은 읍·면 자율적으로 주민이 결정하여 중요성과 완급을 가려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빌 공자 공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초의원이 공약한다고 해 놓고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키지 못할 허세보다는 더 열심히 뛰면서 유권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을 저의 제1공약으로 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요구이유

2006년 5월 1일자 8면 『5·31 지방선거 - 보성군의회('가' 선거구) 출마자 공약·정책 비교』 제하의 기사에서 예비후보자 5인의 정책과 공약사항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으나, 특집 기사를 실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거절하였는데 시정요구인 측이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요구인만을 배제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

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경고 결정문

주　　문 : 보성다향신문 2006년 5월 1일자 8면 『5·31 지방선거 - 보성군의회('가' 선거구) 출마자 공약·정책 비교』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신 청 취 지 : 보성군의회 후보예정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소개하면서 보성군 전체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자 중 시정요구인만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보성다향신문의 불공정 보도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

이　　유 : 보성다향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보성군의원) 후보예정자들('가' 선거구)의 출마의 변을 부각 보도하면서 전체 예비후보 등록자 중 시정요구인 단 한 사람만을 배제한 것은 시정요구인에게 지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예비후보자들의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시정요구인을 배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10
시정요구인 : 정 규 인
　　(무소속 김천시의원 '바' 선거구 예비후보)
피시정요구인 : 김천신문
접　수　일 : 2006년 5월 19일
처 리 결 과 : 주 의

보도내용

시장 4명, 도의원 5명, 시의원 50명 후보 등록

(전략)
바 선거구

기호 1 김현구
정당 : 열린우리당
생년월일 : 1953년 06월 12일 (52세)
직업 : 현구 석재산업 대표
학력 : 지례중학교 3년 중퇴
경력 : 김천시의회 의원, 새마을지도자 지례면협의회 회장

기호 2-가 오연택
정당 : 한나라당
생년월일 : 1963년 07월 03일 (42세)
직업 : 김천시의회 의원
학력 : 상주농업전문대학 원예과 졸업

경력 : 제4대 김천시의회 의원, 임인배 국회의원비서
기호 2-나 전정식
정당 : 한나라당
생년월일 : 1948년 12월 20일 (57세)
학력 : 대덕주유소 대표
학력 : 성의상업고등학교(現 성의고등학교) 1년 중퇴
경력 : 제2대 김천시의회의원, 제3대 김천시의회의원

기호 6 김인수
정당 : 무소속
생년월일 : 1956년 05월 09일 (50세)
학력 : 농업
학력 : 상주대 축산학과 졸업
경력 : 前 금릉군 새마을 청소년회 회장,
前 지례면 이장 협의회 총무

기호 7 문재원
정당 : 무소속
생년월일 : 1948년 05월 23일 (58세)
학력 : 자유기고가
학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재적
경력 : 지례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기호 8 이명기
정당 : 무소속
생년월일 : 1957년 02월 28일 (49세)
학력 : 명 인테리어 대표
학력 : 성광고등학교 졸업
경력 : 김천청년회의소 회장, 김천시체육회 이사

기호 9 이상대
정당 : 무소속
생년월일 : 1953년 04월 08일 (53세)
학력 : 농업
학력 : 김천농림고등학교 졸업
경력 : 제2대 김천시의회의원, 부항면 새마을 지도자
회장
(후략)

시정요구이유

2006년 5월 18일자 4~5면 『김천시의원선거 '바' 선거구』 관련 기사에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을 소개하면서 시정요구인을 배제하였기에 사과문 및 후보자 정보를 A3 용지 크기로 게재할 것을 요구한다.

주의 결정문

주 문 : (주)김천신문사가 발행한 김천신문 2006년 5월 18일자 4, 5면 『5·31지방선거 입후보자』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신 청 취 지 : 김천시의원선거 '바' 선거구 후보자 8인 중 시정요구인은 배제하고 7인의 후보자만을 소개한 김천신문의 불공정 보도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
이 유 : 김천신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김천)와 관련해 「5·31지방선거 입후보자」 라는 제목하에 후보자들을 소개하면서 김천시의원선거 '바' 선거구의 경우, 8인의 후보자 중 시정요구인만을 배제한 것은 이 사건 기사 보도전 이미 중앙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한 (2006. 5. 17.)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부적절한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하여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와 피해를 입었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11
시정요구인 : 강 종 만 (무소속 전남 영광군수 후보)
피시정요구인 : 영광21
접 수 일 : 2006년 5월 23일

처 리 결 과 : 기 각

보도내용

5·31지방선거 카운트다운 돌입

민주당 정기호 VS 무소속 강종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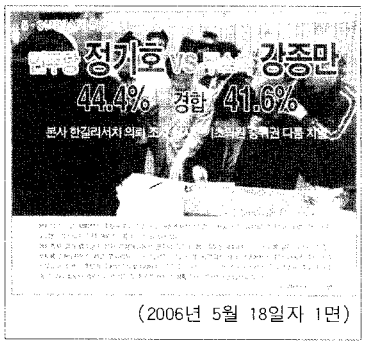
44.4% 경합 41.6%

본사 한길리서치 의뢰 조사 실시

기초의원 중위권 다툼 치열

본사가 5·31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기점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울의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영광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15~16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영광군수 선거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정기호 예비후보는 44.4%로 41.6%를 얻은 무소속 강종만 후보를 2.8%포인트 차로 오차범위내에서 앞서가고 있다. 또 광역의원 제1선거구에서 민주당 이동권 후보가 열린우리당 조영기 후보와 오차범위외로 따돌리고 선두로 나서고 있고, 제2선거구에서 민주당 박찬수 후보가 무소속 주경채 후보와 열린우리당 장원종 후보를 제치는 상황에서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다.



(2006년 5월 18일자 1면)

❀ ❀ ❀

정기호 강종만 양자대결 지지도 오차범위내 접전

군수선거 부동층 10%대로 축소

당선가능성은 정기호 앞서

지방선거 투표의향

영광군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할 의향에 대해, "반드시 투표한다"는 87.3%로 나타남. 그밖에 "가급적 투표한다" 3.7%, "그때 가봐야 알겠다" 8.5%, "기권한다 0.5%"로 나타남.

기존 선거의 투표율이 반드시 투표한다는 응답보다 10% 정도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의 실제 투표율은 70% 후반으로 예상됨.

영광군수선거 후보 지지도

영광군 유권자들의 군수 선거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정기호 후보가 44.4%로 무소속 강종만 후보(41.6%)보다 2.8%P높게 나타남. 한편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부동층은 14.0%임.

투표예상층(반드시 투표한다는 층, N=873)에서도 민주당 정기호 후보가 46.1%로 무소속 강종만 후보(42.5%)보다 3.6%P 높게 나타남. 한편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부동층은 11.1%임.

민주당 정기호 후보 지지도는 △연령별로 30대 △선거구별로 제1선거구 △권역별로 대마·묘량·불갑면, 영광읍 △학력별로 전문대졸 △직업별로 블루칼라, 자영업, 가정주부 △지지정당별로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무소속 강종만 후보 지지도는 △선거구별로 제2선거구 △권역별로 백수·염산면 △직업별로 농·임·어업 △지지정당별로 열린우리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영광군수선거 당선 예상

영광군 유권자들은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로 민주당 정기호 후보가 37.1%로 무소속 강종만 후보(31.1%)보다 높게 나타남. 한편 잘 모른다는 의견은 31.8%임. 투표예상층(반드시 투표한다는 층, N=873)에서도, 민주당 정기호 후보(38.4%), 무소속 강종만 후보(31.8%) 순으로 나타남.

민주당 정기호 후보는 △연령별로 30대 △선거구별로 제1선거구 △권역별로 영광읍, 대마·묘량·불갑면 △학력별로 전문대졸, 대졸이상 △직업별로 자영업, 가정주부, 화이트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무소속 강종만 후보는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별로 30대 △선거구별로 제2선거구 △권역별로 백수·염산면 △학력별로 전문대졸, 고졸 △직업별로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농·임·어업 △지지정당별로 열린우리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제1선거구 도의원선거 후보 지지도

영광군 제1선거구 유권자(N=537)들의 영광군 제1선거구 도의원선거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이동권 후보가

43.8%로 열린우리당 조영기 후보(40.5%)보다 3.3%P 높게 나타남. 한편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부동층은 15.7%임.

또한, 투표예상층(반드시 투표한다는 층, N=479)에서도 민주당 이동권 후보(45.0%), 열린우리당 조영기 후보(41.5%)순으로 나타남. 한편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부동층은 13.5%임.

민주당 이동권 후보는 △성별로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별로 40대, 30대 △권역별로 군서·군남면, 대마·묘량·불갑면 △학력별로 중졸이하 △직업별로 화이트칼라, 농·임·어업 △지지정당별로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열린우리당 조영기 후보는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권역별로 영광읍 △학력별로 전문대졸, 고졸 △직업별로 자영업 △지지정당별로 열린우리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제1선거구 도의원선거 당선 예상

영광군 제1선거구 유권자(N=537)들은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로, 민주당 이동권 후보가 35.1%로 열린우리당 조영기 후보(32.5%)보다 높게 나타남. 한편 잘모른다는 의견은 32.4%임. 또한, 투표예상층(반드시 투표한다는 층, N=479)에서도 민주당 이동권후보(36.8%), 열린우리당 조영기 후보(32.6%)순으로 나타남. 한편 잘모름은 30.6%임.

민주당 이동권 후보는 △연령별로 30대 △권역별로 대마·묘량·불갑면, 군서·군남면 △학력별로 대졸이상 △직업별로 화이트칼라 △지지정당별로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열린우리당 조영기 후보는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별로 19~29세 △권역별로 영광읍 △학력별로 전문대졸, 고졸, 대졸이상 △직업별로 자영업, 화이트칼라 △지지정당별로 열린우리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제2선거구 도의원선거 후보 지지도

영광군 제2선거구 유권자들의 도의원 선거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박찬수 후보가 34.1%로 1위인 가운데, 무소속 주경채 후보(17.8%), 열린우리당 장원종 후보(15.2%), 무소속 김양모 후보(11.3%) 순으로 나타남.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부동층은 21.6%임.

또한, 투표예상층(반드시 투표한다는층, N=393)에서도 민주당 박찬수 후보(36.1%), 무소속 주경채 후보

■ 특집 : 5·31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정기호 강종만 양자대결 지지도 오차범위내 접전

군수선거 부동층 10%대로 축소 · 당선가능성은 정기호 앞서

■표본의 특성

구 분	사례수	%
■ 전체	1,000	100
□ 성별		
남 성	493	49.3
여 성	507	50.7
□ 연령별		
19~29세	174	17.4
30대	159	15.9
40대	177	17.7
50대	490	49.0
□ 선거구별		
영광선거구	537	53.7
영광군선거구	463	46.3
□ 권역별		
영광읍	325	32.5
대마·묘량·불갑	104	10.4
군서·군남	108	10.8
백수·염산	202	20.2
홍농·장갑·낙월	261	26.1
□ 학력별		
중졸이하	476	48.6
고졸	333	33.5
전문대졸	48	4.8
대졸이상	136	13.0
□ 직업별		
농 임 어업	357	37.1
자 영 업	112	11.4
블 루 칼 라	63	6.3
화이트칼라	64	6.9
가정주부	232	23.7
학 생	33	3.7
무직/기타	162	16.9

■조사의 설계(Sample Design)

(2006년 5월 18일자 6면)

(19.0%), 열린우리당 장원종 후보(14.9%), 무소속 김양모 후보(11.2%) 순으로 나타남.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부동층은 18.9%임.

민주당 박찬수 후보는 △연령별로 19~29세 △권역별로 백수·염산면 △학력별로 대졸이상 △지지정당별로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무소속 주경채 후보는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별로 30대, 40대 △권역별로 홍농읍·법성·낙월면 △학력별로 고졸 △직업별로 자영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제2선거구 도의원선거 당선 예상

영광군 제2선거구 유권자(N=463)들은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로, 민주당 박찬수 후보가 29.2%로 1위인 가운데, 무소속 주경채 후보(12.7%), 열린우리당 장원종 후보(10.9%), 무소속 김양모 후보(6.8%) 순으로 나타남. 한편 잘 모른다는 의견은 40.4%임. 또한 투표예상층(반드시 투표한다는 층, N=393)에서도 민주당 박찬수 후보(29.7%), 무소속 주경채 후보(13.8%), 열린우리당 장원종 후보(11.0%), 무소속 김양모 후보(7.0%) 순으로 나타남. 한편 잘모름은 38.5%임.

민주당 박찬수 후보는 △연령별로 40대, 19~29세 △권역별로 백수·염산면 △학력별로 대졸이상 △직업별로 자영업 △지지정당별로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무소속 주경채 후보는 △연령별로 30대 △학력별로 고졸 △직업별로 농·임·어업 △지지정당별로 열린우리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가선거구 군의원선거 후보 지지도

영광군 (가)선거구 유권자(N=537)들의 군의원 선거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강필구 후보가 19.1%로 1위인 가운데, 민주당 김준성 후보(14.9%), 민주당 신언창 후보(12.7%)가 10% 이상의 지지도를 얻음. 한편 잘 모른다는 의견은 17.4%임.

민주당 강필구 후보는 △권역별로 대마·묘량·불갑면 △직업별로 농·임·어업 △지지정당별로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민주당 김준성 후보는 △연령별로 40대 △권역별로 군서·군남면 △학력별로 대졸이상 △직업별로 화이트칼라 △지지정당별로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나선거구 군의원선거 후보 지지도

영광군 (나)선거구 유권자(N=463)들의 군의원 선거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이장석 후보가 13.5%로 1위인 가운데, 민주당 유병남 후보(13.2%)가 10%대 이상의 지지도를 나타내며 그 뒤를 민주당 김봉환 후보, 무소속 조삼차 후보 순으로 나타남.

민주당 이장석 후보는 △연령별로 40대, 30대 △권역별로 홍농읍·법성·낙월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민주당 유병남 후보는 △권역별로 백수·염산면 △학력별로 대졸이상 △직업별로 가정주부 △지지정당별로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

광역, 민주당 후보 우세속 상대후보 추격전 관전포인트

기초, 상위 당선권 근접·중위권 오차범위내 초접전

문 1) 선생님께서는 이번 5월 3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투표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투표한다
② 가급적 투표한다
③ 그때 가봐야 알겠다
④ 기권한다

문 2) 선생님께서 지지하시는 정당은 어느 당입니까?

① 열린우리당
② 한나라당
③ 민주당
④ 민주노동당
⑤ 국민중심당
⑥ 기타정당(　　)
⑦ 지지정당 없다

※ 다음은 영광군수 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3) 선생님께서는 오는 5월31일 영광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전 전남도의원인 정기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전 전남도의원인 강종만 후보가 출마할 경우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① 민주당 정기호
② 무소속 강종만

③ 기타후보(　　)
④ 잘 모르겠다

문 4) 그럼 선생님의 지지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번 영광군수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십니까?
① 민주당 정기호
② 무소속 강종만
③ 기타후보(　　)
④ 잘 모르겠다

〈광역 제1선거구 · 기초 가지구〉
※ 이번에는 도의원 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5) 선생님께서는 오는 5월31일 영광군 도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전 전남도의원인 조영기 후보, 민주당으로 민주당 전남도당 부대변인인 이동권 후보가 출마할 경우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① 열린우리당 조영기
② 민주당 이동권
③ 기타후보(　　)
④ 잘 모르겠다

문 6) 그럼 선생님의 지지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번 영광군 도의원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십니까?
① 열린우리당 조영기
② 민주당 이동권
③ 기타후보(　　)
④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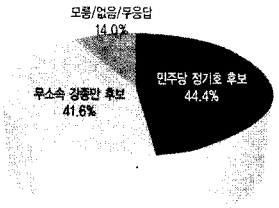
※ 이번에는 군의원 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7) 다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광군 가선거구 군의원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입니다.
- 군남면 출신의 영광군의회 의원인 장재곤 씨
- 영광읍 출신의 영광사회운동협의회 전회장인 최은영 씨
- 불갑면 출신의 영광군의회 의원인 강필구 씨
- 군서면 출신의 심지종합건설 대표이사인 김준성 씨
- 영광읍 출신의 영광군의회 의원인 신언창 씨
- 대마면 출신의 영광군민의날 집행위원장인 이종윤 씨
- 모량면 출신의 영광농협 전직원인 김일남 씨
- 영광읍 출신의 전직 지방공무원인 김천식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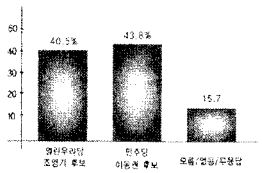
문 8) 선생님께서는 이번 군의원 선거에서 이 중 누구를 가장 지지하십니까?
① 열린우리당 장재곤
② 열린우리당 최은영
③ 민주당 강필구
④ 민주당 김준성
⑤ 민주당 신언창
⑥ 민주당 이종윤
⑦ 무소속 김일남
⑧ 무소속 김천식

광역, 민주당 후보 우세속 상대후보 추격전 관전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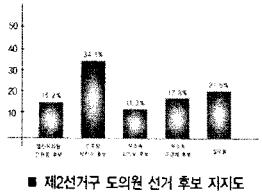
기초, 상위 당선권 근접 · 중위권 오차범위내 초접전



■ 영광군수 선거 후보 지지도



■ 제1선거구 도의원 선거 후보 지지도



■ 제2선거구 도의원 선거 후보 지지도

(2006년 5월 18일자 7면)

⑨ 기타후보(　　)
⑩ 잘 모르겠다

〈광역 제2선거구 · 기초 나지구〉

※ 이번에는 도의원 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5) 선생님께서는 오는 5월31일 영광군 도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영광볼링센터 대표인 장원종 후보, 민주당으로 서울환경산업 영광지사장인 박찬수 후보, 무소속으로 법성면번영회장인 김양모 후보, 무소속으로 영광군농민회 부회장인 주경채 후보가 출마할 경우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① 열린우리당 장원종
② 민주당 박찬수
③ 무소속 김양모
④ 무소속 주경채
⑤ 기타후보(　　)
⑥ 잘 모르겠다

문 6) 그럼 선생님의 지지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번 영광군 도의원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십니까?

① 열린우리당 장원종
② 민주당 박찬수
③ 무소속 김양모
④ 무소속 주경채
⑤ 기타후보(　　)
⑥ 잘 모르겠다

※ 이번에는 군의원 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7) 다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광군 가선거구 군의원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입니다.

- 염산면 출신의 염산면청년회 전회장인 은희삼 씨
- 홍농읍 출신의 봉대건설 대표이사인 이상근 씨
- 백수읍 출신의 백수읍청년회 전회장인 장기소 씨
- 염산면 출신의 영광군농업경영인회 전회장인 김봉환 씨
- 법성면 출신의 대성굴비 대표이사인 박철복 씨
- 백수읍 출신의 영광군의회 의원인 유병남 씨
- 홍농읍 출신의 영광군의회 의원인 이장석 씨
- 염산면 출신의 영광군의회 전의원인 김강헌 씨
- 법성면 출신의 법성공인중개사 대표인 김삼차 씨
- 백수읍 출신의 호남투데이신문 편집국 사회부 전부장인 김상희 씨
- 홍농읍 출신의 홍농읍청년회 전회장인 김성진 씨
- 법성면 출신의 영광군의회 의원인 조삼차 씨
- 염산면 출신의 영광군의회 의원인 홍순남 씨

문 8) 선생님께서는 이번 군의원 선거에서 이 중 누구를 가장 지지하십니까?

① 열린우리당 은희삼
② 열린우리당 이상근
③ 열린우리당 장기소
④ 민주당 김봉환
⑤ 민주당 박철복
⑥ 민주당 유병남
⑦ 민주당 이장석
⑧ 무소속 김강헌
⑨ 무소속 김삼차
⑩ 무소속 김상희
⑪ 무소속 김성진
⑫ 무소속 조삼차
⑬ 무소속 홍순남
⑭ 기타후보(　　)
⑮ 잘 모르겠다

시정요구이유

2006년 5월 18일자 6면 『특집 : 5 · 31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 정기호 강종만 양자대결 지지도 오차범위내 접전』 제하의 기사에 게재된 여론조사결과는 표본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50대까지만 조사한 것으로 표기되어, 영광군 전체 유권자의 33%를 차지하는 60대 이상에 대해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무의미한 조사결과임에도 '부동층이 10%로 축소되고 당선가능성은 특정후보자가 앞선다'는 기사내용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한다.

기각 결정문

주　　문 :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표본에서 배제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해 여론을 호도한 영광21의 불공정 보도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다.

이　　유 : 1. 시정요구인 주장

피시정요구인은 영광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관련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설계상 모집단을 2006년 5월 영광군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로 설정했음을 밝히고 표본의 연령별 분포를 19~29세, 30대, 40대, 50대로 적시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영광군 전체 유권자 중 60대 이상이 33%에 이른다며 60대 이상을 배제한 여론조사 결과는 무의미함에도 이를 토대로 '당선가능성이 특정 후보가 높게 나타남' 등을 보도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판단컨대, 당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4항과 당위원회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제2항의 규정(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적시하여야 한다)에 따라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이러한 준수요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준수를 촉구할 수는 있으나, 당위원회가 조사방법, 피조사자 선정방법 등 여론조사방법의 공정성여부까지 판단하여 그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60대 이상을 표본에서 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시정요구인이 당위원회에 증빙자료로 제출한 '한길리서치연구소의 영광군민 선거환경 여론조사 보고서'상의 연령별 분류에서 50대 이상 490명이 이 사건 기사에서 표기된 50대 490명과 일치되는 점을 감안해 보건대 피시정요구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50대 이상'을 '50대'로 단순 오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정 연령대를 배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요구인이 사할린동포들로부터 무단으로 당비를 납부받아 경찰조사중이라고 보도되었으나 해당 사건이 무혐의 내사종결되어 후속보도를 요구한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12
시정요구인 : 박 명 훈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
피시정요구인 : 경기일보
접　수　일 : 2006년 5월 23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사할린동포 당비납부 논란

안산 50여명중 상당수
'우리당 입당·당비 인출' 조차 몰라

열린우리당이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할린영구이주교포(이하 사할린교포) 50여 명으로부터 일정액의 당비를 전화이용요금에 포함시켜 납부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교포들 상당수가 입당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당비 자동납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난 14일부터 돌연 납부된 당비를 돌려주고 있어 입당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 고향마을에 거주하는 사할린 교포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몇몇 사할린 교포들은 매달 전화요금 청구서상에 콘텐츠(사이버패스) 사용료 1천원씩 청구된 요금서를 받았다.

이후 이같은 요금서를 받은 사할린 교포들의 숫자는 늘어나 최근까지 5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씨(71·여)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3개월 동안 집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에 콘텐츠 사용료로 1천원씩 청구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지난 2월에는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미납 고지서가 발부돼 지난달 24일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가 사할린 교포들의 전화요금 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요금이 열린우리당 당비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밝혀져 이들 사할린 교포들이 우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포들만 우리당에 입당한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상당수 교포들은 '자신들이 입당원서를 제출했던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당비가 자동으로 납부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1천원씩 납부했다는 이모씨(65)는 "우리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입원서를 권유받거나 가입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국회의원 보좌관인 김모씨가 지난 14일 오후 고향마을을 방문, 사할린교포 32명에게 납부된 당비를 돌려준데 이어 15일 저녁 개별 방문을 통해 사할린 교포들에게 당비를 되돌려주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당비를 돌려받는 해당 교포들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고 수령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당비를 돌려받았다는 교포 남모씨(76)는 "무슨 돈인지는 몰랐지만 전화로 돈을 준다기에 4천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당비 반환 현장에 있었던 고모씨(70)는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을 4명 봤는데 이중 2명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보좌관은 "사실을 확인해줄 입장도 아니고 그런 사실도 없다"면서 "어제도 간 적이 없고 오늘도 갈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 도당 관계자는 "고향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 입당원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자신이 입당원서를 작성해 놓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난감할 때가 있다"면서 "입당원서도 받지 않은 채 근거 없이 당비를 받을 수 있겠냐"고 해명했다.

❁ ❁ ❁

사할린교포 당비 '변칙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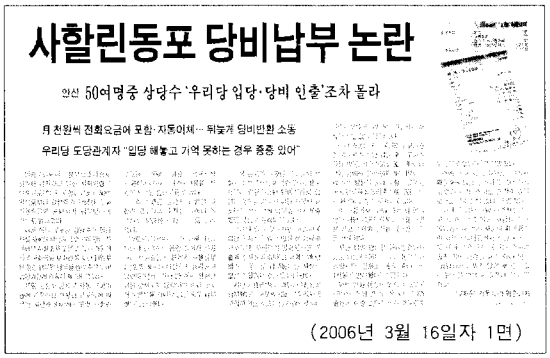
우리당 도당, 절차없이 돌연 현금으로 돌려줘…
일부 입당원서 글씨체·날인도장 같아 또다른 의혹
당 관계자 "일부 교포 한글 못써 대신 작성해줬다"

〈속보〉안산시 고향마을에 거주하는 사할린 교포 150여명이 열린우리당에 입당, 이중 59명이 당비를 납부해 논란(본보 16일자 1면)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당 도당이 사무처장의 지시 하에 변칙적으로 당비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의 일부 입당원서를 확인한 결과, 필체가 똑같거나 심지어 도장이 동일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당원서 작성과정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16일 우리당 도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 사동 고향마을에 거주하는 사할린교포 150명은 지난해 8월부터 우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우리당은 59명으로부터 매달 전화요금 콘텐츠료에 포함시켜 1천원씩(1명은 2천원씩) 당비를 납부받아 왔다.

그러나 매월 1천원이 전화요금 고지서로 청구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사할린 교포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상당수 사할린 교포들이 당원 가입이나 당비 납부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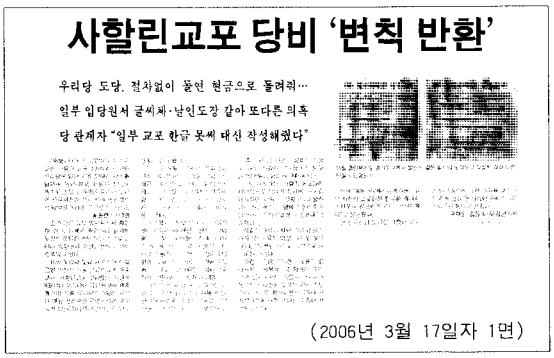

사할린동포 당비납부 논란

안산 50여명중 상당수 '우리당 입당·당비 인출'조차 몰라

月천원씩 전화요금에 포함·자동이체… 뒤늦게 당비반환 소동

우리당 도당관계자 "입당 해놓고 기억 못하는 경우 종종 있어"

(2006년 3월 16일자 1면)


사할린교포 당비 '변칙 반환'

우리당 도당, 절차없이 돌연 현금으로 돌려줘…
일부 입당원서 글씨체·날인도장 같아 또다른 의혹
당 관계자 "일부 교포 한글 못써 대신 작성해줬다"

(2006년 3월 17일자 1면)

이 과정에서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우리당 도당 내부에선 정상적인 방법을 거쳐 당비를 반환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사무처장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산시 상록갑 당원협의회에 연락, 당비를 반환해 주도록 조치하고 기간당원인 사할린 교포들을 일반당원으로 전환하려 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인 김모씨는 지난 14일 도당사를 방문, 당비를 돌려줄 사할린 교포들의 명단을 도당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받은 후 지난 14·15일 고향마을을 방문, 해당 사할린 교포들에게 모두 28만9천원의 당비를 반환해줬다.

도당 관계자는 "사할린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적법적 절차에 따라 입당했지만 이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고 당비를 돌려주며 일반당원 전환작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김 보좌관이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던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할린 교포들의 입당원서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일부 입당원서에 기입된 글씨체가 동일하고 날인된 도장이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입당원서 작성과정에 대한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관계자는 "일부 사할린 교포들은 한글을 제대로 쓰지못해 김모씨가 일부 작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당 도당은 사할린 교포의 입당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 ❁ ❁

사할린동포 당비 조사착수

우리당 도당, 안산署에 수사의뢰… 선관위도 위법여부 검토

〈속보〉열린우리당이 안산 사할린동포들로부터 당비를 받은데다 입당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6·17일자 1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 가입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사할린 동포들의 우리당 입당 및 당비 납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17일 우리당 도당 관계자들과 경찰에 따르면, 우리당 도당은 본보 보도 이후 사할린교포의 입당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이날 오전 안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 도당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안산경찰서는 20일부터 사할린 교포들의 입당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안산경찰서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민감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충분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위법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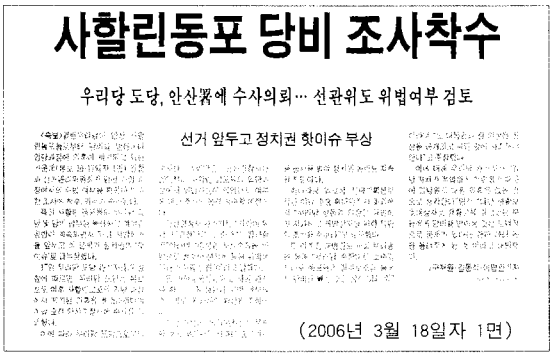
또 안산상록선관위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놓고 우리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벌여 정치권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주요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계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 주장대로 소수일지라도 동포들의 정부보조금 등에서 당비를 빼간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노 대통령과 정 의장은 진상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관계자는 "입당 자체가 적법하게


사할린동포 당비 조사착수

우리당 도당, 안산署에 수사의뢰… 선관위도 위법여부 검토

선거 앞두고 정치권 핫이슈 부상

(2006년 3월 18일자 1면)

이뤄졌기 때문에 입당원서 대필 의혹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당비를 받아온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돈을 돌려주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 ❀

입당원서 이미 작년초에 받아

사할린동포에 몇몇이 권유… 8월 이후 제출

〈속보〉열린우리당이 사할린 동포들로부터 당비를 납부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본보 16·17·18일자 1면) 가운데 실제 당원 가입보다 6개월 앞선 지난해 초 입당원서 작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우리당 경기도당 관계자와 안산 고향마을 사할린 동포들에 따르면, 우리당은 최근 사할린 동포들의 무더기 입당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4·15 양일간 당원으로 가입한 150명 중 당비를 납부한 59명의 당비를 전액 환불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당은 입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입당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8월 이후 입당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할린 동포 일부는 지난해 2월께 미리 입당원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사할린 동포들의 당원 가입 사실을 알고 난 후 확인을 거치면서 (사할린 동포들의) 입당원서 작성이 작년 초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할린 동포들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했던 김모씨(73)도 "지난해 정월에 받았기 때문에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150여명의 입당원서를 받아 지역의 당 관계자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우리당이 보관하고 있는 입당원서에 '가입 날짜란'이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지역의 당 관계자는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9일 열린우리당이 사할린 영구이주 일부 교포들에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당비를 납부받아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본보 보도와 관련,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 추진과 함께 검찰의 수사 착수, 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당이 사할린동포 정부보조금을 당비 명목으로 갈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선관위는 여당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도덕적으로 공당에 용납되지 않는 일인만큼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사하겠다"며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입당원서 이미 작년초에 받아

사할린동포에 몇몇이 권유… 8월이후 제출

안산지역 당 관계자 "추후 입장 밝히겠다"

한나라, 진상조사 나서

(2006년 3월 20일자 1면)

시정요구이유

2006년 3월 16일자 1면 『사할린동포 당비납부 논란』, 동년 동월 17일자 1면 『사할린교포 당비 '변칙 반환'』, 동년 동월 18일자 1면 『사할린동포 당비 조사착수』, 동년 동월 20일자 1면 『입당원서 이미 작년초에 받아』 제하의 각 기사에서 경기도 안산시 사할린 귀국동포 50여명이 자신도 모르게 전화요금에서 수개월동안 월 1,000원씩 열린우리당 당비로 빠져 나갔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정당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라는 등의 내용이 여러 차례 보도되어 사건이 확대됨에 따라 열린우리당 안산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해야 했으며, 지난 4월 5일 사할린동포들이 "당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당비를 냈다"고 발표를 한 데다 5월 17일자로 해당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었으므로 사실을 바로잡고자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보는 지난 3월 16일자 내지 20일자 각 1면 『사할린동포 당비납부 논란』, 『사할린교포 당비 '변칙반환'』, 『사할린동포 당비 조사착수』, 『입당원서 이미 작년 초에 받아』 제하의 각 기사에서 '사할린교포들이 자신도 모르게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가입되었으며, 아울러 당비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였던 박명훈씨(45,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는 경찰과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결국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7일자로 종결되었다.

한편, 사할린교포들은 평소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자진하여 박 후보의 정당에 입당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일 뿐 입당절차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왔다.

시정요구 후 보도문

경기일보 : 『'사할린동포 당비 징수' 안산시청 "위법사실 없다"』(2006년 5월 24일자 10면)

내 용 :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이 안산 사할린동포로부터 입당원서와 함께 당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인 가운데(본보 3월 16·17·18·20·21일자 1면) 당비 문제를 수사해 온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당시 열린우리당 안산시장 출마를 준비해온 박명훈씨(45)에 대해 당비징수 과정에 강요나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 한다고 밝혔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그동안 입당원서를 작성한 고향마을 사할린동포들을 상대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으나 당비 징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지난 17일 최종 내사종결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31일 기간당원모집을 마감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당원)들로부터 1천원의 당비를 받아야 하는데 2천원(3명)을 받은 것은 한꺼번에 많은 당원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전산착오로 빚어진 것이라고 경기도당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명훈씨는 "경찰과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결국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할린교포들은 평소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나를 돕기 위해 자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정당에 입당해 당비를 납부했을 뿐 입당절차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사할린동포 당비 징수'

안산지청 "위법사실 없다"

〈속보〉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이 안산 사할린동포로부터 입당원서와 함께 당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인 가운데(본보 3월16·17·18·20·21일자 1면) 당비 문제를 수사해 온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당시 열린우리당 안산시장 출마를 준비해온 박명훈씨(45)에 대해 당비징수 과정에 강요나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 한다고 밝혔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그동안 입당원서를 작성한 고향마을 사할린동포들을 상대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으나 당비 징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지난 17일 최종 내사종결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해 8월31일 기간당원모집을 마감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당원)들로부터 1천원의 당비를 받아야 하는데 2천원(3명)을 받은 것은 한꺼번에 많은 당원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전산착오로 빚어진 것이라고 경기도당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박명훈씨는 "경찰과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결국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할린교포들은 평소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나를 돕기 위해 자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정당에 입당해 당비를 납부했을 뿐 입당절차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안산=

구재원기자 kjwon@kgdi.co.kr

시정요구인이 당원을 모으기 위해 사할린동포들로부터 무단으로 당비를 납부받았다고 보도되었으나 해당 사건이 무혐의 내사종결되어 후속보도를 요구한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13
시정요구인 : 박 명 훈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
피시정요구인 : 경향신문
접 수 일 : 2006년 5월 23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목포 현직 공무원 28명 무더기 민주 입당 '충격'

안산시장 與후보는 사할린교포 입당시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직 공무원이 무더기로 정당에 가입하고 사할린 교포까지 입당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목포시 5급 직원 ㄱ씨 등 28명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민주당 전남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공무원이 대거 특정정당에 입당했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공무원법을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동장을 맡고 있는 ㄱ씨와 ㅈ씨는 지난해 말 민주당에 가입한 후 매월 1,000원씩 4개월치 당비 4,000원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ㅇ과장도 지난해 10월 말 가입한 후 3개월분 당비를 냈으며, 8급 직원 ㅎ씨도 지난해 9월1일 가입, 당비를 휴대전화 요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선관위가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당원명부를 건네받아 공무원 입당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선관위는 적발된 직원 28명 가운데 3명은 입당원서를 썼다고 시인했고, 나머지는 이를 부인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민주당 입당사실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가자 모두 탈당계를 냈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와 관련, 목포시 공무원 28명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당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3월6일 최종 확정된 당원 명부에서 뺐다고 해명했다.

또 사할린 영구이주교포(사할린 교포)가 매달 40만원씩 받는 정부보조금에서 당비가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목포 현직 공무원 28명
무더기 민주 입당 '충격'
안산시장 與후보는 사할린교포 입당시켜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할린 교포 50여명의 전화요금 청구서에 선 지난해 8월부터 매달 콘텐츠 사용료(사이버패스)가 1,000원씩 빠져 열린우리당 당비 계좌에 입금됐다.

사할린 교포 이모씨(65)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1,000원씩 빠져나갔다"며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적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거나 입당원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은 열린우리당의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경선에 대비해 무리하게 당원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지역 국회의원의 김모 보좌관은 받은 당비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이들로부터 받은 입당원서에는 본인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는 등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정요구이유

2006년 3월 17일자 8면 『목포 현직 공무원 28명, 무더기 민주 입당 '충격' - 안산시장 與후보는 사할린 교포 입당시켜』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 안산시 사할린 귀국동포 50여명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도 모르게 전화요금에서 수개월동안 월 1,000원씩 열린우리당 당비로 빠져나가 시정요구인이 무리하게 당원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4월 5일 사할린동포들이 "당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당비를 냈다"고 발표를 한 데다 5월 17일자로 해당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었으므로 사실을 바로잡고자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보는 지난 3월 17일자 8면 『목포 현직 공무원 28명, 무더기 민주 입당 '충격' - 안산시장 與후보는 사할린 교포 입당시켜』 제하의 기사에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할린 교포들의 전화요금 청구서를 이용하여 당사자 몰래 열린우리당 당비계좌에 입금됐는데 이는 열린우리당의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경선에 대비해 무리하게 당원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였던 박명훈씨(45,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는 경찰과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결국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7일자로 종결되었다.

한편, 사할린교포들은 평소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자진하여 박 후보의 정당에 입당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일 뿐 입당절차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왔다.

시정요구 후 보도문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2006년 5월 26일자 12면)
내 용 : '안산시장 與 후보 사할린교포 입당시켜' 기사(3월 17일자 8면 보도)와 관련, 당시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였던 박명훈씨(45·현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는 경찰과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결국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7일자로 종결되었다.

한편 사할린교포들은 평소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자진하여 박 후보의 정당에 입당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일 뿐 입당절차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왔다.

반론보도문

'안산시장 與 후보 사할린교포 입당시켜' 기사(3월 17일자 8면 보도)와 관련, 당시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였던 박명훈씨(45·현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는 경찰과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결국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7일자로 종결되었다.

한편 사할린교포들은 평소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자진하여 박 후보의 정당에 입당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일 뿐 입당절차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왔다.

시정요구인이 사할린동포들로부터 무단으로 당비를 납부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받는 중이라고 보도되었으나 해당 사건이 무혐의 내사종결되어 후속보도를 요구한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14
시정요구인 : 박 명 훈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
피시정요구인 : 중앙일보
접 수 일 : 2006년 5월 23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50여 명
본인 모르게 열린우리에 당비

월 1000원씩 전화료 포함
열린우리 "입당원서 받아"

경기도 안산시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50여 명이 자신도 모르게 수개월 동안 매달 1000원씩의 당비를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에 납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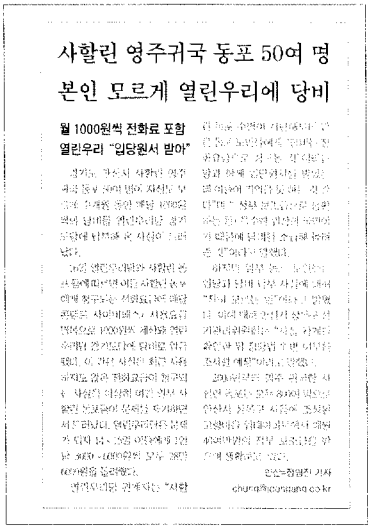
16일 열린우리당과 사할린 동포 등에 따르면 이들 사할린 동포에게 청구되는 전화요금에 매달 콘텐츠(사이버패스) 사용요금 명목으로 1000원씩 계상돼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에 당비로 입금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사용하지도 않은 전화요금이 청구되는 사실을 이상히 여긴 일부 사할린 동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은 문제가 되자 14~15일 이들에게 1인당 3000~6000원씩 모두 28만 6000원을 돌려줬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사할린 동포 수명이 지난해부터 같은 동포 노인들에게 '당비는 전화요금으로 청구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입당원서를 받았는데 이들이 기억을 못 하는 것 같다"며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등) 특수한 입장의 국민이기 때문에 당비를 소급해 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동포 노인들은 입당과 당비 납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모두 800여 명으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조성된 고향마을 임대아파트에서 매월 40여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시정요구이유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50여 명
본인 모르게 열린우리에 당비

월 1000원씩 전화료 포함
열린우리 "입당원서 받아"

2006년 3월 17일자 8면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50여 명, 본인 모르게 열린우리에 당비』 제하의 기사에서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50여 명이 자신도 모르게 수개월 동안 매달 1,000원씩의 당비를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에 납부해 온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4월 5일 사할린동포들이 "당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당비를 냈다"고 발표를 한 데다 5월 17일자로 해당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었으므로 사실을 바로잡고자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보는 지난 3월 17일자 8면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50여명, 본인 모르게 열린우리에 당비』 제하의 기사에서 '안산시 사할린 영주귀국동포들이 자신도 모르게 수개월 동안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에 당비를 납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였던 박명훈씨(45,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는 경찰과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결국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7일자로 종결되었다.

한편, 사할린교포들은 평소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자진하여 박 후보의 정당에 입당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일 뿐 입당절차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왔다.

시정요구인이 사할린동포들로부터 무단으로 당비를 납부받아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로부터 조사받는 중이라고 보도되었으나 해당 사건이 무혐의 내사종결되어 후속보도를 요구한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15
시정요구인 : 박 명 훈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
피시정요구인 : 한국일보
접 수 일 : 2006년 5월 23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與, 사할린 귀국동포에도 당비

매달 전화요금서 1,000원씩 빠져나가

경기 안산시 사할린 귀국동포 50여명이 자신도 모르게 전화요금에서 수개월동안 월 1,000원씩 열린우리당 당비로 빠져 나갔다는 의혹을 제기,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안산경찰서와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사할린 동포들에게 청구되는 전화요금에 매달 컨텐츠사용료(사이버 패스) 명목으로 1,000원씩이 빠져나간 뒤 우리당 경기도당에 당비로 입금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쓰지도 않은 요금이 공제되는 것을 이

與, 사할린 귀국동포에도 당비

매달 전화요금서 1,000원씩 빠져나가

상히 여긴 일부 사할린 동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우리당은 문제가 불거지자 14, 15일 사할린 동포 59명에게 1인당 3,000~6,000원씩을 돌려줬다.

우리당 관계자는 "사할린 동포들이 연로해서 입당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동포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인 데다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당비를 되돌려드렸다"고 말했다. 우리당 경기도당은 이날 이들의 입당원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안산경찰서는 "허위입당원서를 받는 등 정당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할린 동포 800여명은 2000년부터 영주 귀국해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조성된 고향마을 임대아파트에서 매월 40여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시정요구이유

2006년 3월 17일자 A4면 『與, 사할린 귀국동포에도 당비』 제하의 기사에서 사할린 귀국동포 50여명이 자신도 모르게 전화요금에서 수개월동안 월 1,000원씩 열린우리당 당비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관계자의 정당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4월 5일 사할린동포들이 "당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당비를 냈다"고 발표를 한 데다 5월 17일자로 해당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었으므로 사실을 바로잡고자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보는 지난 3월 17일자 A4면 『與, 사할린 귀국동포에도 당비』 제하의 기사에서 '안산시 사할린 귀국동포 50여명이 자신도 모르게 전화요금에서 수개월동안 월 1,000원씩 열린우리당 당비로 빠져 나갔다는 의혹을 제기,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였던 박명훈씨(45,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는 경찰과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결국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7일자로 종결되었다.

한편, 사할린교포들은 평소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자진하여 박 후보의 정당에 입당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일 뿐 입당절차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왔다.

시정요구 후 보도문

한국일보 : 『밝혀왔습니다』 (2006년 5월 26일자 A12면)

내 용 : 3월 17일자 4면 '여당, 사할린 동포에도 당비'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당시 안산시장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였던 박명훈(45·무소속)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혀왔습니다. 사할린 동포들도 자진해서 당비를 납부한 것이며 입당절차 역시 정당했다고 합니다.

밝혀왔습니다 3월17일자 4면 '여당, 사할린 동포에도 당비'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당시 안산시장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였던 박명훈(45·무소속)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혀왔습니다. 사할린 동포들도 자진해서 당비를 납부한 것이며 입당절차 역시 정당했다고 합니다.

시정요구인을 돕기 위해 입당한 사할린동포들 중 상당수가 입당 사실과 당비 납부 여부를 알지 못해 논란이라고 보도되었으나 해당 사건이 무혐의 내사종결되어 후속보도를 요구한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16
시정요구인 : 박 명 훈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
피시정요구인 : 반월신문
접 수 일 : 2006년 5월 23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사할린동포, '본인도 모르는 당비납부'

열린우리당, 논란 야기되자 당비 환급

상록구 사동 고향마을에 거주하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이하 사할린동포) 중 50여 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열린우리당 당비를 몇 개월째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에 착수해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토대로 사건의 진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할린동포들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우리당 시장후보로 나서겠다는 모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몇몇 사할린동포들이 고향마을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150여 명의 입당원서를 받았으며, 이 중 한국말이 서툰 사할린동포의 입당원서를 대신 작성해줬으나, 몇몇을 제외한 사할린동포들은 자신이 입당을 했다는 사실과 당비 납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사할린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나 권유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간당원으로 남겠다는 사할린동포를 제외하곤 20여 명의 당비를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대처에 일부에서는 "일을 저질러놓고 사할린동포들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이 알려지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돌려준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영주귀국자 노인회 고창남 회장은 "입당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정작 본인들이 모르는 것이 문제"라면서 노인들이 생계비 지출은 세세히 알고 있으나, 당비 납부의 경우 전화요금으로 빠져나가니까 관심을 두지 않아 곧바로 알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할린동포, '본인도 모르는 당비납부'

열린우리당, 논란 야기되자 당비 환급

또한, 고 회장은 "지난해 2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같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해 영주귀국동포들이 입당원서에 대해 인지했느냐와 함께 입당원서 작성 시기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후원회 오창석 회장은 "사할린동포들의 피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안타깝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철두철미하게 진상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 정천수 소장은 사할린동포들이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KT링고서비스 등 각종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노인들을 상대로 한 피해가 근절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정요구이유

2006년 3월 23일자 16면 『사할린동포, '본인도 모르는 당비납부』 제하의 기사에서 사할린영주귀국동포 50여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열린우리당 당비를 몇 개월째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그 진위를 조사중이고, 자발적으로 입당한 일부 동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당비 납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4월 5일 사할린동포들이 "당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당비를 냈다"고 발표를 한 데다 5월 17일자로 해당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었으므로 사실을 바로잡고자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보는 지난 3월 23일자 16면 『사할린동포, '본인도 모르는 당비납부』 제하의 기사에서 '상록구 고향마을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열린우리당 당비를 몇 개월째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토대로 사건의 진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였던 박명훈씨(45,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는 경찰과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결국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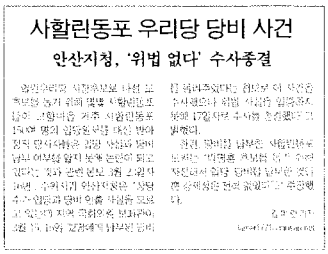
사건은 지난 5월 17일자로 종결되었다.

한편, 사할린교포들은 평소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자진하여 박 후보의 정당에 입당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일 뿐 입당절차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왔다.

시정요구 후 보도문

반월신문 : 『사할린동포 우리당 당비사건 안산지청, '위법없다'』 수사종결 (2006년 5월 22일자 17면)
내 용 : 열린우리당 시장후보로 나설 모 후보를 돕기 위해 몇몇 사할린동포들이 고향마을 거주 사할린동포 150여명의 입당원서를 대신 받아 정작 당사자들은 입당사실과 당비 납부 여부를 알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본보 3월 23일자 16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상당수가 입당과 당비 인출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3월 15, 16일 32명에게 납부된 당비를 돌려주었다는 첩보로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위법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17일자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비를 납부한 사할린동포 모씨는 "박명훈 후보를 돕기 위해 자진해서 입당, 당비를 납부한 것일 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할린동포 우리당 당비 사건

안산지청, '위법 없다' 수사종결

시정요구인이 몸 담았던 모 정당이 사할린 동포들을 본인들 몰래 정당에 가입시켜 당비를 납부토록 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후속보도를 요구한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17
시정요구인 : 박 명 훈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
피시정요구인 : 안산정론신문
접 수 일 : 2006년 5월 23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눈뜨고 당하는 사할린 교포들

자신도 모르게 KT링고서비스 가입 요금 납부
원하지 않는 당비 납부… 여행사 횡포에 고생

사동 고향마을에 살고 있는 사할린영구이주교포들이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많은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정당의 기간당원으로 등록돼 매달 일정액의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KT링고서비스에 가입돼 서비스 사용료를 지급한 교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동 고향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P씨(71세)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집 전화요금으로 1000원의 사용료가 청구된 것을 보고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P씨는 전화국의 착각일 것이라고 생각해 해당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달인 지난 1월 이번에는 2000원의 요금이 청구된 전화요금 고지서가 발부됐다. 지난달에 청구된 1000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금고지서에는 「컨텐츠사용료(사이버패스)」요금이라고 적혀있었지만 고령인데다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P씨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P씨에게 전화요금이 청구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P씨를 포함한 고향마을 입주민들의 경우 복지전화로 분류돼 전화 기본요금이 없을 뿐 아니라 한달에 수십 통 정도의 전화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P씨에게 전화요금이 청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느닷없이 P씨에게 전화요금 청구서가 날아든 것이다.

P씨는 1월에도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달이 되자 이번에는 3000원의 요금이 적힌 전화요금고지서가 배달됐다. 미납요금 2000원에 2월요금 1000원이 합산된 것이다. 당황한 P씨는 결국 지난 2월24일 인근 우체국을 통해 전화요금 3천원을 납부했다.

기자가 취재한 결과 P씨가 납부한 전화요금 3000원은 모 정당의 당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KT안산지점에 확인한 결과 모 정당의 당비가 납부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P씨는 자신은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고, 정당 관계자를 만나 가입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P씨는 모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정당관계자는 P씨의 입당원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뒤 정황으로 볼 때 P씨는 정당에 가입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입당원서를 써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원하지 않는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씨 외에도 원하지 않는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사할린 교포는 또 있는 것으로 보인다. P씨는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해 P씨와 같은 피해자가 고향마을 아파트 내에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향마을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사할린 교포들 가운데 여러 명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정치권을 의식해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려 하지 않고 있다.

눈뜨고 당하는 사할린 교포들

자신도 모르게 KT링고서비스 가입 요금 납부
원하지 않는 당비 납부… 여행사 횡포에 고생

이뿐이 아니다.

고향마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할린교포들이 KT링고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전화요금에 청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포 권모씨 가구 등 이 아파트에 사는 13가구가 지난해 자신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KT링고서비스를 사용했다며 KT전화요금 고지서에 요금이 청구돼 여러 달치의 요금을 납부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구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1만원 내외로 일반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인당 40여만원의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큰 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요금을 납부했다가 돌려받은 한 교포는 『우리는 한국말이 서툴러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한다』며 『우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입해서 사용한 것처럼 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KT링고 서비스를 해약할 줄 몰라 지금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요금을 내는 교포들이 있다』고 말했다.

사할린 교포들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할린 교포들은 최근 여행사의 약속위반 때문에 해외까지 가서 고생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할린교포 38명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을 여행했다. 이들을 담당한 여행사는 서울에 있는 「세진여행사」였다. 그런데 귀국 전날인 5일 싱가폴에서 이들은 밥도 굶은 채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현지 여행사가 국내 여행사인 세진여행사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5일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점심과 저녁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루 전에는 당초 약속과 달리 현지 여행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의 추가비용을 거두었다. 이처럼 당초 계약과 달리 불이익을 당한 사할린 교포들은 지난 6일 귀국해 고향마을 아파트내에 있는 안산시사할린지원사업소에 자신들이 당한 고생을 토로했다.

결국 지난 9일 세진여행사 대표가 고향마을을 방문, 추가 여행경비 5만원과 하루 일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1인당 8만원씩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이런 여행사대표의 약속에 대해 사할린 교포들은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고생시켜 놓고 8만원으로 보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한 교포는 『평생 한번 가는 외국 여행인데 그렇게 망쳐놓고 8만원을 보상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 했다.

이번에 외국 여행을 다녀온 38명의 노인들은 이번 여행을 위해 매달 자신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지난 1년간 조금씩 모아서 여행경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요구이유

2006년 3월 13일자 1면 『눈뜨고 당하는 사할린 교포들』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말이 서툰 사할린영주이주교포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정당의 기간당원으로 등록돼 모 정당 관계자가 입당 원서를 보관 중이며 매달 일정액의 당비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4월 5일 사할린동포들이 "당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당비를 냈다"고 발표를 한 데다 5월 17일자로 해당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었으므로 사실을 바로잡고자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보는 지난 3월 13일자 1면 『눈뜨고 당하는 사할린 교포들』 제하의 기사에서 '많은 사할린교포들이 자신도 모르게 특정정당에 가입하고 원하지도 않는 당비를 납부했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였던 박명훈씨(45,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는 경찰과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결국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7일자로 종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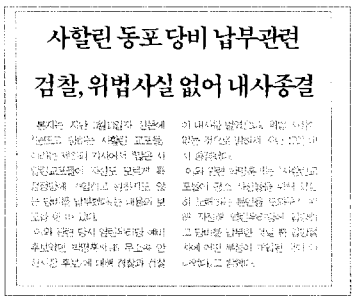
한편, 사할린교포들은 평소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자진하여 박 후보의 정당에 입당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일 뿐 입당절차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왔다.

시정요구 후 보도문

안산정론신문 : 『사할린 동포 당비 납부관련 - 검찰, 위법사실 없어 내사종결』 (2006년 5월 29일자 2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13일자 신문에 『눈뜨고 당하는 사할린 교포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많은 사할린교포들이 자신도 모르게 특정정당에 가입하고 원하지도 않는 당비를 납부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였던 박명훈씨(45,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내사를 벌였으나,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지난 17일 내사 종결됐다.

이와 관련 박명훈씨는 『사할린교포들이 평소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본인을 도와주기 위해 자진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일 뿐 입당절차에 어떤 부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할린 동포 당비 납부관련

검찰, 위법사실 없어 내사종결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시정요구인이 당비원서를 모집하고 당비를 대납하고 있어 경찰 조사중이라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무혐의 내사종결되어 후속보도를 요구한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18
시정요구인 : 박 명 훈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

피시정요구인 : 안산타임스
접 수 일 : 2006년 5월 23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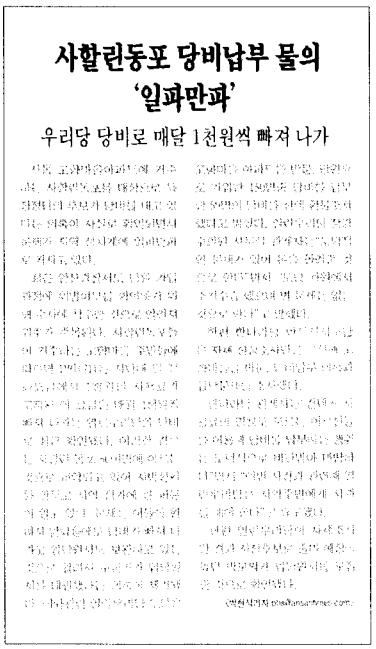
사할린동포 당비납부 물의 '일파만파'

우리당 당비로 매달 1천원씩 빠져 나가

사동 고향마을아파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특정정당의 후보가 당비를 내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지역 정치계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최근 안산경찰서도 당원 가입과정에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사할린동포들이 거주하는 고향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P씨(71)는 지난해 말 전화요금에서 1천원의 사용료가 고지된 이 요금은 매월 1천원씩 빠져 나가는 열린우리당의 당비로 최근 확인됐다. 이러한 경우는 사할린 동포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당비가 빠져 나가고 입당원서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누군가가 입당원서를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열린우리당 도당은 고향마을 아파트를 방문, 당원으로 가입한 150명중 당비를 납부한 59명의 당비를 전액 환불조치 했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 당비납부 물의
'일파만파'
우리당 당비로 매달 1천원씩 빠져 나가

열린우리당 장경수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안다"면서 "도당 차원에서 조기수습 했으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산시지구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고향마을을 방문, 당비납부 의혹과 입당문제를 조사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컨텐츠 사용료의 명칭도 모르는 어르신들을 이용해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지역주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자체조사한 결과 시장후보로 출마예정이었던 박모씨가 입당원서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요구이유

2006년 3월 23일자 2면『사할린동포 당비납부 물의 '일파만파'』제하의 기사에서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특정정당의 후보가 당비를 내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안산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할린동포들의 전화요금에서 빠져나간 매월 1천원의 사용료가 열린우리당 당비로 확인되었으며 당 자체조사결과 시장 출마예정이었던 박 모씨가 입당원서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4월 5일 사할린동포들이 "당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당비를 냈다"고 발표를 한 데다 5월 17일자로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되었으므로 사실을 바로잡고자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보는 지난 3월 23일자 2면『사할린동포 당비납부 물의 '일파만파'』제하의 기사에서 '사동 고향마을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열린우리당 후보가 당비를 내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안산경찰서도 당원 가입과정에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또한 사할린동포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열린우리당에 당원으로 가입되어 당비가 전화요금으로 빠져나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열린우리당이 자체조사한 결과 안산시장후보로 출마예정이었던 박 모씨

가 입당원서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당시 열린우리당 안산시장 예비후보였던 박명훈씨(45,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는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당비를 내 준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할린동포를 자신도 모르게 입당시켜 당비를 납부토록 했다는 내용과 관련, 박 후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7일자로 종결되었다.

한편, 사할린교포들은 평소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자진하여 박 후보의 정당에 입당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일 뿐 입당절차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왔다.

시정요구 후 보도문

안산타임즈 : 『박명훈씨, 사할린동포 당비대납 "위법 무"』 (2006년 6월 1일자 2면)

내　　용 : 사동 고향마을아파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특정정당의 후보가 당비를 내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관련기사 본지 85호 2면〉 수사해 온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24일 당시 모정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박명훈(45) 후보에 대해 당비 징수 과정에 강요나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박씨측에 따르면 그동안 입당원서를 작성한 고향마을 사할린동포들을 상대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당비 징수와 관련한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17일 내사종결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31일 기간당원 모집을 마감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로부터 1천원의 당비를 받아야 하는데 2천원(3명)을 받은 것은 한꺼번에 많은 당원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전산착오로 빚어진 것이라고 모정당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45)씨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결국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사할린 교포들은 평소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나를 돕기 위해 자진해서 속해 있는 정당에 입당, 당비를 납부했을 뿐 입당절차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박명훈씨, 사할린동포 당비대납 "위법 무"

시정요구인의 전과를 악질적인 범죄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19
시정요구인 : 차 준 미 (민주노동당 경기도의회의원 후보)
피시정요구인 : 안산정론신문
접　수　일 : 2006년 5월 25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이런사람들도 출마하나
투표할 생각 싹 달아난다

5.31선거 출마자 전과자 수두룩
민주노동당 후보 절반이 전과기록
열린우리·민주당 각 2명 한나라 1명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신상명세 가운데 전

과기록을 보면, 놀랄만한 수준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안산 유권자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기에 출마하는지, 또 각 정당들이 안산 유권자들의 수준을 얼마나 낮게 보기에 이런 후보들을 공천하는가 의아할 정도다.

5.31지방선거에 안산지역에서 출마하는 91명의 후보 가운데 16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후보자의 17.5%가 전과자인 것이다.

전과기록도 다양하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하다 처벌받는 경우 대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은 매우 다양하다.

바선거구에 출마하는 S후보는 절도 전과가 있다. 이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제3선거구에 출마하는 L후보는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다. 이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기록이 있다. 제6선거구에 출마하는 L후보는 군무 이탈한 전과가 있다.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제7선거구에 출마하는 C후보는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제2선거구에 출마하는 C후보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마선거구에 출마하는 J후보는 대통령선거법을 위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이 선거구에 출마한 S후보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이외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갖고 있는 후보는 각 선거구마다 있을 정도로 숫자가 많다.

이런 사람들도 출마하나 투표할 생각 싹 달아난다

5.31선거 출마자 전과자 수두룩
민주노동당 후보 절반이 전과기록
열린우리 · 민주당 각 2명 한나라 1명

집시법 위반자 가장 많고
절도 · 뇌물공여, 군무이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도 있어

(2006년 5월 25일자 1면)

출마 후보들의 수준과 유권자의 역할

오는 31일 실시되는 5.31지방선거에 안산지역에서 출마한 일부 후보들의 수준을 보노라면, 도대체 안산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하는 한숨이 나온다.

학력이나 전문분야의 경력이 부족한 것은 차치하고, 그들의 범죄 경력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안산에서 지역구 선출직에 도전한 후보는 모두 91명이다. 시장후보가 7명 도의원후보가 30명 시의원후보가 54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16명이 범죄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범죄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과거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하지만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범죄경력은 과거 후보들의 그것과는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과거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있어,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다 위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는 일종의 훈장처럼 여겨지던 것이었다. 그리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그런 법을 위반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전과 아닌 전과였었다.

그런데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범죄전과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악질적인 범죄가 있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안산시민을 어떻게 보고 출마한 것인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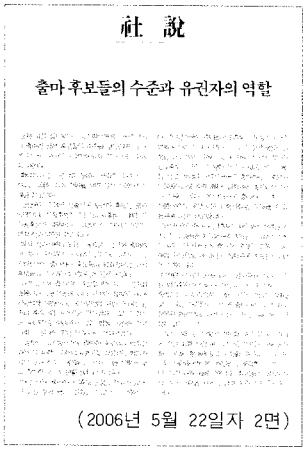
바선거구에 출마하는 S후보는 절도 전과가 있다. 이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제3선거구에 출마하는 L후보는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다. 이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기록이 있다. 제6선거구에 출마하는 L후보는 군무 이탈한 전과가 있다.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제7선거구에 출마하는 C후보는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제2선거구에 출마하는 C후보

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마선거구에 출마하는 J후보는 대통령선거법을 위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아 선거구에 출마한 S후보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이처럼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운동을 하다 저지른 범죄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준법정신의 부족으로 인해 저지른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과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다. 『과거에 지은 죄를 반성하는 의미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봉사해달라고 부탁할 시민은 없다. 이제 유권자들의 몫이다.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 과거 경력을 자세히 살펴 신중하게 투표해야 한다.



社 說

출마 후보들의 수준과 유권자의 역할

(2006년 5월 22일자 2면)

시정요구이유

2006년 5월 22일자 1면 『이런 사람들도 출마하나, 투표할 생각 싹 달아난다』제하의 기사와 동년 동월 동일자 2면 『출마 후보들의 수준과 유권자의 역할』 제하의 사설에서 시정요구인이 악질적인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같은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대학교 재학시절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노동현장에 위장취업한 것으로 사실에 관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6년 5월 22일자 1면과 사설을 통해 출마후보자들의 범죄사실을 거론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후보들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해명기회를 주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후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제2선거구의 C후보는 회사측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전과가 발생하였으며, 노동현장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범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악질적인 범죄'로 묘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기록을 가진 후보자들의 출마를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묘사하며 출마자질을 문제삼아, 입후보자들의 정당한 피선거권과 인권을 훼손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조로 인하여 피해를 본 해당 후보자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리며, 이전 기사가 문제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시정요구인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공보물을 발송하여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20
시정요구인 : 서 기 동 (열린우리당 전남 구례군수 후보)
피시정요구인 : 아시아일보
접 수 일 : 2006년 5월 26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구례 'X파일' 제기한 전직기자 구속

S모 군수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구례경찰서는 구례군 비리 'X파일'을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전직 모 일간지 기자 C모씨(53)를 지난 2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0월 구례군의 수해복구 비리와 공무원 특채 등과 관련한 X파일을 경찰에 허위로 제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기 등으로 구속된 것이다.

C씨는 군청 C모계장이 제기한 채무관계 고소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례군청의 비리를 담았다'며 X파일을 경찰에 제출, 근본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추가 수사를 요청하자 구례군은 곧바로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한편, C씨는 'X파일'을 경찰에 제기한 후, 지난 2월 6일자 S모 신문에 본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날자 신문을 선거에 출마한 S모 군수 후보자가 본인과 경쟁 관계인 특정 후보 죽이기에 이용하기 위해 직접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산동면에 거주하는 K모(남 54세)씨에 의하면 "S모 신문을 들고와 전달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제95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언론에 게재된 기사 내용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최근에는 C씨의 허위 사실로 밝혀진 내용을 S모 군수 후보가 자신의 선거 공보물 뒤편에 첨부, 부재자 투표자들에게 발송한 사건이 발생하여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점이 드러났다.

구례 'X파일' 제기한 전직기자 구속

S모 군수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구례경찰서는 구례군 비리 'X파일'을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전직 모 일간지 기자 C모씨(53)를 지난 2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0월 구례군의 수해복구 비리와 공무원 특채 등과 관련한 X파일을 경찰에 허위로 제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기 등으로 구속된 것이다.

C씨는 군청 C모계장이 제기한 채무관계 고소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례군청의 비리를 담았다'며 X파일을 경찰에 제출, 근본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추가 수사를 요청하자 구례군은 곧 바로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한편, C씨는 'X파일'을 경찰에 제기한 후, 지난 2월 6일자 S모 신문에 본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날자 신문을 선거에 출마한 S모 군수 후보자가 본인과 경쟁 관계인 특정 후보 죽이기에 이용하기 위해 직접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산동면에 거주하는 K모(남 54세)씨에 의하면 "S모 신문을 들고와 전달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제95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언론에 게재된 기사 내용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최근에는 C씨의 허위 사실로 밝혀진 내용을 S모 군수 후보가 자신의 선거 공보물 뒤편에 첨부, 부재자 투표자들에게 발송한 사건이 발생하여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점이 드러났다.

구례 최재선 기자

시정요구이유

2006년 5월 25일자 18면『구례 'X파일' 제기한 전직기자 구속, S모 군수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전직 모 일간지 기자가 구례군의 비리 관련 X파일을 경찰에 허위로 제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관련 내용을 시정요구인이 선거 공보물로 발송한 것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행위는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법하다는 답변서를 받은 이후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본 보도는 시정요구인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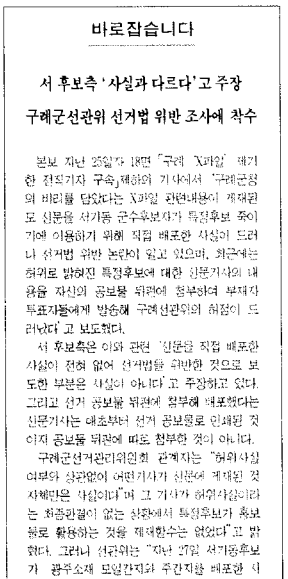
시정요구 후 보도문

아시아일보 : 『서 후보측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 구례군 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2006년 5월 30일자 2면)

내 용 : 본보 지난 25일자 18면「구례 'X파일' 제기한 전직기자 구속」제하의 기사에서 '구례군청의 비리를 담았다는 X파일 관련내용이 게재된 모 신문을 서기동 군수후보자가 특정후보 죽이기에 이용하기 위해 직접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으며, 최근에는 허위로 밝혀진 특정후보에 대한 신문기사의 내용을 자신의 공보물 뒤편에 첨부하여 부재자 투표자들에게 발송해 구례선관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 후보측은 이와 관련 '신문을 직접 배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 공보물 뒤편에 첨부해 배포했다는 신문기사는 애초부터 선거 공보물로 인쇄된 것이지 공보물 뒤편에 따로 첨부한 것이 아니다.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기


바로잡습니다

서 후보측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구례군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

본보 지난 25일자 18면「구례 'X파일' 제기한 전직기자 구속」제하의 기사에서 '구례군청의 비리를 담았다는 X파일 관련내용이 게재된 모 신문을 서기동 군수후보자가 특정후보 죽이기에 이용하기 위해 직접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으며, 최근에는 허위로 밝혀진 특정후보에 대한 신문기사의 내용을 자신의 공보물 뒤편에 첨부하여 부재자 투표자들에게 발송해 구례선관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 후보측은 이와 관련 '신문을 직접 배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도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 공보물 뒤편에 첨부해 배포했다는 신문기사는 애초부터 선거 공보물로 인쇄된 것이지 공보물 뒤편에 따로 첨부한 것이 아니다.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기사가 신문에 게재된 것 자체만을 사실이다"며 그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최종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후보가 홍보물로 활용하는 것을 제재할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2일 서기동후보가 광주소재 모업간지와 주간지를 배포한 사실확인서를 3건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하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구례 최재선 기자

사가 신문에 게재된 것 자체만은 사실이다"며 "그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최종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후보가 홍보물로 활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27일 서기동 후보가 광주소재 모일간지와 주간지를 배포한 사실 확인서를 3건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하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시정요구인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공보물을 발송하였다는 상대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21
시정요구인 : 서 기 동 (열린우리당 전남 구례군수 후보)
피시정요구인 : 광주매일
접 수 일 : 2006년 5월 26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전경태 후보 상대후보 고발

○…민주당 전경태 구례군수 후보는 24일 "A모 후보가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수해복구비리, 공무원특채기사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키로 결정.

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후보가 선거용 공보물에 지역언론에 발표된 신문기사를 그대로 게재해 지역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

이에 따라 전 후보는 "A후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물론 가능한 모든 대책을 세워 강경 대응하겠다"고 발표.

전경태 후보 상대후보 고발

○…민주당 전경태 구례군수 후보는 24일 "A모 후보가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수해복구비리, 공무원특채기사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키로 결정.

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후보가 선거용 공보물에 지역언론에 발표된 신문기사를 그대로 게재해 지역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

이에 따라 전 후보는 "A후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물론 가능한 모든 대책을 세워 강경 대응하겠다"고 발표.

시정요구 이유

2006년 5월 25일자 3면 『전경태 후보 상대후보 고발』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지역언론에 발표된 구례군 관련 허위사실을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통해 배포하여 상대후보측에서 법적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행위는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법하다는 답변서를 받은 이후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본 보도는 시정요구인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시정요구 후 보도문

광주매일 : 『서기동 후보, 상대 후보 법적 검토』 (2006년 5월 26일자 3면)

내 용 : 열린우리당 서기동 구례군수 후보는 25일 자신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대해 A모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키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합법한 내용이라고 통보해 온 적법한 선거 공보물이다"며 반박.

이어 서 후보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배포한 A후보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A후보가 정당한 선거 공보물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역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

한편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서기동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이 합법하다고 발표.

서기동 후보, 상대 후보 법적 검토

○…열린우리당 서기동 구례군수 후보는 25일 자신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대해 A모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키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합법한 내용이라고 통보해 온 적법한 선거 공보물이다"며 반박.

이어 서 후보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배포한 A후보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A후보가 정당한 선거 공보물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역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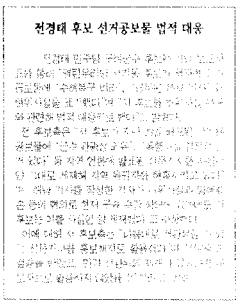
한편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서기동 후보의 책자형선거공보 내용이 합법하다고 발표.

시정요구인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공보물을 발송하였다는 상대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22
시정요구인 : 서 기 동 (열린우리당 전남 구례군수 후보)
피시정요구인 : 무등일보
접 수 일 : 2006년 5월 26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전경태 후보 선거공보물 법적 대응


전경태 후보 선거공보물 법적 대응

O…전경태 민주당 구례군수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우리당 서기동 후보가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수해복구 비리', '공무원 특채 기사' 등 허위사실을 표기했다"며 "서 후보를 허위사실 유표와 관련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측은 "서 후보가 지난 23일 배포된 선거용 공보물에 '군수 관광성 외유', '폭행사실 결정적 근거 있다' 등 지역 언론에 발표된 신문기사를 사실인 양 그대로 게재해 지역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 상태에 있는데도 서 후보는 이를 사실인 양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측은 "나름대로 객관적일 수 있는 신문기사를 홍보책자로 활용했다"며 "선관위의 검증을 받았고, 만약 선관위의 제재가 있었다면 홍보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요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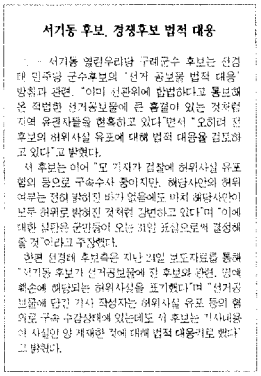
2006년 5월 25일자 3면 『전경태 후보 선거공보물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지역언론에 발표된 구례군 관련 허위사실을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통해 배포하여 상대 후보 측에서 법적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행위는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법하다는 답변서를 받은 이후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본 보도는 시정요구인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시정요구 후 보도문

무등일보 : 『서기동 후보, 경쟁후보 법적 대응』
(2006년 5월 29일자 3면)
내 용 : 서기동 열린우리당 구례군수 후보는 전경태 민주당 군수후보의 '선거 공보물 법적 대응' 방침과 관련, "이미 선관위에 합법하다고 통보해온 적법한 선거공보물에 큰 흠결이 있는 것처럼 지역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전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이어 "모 기자가 검찰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수사 중이지만, 해당사안의 허위 여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마치 해당사안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것처럼 강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심판은 군민들이 오는 31일 표심으로써 결정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태 후보측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기동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전 후보와 관련,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허위사실을 표기했다"며 "선거공보물에 담긴 기사 작성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상태에 있는데도 서 후보는 기사내용이 사실인 양 게재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기동 후보, 경쟁후보 법적 대응

시정요구인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공보물을 발송하여 선관위가 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23
시정요구인 : 서 기 동 (열린우리당 전남 구례군수 후보)
피시정요구인 : 전광일보
접 수 일 : 2006년 5월 26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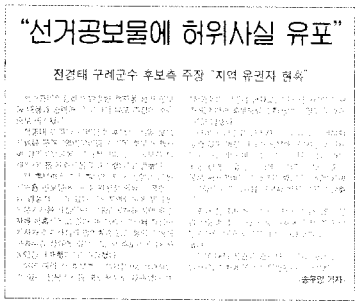
전경태 구례군수 후보측 주장 "지역 유권자 현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책자형 선거 공보물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전경태 민주당 구례군수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우리당 서기동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해복구비리', '공무원 특채기사' 등 허위사실을 표기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측은 "서 후보가 지난 23일 배포된 선거용 공보물에 '군수 관광성 외유', '폭행사실 결정적 근거 있다' 등 지역언론에 발표된 신문기사를 사실인양 그대로 게재해 지역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수감 상태에 있는데도 서 후보는 이를 사실인양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측은 "나름대로 객관적일 수 있는 신문기사를 홍보 책자로 활용했다"며 "선관위의 검증을 받았고, 만약 선관위의 제재가 있었다면 홍보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유포"

전경태 구례군수 후보측 주장 "지역 유권자 현혹"

송우인 기자

구례군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어떤 기사가 신문에 게재된 것 자체만은 사실이다"며 "그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최종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가 홍보물로 활용하려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었다"면서 "앞으로 조사위를 구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 후보측은 "서 후보가 지난 2월 7일경 산동면 소재 5일시장 근처에서 전 후보 비방기사의 내용을 주민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는 공직선거법 95조 ①항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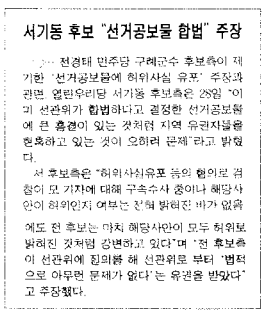
시정요구 이유

2006년 5월 25일자 1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유포"』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지역언론에 발표된 구례군 관련 허위사실을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통해 배포하여 지역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어 구례군 선관위가 조사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행위는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법하다는 답변서를 받은 이후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본 보도는 시정요구인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시정요구 후 보도문

전광일보 : 『서기동 후보 "선거공보물 합법" 주장』
(2006년 5월 29일자 2면)

내 용 : 전경태 민주당 구례군수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유포' 주장과 관련, 열린우리당 서기동 후보 측은 28일 "이미 선관위가 합법하다고 결정한 선거공


서기동 후보 "선거공보물 합법" 주장

…… 전경태 민주당 구례군수 후보측이 제기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유포' 주장과 관련, 열린우리당 서기동 후보측은 28일 "이미 선관위가 합법하다고 결정한 선거공보물에 큰 흠결이 있는 것처럼 지역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밝혔다.

서 후보측은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이 모 기자에 대해 구속수사 중이나 해당사안이 허위인지 여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전 후보는 마치 해당사안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것처럼 강변하고 있다"며 "전 후보측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 선관위로 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물에 큰 흠결이 있는 것처럼 지역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밝혔다.

서 후보 측은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이 모 기자에 대해 구속수사 중이나 해당사안이 허위인지 여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전 후보는 마치 해당사안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것처럼 강변하고 있다"며 "전 후보 측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 선관위로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정요구인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공보물을 발송하였다는 상대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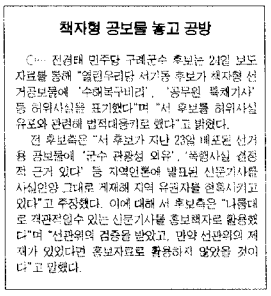
사 건 번 호 : 2006시심24
시정요구인 : 서 기 동 (열린우리당 전남 구례군수 후보)
피시정요구인 : 전남일보
접 수 일 : 2006년 5월 26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책자형 공보물 놓고 공방

○… 전경태 민주당 구례군수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우리당 서기동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해복구비리', '공무원 특채기사' 등 허위사실을 표기했다"며 "서 후보를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 법적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측은 "서 후보가 지난 23일 배포된 선거용 공보물에 '군수 관광성 외유', '폭행사실 결정적 근거 있다' 등 지역언론에 발표된 신문기사를 사실인양 그대로 게재해 지역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측은 "나름대로 객관적일 수 있는 신문기사를 홍보책자로 활용했다"며 "선관위의 검증을 받았고, 만약 선관위의 제재가 있었다면 홍보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책자형 공보물 놓고 공방

○… 전경태 민주당 구례군수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우리당 서기동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해복구비리', '공무원 특채기사' 등 허위사실을 표기했다"며 "서 후보를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 법적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측은 "서 후보가 지난 23일 배포된 선거용 공보물에 '군수 관광성 외유', '폭행사실 결정적 근거 있다' 등 지역언론에 발표된 신문기사를 사실인양 그대로 게재해 지역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측은 "나름대로 객관적일 수 있는 신문기사를 홍보책자로 활용했다"며 "선관위의 검증을 받았고, 만약 선관위의 제재가 있었다면 홍보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정요구 이유

2006년 5월 25일자 4면 『책자형 공보물 놓고 공방』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지역언론에 발표된 구례군 관련 허위사실을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통해 배포하여 상대 후보 측에서 법적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행위는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법하다는 답변서를 받은 이후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본 보도는 시정요구인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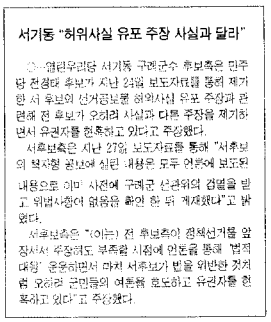
시정요구 후 보도문

전남일보 : 『서기동 "허위사실 유포 주장 사실과 달라"』
(2006년 5월 29일자 4면)

내 용 : 열린우리당 서기동 구례군수 후보측은 민주당 전경태 후보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서 후보의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유포 주장과 관련해 전 후보가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후보측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후보의 책자형 공보에 실린 내용은 모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이미 사전에 구례군 선관위의 검열을 받고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뒤 게재했다"고 밝혔다.

서후보측은 "(이는) 전 후보측이 정책선거를 앞장서서 주장해도 부족할 시점에 언론을 통해 '법적대응' 운운하면서 마치 서후보가 법을 위반한 것처럼 오히려 군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기동 "허위사실 유포 주장 사실과 달라"

○…열린우리당 서기동 구례군수 후보측은 민주당 전경태 후보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서 후보의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유포 주장과 관련해 전 후보가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후보측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후보의 책자형 공보에 실린 내용은 모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이미 사전에 구례군 선관위의 검열을 받고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뒤 게재했다"고 밝혔다.

서후보측은 "(이는) 전 후보측이 정책선거를 앞장서서 주장해도 부족할 시점에 언론을 통해 '법적대응' 운운하면서 마치 서후보가 법을 위반한 것처럼 오히려 군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정요구인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공보물을 발송하였다는 상대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번 호 : 2006시심25
시정요구인 : 서 기 동 (열린우리당 전남 구례군수 후보)
피시정요구인 : 호남매일
접 수 일 : 2006년 5월 26일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전경태, 우리당 후보 법적대응

○…전경태 민주당 구례군수 후보는 24일 열린우리당 서기동 구례군수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수해복구비리, 공무원 특채 등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과 관련,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

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 후보가 공보물에 '군수 관광성외유? 폭행사실 결정적 근거 있다' 등 지역 언론에 발표된 신문기사 내용을 사실인양 악의적으로 게재해 지역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

특히 전 후보측은 "최모 기자가 '구례군 X파일'을 만들어 기사화 한 것과 관련, 최 기자를 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지금 현재 구속수감 상태에 있다"며 "그런데도 서 후보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양 공보물에 게재해 이번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

이에 따라 전 후보는 "서 후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대응 할 방침"이라고 천명.

전경태, 우리당 후보 법적대응

○…전경태 민주당 구례군수 후보는 24일 열린우리당 서기동 구례군수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수해복구비리, 공무원 특채 등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과 관련,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

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 후보가 공보물에 '군수 관광성외유?폭행사실 결정적 근거 있다' 등 지역 언론에 발표된 신문기사 내용을 사실인양 악의적으로 게재해 지역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

특히 전 후보측은 "최모 기자가 '구례군 X파일'을 만들어 기사화 한 것과 관련, 최 기자를 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지금 현재 구속수감 상태에 있다"며 "그런데도 서 후보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양 공보물에 게재해 이번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

이에 따라 전 후보는 "서 후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대응 할 방침"이라고 천명.

시정요구 이유

2006년 5월 25일자 3면 『전경태, 우리당 후보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지역언론에 발표된 구례군 관련 허위사실을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통해 배포하여 상대 후보 측에서 법적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행위는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법하다는 답변서를 받은 이후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본 보도는 시정요구인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시정요구 후 보도문

호남매일 : 『서기동 후보 법적 맞대응』
(2006년 5월 29일자 3면)

내 용 : 서기동 열린우리당 구례군수 후보는 지난 24일 전경태 군수후보가 제기한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표기한 '구례군 X파일' 기사와 관련해 법적 맞대응키로 하는 등 반박.

서 후보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에서 합법하다고 통보한 선거 공보물에 큰 흠결이 있는 것처럼 지역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

특히 서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최모 기자가 검찰에 구속수사 중이지만 해당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마치 해당사안이 모두 허위인 것처럼 경쟁후보가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

서기동 후보 법적 맞대응

○…서기동 열린우리당 구례군수 후보는 지난 24일 전경태 군수후보가 제기한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표기한 '구례군 X파일' 기사와 관련해 법적 맞대응키로 하는 등 반박.

서 후보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에서 합법하다고 통보한 선거 공보물에 큰 흠결이 있는 것처럼 지역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

특히 서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최모 기자가 검찰에 구속수사 중이지만 해당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마치 해당사안이 모두 허위인 것처럼 경쟁후보가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

/선거특별취재팀

제3장 반론보도

청구인이 축산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세운 공장을 전혀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취재한 언론사를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사 건 번 호 : 2006반심1
청 구 인 : 고 일 갑
(열린우리당 전남 장성군수 예비후보)
피 청 구 인 : 장성군민신문
접 수 일 : 2006년 5월 8일
처 리 결 과 : 인 용

보도내용

고일갑 열린우리당 장성군수공천 신청자

신문사 찾아와 '기사 내지 말라' 협박

열린우리당 장성군수 공천을 신청한 고일갑씨가 본사를 찾아와 편집국장에게 "나한테 원한 살 일은 조금이라도 안 하는 것이 좋다"며 고씨와 관련한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협박과 욕설을 했다.

고씨는 2001년 축산 정책자금 14억여 원을 받아 삼계면에 축산물 가공공장을 지었으나 공장을 준공한 이후 지금가지 단 한차례도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씨 측은 "공장이 준공되자마자 구제역이 발생해 수출을 하지 못했고, 2005년도에 2차 육가공 공장을 증축하려 했으나 축협에서 대출을 해 주지 않아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고일갑 열린우리당 장성군수공천 신청자

신문사 찾아와 '기사 내지 말라' 협박

하지만 처음에는 1차 육가공을 위한 정책자금을 받아 공장을 신축했고, 2004년도에는 구제역 청정지역이 되어 수출이 가능했으며 2005년 2차 육가공 공장을 위한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1차 육가공 공장이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육가공 공장을 위한 대출은 해줄 수 없다"는 축협의 입장 때문이었다.

10억원이 훨씬 넘는 국가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단 한번도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취재를 하고 있던 본사를 찾아온 고일갑씨는 "보도가 나가면 내게 불이익이 온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한테 원한 살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협박했고, 편집국장이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 나이도 어린사람이 어디 와서 누구에게 협박을 하느냐"며 따지자 "너 같은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너 이XX 두고 보자. 기사만 나가봐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본사는 고씨의 언론사에 대한 협박에 강력 대처하고,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물론 중앙당에도 이 사실을 통고하기로 했다.

한편 고일갑씨는 지난 3월19일 열린우리당 장성군수 후보 공천을 단독으로 신청했으나 전남도당은 한달이 지나도록 공천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 이유

2006년 4월 25일자 3면 『신문사 찾아와 '기사 내지 말라' 협박』 제하의 기사에서 청구인이 축산정책자금을

받아 축산물 가공공장을 지은 이후 단 한 차례도 가동한 적이 없었는데, 공장 준공 후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 수출이 불가능했다는 청구인 측 주장과 달리 2004년도에는 구제역 청정지역이 되어 수출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본사의 언론활동에 대해 협박과 압력을 행사하였고, 3월 19일 현재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콜레라가 발생하여 일본수출이 중단되어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했고, 2004년도에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된 곳은 국내에서 제주도가 유일했다. 또한 청구인이 수년동안 공직후보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언론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치 청구인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정당에서 공천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였으나 도당에서는 청구인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4월 24일 공천을 확정하였다.

청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전략)

그러나, 위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반론을 제기합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일경은 축산가공 공장으로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축산발전에 기여하고자 농림부 정책에 따라 2000년도에 신축하였으나, 2000년 4월 소구제역, 2001년 돼지 구제역, 2003년과 2004년 돼지 콜레라가 각각 발생하여 일본 수출을 목표했던 공장의 가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정부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등의 비도덕적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일본이 한국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정한 곳은 제주도뿐으로 청구인 공장이 육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마치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측 편집국장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피청구인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 청구인은 기초단체장 선거를 수년간 준비해온 자로서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사에게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상황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이 기사는 마치 청구인의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어 장성군수 열린우리당 단독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청구인에 대해 전남도당이 한 달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전남도당은 청구인이 군수후보자로서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음을 이미 확인하고 4월 24일 열린우리당 장성군수 예비후보로 공천을 확정하였음을 밝힙니다.

결 정 문

주　　문 : 피신청인은 장성군민신문 2006년 5월 16일자 3면에 별지1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가(반론보도문)의 활자크기는 이 사건 기사 제목(고일갑 열린우리당 장성군수공천 신청자)의 활자크기보다 작게 하고 제목 나("구제역 발생으로 수출 막혀" 고일갑씨 축산가공공장 미가동사유 주장)의 활자크기는 이 사건 기사 제목(고일갑 열린우리당 장성군수공천 신청자)의 활자와 동일하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4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반론보도 청구 후 보도문

장성군민신문 :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 막혀" 고일갑씨 축산가공공장 미가동사유 주장』(2006년 5월 16일자 3면)

내　　용 : 1. 제목 :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 막혀" 고일갑씨 축산가공공장 미가동사유 주장

2. 내용 : 본지가 지난 4월 25일자 3면 "신문사 찾아와 '기사내지 말라' 협박" 제하의 기사에서 [삼계면 축산가공공장] 관련기사를 "축산물 가공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것은 공장준공 후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물 수출이 불가능하였기

〈반론보도문〉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막혀"
고일갑씨 축산가공공장 미가동사유 주장

본지가 지난 4월 25일자 3면 "신문사 찾아와 '기사 내지 말라' 협박" 제하의 기사에서 [삼계면 축산가공공장] 관련기사를 "축산물 가공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것은 공장준공후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물 수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는" 는 열린우리당 장성군수 공천 신청자 고일갑씨 39)의 주장은 "2004년도에 장성지역이 구제역 청정지역이 되어 수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돼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요지로 보도한 데 대해, 고씨는 "당시 구제역 청정지역은 제주도 한 지역에만 해당되었던 사항이며, 자신의 공장은 육가공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어서 공장가동이 어려웠다" 고 재차 밝혔다.

고씨는 또 "마치 자신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열린우리당 장성군수 후보자 공천을 단독으로 신청하고도 도당으로부터 한달이 넘도록 공천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이미 자신에 대해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지난 4월 24일 제7차 공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시를 장성군수 공천자로 결정했다.

때문이다"는 열린우리당 장성군수 공천신청자 고일갑씨(39)의 주장은 "2004년도에 (장성지역이) 구제역 청정지역이 되어 수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돼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요지로 보도한 데 대해, 고씨는 "당시 구제역 청정지역은 제주도 한 지역에만 해당되었던 사항이며, 자신의 공장은 육가공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어서 공장가동이 어려웠다"고 재차 밝혔다.

고씨는 또 "마치 자신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열린우리당 장성군수 후보자 공천을 단독으로 신청하고도 도당으로부터 한 달이 넘도록 공천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이미 자신에 대해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지난 4월 24일 제7차 공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씨를 장성군수 공천확정자로 결정했다.

청구인이 선대본부장 소유의 개발제한녹지를 임의로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하여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사 건 번 호 : 2006반심2
청 구 인 : 안 상 수
(現 인천시장,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
피 청 구 인 : 신 동 아
접 수 일 : 2006년 5월 19일
처 리 결 과 : 기 각

보도내용

안상수 인천시장, 선대본부장 소유 개발제한 녹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 "땅값 수십억 상승"

안상수 인천시장은 최근 조진형 한나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 소유의 녹지가 포함된 지역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시가화(市街化)예정용지로 결정했다.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녹지가 시가지로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본부장이 소유한 땅의 시세는 수십억원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본부장은 땅값이 오르기 전 아들에게 이 땅을 증여해 절세 효과도 봤다.

조 본부장은 5·31 인천시장 선거에 재출마한 안상수 시장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 인천 부평갑 당원협의회(옛 지역구) 위원장(14·15대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조 본부장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갑의 한나라당 중앙위원 회장 김모씨가 대표이사인 A건설회사는 조 본부장측 땅과 인근 부지를 묶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의 시행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조 본부장 땅에 인접한 이 건설사 소유 땅도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허가권자인 시장, 해당 사업 예정지 안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 시행권 확보를 추진하는 건설사의 대표가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인데다 '후보와 선대본부장' '같은 지역구의 위원장과 중앙위원 회장'으로 긴밀한 사이여서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 본격화하면 더 오를 것"

인천시가 수립한 '2020 도시기본계획'은 2006년 5월4일 건설교통부에 의해 확정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대 보존용지 등 12만1000평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안은 이번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인천시측은 "6000명 인구 계획의 주거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수립한 2020 도시기본계획은 공람공고,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결정권자는 인천시장"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조진형 한나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 소유 3개 번지 2175평(각각 3379㎡,

2539㎡, 1273㎡로 총 7191㎡) 보존용지도 효성동 시가화 예정용지 내에 포함됐다. 이들 땅은 현재 배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계양구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란에는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시설란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다. 이 땅 어귀에 세워진 계양구청장 명의의 안내문은 이 땅이 '녹지지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는 효성동 시가화 예정용지를 지정한 이유에 대해 자체 자료에서 "집단으로 입지한 무허가 노후주택으로 환경이 매우 불량하다. 경관관리 차원에서 주거용지 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본부장의 땅은 무허가 노후주택 밀집지역과는 떨어져 있으며 지상건축물이 없는 밭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위치도 시가화 예정용지 구역의 맨 가장자리쪽이다. 조 본부장 땅이 시가화 예정용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효성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최초엔 '효성도시개발조합'이라는 주민단체가 '효성동 일대 6만6000평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해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다.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에는 조진형씨의 땅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2004년 10월쯤 주민단체가 요청한 지역에다 인접한 땅까지 묶어 12만1000평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았다. 이때 조씨의 땅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12만1000평이 인천시가 최초 계획한 면적인지, 중간에 일부 부지를 편입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효성동 땅'에 민감

조 본부장의 땅은 시가화 예정용지에 편입되면서 시세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효성동 시가화 예정용지 편입지역의 경우 2003년까지만 해도 평당 100만~120만원에 거래됐으나, 시가화 예정용지 편입이 가시화한 2005년 중순 이후 개발 기대심리로 가격이 많이 올라 평당 230만~24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시가화 예정용지내의 땅은 시세가 거의 비슷하다"고 했다.

주변 부동산중개소들도 같은 견해였다. 이들에 따르면 조 본부장 땅 2175평의 시세는 20억원대에서 40억~50억원대로 오른 셈이다.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하면 시가화 예정용지 일대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이들 3개 번지를 1976년 5월20일에 사들여 소유해왔다. 이후 그는 2005년 3월28일과 5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이들 땅을 자신의 아들(36)에게 모두 증여했다.

조 본부장과 같은 지역구인 인천 부평갑의 한나라당 중앙위원 회장 김모씨가 대표이사(2003년 3월3일~현재)로 있는 A건설사 소유의 효성동 땅도 이번에 인천시에 의해 시가화 예정용지 12만1000평에 포함됐다.

효성동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A건설사는 조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시가화 예정용지내 지주이면서 동시에 이곳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몇몇 건설사들도 시행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A건설사는 시가화 예정용지와 가까운 효성동 소재 조 본부장 소유의 땅을 이미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전력이 있다.

효성동 일대 주민들은 "시가화 예정용지내 아파트 조성 사업은 인천시가 용적률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 사업성이 좌우된다. 예를 들어 '용적률 180%면 사업성이 별로 없고, 210%만 되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다. 건설사나 지주들이 향후 인천시로부터 높은 용적률을 받으면 이익을 많이 남기게 된다"고 했다.

조 본부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한나라당 예비후보 공천심사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선대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안상수 인천시장과 친분이 있으며 한나라당 인천시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 본부장의 땅이 이처럼 인천시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시세가 많이 오르게 됐고, 향후 인천시의 용적률 허용기준이 중요 변수가 되는 그 땅의 개발도 조 본부장 지역구의 한나라당 인사에 의해 적극 추진되자 한나라당 중앙당도 문제가 없는지 민감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시, 조 본부장, A건설사 김모 대표 등 관계자들은 "인천시의 효성동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은 특정인에 대한 배려 없이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일절 의혹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효성동 시가화 예정용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누구인지는 검토대상이 되지 않았

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특정 부지를 시가화 예정용지에 포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진형 본부장은 "내 땅이 시가화 예정용지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 땅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본부장은 "2005년 절세 차원에서 효성동 땅을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가 인천지역 선거에 악용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다음은 조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안 시장과 상의한 적 없다"

-일부 지주들은 자신의 땅을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시켜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하기도 했는데, 조 본부장도 안상수 시장이나 다른 인천시 관계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는가.

"나는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내 재산과 연관된 일에 대해 일절 부탁하지 않는다. 일부 주민들이 지역개발문제와 관련해 도와달라고 내게 요청해도 거절해왔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효성동 땅의 시세가 많이 상승했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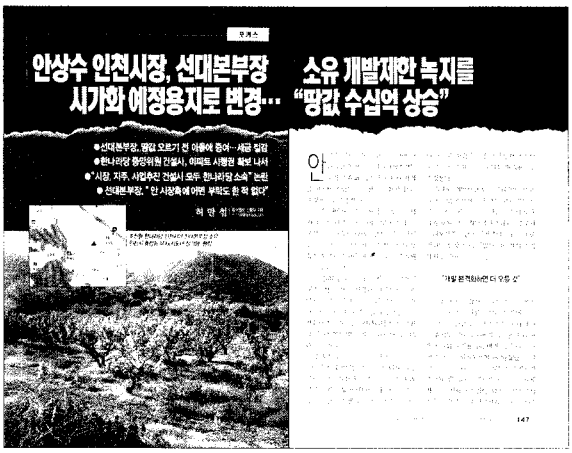
"30년 이상 갖고 있던 땅이다. 인천시내에 개발할 땅이 별로 없다. 그냥 놔두면 더 좋아진다. 안 시장이 시장직을 잘 수행하도록 곁에서 돕고 있지만, 이런 문제로는 안 시장을 찾은 적이 전혀 없다. 한나라당 인천시장 경선과정에서 효성동 땅 문제가 나와 '페이퍼'가 돌기도 했다. 한나라당 중앙당도 경위 파악에 나섰고 안 시장측도 해명하려고 애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중앙당은 내겐 답변해달라고 하진 않았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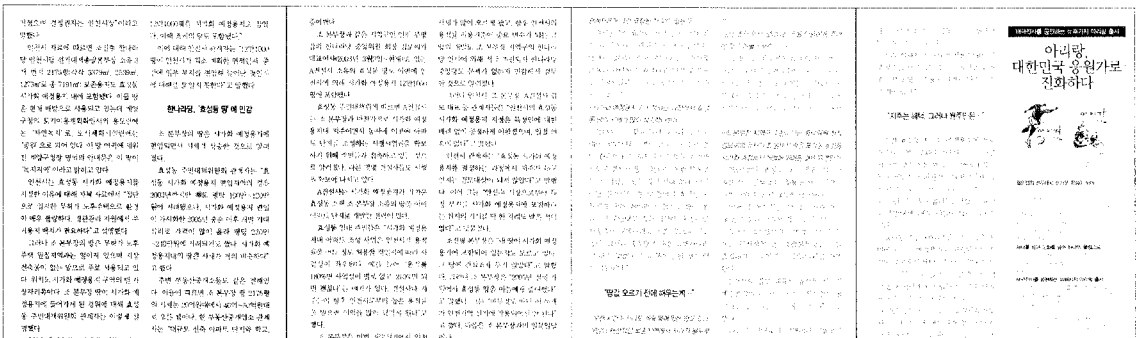
"땅값 오르기 전에 해두는게…"

-오랜시간이 지나도 계속 묶여 있는 땅도 있다. 개발이 제한적인 보존지역에서 시가지 용도로 바뀌면 지주에겐 좋은 일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내 땅은 언젠가는 좋아질 곳이다. 내 땅이 시가화 예정용지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난 여유가 많은 사람이다. 임대 수입과 현금도 좀 있으며 (인천시) 논현동에서 보상받은 것도 많이 있다. 그 땅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는 땅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어떻


안상수 인천시장, 선대본부장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
소유 개발제한 녹지를 "땅값 수십억 상승"
안


"땅값 오르기 전에 해두는게…"
아리랑, 대한민국 응원가로 진화하다

(2006년 6월호 146~151쪽)

게 봐야 하나.

"언젠가는 아들에게 줘야 할 땅이었다. 땅값이 오르기 전에 (증여) 해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아들도 금방 안 써야 좋다. 오래 보유하고 있어야… (나중에 처분하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조 본부장 지역구의 한나라당 중앙위원 회장 김모씨의 회사가 조 본부장 땅을 포함한 효성동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에 뛰어든 것은 우연인가.

"모르겠다. 효성동 땅 문제로 그와 상의한 적이 전혀 없다. 부동산 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어 조 본부장은 "효성동 땅과 관련해 안 시장과 상의한 적이 전혀 없다. 안시장에게 얘기했으면 천벌받는다. 땅 문제는 인천지역 선거총괄본부장인 나를 흠집내려는 것인데…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B건설사 김모 대표는 효성동 시가화 예정용지의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대표의 설명이다. "효성동 203명의 지주가 공동으로 도시계획구역지정안 제안서를 인천시에 낸 이후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됐다. 제안서를 낸 지주 중에 조 본부장은 없다.

지금은 주민들의 공원부지 해제 요구가 시에 올라와 있는 단계다. 개발이 되려면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고, 우리 회사가 다른 건설사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우리 회사가 시가화 예정용지내에 일부 부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과거 조 본부장 땅을 수용해 아파트 단지를 지은 적이 있다."

"지주는 혜택, 그러나 원주민은…"

한편 효성동 시가화 예정용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700여 가구 대부분은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한 채 노후주택에서 살고 있다. 세입자, 무허가건물주(지상권자) 등 영세민들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달동네도 이런 달동네가 없다"고 말했다. 효성동 주민대책위에도 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효성동 주민대책위측은 "지주들은 이번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앞으로도 지주들은 더 많은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딱하게 된 사람들은 시가화 예정용지내 국유지나 지주의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 등을 짓고 사는 지상권자와 세입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 없이 아파트단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이들은 모두 쫓겨나고 상당수는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적절한 기준에 따른 국유지 불하 등 지상권자와 세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들 영세민을 배려하는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보도청구 이유

2006년 6월호 『안상수 인천시장, 선대본부장소유 개발제한녹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땅값 수십억 상승"』 제하의 기사에서 청구인이 선대본부장 소유의 개발제한 녹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해줌으로써 땅값이 수십억이나 상승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선대본부장 소유 토지는 이미 1998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원해제가 검토되고 개발계획안을 수립한 지역이었고, 애초부터 공원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땅으로 계양구청의 민원에 의해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선대본부장의 땅값이 상승했다는 해당 기사의 내용은 객관성이 없다.

기각 결정문

이 유 : 1. 이 사건 기사의 요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행하는 월간 신동아 6월호 146~151쪽에 『안상수 인천시장, 선대본부장 소유개발제한 녹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땅값 수십억 상승"』 제하의 기사로 "안상수 인천시장은 최근 조진형 한나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 소유의 녹지 2,175평이 포함된 지역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조진형씨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용지변경과 관련하여 안상수 인천시장과 조진형 선대본부장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이 사건 토지는 199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원해제 권고로 2001년 1단계 지역개발계획(안)을 이미 확정한 곳이며,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변경은) 2004년 해당 구역의 영

세민 무허가 밀집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계양구청이 인천시청에 허가를 요청한 사안이며, ▲시 담당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시장과 어떠한 상의도 한 적이 없고, 안상수 시장은 여기에 조진형 선대본부장의 땅이 있는 줄도 몰랐던 상황이어서 마치 안상수 인천시장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이 사건 기사는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또 ▲조진형 선대본부장은 한나라당 인천시당 전체 후보의 선대본부장임에도 이 사건 기사에서는 조씨가 안상수 후보의 선대본부장이라고 잘못 보도됐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 게재를 요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대부분 허위이며 일부는 이 사건 기사에 이미 게재된 반론의 중복 게재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반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이건 반론보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및 결론

가.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사 또는 방송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또는 방송)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사자 협의를 통해 언론사는 청구인의 반론을 무료로 보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들은 해당 사건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에 회부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은 회부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조의4제4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은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①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②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③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④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⑤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8조의4제4항 준용조항에 따라 언론사가 반론보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각호의 내용과 같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반론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특정 토지의 용도지구지정 또는 변경 결정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있음이 관련법에 의해 분명하여 "조진형씨 소유 토지의 용지변경과 관련하여 안상수 인천시장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반론은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시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변경과 관련하여 시장과 어떠한 상의도 한 적이 없고, 안상수 시장은 여기에 조진형 선대본부장의 땅이 있는 줄도 몰랐던 상황"이라는 청구인의 반론 또한 이 사건 기사에서 인천시관계자와 조진형씨의 반론을 통해 이미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반론요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는 199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원해제 권고로 2001년 1단계 지역개발계획(안)을 이미 확정한 곳"이라는 청구인의 반론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199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원해제를 권고한 지역에는 문제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2001년 1단계 효성지구 개발계획(안)에도 이 사건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심의회의에서 청구인측도 그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시인하고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 부분 청구도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은)2004년 해당 구역의 영세민 무허가 밀집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계양구청이 인천시청에 허가를 요청한 사안"이라는 청구인의 반론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4년 효성동 주민들의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요청에는 조진형씨 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아래쪽 지역만 포함됐다. 위쪽 지역에 있던 조진형씨 땅은 2004년 말~2005년 1월이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포함됐다.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인천시가 효율적 도시계획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주

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물로 피청구인측 기자 허만석과 청구인측 개발계획과 개발관리팀 소속 시가화 예정용지 결정담당 공무원(익명)과의 대화녹음 녹취록, 피청구인측 기자 허만석과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주민대책위원회 총무 손영오, 주민대책위원회 고문 허충구 등과의 대화녹음 녹취록, 피청구인측 기자 허만석과 인천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 서강원과의 대화녹음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이 건 청구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의 반론을 주장만 할 뿐 그 내용을 입증하거나 피청구인측이 제시한 증거물이나 답변을 허위로 돌릴만한 다른 증거물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청구인측은 이 사건 심의회의가 열리기 전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한바 있으나 관련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변경과 관련 "2004년 해당 구역의 영세민 무허가 밀집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청구인측 반론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진형 선대본부장은 안상수 후보의 선대본부장이 아니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전체 후보의 선대본부장이다"라는 청구인의 반론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 본문 서두에 "조진형 한나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이라고 문면상으로 조 본부장의 직함을 정확히 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 건 기사 제목 또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부분 청구 역시 그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이에 당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4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5부 선거기사심의 관련 법규 및 서식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 선거기사심의기준
- 서 식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

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69조 (신문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④제1항의 광고는 전면광고면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사란 부분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하여야 한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37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 ①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

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⑥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⑨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개정 : 2002. 4. 24.
2004. 10. 26.
2005. 7. 2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등)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제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구성 및 운영

제3조 (설치 등) ①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언론인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④언론중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함에 있어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⑤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단체와 추천정당이 추천한 자의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 (임기 등) ①심의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와 관련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를 재위촉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심의위원장 등) ①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③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규정된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②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의거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7조 (회의 등)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결정족수) ①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및 시정

제10조 (심의) ①선거기사의 심의기준은 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 심의에 관한 기준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정기간행물 제출) ①「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기간행물 제출기간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구독료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구독료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정기간행물 제출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안건) ①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주의 또는 경고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④언론중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①심의위원회가 제12조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①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에 대한 제12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본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언론중재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정요구사항) ①후보자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의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

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장은 후보자로부터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가 제2항의 심의를 한 결과 불공정한 선거기사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서 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시정요구사항의 심의절차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제16조 (반론보도청구) ①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심의위원장은 회부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6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선거법 제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언론중재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 (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0조 (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제21조 (심의위원회의 해산) 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필요한 업무를 완료하고 해산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정기간행물의선거보도에대한반론보도청구사건심의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기사심의기준

제정 : 2000. 2. 28.
개정 : 2002. 10. 23.
2004. 5. 12.
2006. 1. 31.
2006. 6. 26.

제1장 총 칙

제1조 (공정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2조 (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객관성) ①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4조 (공익성) 언론사는 언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장 기 사

제6조 (사실보도) ①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언론사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사는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사실과 의견의 구별) 언론사는 선거기사에서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제8조 (여론조사 보도) ①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③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설기사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보도할 경우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용보도) ①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거나 개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인터뷰 기사) ①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

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한 균형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외부기고) ①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대담·토론기사)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기사를 다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표제 및 사진

제14조 (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진 게재) ①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게재 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광 고

제16조 (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상업광고의 제한) ①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권리구제

제18조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 (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table>
<tr><td>선거기사
심의위원회
(☎)</td><td colspan="4">시 정 요 구 서</td></tr>
<tr><td rowspan="2">청 구 인</td><td>①성 명</td><td></td><td>②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③주 소</td><td></td><td>④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3">시정요구대상</td><td>⑤정기간행물명</td><td></td><td>⑥대표자 성명</td><td></td></tr>
<tr><td>⑦보도일자
및 지면</td><td></td><td>⑧소 재 지</td><td></td></tr>
<tr><td>⑨보도내용</td><td></td><td>⑩전화번호</td><td></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보도기사 전문</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table>
<tr><td>선거기사
심의위원회
(☎)</td><td colspan="4">반 론 보 도 청 구 회 부 서</td><td>처리시간
48시간</td></tr>
<tr><td rowspan="6">청 구 인</td><td>①성 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td><td></td><td>②주 소</td><td colspan="2"></td></tr>
<tr><td>③대표자 성명</td><td></td><td>④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⑤소 재 지</td><td></td><td>⑥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피 청 구 인</td><td>⑦성 명 (단체명
또는 언론사명)</td><td></td><td>⑧주 소</td><td colspan="2"></td></tr>
<tr><td>⑨대표자 성명</td><td></td><td>⑩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⑪소 재 지</td><td></td><td>⑫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반 론 보 도
청 구 대 상</td><td>⑬정기간행물명</td><td colspan="4"></td></tr>
<tr><td>⑭보도일자 및 지면</td><td colspan="4"></td></tr>
<tr><td>⑮보 도 내 용</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공직선거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 청구를 회부합니다.

년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
(백상지 80g/㎡)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

5·31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2006년 7월 25일 인쇄
2006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조 준 희
편 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의본부 심의팀
발 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 화 : 397-3061~4
FAX : 397-3069
www.pac.or.kr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